

1 ①	2 ⑤	3 ①	4 ②	5 ④
6 ①	7 ④	8 ⑤	9 ③	10 ③
11 ④	12 ④	13 ⑤	14 ④	15 ③
16 ④	17 ②	18 ②	19 ②	20 ③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에서 A는 정치를 좁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관점, B는 정치를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① 국회에서 의원의 입법 활동 과정은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으로 볼 수 있어서 좁은 의미의 정치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②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정치를 좁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다.

③ 소수 통치 엘리트의 활동은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모두에 해당한다.

④ 넓은 의미의 정치는 개인, 정당, 이익 집단을 정치의 주체로 본다.

⑤ 학생회에서 학생들 간의 축제 논의 과정은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에 해당하지 않아 좁은 의미의 정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찾기 ⑤ 현대 사회로 오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합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확장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통치로,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법의 목적과 내용과는 관계없이 법의 효력이 인정되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자의 합법적인 통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③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과 정당성을 중시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심사하는 위한 법률 심사제 도입을 옹호할 것이다.

④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적 절차 이외에도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는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3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A는 지방 의회, B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정답찾기 ㄱ. 지방 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ㄴ. 지방 자치 단체장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ㄷ. 지방 자치 단체 예산 심의 및 확정권은 지방 의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ㄹ. 지방 의회는 의결 기관,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집행 기관에 해당한다.

4 전형적인 정부 형태 이해

문제분석 갑국은 대통령제로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고, 을국은 의원 내각제로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

정답찾기 ㄱ. 갑국은 T 시기에 행정부 수반이 A당일 경우, A당은 의석률 40%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난다. ㄴ. 을국은 T+1 시기에 D당이 60%의 의석률로 과반을 확보하여 단독 내각 구성이 가능하지만, T 시기에는 과반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서 연립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오답피하기 ㄴ.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로 의회가 아닌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

ㄷ. 을국은 T 시기에는 과반을 확보한 정당이 없고 T+1 시기에는 D당이 60%의 의석률로 과반을 확보하여 T+1 시기에 비해 T 시기에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가능성이 높다.

5 정치 참여 집단의 이해

문제분석 A는 공약을 세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내세우는 정당이고, B는 공약을 중시하는 시민 단체이며, C는 공익보다 특수 이익을 중시하는 이익 집단이다.

정답찾기 ④ 시민 단체와 달리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진다.

오답피하기 ① 정당은 특수한 이익보다 공익을 추구한다.

②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③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⑤ 이익 집단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6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A는 참정권, B는 청구권이다.

정답찾기 ① 참정권은 정치적 기본권으로 능동적인 성격의 권리이다.

오답피하기 ②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권리는 사회권이다.

③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④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⑤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는 자유권이다.

7 부당 노동 행위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 회사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따라서 A는 중앙 노동 위원회, B는 지방 노동 위원회이다.

정답찾기 ④ 중앙 노동 위원회는 '○○ 회사가 ○○ 회사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부당 노동 행위로 보았다. 그러나 제시된 자료를 통해 지방 노동 위원회에서 '○○ 회사가 ○○ 회사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부당 노동 행위로 판정했는지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서 ○○ 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행정 소송이다.

② 헌법이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사용자가 그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상태가 방치된다면 근로 3권 보장의 실효성은 떨어지게 된다.

③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 조건에 관하여 사용자 측과 단체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 회사 노동조합이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한 B는 지방 노동 위원회이고, ○○ 회사가 A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A는 중앙 노동 위원회이다.

8 우리나라 국가 기관 이해

문제분석 A는 국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이다. B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를 하는 감사원이다. C는 대법원장 임명 권한을 갖는 대통령이며, D는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다.

정답찾기 ⑤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인 국무 회의에서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②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은 국회가 갖는다.

③ 법관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국가 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④ 대통령은 조약 체결 및 비준권, 국회는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9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국민 주권주의 관련 헌법 조항과 내용이다.

정답찾기 ③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민주적 선거 제도 운영을 들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남북 교류 협력 추진 정책 수립과 실천은 평화 통일 지향을 실현하는 방안이다.

② 국제법과 조약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은 국제 평화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④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의 보장과 최저 임금제 실시는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⑤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무형 문화재를 지원하는 제도는 문화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10 선거와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국의 현행 선거 결과와 개편안에 따른 예상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단위: 표, 석)

지역구	정당	A당	B당	C당	D당	합계
가		110	20	40	30	200
나		70	40	10	30	150
다		40	60	30	20	150
라		50	40	30	80	200
마		70	20	10	0	100
의석수		5	3	1	1	10

(개편안: 지역구 '나'와 지역구 '마'를 통합할 경우)

(단위: 표, 석)

선거구	정당	A당	B당	C당	D당	합계
가		110	20	40	30	200
나+마		140	60	20	30	250
다		40	60	30	20	150
라		50	40	30	80	200
합계		340	180	120	160	800
비례 대표		3(3.4)	2(1.8)	1(1.2)	2(1.6)	8
의석수		5	3	1	3	12

(개편안: 지역구 '다'와 지역구 '마'를 통합할 경우)

(단위: 표, 석)

지역구	정당	A당	B당	C당	D당	합계
가		110	20	40	30	200
나		70	40	10	30	150
다+마		110	80	40	20	250
라		50	40	30	80	200
합계		340	180	120	160	800
비례 대표		3(3.4)	2(1.8)	1(1.2)	2(1.6)	8
의석수		6	2	1	3	12

정답찾기 ③ 개편안의 경우 비례 대표 의석수는 B당 2석, C당 1석으로 B당이 C당보다 비례 대표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현행 선거에서 C당은 1석, D당은 1석으로 의석수를 동일하게 확보하였다.

② 개편안은 당선에 필요한 득표 기준 없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미리 정해져 있는 당선자 수만큼 대표자로 당선되는 방식으로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④ A당은 지역구 '다'와 '마'를 통합할 경우 총의석수는 6석으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

⑤ B당은 지역구 '나'와 '마'를 통합할 경우 총의석수는 3석, 지역구 '다'와 '마'를 통합할 경우 총의석수는 2석으로, 지역구 '나'와 '마'를 통합할 경우가 의석수 확보에 더 유리하다.

11 사적 자치의 원칙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대법원 판결에서 변호사의 소송 위임 사무 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 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에서 ㉠은 사적 자치의 원칙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④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은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법률관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소유권 행사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②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요건에 따라 관계되는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이다. 우리 민법은 불법 행위 책임 영역에서 과실 책임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③ 소유권 절대 원칙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여 개인의 사유 재산은 국가가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⑤ 계약 공정의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강조한다.

12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 이해

문제분석 미성년자인 갑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미성년자 을이 부모의 동의를 위조하여 B로 하여금 위조된 동의서를 믿게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이 배제된다.

정답찾기 ④ B는 을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보고 을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오답파하기 ① 갑의 계약은 부모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갑은 미성년자일 때 체결한 전속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인 갑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과 갑의 부모는 A와 맺은 전속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을은 부모의 동의를 위조하여 B로 하여금 위조된 동의서를 믿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을과 을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계약에 대해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을은 부모의 동의를 위조하여 B로 하여금 위조된 동의서를 믿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을이나 을의 부모의 취소권이 배제된다.

13 불기소 처분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헌법 재판소가 검사가 내린 불기소 처분의 종류인 기소 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사례이다.

정답찾기 ⑤ 기소 유예 처분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었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오답파하기 ① 갑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검사의 기소 유예 처분에 관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② 헌법 재판소는 갑의 행위가 절도의 고의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③ 배상 명령 제도는 상해죄 등 일정한 사건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 명령 제도의 신청 대상이 아니다.

④ 기소 유예 처분은 검사가 한다.

14 특수 불법 행위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사례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 불법 행위 유형

중에서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을 나타낸 것이다.

정답찾기 ④ 병은 을이 아닌 갑과 꽃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꽃을 배달받지 못한 병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답파하기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에 해당하여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사례는 A와 B가 을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갑과 을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로 병의 손해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사례에서 A 소유의 건물 1층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B의 가게 간판이 떨어져서 을이 다쳤을 때 점유자인 B가 1차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고, 공작물 등의 소유자인 A가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해 갑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공작물 등의 점유자인 B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 면책이 된 경우에 공작물 등의 소유자인 A는 을에게 무과실 책임을 진다.

15 불법 행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A가 □□ 음료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것이다.

정답찾기 나. □□ 음료 회사는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ㄹ.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한다. 이때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해당된다.

오답파하기 가. A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 □□ 음료 회사가 A의 근로 3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제시된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없다.

ㄷ. A의 해고에 대해 중앙 노동 위원회는 부당 해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자료를 통해 A의 해고에 대해 지방 노동 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로 판정했는지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

16 혼인과 이혼 이해

문제분석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갑과 병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서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정답찾기 ④ 갑의 유언이 무효인 경우, 법정 상속 1순위인 직계 비속 A가 갑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오답파하기 ① 이혼 숙려 기간은 협의상 이혼 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②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신고에 의해 친권이 상실되거나 일부 제한될 수 있다. 갑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혼 판결과 동시에 A에 대한 친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에서 정한 일정한 형식을 갖춘 유언이 존재하면 유언에 따른다. 따라서 갑의 유언이 유효한 경우에 병은 갑의 재산을 받는다.

⑤ 갑의 유언이 유효한 경우, 갑의 직계 비속인 A만 병에게 법정 상속

속분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B는 갑과 병의 혼인 외 출생자로 갑에 의해 인지된 상태가 아니므로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을은 갑과 이혼하였으므로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17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이해

문제분석 자료에서 정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투입, 산출, 정책 결정 기구, 환류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정답찾기 ㄱ. 개인의 청원 활동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ㄴ. 환류 과정에서 개인과 집단 모두 기존의 정책에 대한 평가·수정·보완, 새로운 정책 요구에 참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선거 참여는 정치 과정에서 투입과 환류 과정에 해당한다.

ㄷ. 정책 결정 기구는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며, 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 등이 해당된다.

18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정에 대한 상해죄 혐의로 형사 절차를 거쳐 판결이 확정된 갑, 을, 병의 상황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구분한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갑은 유·무죄 중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없고, 을은 무죄 확정 판결, 병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② 제시된 자료에서 갑과 달리 을과 병은 구속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형사 보상 제도의 활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갑과 병이 같은 답변을 했다는 점에서 갑과 병의 답변은 '아니요'이다. 을은 구속 수사를 받았고,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구금이 집행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을과 같은 답변을 한 갑은 구금되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면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는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필요성 판단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를 거쳤습니까?'라는 질문에 구속 수사를 받은 을, 병과 구속 수사를 받지 않은 갑이 같은 답변을 하였으므로 갑, 을, 병 모두 '예'로 같은 답변을 하였다.

③ 갑, 을, 병은 모두 형사 절차를 거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다.

④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갑은 유·무죄 중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없고, 을은 무죄 확정 판결, 병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병과 달리 을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갑은 유·무죄 중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갑과 달리 을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⑤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갑, 을, 병 모두 재판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19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갑의 관점은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 국제 평화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관점, 을의 관점은 힘의 우위 확보를 강조하고 국력 증강과 동맹 등을 통한 세력 균형 전략으로 국가의 안전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정답찾기 ② 현실주의적 관점은 군사 동맹 등으로 세력 균형을 확보하여 국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①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는 자국 이익의 배타적 추구를 중시한다고 본다.

③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이해관계의 조화와 평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④ 현실주의적 관점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동맹 및 군사력 강화를 강조한다.

⑤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보다 상호 협력 및 이성과 제도의 영향력이 크다고 본다.

20 국제 연합(UN)의 주요 기관 분석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A는 안전 보장 이사회, B는 총회,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정답찾기 ③ 국제 사법 재판소는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 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오답피하기 ① 국제 연합(UN)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기관은 총회이다.

②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④ 국제 사법 재판소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을 적용하여 재판한다.

⑤ A는 안전 보장 이사회, B는 총회,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1 ③	2 ④	3 ④	4 ⑤	5 ④
6 ②	7 ④	8 ①	9 ③	10 ④
11 ⑤	12 ⑤	13 ⑤	14 ④	15 ④
16 ①	17 ④	18 ③	19 ①	20 ②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에는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이 나타나 있다.

정답찾기 ③ 넓은 의미의 정치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갈등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오답피하기 ①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형성 이전의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②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기관에서의 정치 현상도 정치로 보므로 국회의 입법 과정을 정치 현상이라고 본다.

④ 넓은 의미의 정치는 시민 단체가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것도 정치 현상으로 본다.

⑤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의 정치 현상을 모두 포함하므로, 국가의 정치 현상과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본다.

2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질문 1> 관련 보통 선거권이 인정되는 것은 현대 민주 정치만이므로 C는 현대 민주 정치이다. <질문 2> 관련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근대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이므로 B는 근대 민주 정치이다. 따라서 A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이다.

정답찾기 나.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투표 등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였다.

르. 근대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 모두 국민 주권주의를 기초로 한다.

오답피하기 가.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은 근대 민주 정치이다.

다.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와 근대 민주 정치 모두에서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3 기본권 유형의 이해

문제분석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중 적극적 성격의 권리가 아닌 것은 자유권이므로 C는 자유권이며, (가)의 질문에 따라 A, B는 각각 사회권과 청구권 중 하나이다.

정답찾기 ④ 자유권은 사회권이나 청구권과 달리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오답피하기 ①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청구권만이므로, (가)에는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② 현대에 들어와 강조된 것은 사회권만이므로 (가)에 '현대에 들어와 강조되는가?'가 들어가면 A는 사회권이다. 사회권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③ A가 사회권이면 B는 청구권이다. 청구권의 내용으로 재판 청구권을 들 수 있다.

⑤ 자유권은 국가의 성립과 무관하게 인정된다.

4 정부 형태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부 수반이 결정되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따라서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 을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정답찾기 ⑤ 의원 내각제보다 대통령제가 행정부 수반의 임기 동안 정책의 계속성 확보에 유리하다.

오답피하기 ① 의원 내각제 국가인 갑국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연립 내각은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③ 행정부도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 국가인 갑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④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 발생 시 조정이 곤란한 것은 대통령제 국가인 을국이다.

5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찾기 ④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가 정의를 법적 안정성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아니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정당성 모두를 확보해야 법이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③ 실질적 법치주의는 위헌 법률 심사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하지만,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6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A는 주민 투표 제도로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B는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제도로 주민들이 특정 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폐지해 달라고 지방 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답찾기 가. 주민 투표 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르. 주민 투표 제도와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제도는 모두 직접 민주 정치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나. 조례는 법령 및 상위 지방 자치 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 따라서 지방 의회가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제도를 통해 부의된 조례안을 반드시 원안대로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주민 투표 제도와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제도는 기초 및 광역 자치 단체 모두에서 실시할 수 있다.

7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가)는 국제 평화주의, (나)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찾기 ④ 복지 국가의 원리는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이 있다.

오답피하기 ① 국제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나라는 일체의 전쟁이 아닌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제6조 제2항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므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모든 기본권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③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의 확립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⑤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과 관련된다.

8 정치 참여 집단의 비교 이해

문제분석 정치 참여 집단 A~C는 (가), (나)의 질문에 따라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정답찾기 ㄱ. 특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시민 단체와 정당이므로 (가)에 '특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ㄴ. 자기 집단의 활동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만이므로 (나)에 '자기 집단의 활동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일반적으로 한정된 쟁점에 치중하여 활동하는 것은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이므로 (가)에 '일반적으로 한정된 쟁점에 치중하여 활동하는가?'가 들어가면 C가 정당이 된다. 정당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은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 모두이므로 (나)에 '정당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ㄷ. 정치적 총원 기능을 하는 것은 정당만이므로 (나)에 '정치적 총원 기능을 하는가?'가 들어가면 A는 정당이다.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것은 정당만이므로 (가)에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9 헌법의 의미 변천 이해

문제분석 A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 B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 C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정답찾기 ③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B-C-A의 순서대로 등장하였다.

②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④ 현대 복지 국가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모두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⑤ 입헌주의란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통치 원리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등장, 확립되었다.

10 선거 제도 및 결과에 대한 분석

문제분석 갑국의 현행 의회 의원 선거구 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회 의원을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며, 개편안은 한 선거구에서 5명을 일정 기준에 의한 순서에 따라 차례로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이다.

현행 선거구 제도에 따르면 1선거구에서 A당 후보, 2선거구에서 B당 후보, 3선거구에서 B당 후보, 4선거구에서 D당 후보, 5선거구에서 A당 후보가 선출된다. 이때 정당별 의석수는 A당 2석, B당 2석, C당 0석, D당 1석이다.

개편안 도입에 따른 정당별 득표수 및 득표율은 표와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합계
득표수(표)	175	135	90	100	500
득표율(%)	35	27	18	20	100
득표율 비례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	1.75	1.35	0.90	1.00	5
확정된 정당별 의석수(석)	2	1	1	1	5

정답찾기 ㄴ.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B당은 27%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지만 의석수는 전체 의석의 40%인 2석으로 과대 대표되었다.

ㄷ. 현행 선거 제도에 따르면 A당, B당, D당의 3개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였지만, 개편안을 도입하면 A당, B당, C당, D당의 4개 정당이 모두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오답피하기 ㄱ.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A당은 2석, D당은 1석을 확보하였다.

ㄴ. 의회 의석수 확보를 고려하면 C당은 현행 제도에서 0석, 개편안에서 1석으로 의석수가 늘어 개편안의 도입을 찬성할 것이다.

11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분석 법원은 갑과 을 간에 체결된 계약이 을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⑤ 제시문에서 법원은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수정된 민법의 기본 원칙인 계약 공정의 원칙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② 개인이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③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에 대해 국가나 타인은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④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12 계약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이 을에게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8월 31일(9월 1일의 전일)에 요청하고 을은 같은 날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였지만, 실제 차용 증서는 9월 1일에 작성한 사례이다.

[정답찾기] 다. 차용 증서는 일종의 계약서로 계약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해도 성립된다.

라. 채무자가 변제일에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계약 위반이 되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오답피하기] 가. 갑은 채무자, 을은 채권자이다.

나. 갑과 을의 계약 성립일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된 2022년 8월 31일이다.

13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책임 능력이 없는 자녀 을에 의한 손해에 대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병은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을, 정은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찾기] ⑤ 병이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병은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을 면하며, 이런 경우 정은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을 진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사용자 배상 책임이 아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갑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피해자인 A가 갑이 감독자의 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③ 병과 정은 각각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과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④ 을은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병만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이라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14 성년 의제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에서 갑과 을은 모두 18세의 미성년자이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의제되어 민법상 성년자로 취급된다.

[정답찾기] ④ 을이 재혼하더라도 갑과 병의 친자 관계는 지속된다.

[오답피하기] ① 18세의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성년 의제된 갑과 을은 성년자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자녀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양육할 자녀 병이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을 하면서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을 것이다.

⑤ 갑이 사망할 경우 병은 갑의 직계 비속으로서 갑의 상속인이 된다.

15 청소년 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자료는 사용자와 17세인 고등학생 을이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 계약서를 보여 주고 있다. 을은 청소년 근로자로서 근로 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정답찾기] ④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 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을은 1일 7시간, 주 5일을 일하고 있으므로, 갑과 을이 합의하면 을의 연장 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5시간까지 가능하다.

[오답피하기] ①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③ 근로 계약서상에 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이다. 따라서 을이 근로 계약서대로 근무할 경우 하루 70,000원의 임금을 받는다.

⑤ 18세 미만인 사람(연소자)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6 죄형 법정주의의 이해

[문제분석] (가)에서 ○○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저작권법의 해당 조항이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나)에서 △△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포고 제1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정답찾기] ① 유추 해석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엄격히 금지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허용되기도 한다.

[오답피하기] ②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③ B는 비례성의 원칙이 아닌 명확성의 원칙이다.

④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모두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에서도 중시된다.

17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은 수사에서 형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 절차에 대한 예시를 보여 주고 있다.

[정답찾기] 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범죄를 저지른 자는 경찰서장이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 한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은 검사가 조사를 하여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형사 재판을 받도록 기소할 수 있으며,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다.

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형벌이 아닌 대안적 제재 수단에 해당한다.

라. 집행 유예의 확정 후 형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오답피하기] 다. 구속 적부 심사에서 석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검사가 아닌 판사이다.

18 유언과 상속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에서 갑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을, 자녀인 병과 정이며 상속 비율은 을 : 병 : 정 = 1.5 : 1 : 1이다. 그리고 상속 재산이 재산 16억 원, 채무 2억 원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순수 재산은 14억 원이다. 유언장이 무효일 경우는 법정 상속을 하게 되는데 순수 재산 14억 원을 상속 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되면 을은 6억 원, 병과 정은 각각 4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정답찾기] 나. 유언장이 유효할 때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유언장이 유효할 때 병과 정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각각 법정 상속분의 1/2인 2억 원씩이다.

ㄷ. 유언장이 무효라면 병과 정은 각각 4억 원을 상속받는다.

오답피하기 ㄱ. 배우자인 을은 법정 상속액 6억 원의 1/2인 3억 원을 유류분액으로 받을 수 있다.

ㄹ. 1순위 상속자인 병, 정이 있으므로 갑의 부모인 A, B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19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그림에서 A는 조약, B는 국제 관습법, C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정답찾기 ① 조약은 국가 간에는 물론 국가와 국제기구, 국제기구 간에도 체결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국제 관습법은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도 국제 사회의 국가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③ 법의 일반 원칙의 내용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이 있다.

④ 조약과 국제 관습법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 규범으로 인정된다.

⑤ 국제법을 위반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없다.

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A는 총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정답찾기 ② 안전 보장 이사회의 안건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동의로 의결된다. 다만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의 경우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가진다.

오답피하기 ① 국제 연합 총회는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③ 총회는 1개국이 한 표씩을 행사하지만,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는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가지는데 이는 힘의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은 현재 5개국이며, 비상임 이사국은 모두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된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실전 모의고사

3회

본문 110~114쪽

1 ④	2 ③	3 ①	4 ②	5 ⑤
6 ②	7 ⑤	8 ③	9 ②	10 ③
11 ⑤	12 ⑤	13 ②	14 ②	15 ⑤
16 ④	17 ①	18 ④	19 ④	20 ②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A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B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정답찾기 ④ 교사의 진술에서 병은 틀리게 설명했다고 하였으므로, (가)에는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해당 진술은 옳은 내용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의 정치 현상과 국가 이외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②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의 활동도 정치 현상으로 보므로,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③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국가의 선거 관리 활동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모두에서 정치로 본다.

⑤ (가)에는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권력과 무관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진술은 옳지 않은 내용인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2 우리나라 국가 기관 이해

문제분석 질문 (가)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이 구분된다.

정답찾기 ③ (가)에 '탄핵 소추권을 갖는가?'가 들어가고 ㉠이 '아니요'라면, A는 대통령, B는 국회가 된다.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은 국무 회의이고,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오답피하기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따라서 (가)에 해당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

② (가)에 '사면권을 갖는가?'가 들어가고, ㉡이 '예'라면, A는 대통령, B는 국회이다.

④ (가)에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갖는가?'가 들어가고, ㉠이 '예'라면, A는 국회, B는 대통령이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회이다.

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A는 국회, B는 대통령이다.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가)에 해당 질문이 들어가면, ㉠은 '아니요', ㉡은 '예'이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A는 국제 평화주의, B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찾기] ① 국제 평화주의에 따라 우리나라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오답피하기] ② 국민의 참정권 보장은 국민 주권주의 실현 방안 중 하나이다.

③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④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만이 가지는 원리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⑤ 의무 교육 제도는 복지 국가의 원리, 문화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4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찾기] ②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을 때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제도는 위헌 법률 심사 제도이다. 위헌 법률 심사 제도는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이다.

[오답피하기] ①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실질적 평등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리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③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될 때 법의 권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한다.

⑤ 통치가 합법적이기만 하면 독재 정치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5 정부 형태의 이해

[문제분석]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해당 답안에 대한 채점 결과가 1점이므로 B는 의원 내각제가 되며, A는 대통령제가 된다.

[정답찾기] ⑤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갖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이 2점이고, (나)에 해당 진술이 들어가면, ㉡은 1점이 되므로 ㉢은 0점이 된다. 따라서 (가)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대통령제는 대통령, 의회 의원 모두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②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정국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③ ㉠이 1점이고, ㉡이 2점이면, ㉢은 0점이 된다. 따라서 (나)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진술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④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따라서 ㉣이 1점이고, (가)에 해당 진술이 들어간다면 ㉠은 0점이므로, ㉡은 2점이 된다.

6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A는 참정권, B는 자유권이다.

[정답찾기] ② 자유권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가 자기 결정의 영역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으므로써 보장되는 권리는 자유권이다.

[오답피하기] ① 참정권은 헌법에 열거되어야만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인 반면에,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될 권리이다. 따라서 자유권은 입법자에 의하여 구체적 형성을 필요로 하는 권리는 아니다.

③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④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이다.

⑤ 본질적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7 형사 재판과 위헌 법률 심판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1심이 지방 법원 단독 판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2심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졌다. A는 지방 법원 합의부, B는 대법원, C는 헌법 재판소이다.

[정답찾기] ㄷ. 헌법 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ㄹ.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ㄱ.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 하며,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따라서 ㉠은 항소, ㉡은 상고이다.

ㄴ. A는 지방 법원 합의부이다.

8 가족 관계 이해

[문제분석] 갑과 을은 협의상 이혼을 하였고, 병과 정은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병이 B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을 하였으므로, B는 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정답찾기] ③ 병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병의 재산은 직계 비속인 B와 배우자인 을이 상속받게 된다.

[오답피하기] ① 행정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은 협의상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을과 병이 혼인을 했다고 해서 을과 A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④ 갑의 유언이 무효라면, 갑의 재산은 법정 상속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을은 갑과 이혼을 하였으므로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A와 B가 갑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⑤ 갑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상속인은 ○○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A, B 모두 ○○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9 정치 참여 집단 이해

문제분석 A는 시민 단체, B는 이익 집단, C는 정당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정답찾기 ② 정당은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정당을 실현하고자 한다.

오답피하기 ①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집단은 정당이다.

③ 시민 단체와 정당은 모두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한다.

④ 정치 참여 집단은 모두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⑤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모두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10 국제 연합 주요 기관의 이해

문제분석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판결을 내리는 기관은 국제 사법 재판소이므로, 국제 사법 재판소는 A, B 중 하나가 된다.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의사 결정 기관은 총회이므로, A는 총회가 되고, B와 C는 각각 안전 보장 이사회와 국제 사법 재판소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A는 총회, B는 국제 사법 재판소, C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정답찾기 ③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관은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오답피하기 ①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은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②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④ 분쟁 지역에 평화 유지군을 파견할 수 있는 기관은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가)에는 국제 사법 재판소와 안전 보장 이사회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⑤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른 1국 1표의 표결 방식이 적용되는 기관은 총회이다. (나)에는 총회와 국제 사법 재판소를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 들어가야 하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11 정치 참여 이해

문제분석 청원은 국가 기관에 요구 사항을 일정한 형식의 문서로 제출하는 정치 참여 방법 중 하나이다.

정답찾기 ⑤ ㉠, ㉡은 모두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 방법에 해당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는 의원 소개 청원처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에 비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데 유리하다.

오답피하기 ①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청원은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② 환류는 정책을 평가하고 평가에 기반하여 수정, 보완 또는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국민의 청원에 답을 하는 것을 환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청와대 국민 청원이나 국민 동의 청원은 모두 국민의 정치적 효능

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청원은 개별적인 정치 참여 유형에 해당한다.

12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 이해

문제분석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⑤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판정하였으며, 재심을 맡은 중앙 노동 위원회도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대법원도 ○○ 회사가 근로자 갑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결한 원심을 인정하여 ○○ 회사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보아, ○○ 회사의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보았다. 따라서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중앙 노동 위원회와 대법원은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갑이 근로 3권을 침해당했는지 여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회사의 갑에 대한 부당 해고 여부가 구제 절차의 쟁점이 되었다.

② 상고심을 담당한 △△ 법원은 대법원이다.

③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 구제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갑은 회사의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판단하여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해고가 부당 해고라 판정하였으며, ○○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13 미성년자 계약 이해

문제분석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②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와 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병이 정 의 동의를 위조하였다면, 병과 정 의 취소권이 배제된다.

④ 병이 정 의 동의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병이 정 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이므로, 병과 B의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된다. 따라서 B는 정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가 법률혼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간주되고, 민법상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무는 C와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거래 상대방인 C도 무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4 범죄 성립 요건 이해

문제분석 (가)는 강요된 행위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며, (나)는 긴급 피난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고, (다)는 정당방위로 위

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라)는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며, (마)는 심신 상실자의 행위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고, (바)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A는 위법성, B는 책임이다.

[정답찾기] ②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며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라도 보안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위법 행위를 하였다는 데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 가능성은 책임이다. 위법성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판단이다.

③ (가)는 강요된 행위, (나)는 긴급 피난의 사례이다.

④ (다)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마)는 심신 상실자의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따라서 (다), (마)는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라)는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바)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15 특수 불법 행위 이해

[문제분석]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가 불법 행위 책임을 지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찾기] ⑤ 갑과 B는 각각 병과 C의 사용자로서, 병과 C의 불법 행위에 대해 병과 C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인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오답피하기] ① 을은 갑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의 소유자이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서 A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병은 17세로서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의 법정 대리인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③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피용자인 병의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인 갑과 병이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④ B는 C의 사용자인데,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피용자인 C가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사용자인 B도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16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 기관 이해

[문제분석] A는 지방 의회, B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정답찾기] ④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으로서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며,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지방 의회 지역구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만, 비례 대표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③ 주민 투표 제도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 의회의 주요 의결 사항이라고 해서 주민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에 관한 심의·확정권은 지방 의회에 있다.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에 관한 심의·확정권으로 지방 자치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

17 형사 절차 이해

[문제분석] 1심은 갑에 대해 도로 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2심은 도로 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만 인정하였고, 대법원도 원심 선고 내용을 확정하였다.

[정답찾기] ①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소 제기 이후에는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이 되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구속 적부 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②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형법' 자체를 의미하고, 도로 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모두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③ 1심은 갑에 대해 준법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였으며, 2심은 준법 강의 수강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1심, 2심 모두 대안적 제재 수단인 보안 처분을 부과하였다.

④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선고를 확정하였으므로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선고 유예이다. 집행 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다.

18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분석]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절차를 거쳐 문서 형식으로 작성된 것은 조약이고,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다. 따라서 A는 조약이고, B와 C는 각각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정답찾기] ④ ⊕이, '예', ⊕이 '아니요'라면, B는 법의 일반 원칙, C는 국제 관습법이다. 조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들 간에만 효력을 미치는 반면에,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포괄적 구속력을 갖는다.

[오답피하기] ① ⊕, ⊙, ⊕은 모두 '아니요'이다.

② 우리나라에서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이 가지며, 국회는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③ 국제기구는 조약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신의 성실의 원칙이 B의 사례라면, B는 법의 일반 원칙, C는 국제 관습법이다. 따라서 ⊕은 '예', ⊕은 '아니요'이다.

19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분석] A는 계약 자유의 원칙, B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정답찾기] ④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으면 법률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오답피하기** ① 사회적 약자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한 것은 계약 공정의 원칙을 비롯한 근대 민법의 수정·보완된 원칙이다.
 ② 소유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③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⑤ 계약 자유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고, 계약 공정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 수정·보완된 원칙이다.

20 선거 결과 분석

문제분석 갑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는 현행의 경우 A당 3.6석(=18×1,920/9,600), B당 4.5석(=18×2,400/9,600), C당 5.04석(=18×2,688/9,600), D당 4.86석(=18×2,592/9,600)이며, 변경안의 경우 A당 2.0석(=10×1,920/9,600), B당 2.5석(=10×2,400/9,600), C당 2.8석(=10×2,688/9,600), D당 2.7석(=10×2,592/9,600)이다. 이를 토대로 현행 및 변경안에 따른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정당	득표수(표)	득표율(%)	의석 할당 득표율(%)	비례 대표 의석수(석)	의석률(%)
A	1,920	19.2	20	4	약 22.2
B	2,400	24.0	25	4	약 22.2
C	2,688	26.88	28	5	약 27.8
D	2,592	25.92	27	5	약 27.8
E	400	4.0			
합계	10,000	100.0	100.0	18	100.0

〈변경안〉

정당	지역구 의석수(석)	비례 대표 의석수(석)	총의석수(석)	의석률(%)
A	2	2	4	약 22.2
B	1	2	3	약 16.7
C	2	3	5	약 27.8
D	2	3	5	약 27.8
E	1		1	약 5.6
합계	8	10	18	100.0

정답찾기 ② B당의 현행 제도의 의석수는 4석이고, 변경안의 의석수는 3석이다. 따라서 B당은 현행보다 변경안이 불리하다.

오답피하기 ① 변경안의 지역구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중·대선거구제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나타난다.

③ D당의 현행, 변경안 모두 정당 득표율은 25.92%이고, 의석률은 약 27.8%이므로, 현행, 변경안 모두 정당 득표율이 의석률보다 낮다.

④ 현행 제도에서 의석이 배분된 정당 수는 4개이고, 변경안에서는 5개이다.

⑤ 현행, 변경안 모두 제1당의 의석수는 5석이므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전 모의고사

4회

본문 115~120쪽

- | | | | | |
|------|------|------|------|------|
| 1 ⑤ | 2 ⑤ | 3 ④ | 4 ② | 5 ⑤ |
| 6 ③ | 7 ④ | 8 ⑤ | 9 ④ | 10 ④ |
| 11 ③ | 12 ① | 13 ① | 14 ③ | 15 ④ |
| 16 ⑤ | 17 ④ | 18 ⑤ | 19 ③ | 20 ⑤ |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로 본다. 반면에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정치가 나타난다고 본다.

정답찾기 ⑤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로 보기 때문에 국무 회의에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또한 국가의 정치 현상과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②, ③, ④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정치가 나타난다고 보므로 국무 회의에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또한 국가의 정치 현상과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며,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적합하다.

2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중 갑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입장에 있고, 을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에 있다.

정답찾기 ⑤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의 방지를 강조한다.

②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④ 실질적 법치주의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옹호한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A는 복지 국가의 원리, B는 국제 평화주의, C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정답찾기 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헌법 내용은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은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기. '최저 임금제 실시'는 복지 국가의 원리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ㄷ. 국제 평화주의에 따르면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다.

4 우리나라의 헌법 기관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A는 감사원, B는 국회, C는 대법원, D는 대통령, E는 헌법 재판소이다.

정답찾기 ② 탄핵 소추권은 국회의 권한이고, 탄핵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오답피하기 ①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인 것은 옳지만 국정 감사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③ 국가 예산안 편성은 행정부의 권한이다. 국회는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④ 국회는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재판소 재판관 9인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⑤ 위헌·위법한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의 권한이다.

5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은 모두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적극적 권리는 사회권과 청구권이고,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이며,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따라서 <카드 1>은 3점, <카드 3>은 2점, <카드 4>는 1점, <카드 6>은 -1점이다.

정답찾기 ⑤ <카드 2>가 3점, <카드 5>가 3점일 경우 각자의 총점은 같은 8점, 을은 6점, 병은 6점, 정은 2점, 무는 3점이다. 따라서 정이 총점이 가장 낮다.

오답피하기 ①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는 사회권과 청구권이다. 따라서 (가)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면 <카드 2>의 점수는 2점이다. 이 경우에 병의 총점은 5점이고, 정이 총점은 2점이다.

②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청구권이므로 (가)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면 <카드 2>는 1점이다. 이 경우에 갑의 총점은 6점, 을의 총점은 6점이다.

③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므로 (나)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면 <카드 5>는 -1점이다. 이 경우 무의 총점은 -1점이다.

④ 소극적·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므로 (나)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면 <카드 5>는 1점이다. 이 경우에 을의 총점은 6점, 무의 총점은 1점이다. 따라서 을의 총점은 무의 총점보다 5점 높다.

6 근로자의 권리 구제 이해

문제분석 갑과 을은 ○○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는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갑의 해고는 '근무 태만'이 이유이므로 갑은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을의 해고는 '노동조합의 파업 주도'가 이유이므로 을은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정답찾기 ㄴ. 노동조합은 부당 해고와 달리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근로자는 직접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갑, 을은 모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 진행 중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상황이라면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제도 중에서 직접 민주 정치 요소는 주민 투표 제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 주민 소환 제도 등이 있다.

정답찾기 ④ 우리나라의 기초 의회 지역구 의원은 중선거구제에서 선출된다.

오답피하기 ① 지방 자치 단체장은 규칙 제정권을 갖는다.

② 주민 투표 제도와 주민 소환 제도는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에 해당한다.

③ 지방 의회는 조례 제정 및 개폐권을 갖는다.

⑤ 비례 대표 의원을 제외한 지방 의회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된다.

8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분석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하여야 하는데, 이를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사례의 헌법 재판소는 도로 교통법 해당 조항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정답찾기 ⑤ 헌법 재판소는 도로 교통법 해당 조항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②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었다면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을 것이다.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위헌 법률 심판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③ 도로 교통법은 형법의 명칭은 아니지만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 제재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④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후 재판 당사자가 헌법 재판소에 청구하여 진행되는 것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9 정치 참여 집단 이해

문제분석 정치 참여 집단 중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정당이고, 집단의 특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정당과 시민 단체이다. 따라서 A는 시민 단체, B는 이익 집단, C는 정당이다.

정답찾기 ④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당이다. 따

라서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가면 ㉠은 '아니요'이다.

- 오답피하기** ① 시민 단체는 비영리성, 비당파성을 특징으로 한다.
 ②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모두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③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은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⑤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가면 ㉠은 '아니요'이다.

10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 문제분석**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여 법률 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 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찾기** ④ 병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병과 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오답피하기** ① 갑은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 의사 무능력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의사 무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정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매업자 D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정의 법정 대리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② 을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을과 을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C는 계약 체결 당시 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으므로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D의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D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1 특수 불법 행위의 이해

- 문제분석**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해야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인 부모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점유자가 1차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가)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나)에 옳은 내용이 들어가면 (다)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가고, (나)에 틀린 내용이 들어가면 (다)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간다.
- 정답찾기** ③ ㉠이 '2점'이면 (다)에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인 정이 면책되면 소유자인 무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다)에 들어갈 수 있다.
- 오답피하기** ① ㉠이 '1점'이면 (나)에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미성년자인 병이 책임 능력이 있다면 B는 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② ㉠이 '1점'이면 (다)에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인 정이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C는 소유자인 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다)에 들어갈 수 있다.
 ④ (가)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을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하면 A는 을의 부모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⑤ (가)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을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하더라도 갑과 을은 특수 불법 행위 중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12 상속 제도의 이해

- 문제분석**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면 민법에 정해진 순위대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고,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의 내용대로 하지만 유류분 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법정 상속 시 이혼한 배우자는 법정 상속권자가 아니며,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므로 친생부모의 법정 상속권자가 아니다.
- 정답찾기** ㄱ.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법정 상속권자는 A, C이며 각각 10억 원의 1/2씩 상속받는다. B는 친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법정 상속권자가 아니다.
 ㄴ. 을이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법정 상속권자는 배우자 정, 자녀 A, B, D이다.
오답피하기 ㄷ.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정 상속권자만 청구할 수 있다. 병의 법정 상속권자는 자녀 C 밖에 없다. 갑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정 상속권자가 아니다.
 ㄹ. 정은 법정 상속권자는 을, B, D이다.

13 이혼의 절차 이해

- 문제분석** 갑과 을은 합의하여 이혼을 하였으므로 ㉠은 협의상 이혼이고, A와 B는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하였으므로 ㉡은 재판상 이혼이다.
- 정답찾기** ① 을이 병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갖는다면 갑과 병은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면접 교섭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그 자녀에게 발생한다.
- 오답피하기** ②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와 인척 관계만 종료되는 것이다.
 ③ 협의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혼 숙려 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다.
 ④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협의상 이혼의 효력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한 때에 발생하고, 재판상 이혼의 효력은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 발생한다.

14 형사 절차의 이해

- 문제분석** 형사 절차는 크게 수사 → 기소 → 공판 → 판결로 구분할 수 있다. 사례의 공판에서 쟁점은 갑이 범죄 행위를 했을 당시에 갑이 심신 미약 상태였느냐, 심신 상실 상태였느냐이다. 심신 미약의 상태인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고, 심신 상실의 상태인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답찾기** ③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제도는 보석 제도이다.

- 오답피하기** ① 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 ②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 및 피고인은 모두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 ④ 징역은 1개월 이상 교도소 등에 구금하고 노역이 부과되는 자유형이다.
- ⑤ 심신 상실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소급효 금지의 원칙 이해

문제분석 대법원이 '도로 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된 도로 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 구 도로 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한 것은 이렇게 적용하더라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답찾기 ㄱ. (가)에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들어갈 수 있다.
 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도로 교통법에는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로 교통법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오답피하기 ㄴ. 지방 법원에서 2심을 담당하였으므로 1심은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했을 것이다.

16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분석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⑤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기소 유예 처분은 불기소 처분이므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② 같은 재판 중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어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③ 같은 형사 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기소 유예 처분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으로 바뀔 것이다.

④ 벌금은 구금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재산형에 해당한다.

17 소년 사건 절차 이해

문제분석 소년은 성인에 비해 심신의 성장이 미숙한 상태이므로 이들의 범죄 사건이나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비행 사건의 경우 성인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한다. 소년 사건의 대상이 되는 연령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정답찾기 ㄱ.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4세 이상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ㄴ. 10세 이상 19세 미만에게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ㄷ. 14세 이상 19세 미만에게는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14세 이상에게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다)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ㄷ. 범죄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는 경찰서장이 가장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라)에 들어갈 수 없다.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분석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관은 총회이고,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은 총회에서 정기적으로 선출된다. 또한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옳게 답한 3명의 학생은 을, 병, 정이고, A는 국제 사법 재판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 C는 총회이다.

정답찾기 ⑤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는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옳게 답한 학생은 을, 병, 정이다.

②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 법적 분쟁에 대하여 강제적 관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양 당사국 간 합의가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③ 국제 평화와 안전의 책임을 지는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은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④ 안전 보장 이사회와 총회에서의 표결 방식은 모두 1국 1표주의이다.

19 전형적인 정부 형태 이해

문제분석 T+1대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A당이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아니므로 T+1대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고, T대~T+3대 중 정부 형태는 1회 바뀌었으며, 연립 내각은 1회 구성되었다. 따라서 T대~T+3대 갑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대통령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이다.

정답찾기 ③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서 선출되며,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

오답피하기 ①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된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인정된다.

④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된다.

⑤ T대~T+3대 중 여소야대 현상은 T+1대, T+2대에 나타난다.

20 선거 자료 분석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한 현행, <1안>, <2안>의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거구별 정당 득표수〉

(단위: 표)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합계
1선거구	20	30	60	80	10	200
2선거구	15	40	30	15	0	100
3선거구	40	50	40	30	40	200

4선거구	15	5	15	45	20	100
5선거구	40	50	90	10	10	200
6선거구	30	40	15	15	0	100
7선거구	60	90	20	30	0	200
8선거구	25	20	50	5	0	100
합계	245	325	320	230	80	1,200

(각 정당별 의석수)

(단위: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현행	0	4	2	2	0
1안	1	2	2	2	1
2안	2	2	2	2	0

정답찾기 ⑤ 현행에서 B당의 의석률은 50%, 정당 득표율은 약 27.1%이고, D당의 의석률은 25%, 정당 득표율은 약 19.2%이다. 따라서 B당과 D당은 과대 대표되었다.

오답피하기 ① <1안>의 지역구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이며 각 정당은 선거구당 1명씩만 공천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해도 4석이다. 따라서 지역구 의석수의 50%를 초과하는 정당이 나타날 수 없다.

② A당의 경우 현행 0석, <1안> 1석, <2안> 2석을 차지하므로 현행에 비해 <1안>과 <2안>이 모두 유리하다.

③ C당의 의석률은 현행, <1안>, <2안> 모두 25%로 같다.

④ E당의 경우 현행 0석, <1안> 1석, <2안> 0석이다. 따라서 <1안>이 가장 유리하다.

실전 모의고사

5회

본문 121~126쪽

1 ⑤	2 ②	3 ④	4 ⑤	5 ①
6 ③	7 ③	8 ②	9 ④	10 ③
11 ⑤	12 ②	13 ⑤	14 ④	15 ②
16 ②	17 ③	18 ②	19 ②	20 ④

1 정치의 의미 이해

문제분석 감의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을의 관점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가)에는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가 들어야 하고, (나)에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는 해당하지만 좁은 의미의 정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들어야 한다.

정답찾기 ⑤ '정부의 재난 지원금 집행'은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이고, '아파트 도색 디자인 선정'을 위한 입주민 투표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는 해당하지만 좁은 의미의 정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례이다.

오답피하기 ① '국회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 의결', '정부의 재난 지원금 집행'은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② '교내 댄스 동아리의 곡 선정 및 역할 배분'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는 해당하지만 좁은 의미의 정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례이다.

③ '아파트 도색 디자인 선정'을 위한 입주민 투표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는 해당하지만 좁은 의미의 정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례이다.

④ '학급 내 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 규칙 제정'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는 해당하지만 좁은 의미의 정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례이다.

2 법치주의 이해

문제분석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찾기 ② 법률이 헌법의 가치에 반할 때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위헌 법률 심사제는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오답피하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 행위가 형식적 합법성을 갖춘 경우 실질적 정당성은 문제 삼지 않는다.

③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통치 행위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권력자의 자의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는 인치(人治)가 아닌 법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는 법치(法治)를 강조한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A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정답찾기 ④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조 제2항은 국민 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조항이다.

- 오답피하기** ① 자유 민주주의와 관련 있는 헌법 조항이다.
 ②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 있는 헌법 조항이다.
 ③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 있는 헌법 조항이다.
 ⑤ 문화 국가의 원리와 관련 있는 헌법 조항이다.

4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

문제분석 갑국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통해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며, 을국의 행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통해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임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⑤ 국가 원수가 명목상 존재하며 실질적인 통치권이 없는 의원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국가 원수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도 가지므로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와 동일인이다.

- 오답피하기** ①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므로 의회는 내각 불신 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의회 의원은 행정부 각료를 견직할 수 있다.
 ③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제인 을국과 달리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인 갑국에서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④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제인 을국의 행정부 수반과 달리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인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5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A는 청구권, B는 평등권이다.

정답찾기 ① 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이다.

- 오답피하기** ②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실질적 평등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다르게 대우할 때 보장될 수 있다.
 ③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는 사회권이다.
 ④ 청구권은 헌법에 열거된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⑤ 국가 권력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6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인 A는 지방 자치 단체장, 의결 기관인 B는 지방 의회이다.

정답찾기 ③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가진다.

- 오답피하기** ① A는 지방 자치 단체장, B는 지방 의회이다.
 ② ㉠은 조례이다. 조례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권은 지방 의회가 가진다.
 ④ 헌법 재판소는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의 내부적 분쟁은 권한 쟁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며 A의 권한 행사로 인한 B의 권한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⑤ 지역 주민들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 및 지방 의회 지역구 의원을 주민 소환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은 거칠 필요가 없다.

7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이해

문제분석 A는 대통령, B는 국무총리, C는 국회, D는 헌법 재판소이다.

정답찾기 ③ 헌법 재판소 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오답피하기** ① 국무총리는 국무 회의의 부의장이며,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② 위헌·위법한 명령과 규칙 및 처분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국가 기관은 대법원이다.
 ④ 헌법 재판소장과 달리 국회 의장은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니다.
 ⑤ 국무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8 법률 제·개정 및 헌법 개정 절차 이해

문제분석 입법 과정에서 국회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는 A는 헌법 개정안이고, 국회 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는 B는 법률안이다.

정답찾기 ② 국회 의원 10인 이상, 국회의 위원회, 정부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오답피하기** ①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제안할 수 있으며, 헌법 재판소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없다.
 ③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법률안은 경우에 따라 국회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⑤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9 정치 과정 이해

문제분석 (가)는 갑이 청원권을 행사한 사례, (나)는 갑이 선거권을 행사한 사례, (다)는 갑이 시민 단체를 통해 정치에 참여한 사례로 (가)~(다)는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의 사례에 해당한다. (라), (마)는 각각 정책 결정 기구인 국회와 정부의 활동을 보여 주는 것으로 정치 과정에서 산출의 사례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④ 시민 단체를 통한 정책 제안서 제작은 투입의 사례에 해당하며, 정부의 '미세 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 2부제' 시행은 산출의 사례에 해당한다.

-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갑의 청구권 행사, (나)에는 갑의 참정권 행사가 나타나 있다.
 ②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는 행위와 달리 시민 단체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는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에 해당한다.
 ③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산출의 사례에 해당한다.
 ⑤ (라)의 국회, (마)의 정부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만, (다)의 시민 단체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을 각 질문을 통해 구분해야 한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정당과 다른 두 집단을 구분할 수 있고, '집단의 특수한 이익보다 공익의 실현을 중시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이익 집단과 다른 두 집단을 구분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③ 정당은 두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며, 이익 집단은 두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B가 이익 집단이라면, 시민 단체와 정당은 모두 특수한 이익보다 공익의 실현을 중시하므로 ㉠, ㉡에 들어갈 대답이 같아진다. 따라서 ㉠, ㉡에 들어갈 대답이 다르다면 B는 정당이며, 정당은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한다.

오답피하기 ①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라는 질문에 정당은 '예',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집단의 특수한 이익보다 공익의 실현을 중시하는가?'라는 질문에 시민 단체와 정당은 '예', 이익 집단은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따라서 ㉠~㉢에 들어갈 대답 중 '예'는 3개이다.

② A가 정당이라면 특수한 이익보다 공익의 실현을 중시하므로 ㉠은 '예'이다. 또한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은 '아니오'이다. 따라서 ㉠과 ㉡에 들어갈 대답은 다르다.

④ 정당과 달리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모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 ㉡에 들어갈 대답이 같다면 ㉠과 ㉡은 '아니오'이다. ㉢도 '아니오'라면 B는 시민 단체, C는 이익 집단이며,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⑤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은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므로 (가)에는 해당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

11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분석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사적 지배를 인정하는 A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개인의 소유권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는 B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정답찾기 ⑤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모두 현대의 개인 간 법률관계에 적용된다.

오답피하기 ①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② 개인이 자율적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③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원칙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④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12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미성년자인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황 1>과 같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황 2>와 같이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위조하여 을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상황 3>과 같이 갑이 법률혼을 하였다면 성년으로 의제되어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찾기 ② 을은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갑의 법정 대리인

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미성년자인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은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위조하였으므로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은 배제된다.

④ 성년 의제된 갑은 민법상 행위 능력이 인정되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상황 1>, <상황 2> 모두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상황 1>에서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반면, <상황 2>에서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3 이혼의 법적 효과 및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 이해

문제분석 갑과 을은 협의상 이혼, 병과 정은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며, 갑과 정이 재혼한 후 정이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 A와 을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정답찾기 ⑤ 병과 정이 이혼하더라도 B와 정은 친족 관계는 유지되므로 B는 정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반면 정은 친양자 입양으로 A는 을과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어 A는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이혼은 협의상 이혼이다. 병과 정은 재판상 이혼이므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

② 갑과 을이 이혼하면서 갑이 A의 양육권을 가지더라도 이혼으로 인해 을과 A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이혼에 책임이 있더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권은 인정되므로 정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친양자로 입양된 A는 갑과 정은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14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분석 <카드 1>은 강요된 행위, <카드 2>는 심신 상실자의 행위로 두 경우 모두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찾기 나. 두 명의 학생 중 한 사람만 옳은 대답을 하였으므로, 학생 1이 옳은 대답을 했다면 (가)와 (나)에는 모두 위법성 조각에 해당하는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 학생 2가 옳은 대답을 했다면 (가)에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 병(12세)이 전자 제품 판매점에서 이어폰을 훔친 것은 책임 조각에 해당하는 사례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가)에 들어갈 수 없다.

르. 자녀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은 범죄가 성립하는 사례이므로 해당 사례가 (나)에 들어간다면 학생 1의 대답은 틀리게 된다. 따라서 학생 2의 대답은 옳은 대답이므로 <카드 3>은 범죄가 성립하는 사례가 들어가야 하며, (나)도 범죄가 성립하는 사례이므로 <카드 3>과 <카드 4>를 범죄 성립 여부로 구분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가. <카드 1>, <카드 2> 모두 책임 조각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다. (가)에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 사례가 들어간다면 학생 2의 대답은 틀렸으므로 학생 1의 대답이 옳은 대답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나)에는 위법성 조각에 해당하는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는 위법성 조각에 해당하므로 (나)에 들어갈 수 없다.

15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반면 2심 법원은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갑의 무죄가 확정되면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② 형사 보상 제도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무죄 취지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가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물질적·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갑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므로 ○○ 고등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 지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갑이 항소하였으므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 전에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고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갑은 구속 적부 심사 제도를 통해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속 영장 발부는 법관이 하며, 기소는 검사가 한다. 검사와 달리 법관은 수사 기관이 아니다.

⑤ 기소된 이후에도 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 거부권을 모두 가진다.

16 국내법과 국제법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은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조약에 해당한다. ㉡은 국내법 중 법률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 조약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다.

㉡. 국내법과 달리 국제법은 강제로 집행할 집행 기구가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오답피하기 ㉢. 우리나라가 체결·공포한 조약인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과 국회가 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모두 성문화된 형태로 존재한다.

㉣.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법률의 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17 부당 노동 행위 이해

문제분석 □□ 회사 사장 갑은 B 노동조합과 달리 A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 시간을 제한하였고, 이에 대해 A 노동조합이 ○○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다. 갑이 ○○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을 통해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③ 갑이 ○○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것을 통해 ○○ 지방 노동 위원회가 갑의 행위를 A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 3권을 침해한 부당 노동 행위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이 재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A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A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도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 모두 갑의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로 판정하였다.

⑤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이 A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 시간을 제한한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로 보았으므로 판정이 확정된다면 B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 시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갑이 A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분석 A는 안전 보장 이사회, B는 총회,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정답찾기 ②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에서의 표결은 1국 1표가 적용된다. 이는 주권 평등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은 절차 사항을 제외한 실질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은 국가 간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은 재판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④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군사적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19 불법 행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던 을이 근무 중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을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 갑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친구 소유의 개를 산책시키다가 부주의로 목줄을 놓쳐 개가 행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정은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찾기 ② 갑이 을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갑은 사용자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오답피하기 ① 갑의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을이 책임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을의 법정 대리인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③ 산책하던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개의 점유자인 정이 B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며, 정이 개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개의 소유자인 병이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병에게 과실이 있다면 병은 B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례에서 병과 정이 공동으로 B에게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니므로 병과 정이 연대하여 B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정이 B에게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진다.

⑤ 을이 A에게 지는 책임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고, 정이 B에게 지는 동물의 점유자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다.

20 선거 결과 분석

문제분석 갑국의 최근 지역구 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수와 개편안 적

용 시 지역구 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수는 다음과 같다.

(최근 지역구 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수)

(단위: 표)

구분	A당	B당	C당	D당	계
선거구1	300	400	100	200	1,000
선거구2	1,000	200	600	200	2,000
선거구3	1,200	200	400	200	2,000
선거구4	200	100	300	400	1,000
선거구5	600	800	400	200	2,000
선거구6	400	1,000	400	200	2,000
계	3,700	2,700	2,200	1,400	10,000

(개편안 적용 시 지역구 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수)

(단위: 표)

구분	A당	B당	C당	D당	계
선거구1-2	1,300	600	700	400	3,000
선거구3-4	1,400	300	700	600	3,000
선거구5-6	1,000	1,800	800	400	4,000
계	3,700	2,700	2,200	1,400	10,000

한편 총 6석의 비례 대표 의석을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따라 계산한 비례 대표 의석 배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례 대표 의석 배분 결과)

구분	A당	B당	C당	D당	계
비례 대표 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율(%)	50	20	20	10	100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	3.0	1.2	1.2	0.6	6
비례 대표 의석 배분 결과(석)	3	1	1	1	6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및 개편안 적용 시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및 개편안 적용 시 선거 결과)

(단위: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계	
최근 결과	지역구 의석수	2	3	0	1	6
	비례 대표 의석수	3	1	1	1	6
	총 의석수	5	4	1	2	12
개편안 적용 시	지역구 의석수	3	1	2	0	6
	비례 대표 의석수	3	1	1	1	6
	총 의석수	6	2	3	1	12

정답찾기 ④ 개편안 적용 시 A당은 지역구 의석 3석, 비례 대표 의석 3석으로 총 6석의 의석을 얻는다. 따라서 A당의 총의석률은 50%이며,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 50%와 같다.

오답피하기 ① 개편안에서 지역구 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인의 대표를 선출하고 있으므로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었다.

②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선거구3의 사표는 800표, 선거구4의 사표는 600표이다.

③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C당의 비례 대표 의석은 1석, D당의 비례 대표 의석은 1석으로 동일하다.

⑤ 개편안 적용 시 C당의 비례 대표 의석은 1석이며, 지역구 의석은 2석이다.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1회

본문 102~106쪽

1 ④	2 ④	3 ①	4 ②	5 ①
6 ③	7 ④	8 ④	9 ⑤	10 ②
11 ④	12 ③	13 ②	14 ③	15 ④
16 ①	17 ④	18 ③	19 ③	20 ③

1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A국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이며, B국은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나라이다. 한편 C국은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는 나라이므로 전근대 사회의 왕조 국가의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정답찾기 을 : C국은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법치주의가 전혀 실현되고 있지 못하는 나라이므로 전근대 사회의 왕조 국가의 모습에 가깝다. 이런 나라에서는 '법(法)의 지배'가 아닌 '인(人)의 지배'가 나타난다.

정 : A국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이며, B국은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타나는 나라이다.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공통점은 통치의 합법성(국가 권력 행사의 법적 근거)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뿐 아니라 정당성도 중요시하며,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만 중요시한다.

오답피하기 갑 : A국은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합법을 명분으로 독재 정치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합법을 명분으로 독재 정치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나라는 A국이 아니라 B국이다.

병 : 위헌 법률 심사 제도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을 나라는 B국보다는 A국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2 헌법의 의의와 기본권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오늘날의 헌법이 기본권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기본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오늘날의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이다.

정답찾기 ④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등은 사회권에 해당한다.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오늘날의 헌법은 국가 통치 구조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이다. 헌법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②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으로서, 사회권이나 청구권 등의 권리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강조된 권리이다.

③ 자유권이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 받지 않으려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인 반면, 참정권은 국가 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나타낸다. 다른 기본권(㉔~㉘)의 내용을 헌법 제10조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내용이 다른 기본권들로 구체화된 것이다.

3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 지향,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제시된 헌법 조항은 이들 중 국민 주권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정답찾기 ㄱ. 국민 투표제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ㄴ. 복수 정당 제도의 보장은 국민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오답피하기 ㄷ.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의 보장이나 최저 임금 제도 실시는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ㄹ. 평생 교육의 진흥 및 의무 교육 제도의 실시는 문화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4 지방 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지방 자치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다. 지방 자치 제도는 중앙 정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여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수직적 권력 분립' 제도이다.

정답찾기 ② 지방 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권이 있으며, 지방 자치 단체장은 규칙 제정권이 있다.

오답피하기 ①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이 아니고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③ 주민 소환 제도는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의회 의원은 제외)을 지역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 자치 단체장과 교육감 모두 주민 소환의 대상이다.

④ 지방 선거는 지방 자치 제도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지방 자치 제도는 수평적 권력 분립 장치가 아니라 수직적 권력 분립 장치이다. 즉,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의 일부를 지방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 교육감 모두 지방 자치 제도에 따라 지방 선거에서 선출된다.

5 정부 형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규칙에 따르면, 뒤집은 두 장의 카드 중 하나가 의원 내각제에 해당하므로 A에도 의원 내각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한다.

정답찾기 ㄱ.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나. 의원 내각제는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한다.

(오답피하기) 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르.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6 정치 참여 집단 및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A는 정당, B는 이익 집단이다. 여러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과 차이점을 숙지해 두어야 하며, 특히 정당의 속성과 다양한 기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찾기 정당은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다. 즉, 항목 (1)은 틀린 진술이다. 정당은 공익을 추구하지만 이익 집단은 그들 집단의 특수 이익(사익)을 추구한다. 즉, 항목 (2)는 옳은 진술이다. 정당은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항목 (3)은 틀린 진술이다. 정치 사회화는 사회의 구성원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정치적 가치관이나 태도 등의 정치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등은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이 있다. 즉, 항목 (4)는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갑은 2점, 을은 3점, 병은 4점, 정은 3점, 무는 2점을 받게 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은 병이다.

7 법원과 헌법 재판소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첫 번째 사례는 헌법 재판소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례이며, 두 번째 사례는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한 사례이다. 상고심이라는 말에서 A가 대법원임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취소 또는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갑이 청구한 것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에 해당한다.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에 해당한다.

다. A는 대법원이다.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은 대법원의 장(長)이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르. 대법원의 장(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답피하기) 나. 갑과 을의 헌법 소원 청구를 받은 기관은 헌법 재판소이다. 헌법 재판소의 권한에는 탄핵 소추권이 아니라 탄핵 심판권이 포함된다. 탄핵 심판은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즉, 탄핵 소추권은 국회가 가진다.

8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정치 과정이 나타나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정치 참여 주체의 역할은 물론 투입, 산출, 환류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정답찾기 갑 : 언론은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제시된 사례에서 언론은 비학생 청소년이 학생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보도함으로써 그것과 관련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병 : 지방 의회는 여론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즉, 지방 의회는 정책 결정 기구로서 기능하였다.

정 : (가)는 정책 결정 기구에 의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므로 산출 과정에 해당한다. 또 (나)는 산출된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수정·보완 또는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환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을 : 시민 단체나 정당 모두 공익을 추구한다. 공익보다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익 집단이다. 시민 단체가 정당과 다른 점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9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대통령의 업무와 권한을 제시하여 다른 국가 기관의 기능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도록 구조화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찾기 ⑤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에서 선출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답피하기) ① 국무 회의의 주재, 법률안 거부권 행사, 헌법 재판소 재판관 임명에서 대통령이 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 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③ 국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 중 하나로서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을 가진다.

④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10 선거와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국의 현행 선거 결과와 개편안에 따른 예상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A당	B당	C당	D당	E당
0석	2석	0석	1석	3석

〈개편안〉 통합 후 하나의 선거구 유권자 수가 다른 선거구 유권자 수의 2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가)-(나), (다)-(바), (라)-(마)'로의 개편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구 개편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선거구에서 특정 정당이 2인을 공천하더라도 그 2인이 모두 당선 가능한 경우에는 2인을 공천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case 1

구분	정당 의석수
(가)-(라) 선거구	E당 2석 또는 D당 1석, E당 1석
(나)-(마) 선거구	B당 1석, D당 1석
(다)-(바) 선거구	B당 1석, E당 1석

■ case 2

구분	정당 의석수
(가)-(라) 선거구	E당 2석 또는 D당 1석, E당 1석
(나)-(다) 선거구	D당 1석, E당 1석
(마)-(바) 선거구	B당 2석 또는 B당 1석, D당 1석

정답찾기

ㄱ. 현행에서도 A당과 C당은 의석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개편안으로 바뀌더라도 의석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ㄴ. 개편안에서 D당은 case 1의 경우 1석~2석이 되며, case 2의 경우 1석~3석이다. 따라서 D당이 얻을 수 있는 최소 의석수는 1석, 최대 의석수는 3석이다.

오답피하기 ㄴ. 현행에서 C당과 D당의 득표율은 각각 10%, 약 26.7%이다. 그런데 의석 점유율은 각각 0%, 약 16.7%(1석/6석)이므로 두 정당 모두 과소 대표되었다.

ㄷ. 현행에서 E당의 의석수는 3석이다. 그런데 개편안에서 선거구가 '가-라', '나-다', '마-바'로 통합된다면 E당의 의석수는 2석~3석이 된다. 즉, 현행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11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분석 A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B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함부로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 행사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정답찾기 ④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인정하였지만,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소유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오답피하기 ① 국가를 포함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법률관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②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③ 근대 민법의 원칙뿐만 아니라 수정·보완된 민법의 원칙도 사인(私人) 간 분쟁 해결 기준이 된다.

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근대 민법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대에 와서 수정·보완되었다. 따라서 현대에서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뿐만 아니라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도 함께 적용되고 있다.

12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문제분석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는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이기 때문에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는 경우이며, (나), (다)는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갑 또는 갑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이다.

정답찾기 ③ (다)는 계약 당시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을이 갑과 계약 당시 갑이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던 경우이다.

을은 갑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갑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갑의 법정 대리인의 주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는 갑이 계약 당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된다. 따라서 갑의 법정 대리인은 갑과 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유효로 할지 여부를 확정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은 갑이 아닌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해당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가)의 경우 갑과 을의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므로,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불법 행위 이해

문제분석 피용자인 을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사용자인 갑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A, B가 공동으로 D를 폭행하였고, C도 망을 보았기 때문에, A, B, C가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정답찾기 ②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을의 행위가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도 을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③ A, B는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에, A, B의 법정 대리인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④ 망을 본 행위도 폭행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므로, C는 D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⑤ 을은 피용자로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고, A, B는 공동으로 D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인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14 적정성의 원칙 이해

문제분석 A는 적정성의 원칙이다.

정답찾기 ③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도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답피하기 ①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②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④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⑤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15 가족 관계 이해

문제분석 A는 병을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을 하였기 때문에 병과 을의 친족 관계는 유지되며, B가 정을 친양자로 입양을 하였기 때문에 정과 갑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정답찾기 ④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부의 자녀로 추

정을 하기 때문에 갑이 C에 대해 따로 인지를 할 필요는 없다.

○답짜하기 ① 협의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 갑과 을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이므로 이혼 숙려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② 입양 당시 병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A가 병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정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③ 친양자로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야 한다.

⑤ 친양자 입양이 아닌 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을이 사망을 할 경우 병은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반면에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갑이 사망을 할 경우 정은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16 범죄 성립 여부 이해

문제분석 표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된 경우이다.

정답찾기 ㄱ. 13세의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답짜하기 ㄷ. 병이 골목에서 맹견에게 쫓기다가 피할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인근 주택으로 들어간 경우는 긴급 피난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ㄹ. 정이 딸을 위협한 사람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로 인정된 경우는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17 형사 절차 이해

문제분석 (가)는 피고인 을에 대해 지방 법원 단독 판사에 의해 이루어진 1심 재판 결과이고, (나)는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진 2심 재판 결과이다.

정답찾기 ④ 을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을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답짜하기 ①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절차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자신을 석방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재판 과정이 아닌 기소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선고 유예이다. 집행 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다.

③ 1심 재판이 지방 법원 단독 판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2심 재판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졌다.

⑤ 형사 재판 과정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18 근로자의 근로 계약 이해

문제분석 연소 근로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갑과 달리 을은 연소 근로자인데, 성인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찾기 ③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답짜하기 ①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경우 15세 미만인 자도 취업이 가능하다.

② 연소 근로자의 1주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주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모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통화의 형태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19 국제법의 법원(法源) 및 국제기구 이해

문제분석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에스게라-바르세나스 협정'은 당사국 간의 명시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조약이다. A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에 해당하므로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정답찾기 ㄴ.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국제 연합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 국적이 다른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ㄷ.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답짜하기 ㄱ.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당사국이 불복할 경우 국제 사법 재판소가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ㄹ. 조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행위 주체들에 대하여 포괄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국제 관습법이다.

20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국제 사회에서 각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한다고 보는 갑의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며, 국제 문제가 국가 간 연합이나 협력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보는 을의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정답찾기 ③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의 문제가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답짜하기 ①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본다.

②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자유주의적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의 전체 이익은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⑤ 현실주의적 관점은 동맹 등으로 이루는 세력 균형을 통해 국가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보는 반면에, 자유주의적 관점은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 국제 평화가 보장된다고 본다.

실전 모의고사 2회

본문 107~111쪽

1 ①	2 ①	3 ②	4 ②	5 ②
6 ④	7 ④	8 ④	9 ②	10 ②
11 ③	12 ③	13 ③	14 ③	15 ②
16 ⑤	17 ⑤	18 ⑤	19 ①	20 ②

1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이해

문제분석 그림에 제시된 3가지 특징은 모두 근대 민주 정치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대의제 실시'와 '입헌주의 원리에 따른 기본권 보장'은 현대 민주 정치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며 '여성의 정치 참여 제한'은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따라서 A는 근대 민주 정치, B는 현대 민주 정치, C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이다.

정답찾기 ① 근대 민주 정치와 달리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가 확립되었다.

오답짜기 ②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국민 주권에 기반을 둔 민주 정치가 실시되었다.

③ 노동자의 참정권 확대 운동인 차티스트 운동은 근대 민주 정치에서 현대 민주 정치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④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과 같은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하였다.

⑤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는 공직 담당자 선출 시 추첨제와 운반제를 활용하여 모든 시민에게 공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였다.

2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은 광역 지방 의회, ㉡은 기초 지방 의회, ㉢은 광역 자치 단체장, ㉣은 기초 자치 단체장이다.

정답찾기 ① 우리나라 기초 지방 의회 지역구 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되는 중·대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된다.

오답짜기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인 광역 지방 의회와 기초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한다.

③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인 광역 지방 의회와 기초 지방 의회는 모두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을 가진다.

④ 지방 의회 지역구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은 모두 주민 소환의 대상이다.

⑤ 광역 자치 단체장과 기초 자치 단체장 모두 지역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3 기본권 이해

문제분석 A는 청구권, B는 자유권이다.

정답찾기 ②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아야 보장·실현되는 방어적·소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오답짜기 ①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③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④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⑤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 및 침해를 받지 않아야 실현될 수 있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4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비교

문제분석 갑국과 을국의 정당별 의석률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 등을 단서로 하여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를 비교하여야 한다. 또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각각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과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을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찾기 ② 갑국의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내각 불신임권이 있다면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며, 을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행정부 수반은 임기가 보장된다.

오답짜기 ① 갑국의 행정부 수반이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A당 소속이 아니라 B당 소속이라면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며,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인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③ 을국의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면 을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며,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인 갑국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A당 소속이며 여대야소 현상이 발생한다.

④ 갑국의 A당 의원이 각료를 겸직하고 있다면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며, 을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탄핵 소추권이 있다.

⑤ ㉡은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인데 각종 동의·승인권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5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가)는 자유 민주주의, (나)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찾기 ②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오답짜기 ①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과 최저 임금제의 실시는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③ 권력 분립을 위한 국가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강조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④ 자유 민주주의와 달리 복지 국가의 원리는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의 증진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경제 활동에 개입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⑤ 복지 국가의 원리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 강조하고 있다.

6 우리나라 헌법 기관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A는 헌법 재판소, B는 대통령, C는 국회, D는 대법원이다.

정답찾기 ④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지는 기관은 대법원이다.

오답피하기 ①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을 담당하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지는 기관은 법원이다.

② 헌법 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담당하며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하였을 때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이다.

③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담당하는 기관은 감사원이다.

⑤ 헌법 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7 우리나라 선거 제도 이해

문제분석 첫 번째 제시문은 투표 기간에 원양 어선, 외항 여객선 및 화물선 등에 승선하고 있어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상 투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제시문은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소개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다양한 유권자의 의견이 정치 과정에 투입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정답찾기 나. 기표 부분이 봉합된 상태로 수신되는 실드 팩스를 통해 투표지를 수신하면 투표자의 투표 내용을 타인이 알 수 없어 비밀 선거의 원칙을 보장할 수 있다.

ㄹ. 선상 투표는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선원들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선거권 연령 하향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범위를 확대해 주고 있으므로 모두 국민의 의견이 정치 과정에 투입되는 것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오답피하기 가. 선상 투표는 유권자 중에 투표하기 어려운 선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로 유권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ㄷ. 선거권자 연령 하향이 유권자들의 표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 선거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은 아니다.

8 정당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국은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두 정당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갑국의 정당 제도는 양당제이다. 을국은 정권 획득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3개 이상 존재하므로 을국의 정당 제도는 다당제이다.

정답찾기 ④ 양당제에서는 다당제에 비해 안정된 국정 운영 가능성이 높다.

오답피하기 ①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어려운 것은 양당제이다.

② 다당제에 비해 양당제에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③ 다당제에 비해 양당제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 이익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

⑤ 양당제에 비해 다당제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9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A는 시민 단체, B는 정당이다.

정답찾기 ② 정당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공직 선거를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으며 정치적 책임을 진다.

오답피하기 ① 로비 활동을 통해 사익을 실현하기도 하는 것은 이익 집단이다.

③ 시민 단체는 대의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④ 시민 단체와 정당은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⑤ 시민 단체와 달리 정당은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10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분석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한 법률관계는 효력이 있다고 보는 A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B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정답찾기 ②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을 줄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오답피하기 ①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작용을 강조한 것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③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인정하는 원칙은 소유권 절대 원칙이다.

④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⑤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계약 자유의 원칙과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인 계약 공정의 원칙 모두 현대 민법에서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11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은 미성년자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을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병은 미성년자이지만 혼인하였으므로 성년으로 의제되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③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갑의 법정 대리인은 갑과 병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반면 병은 성년으로 의제되어 갑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을을 속였으므로 갑의 법정 대리인은 갑과 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을은 갑과 계약 체결 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④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병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갑과 병이 자유로운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에 의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12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특수한 성립 요건이 정해져 있는 특수 불법 행위 중 A는 타인의 가해 행위 또는 물건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의 배상 책임,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해당한다.

정답찾기 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직원이 업무상 부주의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혀 을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진 경우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해당한다.

ㄷ.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건물의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쳐 병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진 경우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ㄱ.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갑이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여 갑의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진 것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정과 무가 공동으로 행인을 폭행한 후 정과 무가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 것은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에 해당한다.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은 타인의 가해 행위 또는 물건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A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재판상 이혼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며 자녀 A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갑이 가지고 을은 갑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자료에 나타나 있다.

정답찾기 ③ 갑이 자녀 A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므로 갑은 을에게 A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이혼은 협의상 이혼이다. 자료에 나타난 갑과 을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이다.

② 일반적인 경우 양육권을 가지지 못하게 된 을은 자녀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갖게 된다.

④ 행정 관청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은 협의상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⑤ 갑과 을이 이혼하더라도 을과 A의 친자 관계는 유지되므로 A는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14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은 심실 상실자의 행위로 책임이 조각되는 사례, 을은 범죄 성립 사례, 병은 긴급 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 정은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되는 사례를 말하고 있다. A가 조각되는 사례를 한 사람이 말했으므로 A는 위법성이며, B가 조각되는 사례를 두 사람이 말했으므로 B는 책임이다.

정답찾기 ③ 변호사가 딸의 생명에 대한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를 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A는 위법성, B는 책임이다.

② 친구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친구 아버지의 노트북을 훔쳐서 판매한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④ 9세 어린이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⑤ 권투 선수가 경기 중에 상대 선수를 때린 경우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15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자료에서는 ○○법 ○○조항이 범죄의 구성 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A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임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②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의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답피하기 ① 관습법을 근거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③ 형벌 법규는 시행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④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⑤ 범죄 행위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16 형벌과 형의 선고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은 벌금 30만 원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을은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병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갑, 을, 병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답찾기 ⑤ 집행 유예와 선고 유예는 모두 유죄 취지의 판결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선고받았다.

② 갑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 지방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갑의 벌금형 집행은 유예된다.

③ 을이 2년간의 집행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징역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선고 유예는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17 근로 계약 사례 분석

문제분석 갑과 을은 각각 병과 주 5일, 하루에 7시간을 근로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작성하였다. 근로 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그런데 갑과 달리 을은 연소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 근로도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찾기 ⑤ 을은 현재 근무일에 7시간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을은 연소 근로자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1일 1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무일에 20시까지 근로 시간을 연장해서 일할 수 없다. 반면 갑은 연소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를 한다면 근무일에 20시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오답피하기 ① 갑과 을 모두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갑과 을은 모두 유급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③ 을은 주 5일(수~일)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을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더라도 휴일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은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④ 갑이 근무일에 근로 계약에 따라 일한 경우 10시부터 18시까지 근로하면서 휴게 시간 1시간(13시부터 14시까지)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한 시간당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병은 갑에게 하루 임금으로 7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A는 안전 보장 이사회, B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정답찾기 ⑤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당사국에게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답짜기 ① 국제 연합의 형식상 최고 의결 기관은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이다.

② 상임 이사국인 갑국과 달리 비상임 이사국인 을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 의사 결정 과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국제기구나 개인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④ 국제 포경 규제 협약은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활용할 수 있다.

19 국내법과 국제법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은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조약에 해당한다. ㉡은 국내법 중 법률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① 우리나라에서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이 가지며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가 가진다.

오답짜기 ② 조약은 체결한 당사자(국가나 국제기구)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조약과 달리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③ 국내법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집행 기구가 있다.

④ 일반적으로 조약과 법률은 모두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 선거 결과의 분석

문제분석 갑국은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가 다르므로 이를 반영한 정당별 득표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표)

구분	지역구 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수				
	A당	B당	C당	D당	합계
선거구 1	200	100	500	200	1,000
선거구 2	400	400	400	800	2,000
선거구 3	200	300	400	100	1,000

선거구 4	400	600	200	800	2,000
선거구 5	400	1,000	400	200	2,000
선거구 6	400	600	800	200	2,000
계	2,000	3,000	2,700	2,300	10,000

지역구 의원은 선거구 1은 C당, 선거구 2는 D당, 선거구 3은 C당, 선거구 4는 D당, 선거구 5는 B당, 선거구 6은 C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다. 비례 대표 의석은 A당이 1석($5석 \times 0.2 = 1.0$), B당이 2석($5석 \times 0.3 = 1.5$), C당이 1석($5석 \times 0.27 = 1.35$), D당이 1석($5석 \times 0.23 = 1.15$)을 배분받는다.

정답찾기 ② B당 소속 당선자 수는 3명, A당 소속 당선자 수는 1명이므로 B당 소속 당선자 수는 A당 소속 당선자 수의 3배이다.

오답짜기 ① 갑국의 지역구 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하고 있으므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C당의 정당 득표율은 27%, C당의 지역구 의석률은 50%이다. D당의 정당 득표율은 23%, D당의 지역구 의석률은 33.3%이다. 따라서 C당과 D당 모두 지역구 의석률은 정당 득표율에 비해 높다.

④ 갑국에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지역구 후보자들이 선거구 전체에서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므로 별도의 정당 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권자는 1인 1표를 행사하였다.

⑤ 선거구 1에서 C당 후보자는 500표를 얻었고, 선거구 4에서 B당 후보자는 600표를 얻었으므로 선거구 4의 B당 후보자가 더 많은 수의 표를 얻었다.

실전 모의고사 3회

본문 112~116쪽

1 ①	2 ④	3 ②	4 ①	5 ③
6 ③	7 ⑤	8 ③	9 ②	10 ⑤
11 ②	12 ④	13 ②	14 ③	15 ④
16 ③	17 ①	18 ④	19 ③	20 ②

1 우리나라 국가 기관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A는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 심의하는 B는 국무 회의,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C는 국회이다.

정답찾기 ㄱ.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ㄴ. 국가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국회에 있다.

오답짜기 ㄷ. 국무 회의의 심의 내용은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

ㄹ. 국회 의원은 국무 회의의 구성원 중 국무총리, 국무 위원을 겸할 수 있다.

2 기본권 유형의 이해

문제분석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따라서 A는 사회권이고, B와 C는 (가), (나)의 질문에 따

라 자유권이나 청구권에 해당하게 된다.

정답찾기 ④ (가)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 받기 않아야 실현되는 권리인가?'라면 B는 청구권, C는 자유권이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될 권리는 청구권이 아닌 자유권이다.

오답짜기 ① 사회권은 자유권과 청구권에 비해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②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는 자유권으로 B가 자유권이라면 C는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③ C가 자유권이면 B가 청구권이다. 소극적·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며 (가)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다.

⑤ (나)가 '적극적 권리인가?'라면 B는 자유권, C는 청구권이다. 국가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3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에서는 정치 현상이 인간 사회 어디에서든 조직이 형성되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다만 조직의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정치를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ㄱ. 넓은 의미의 정치에는 좁은 의미의 정치도 포함된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 해결 과정은 넓은 의미의 정치 현상에도 포함된다.

ㄴ. 넓은 의미의 정치가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 전체를 의미한다.

오답짜기 ㄴ.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정치를 좁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다.

ㄷ.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정치를 좁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다.

4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은 형식적 법치주의, 을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정답찾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의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면 정의에 어긋난 법이라도 효력이 있다고 본다.

오답짜기 ②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법률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며, 이는 정당하지 않은 법에 대해 의회의 입법권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법치주의를 긍정하며, 이는 곧 정치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경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법치주의를 긍정하며, 이는 곧 법에 근거한 정치권력 행사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법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5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권력 분립 제도 도입과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 확립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적법 절차의 원리 준수는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며 전통문화의 진흥은 문화 국가의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따라서 A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정답찾기 ③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이다.

오답짜기 ① ㉠은 갑, ㉡은 을이다.

② 국제법의 존중과 관련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④ 국가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는 국민주권주의이다.

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복지 국가의 원리의 실현과 관련된 헌법 규정이다.

6 근대 사회 계약론의 내용 이해

문제분석 자연 상태를 평화롭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은 홉스이며, 대의제를 옹호하는 것은 로크이다. 따라서 A는 홉스, B는 루소, C는 로크이다.

정답찾기 ③ 로크는 자연권의 일부 신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답짜기 ① 근대 사회 계약론자들은 모두 국가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본다.

② 2권 분립을 주장한 사회 계약론자는 로크이다.

④ 로크는 저항권을 인정한다.

⑤ 일반 의지에 입각한 정치 공동체 구성을 주장한 것은 로크가 아닌 루소이다.

7 선거구 제도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현행 선거구 제도는 3개의 선거구에서 6명의 의원을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하는데, 선거구당 선출 의원 수가 같으므로 선거구당 선출 의원은 2명이며 이때의 선거구 제도는 중·대선거구제이다.

정답찾기 ㄷ.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므로 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정당이 많다. 또한 선거에서 군소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도 커서 전국적으로 군소 정당이 난립할 경우 정국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ㄴ. 동일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므로 동일 선거구 내에서 당사자 간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답짜기 ㄱ. 입법 과정에 다양한 민의 반영이 어려운 경향이 있는 것은 소선거구제이다.

ㄴ. 소수당이나 신인 정치인의 의회 진출에 불리한 것은 소선거구제이다.

8 선거 결과의 분석 및 추론

문제분석 현행 제도의 가 선거구에서는 A당과 B당, 나 선거구에서는 A당과 D당, 다 선거구에서는 B당과 C당의 후보자가 당선되어 정당별 의석수는 A당과 B당이 각각 2석, C당과 D당이 각각 1석이었다. 개편안을 최근 선거에 적용했을 때 가-1 선거구에서는 A당, 가-2 선거구에서는 C당, 나-1 선거구에서는 B당, 나-2 선거구에서는 A

당, 다-1 선거구에서는 C당, 다-2 선거구에서는 B당 후보자가 당선되어 정당별 의석수는 A당, B당, C당 각각 2석이다.

정답찾기 ③ B당의 의석은 현행과 개편안 적용 이후 모두 2석으로 동일하지만, C당의 의석은 1석에서 2석으로 증가한다.

오답피하기 ① A당의 의석수는 변화하지 않는다.

② 의회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수는 4개에서 3개로 감소한다.

④ A당과 D당의 의석수 격차는 현행 제도에서 1석이지만 개편안에서는 2석으로 의석수 격차가 커진다.

⑤ E당은 현행과 개편안 모두에서 0석을 차지한다.

9 정부 형태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표에는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는지 여부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조건에 따라 주어진 상황과 정부 형태를 적절히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답찾기 ㄱ. 사법부의 독립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에서 보장된다. 따라서 (가)에는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ㄷ.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면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고 을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 것은 대통령제이므로 (나)에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가?'가 들어가면 갑국에는 '아니요', 을국에는 '예'라는 답이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ㄴ.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 것은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은 여소야대가 아닌 여대야소이다.

ㄹ. 을국에서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면 을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10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A는 공익보다 특수 이익을 중시하므로 이익 집단이며, B와 C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각각 시민 단체와 정당 중 하나이다.

정답찾기 ⑤ 정당은 정치권력을 추구하지만, 시민 단체는 그렇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이익 집단이 아닌 정당이다.

② 시민 단체와 정당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시민 단체가 아닌 정당이다.

④ 시민 단체와 정당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11 혼인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과 을의 혼인은 형식적 요건(혼인 신고)을 갖추고 있지만, 병과 정의 혼인은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

정답찾기 ㄱ. 18세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의제되어 민법상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ㄷ. 병과 정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상태의 부부이다. 법률혼 관계가 아닌 경우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ㄴ. 병과 정의 혼인은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

ㄹ. 형식적 요건 충족 유무와 관계없이 부부간에는 동거, 협조, 부양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12 유언과 상속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사례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 을과 양자로 들이지 않은 무는 갑의 사망 시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정의 경우 갑과 법률혼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정답찾기 ④ 유언장이 무효이고 갑과 정의 혼인 신고를 한 상태라면 상속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갑의 배우자인 정의 자녀인 병의 법정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법정 상속을 받는다.

오답피하기 ① 유언장이 유효하고 갑과 정의 혼인 신고를 한 상태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병과 정의다.

② 유언장이 유효하고 갑과 정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인 병뿐이다.

③ 유언장의 유효 여부나 갑과 정의 혼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무는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다.

⑤ 유언장이 무효이고 갑과 정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녀인 병뿐이다.

13 민법의 기본 원칙의 변화 이해

문제분석 ㉠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 ㉡에는 계약 공정의 원칙, ㉢에는 사유 재산권 존중(소유권 절대)의 원칙, ㉣에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들어간다.

정답찾기 ㄱ. 계약 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원칙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ㄷ. 사유 재산권 존중(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서구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이 반영되어 나타났으며, 사유 재산권 중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을 전면에 내걸고 강조한다.

오답피하기 ㄴ. 수정된 민법의 기본 원칙들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을 대체했다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ㄹ.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이다.

14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일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과는 달리 특수한 성립 요건이 정해져 있는 불법 행위를 특수 불법 행위라고 하는데, 제시된 사례에서는 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나타나 있다.

정답찾기 ③ 사례에서 갑의 불법 행위는 일반 불법 행위이고, 을의 불법 행위는 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자신의 과실로 인해 중상을 입은 병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② 피용자가 사무 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의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사용자의 배상 책임은 피용자(갑)가 사무 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직접적 가해자인 피용자(갑)의 불법 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발생한다.

⑤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사무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할 경우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15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써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하였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찾기 ④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거래 당시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추인할 때까지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거래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오답짜기 ① 갑과 을의 매매 계약에 대한 취소권은 갑과 병에게 있다.

②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며 부모 동의 여부에 따라 취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③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당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⑤ 미성년자가 속임수써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하였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갑과 법정 대리인인 병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16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형사 절차는 수사와 공판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찾기 ③ 피고인 신문 단계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오답짜기 ① 수사는 범인을 발견하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활동으로, 고소나 고발이 없더라도 현행범의 체포, 자수, 수사 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개시될 수 있다.

②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④ 구속 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구속 이후 기소 이전에 청구할 수 있다.

⑤ 갑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항소할 수 있으므로 갑이 항소하지 않은 것만으로 형벌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17 형벌과 보안 처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징역은 형벌, 사회봉사 명령은 보안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ㄱ. 징역은 형벌 중에서도 자유형에 해당한다.

ㄴ. 법원은 갑에게 대안적 제재 수단인 보안 처분, 구체적으로는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였다.

오답짜기 ㄷ. 유예 기간이 끝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집행 유예가 아닌 선고 유예이다.

ㄹ.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갑은 교도소에 구금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갑이 유예 기간 2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 6월의 형 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18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근로자 을은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인데,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정답찾기 ④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연소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임금 지급 조건이 적용된다. 연소 근로자라는 이유로 친권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게 된다.

오답짜기 ①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맺어야 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

②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한다.

③ 근로 계약 내용 중 일부가 관계 법령에 어긋날 경우 근로 계약 전체가 아니라 해당 부분만 무효이다.

⑤ 연소 근로자의 연장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하루 1시간만 가능하다.

19 조약과 국제 관습법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조약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 간에 체결된 명시적 합의를 의미하며,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성립하는 국제법이다.

정답찾기 ③ 문서 형식의 합의가 일반적인 것은 조약이며, (가)에 해당 질문이 들어가면 A는 조약, B는 국제 관습법이다. 교토 의정서는 조약의 예이다.

오답짜기 ①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국제 관습법이므로, (가)에 해당 질문이 들어가면 A가 조약이라는 가정과 충돌한다.

②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다.

④ (나)가 '국가나 국제기구 상호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인가?'라면 B는 조약인데,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은 국제 관습법이다.

⑤ 조약과 국제 관습법은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A는 국제 사법 재판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 C는 총회이다.

정답찾기 ②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의 상임 이사국 및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주요 안전에 대해서는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만 반대하더라도 의안은 부결되며, 이와 관련한 상임 이사국의

권리를 거부권이라고 한다.

○답짜하기 ①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다만,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 사법 재판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③ 총회에서의 의결은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로 표결한다.

④ 국제 사법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이 서로 합의하여 제소해야 재판이 시작되지만,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가 간 합의가 없더라도 국제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⑤ 안전 보장 이사회와 총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국가이다.

실전 모의고사 4회

본문 117~121쪽

1 ④	2 ⑤	3 ④	4 ④	5 ②
6 ④	7 ④	8 ②	9 ④	10 ③
11 ⑤	12 ②	13 ④	14 ⑤	15 ②
16 ④	17 ③	18 ②	19 ③	20 ④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좁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을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에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정치로 보지 않으나,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정치로 보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찾기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를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이라고 보므로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므로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답짜하기 ① 국무총리가 명령을 발표하는 것은 국가 현상이므로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모두에서 정치로 본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시장 상인 조합회에서 회원들이 조합 규칙을 만드는 것은 국가 현상이 아니므로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만 정치로 본다.

③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⑤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소수의 통치 엘리트에 의한 통치 행위를 정치로 본다.

2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법치주의의 유형 중 A는 ○○법의 내용을 고려하여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법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이고, B는 ○○법의 내용과 상관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정답찾기 ⑤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기본권 제한 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중시하느냐 중시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답짜하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입법 절차의 합법성을 강조한다.

②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③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

3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문제분석 미성년자인 갑은 부모의 동의 없이 고가의 자전거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미성년자인 을은 부모 동의를 위조하여 고가의 자전거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이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지만, 을은 부모의 동의를 위조하여 고가의 자전거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을 또는 을의 부모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찾기 가. 갑은 자전거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을은 자전거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나. 계약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자전거 판매업자가 몰랐다면 자전거 판매업자는 자전거 구매 계약에 대한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 을이 체결한 계약은 부모의 동의를 위조하여 체결하였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유효하여 자전거 판매업자가 을의 부모에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반면 갑이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자전거 판매업자가 갑의 부모에게 자전거 구매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갖는다.

○답짜하기 나. 갑의 부모는 자전거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을의 부모는 자전거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권리는 자유권이므로 A는 자유권이고, B와 C는 사회권과 청구권 중 하나이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므로 C는 사회권이다. 따라서 B는 청구권이다.

정답찾기 ④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답짜하기 ① 사회권과 청구권은 자유권과 달리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따라서 (가)에 해당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

②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본질적 권리는 평등권이다. 따라서 (가)에 해당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

③ 사회권과 청구권은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⑤ 자유권은 사회권, 청구권과 달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5 전형적인 정부 형태 이해

문제분석 T+2대에 의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B당이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아니므로 T+2대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다. 갑국에서 정부 형태는 1회 변경되었으므로 T대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이다. T+1대는 의원 내각제인지 대통령제인지 주어진 자료로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

정답찾기 ㄱ.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와 달리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된다.

ㄴ. T+1대가 의원 내각제라면 의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므로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오답짜기 ㄴ. T대는 의회 과반수 의석 정당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같은 의원 내각제이고, T+2대는 의회 과반수 의석 정당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다른 대통령제이므로 T+2대에 비해 T대에 행정부와 의회 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ㄷ. T+1대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라면 T+1대에 의회 과반수 정당이 없으므로 A당의 의석 점유율이 50% 미만이다. 이 경우에는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난다. T+2대에는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과 의회 과반수 의석 정당이 다르므로 T+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난다.

6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분석 헌법 재판소는 ○○ 지방 법원이 노동조합법 제94조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하였다. 즉,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한 것이다.

정답찾기 ㄱ. 헌법 재판소는 중업원이 부당 노동 행위를 했을 때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정한 법률 내용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A 법인은 중업원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ㄴ. 위헌 법률 심판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가능하다.

ㄷ.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의 금액이 부과되며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다.

오답짜기 ㄴ.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없어도 법원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7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분석 국제법의 법원 중 문서 형식으로 된 합의가 일반적인 것은 조약이다. 따라서 B는 조약이고, A와 C는 각각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정답찾기 ④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은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짜기 ① 국내 문제 불간섭은 국제 관습법의 사례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의 사례이다.

② 우리나라에서 국제법은 헌법보다 하위법 체계에 속한다.

③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은 조약과 달리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갖는다.

⑤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조약의 경우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 등 주요 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8 우리나라 주민 참여 제도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 주민 참여 제도 중 A는 주민 소환 제도, B는 주민 투표 제도, C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이다.

정답찾기 ㄱ. 주민 소환 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의원 제외)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에 태만한 경우 등에 주민들의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ㄷ. 주민 소환 제도, 주민 투표 제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 등은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짜기 ㄴ. 지방 자치 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법 규범이 규칙이며, 지방 자치 단체장은 규칙 제정권이 있다. 지방 자치 단체장이 규칙을 제정할 경우 주민 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

ㄴ. 주민이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지방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청구 내용대로 조례가 제정, 개정,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9 정치 참여 집단 이해

문제분석 각 카드가 어떤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에 해당하는지와 각 카드의 해당 점수 및 갑~정의 획득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카드 1>	<카드 2>	<카드 3>	<카드 4>	<카드 5>	<카드 6>
정당(1점)	정당(1점)	3개 모두 해당(3점)	(가)	시민 단체, 정당(2점)	정당(1점)

갑	5점
을	6점+
병	7점
정	5점+

정답찾기 ㄱ.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가면 갑은 5점, 정은 6점이 된다.

ㄴ.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가면 을은 9점이 되어 총점이 가장 높게 된다.

ㄷ.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모두 여론 형성 기능을 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가면 <카드 1>~<카드 6>은 모두 정당의 특징에 해당한다.

오답짜기 ㄴ. 비영리성, 비권력성, 자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시민 단체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가면 을과 병은 모두 7점이다.

10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게 영유아 보육 책임 및 이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 등의 노력 의무를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다.

정답찾기 ③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오답파헤치기 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②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④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민 주권주의 및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11 특수 불법 행위 이해

문제분석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중 첫 번째 사례는 미성년자 갑의 책임 능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두 번째 사례는 사용자 배상 책임, 세 번째 사례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과 관련이 있다.

정답찾기 ⑤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공작물 등의 소유자는 손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진다.

오답파헤치기 ① 갑이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갑의 부모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만,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면 갑의 부모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갑이 미성년자라도 책임 능력이 있으면 갑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의 배상 책임 사례에서 피용자와 사용자가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④ 병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있어야 사용자인 을이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진다.

12 혼인과 이혼 이해

문제분석 갑과 을은 협의상 이혼을 하였고, 갑과 병은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을과 정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이므로 혼인 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정답찾기 ②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양자와 친양자의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

오답파헤치기 ① 협의상 이혼을 할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A가 양육할 자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혼 숙려 기간을 단정할 수 없다.

③ 협의상 이혼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한 때,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된다.

⑤ 사실혼은 혼인 관계 종료를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13 상속 제도 이해

문제분석 갑은 유언을 남겼으므로 유언이 효력이 있으면 유언에 따른다. 유언이 효력이 없으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갑의 유가족 중 배우자인 을과 자녀인 병과 정이 법정 상속권자가 된다. A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인지 절차를 거친 자녀 C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

정답찾기 ④ 갑의 유언이 효력이 있다면 법정 상속권자 중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물려받는 병을 제외한 을과 정이 법정 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오답파헤치기 ① 인지 절차를 거친 C는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 B는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고, 홀어머니 D는 직계 존속이므로 직계 비속인 자녀 C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

② 사실혼 배우자인 B는 법정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A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다.

③ 무와 D는 각각 갑과 A의 직계 존속이므로 상속 2순위이다. 상속 1순위인 직계 비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와 D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⑤ 갑의 유언이 효력이 없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면 을과 병, 정이 1.5 : 1 : 1의 비로 법정 상속을 받는다. 따라서 을은 6억 원(=14억 원×3/7), 병과 정은 각각 4억 원(=14억 원×2/7)씩을 상속받는다.

14 범죄 성립 요건 이해

문제분석 범죄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한다. (가) 사례의 주요 쟁점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 조각 여부, (나) 사례의 주요 쟁점은 심신 상실자로서 책임 조각 여부, (다) 사례의 주요 쟁점은 피할 수 없는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 조각 여부, (라) 사례의 주요 쟁점은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여부이다.

정답찾기 나. 범죄 성립 요건 중 책임을 법적 비난 가능성이라고도 한다.

다. 피할 수 없는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며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였으므로 법원은 병의 폭행 행위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르. 위법성 또는 책임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된다는 것이다. 범죄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순으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오답파헤치기 가. (가)의 법원은 정당방위, (라)의 법원은 정당 행위로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정당방위, 정당 행위는 모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15 소년 사건 처리 절차 이해

문제분석 소년은 성인에 비해 심신의 성장이 미숙한 상태이므로 이들의 범죄 사건이나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비행 사건의 경우 성인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한다.

정답찾기 ② 12세인 자는 경찰서장이 직접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으며,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범상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오답파헤치기 ① 9세인 자는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받지 않고, 소

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연령인 10세 이상 19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③ C에게는 형사 재판에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둘을 함께 부과할 수는 없다.

④ 형벌은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C에게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검사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은 기소하여 형사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이다.

16 형사 절차 이해

문제분석 형사 절차는 크게 수사 → 기소 → 공판 → 선고 → 형 집행 순으로 이루어진다. 국민 참여 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 제도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정답찾기 ④ 사회 봉사 명령, 수강 명령은 치료 감호, 보호 관찰 등과 함께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사회 질서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인 보안 처분에 해당한다.

오답파하기 ① 국민 참여 재판은 지방 법원 합의부 관할 형사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1심 법원이 지방 법원 합의부이므로 항소심을 담당한 2심 법원은 고등 법원이다.

②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무죄 확정이 아니다. 따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계속 적용된다.

③ 징역은 정역을 부과하는 자유형이고, 집행 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⑤ 항소심 판결은 집행 유예 판결인데 집행 유예는 유죄 선고에 해당하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7 청소년 근로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청소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경우 15세 미만인 자도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보건상 유해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갑과 병이 옳게 답했으므로 (가)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야 한다.

정답찾기 ③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오답파하기 ① 미성년 근로자라도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최저 임금 제도는 미성년 근로자와 성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④ 18세 미만인 자는 사용자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⑤ 근로 기준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한다.

18 근로자 권리 구제 절차 이해

문제분석 갑은 노동 3권이 침해되는 부당 노동 행위 및 부당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을은 부당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정답찾기 ㄱ. 갑과 을은 모두 부당 해고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갑에 대한 해고와 달리 을에 대한 해고에 대해서는 ○○ 회사의 노동조합이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오답파하기 ㄴ. 을과 달리 갑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ㄷ.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 회사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 우리나라 헌법 기관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A는 대통령, B는 국무총리, C는 국회, D는 대법원, E는 헌법 재판소이다.

정답찾기 ③ 국무총리와 국회는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오답파하기 ①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② 국회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심사권을 갖는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권을 갖는 헌법 기관은 감사원이다.

④ 대통령은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 재판소장 등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헌법 재판소장을 포함하여 9인이다.

20 선거 제도 분석

문제분석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한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현행	지역구	3	1	2	1	1
	비례	3	2	2	2	1
	계	6	3	4	3	2
1안	지역구	4	2	1	1	0
	비례	3	2	2	2	1
	계	7	4	3	3	1
2안	I 권역	3	2	2	2	1
	II 권역	3	1	2	2	2
	계	6	3	4	4	3

정답찾기 ④ A당의 의석 점유율은 1안의 경우 약 38.9%, 2안의 경우 30%이고, B당의 의석 점유율은 1안의 경우 약 22.2%, 2안의 경우 15%이다. 따라서 A당, B당 모두 1안보다 2안이 불리하다.

오답파하기 ① 현행 지역구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이고, 1안의 지역구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이다.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보다 당선자 수가 적으므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 ② 현행에서 C당의 의석 점유율은 약 22.2%이고, 2안에서 의석 점유율은 20%이다. 따라서 C당은 2안보다 현행에서의 의석 점유율이 높다.
- ③ 2안의 경우 의석수는 I 권역에서 E당이 1석으로 가장 적고, II 권역에서 B당이 1석으로 가장 적다.
- ⑤ D당의 경우 현행에서 의석 점유율(약 16.7%)보다 득표율(17.5%)이 높으므로 과소 대표되고, 1안에서도 의석 점유율(약 16.7%)보다 득표율(17.5%)이 높으므로 과소 대표된다. E당의 경우 현행에서 의석 점유율(약 11.1%)보다 득표율(12.5%)이 높으므로 과소 대표되고, 1안에서도 의석 점유율(약 5.6%)보다 득표율(12.5%)이 높으므로 과소 대표된다. 따라서 D당과 E당은 현행과 1안 모두에서 과소 대표된다.

실전 모의고사 5회 본문 122~126쪽				
1 ②	2 ②	3 ④	4 ⑤	5 ④
6 ③	7 ④	8 ④	9 ⑤	10 ③
11 ①	12 ②	13 ②	14 ②	15 ③
16 ②	17 ③	18 ④	19 ③	20 ④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표는 질문을 통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A는 '정치를 국가가 독점하는 현상으로 강제력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로 답했으므로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하고, '예'라고 답한 B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가.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나. 의회의 입법 활동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정치로 본다. 따라서 (가)가 '의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보는가?'라면 ①에 '예'가 들어간다.

오답짜기 다.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국가 수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정치로 본다.

라.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따라서 (나)에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한가?'가 들어갈 수 있다.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해

문제분석 A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에 의한 통치만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통치의 합법성에 더하여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적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찾기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이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오답짜기 ①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고 본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가 권력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위헌 법률 심사제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⑤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3 복지 국가의 원리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찾기 ④ 복지 국가의 원리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강조한다.

오답짜기 ①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은 자유 민주주의이다.

②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가의 역할을 단순히 형식적 자유의 보장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 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강조한다.

③ 민주적인 선거 제도의 규정은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⑤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국민 투표제, 민주적 선거 제도 규정,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4 정치 참여 집단 비교

문제분석 제시된 표에서 특수 이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면서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A는 정당, 특수 이익보다 공익을 추구하지만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B는 시민 단체, 공익보다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C는 이익 집단이다.

정답찾기 ⑤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오답짜기 ① 정치 후원금 제공, 로비 활동 등의 방법으로 집단의 다양한 요구를 표출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이익 집단이다.

② 자신의 활동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③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④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5 국회의 역할과 권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A는 국회이다. 국회의 권한을 입법, 재정, 일반 국정으로 분류해서 나타내고 있다.

정답찾기 ④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헌법 재판소장·대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권, 헌법 재판소 재판관(3인)·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3인) 선출권은 국회의 국가 기관 구성 권한에 해당한다.

오답짜기 ① 헌법 개정안 제안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법률 제정을 위해서 국회 의원 10인 이상 또는 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 ㉔에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심사권이 들어갈 수 있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심사권은 감사원의 권한이다.

⑤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하였을 때 국회가 헌법 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장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

6 자유권과 평등권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에서 A는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므로 자유권, B는 최고 속도 제한 기준이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오토바이나 전기 자전거, 전동 모터보드, 해외 제조 전동 킥보드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침해된다고 주장했으므로 평등권이다.

정답찾기 ③ 평등권의 내용으로 법 앞의 평등, 사회적 특수 계급 제도의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자유권은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②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④ 자유권, 평등권 모두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⑤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7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A와 구별되는 B의 특징을 서술하는 문항에서 총 6점을 얻은 답안을 통해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임을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 답안은 국민에 의해 의회가 구성되는 것은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공통점이므로 (가)에는 대통령제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찾기 ④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 처리가 가능하다.

②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연립 내각이 구성될 경우 정국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

③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와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 모두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권한이 있다.

⑤ (가)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와 구별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독립적으로 조직되는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8 지방 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의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④ 지방 자치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주민 투표 제도, 주민 소환 제도를 들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 모두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②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이다.

③ 주민 자치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그 지방의 공공 문제를 처리하는 자치의 원리이다. 단체 자치는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 정부가 자치를 실행하는 지방 분권의 원리이다.

⑤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 제도의 목적이 주민의 의견 반영을 통한 국가 정책 결정의 신속성은 아니다.

9 연소 근로자의 권리 보호 이해

문제분석 A는 성인 근로자이며, B는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맺어야 한다.

정답찾기 다. 연소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리. B는 17세로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한다.

오답피하기 가. A는 19세로 성년이다. 따라서 A가 부모의 동의 없이 갑과 직접 체결한 근로 계약은 유효하다.

나.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넘지 못한다.

10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 이해

문제분석 자료에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함치, 연령을 이유로 갑~무의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A~C의 상황에 맞는 사례를 판단해야 한다.

정답찾기 ③ B의 경우 연령을 이유로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병(18세)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가의 컴퓨터를 구매한 경우가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에 의해 성립하므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함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②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가의 게임기를 구매한 경우에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위조하여 고가의 가방을 구매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이 배제된다.

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고가의 최신 자전거를 구매한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11 일반 입양과 친양자 제도 이해

문제분석 사례는 갑(여)과 을(남)이 결혼 후 자녀 병과 살던 중 협의사 이혼을 한 후 갑과 정이 재혼을 하고, 정이 병과 일반 입양, 친양자

제도 중 하나를 활용하여 법률상 친자 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을 나타낸다. A는 병이 정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므로 친양자 제도, B는 일반 입양이다.

정답찾기 ㄱ. 친자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로 이혼을 이유로 부모와 자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

ㄴ. 친양자 제도를 활용하여 정과 병이 친자 관계를 형성하려 할 때, 가정 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오답짜기 ㄷ. 일반 입양은 양자의 입양 전 친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유지된다.

ㄹ. 친양자 제도와 일반 입양 모두 을이 병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과 ㉡의 답변은 '아니요'로 같다.

12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분석 표의 A~C 유형을 판단하여 해당하는 사례를 고르는 것이다. A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이다. B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고, 행위자에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는 경우로 범죄가 성립된다. C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지만, 행위자에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없는 경우이다.

정답찾기 ② 을(34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차량을 훔친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고,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오답짜기 ① 갑(15세)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식당에서 음식물을 훔친 행위는 범죄 행위로 B에 해당한다.

③ 병(23세)이 달려드는 맹견을 피하기 위해 막다른 골목에서 옆집 대문을 부수고 대피한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로 A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 정이 현행범인 무(19세)를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찰과상을 가한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로 A에 해당한다.

⑤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도, 치료 감호 처분이라는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3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과 수정 원칙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에서 A는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가해 행위를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그 손해를 행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인 과실 책임의 원칙이고, B는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요건에 따라 관계되는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정답찾기 ②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특정한 영역에서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답짜기 ① 소유권 절대적 원칙은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한다.

③ 과실 책임의 원칙은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④ 과실 책임의 원칙과 무과실 책임의 원칙 모두 책임의 성립 요건과

관련된 원칙이다.

⑤ 현대 민법에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 대체된 것이 아니라 과실 책임의 원칙을 수정·보완한 원칙이다.

14 헌법 소원 심판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A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 갑이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재판의 전제가 된 형법 제314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례이다.

정답찾기 ㄱ.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인 갑과 검사이다.

ㄷ.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오답짜기 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 법원과 헌법 재판소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ㄹ. 헌법 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갑은 해당 조항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며 처벌받을 수 있다.

15 부당 노동 행위의 이해

문제분석 교사가 제시한 A의 사례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 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가 해당되므로 A는 부당 노동 행위이다. (가)에는 부당 노동 행위의 사례가 들어가지 않는다.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이다.

정답찾기 ㄴ.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을 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ㄷ. 사용자가 적법한 쟁의 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를 해고, 징계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오답짜기 ㄱ. 사용자가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는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ㄹ. 사용자가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경우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갑에 대한 형사 절차의 과정 중 수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정답찾기 ②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이 가능하다.

오답짜기 ① 수사 개시는 범죄의 피해자나 이해관계자가 수사 기관에 직접 범인을 처벌하도록 요청하는 고소나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고발, 범인의 자수, 수사 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③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④ 기소가 되면 갑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의 신분이 된다.

⑤ 갑이 기소가 되었어도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거나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7 특수 불법 행위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 불법 행위 유형 중에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사용자의 배상 책임,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의 면책 가능 여부와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에는 면책 가능, ㉡에는 면책 불가능이 들어가고, (가), (나), (다)에는 각각의 사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찾기 나. 사용자의 배상 책임은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가 불법 행위 책임을 지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용자 을이 고용한 병(23세)이 업무상 오토바이로 피자를 배달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행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을이 지는 손해 배상 책임은 사용자의 배상 책임의 사례에 해당한다.

다. 정 의 건물 1층에서 꽃가게를 하는 무(32세)의 꽃가게 건물 외벽 일부가 떨어져서 행인이 다쳤을 때 점유자인 무가 1차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고, 공작물 등의 소유자인 정은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정과 무가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므로 정과 무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가. 대학생 갑(21세)은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가)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르. ㉠에는 면책 가능, ㉡에는 면책 불가능이 들어가므로 들어갈 내용은 서로 다르다.

18 명확성의 원칙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품행이 단정할 것' 개념의 명확성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문 중 일부이다. 헌법 재판소는 '품행', '단정' 등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고,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취지와 용어의 사전적 의미 및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은 명확성의 원칙이다.

정답찾기 ④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답피하기 ①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의 수준은 비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형벌의 효력을 그 형벌이 제정 또는 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③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은 관습법은 성문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어

서 그 내용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부과하거나 가중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19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A는 국가나 국제기구를 당사자로 하여 상호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인 조약, B는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 국제 관습법이다.

정답찾기 ③ 국제 관습법은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오답피하기 ①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조약이다.

② 국내 문제 불간섭은 국제 관습법에 해당한다.

④ 국제 관습법과 달리 조약은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⑤ 조약과 국제 관습법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된다.

20 선거 결과의 분석

문제분석 갑국 의회는 현재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여 의회 전체 의석수를 8석으로 하고자 한다. 현행 선거 결과 의회 의석 분포는 A당 2석, B당 1석, C당 1석, D당 0석이다. 선거 제도 개편 후 의회 의석 분포는 A당 3석, B당 2석, C당 2석, D당 1석이다.

정답찾기 가. 선거 제도 개편 전 B당과 C당의 의석수는 각각 1석으로 같다.

나. 선거 제도 개편 전 전체 의석에서 D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0/4) × 100이고, 선거 제도 개편 후에 전체 의석에서 D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1/8) × 100이므로 개편 후에 전체 의석에서 D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르. 선거 제도 개편 후 A당의 의석수는 3석, C당의 의석수는 2석이다.

오답피하기 다. 선거 제도 개편 후 A당의 경우 득표율은 32.5%인 반면, 의석률은 37.5%이다. B당의 경우 득표율은 25%, 의석률 25%이다. 따라서 B당과 달리 A당이 과대 대표되었다.

있게 되었다.

오답피하기 > ㄱ. 세계 무역 기구는 각국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일방이 아닌 당사국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다.

08 전통 외교와 공공 외교의 비교 이해

문제분석 > 전통 외교가 외교관들을 주체로 하여 국가 간 교섭을 하는 형태였다면, 공공 외교는 민간 주체들까지도 그 주체로 포함하여 외국 대중을 직접 대상으로 국익을 증진시키려는 형태이다.

정답찾기 > ㄴ. 외교관 이외에 민간 주체들까지도 외교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ㄷ. 전통적인 외교가 정치나 안보를 중시하였다면, 공공 외교는 정치나 안보는 물론 사회, 문화 등의 영역도 중시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ㄱ. 공공 외교는 전통적인 외교를 보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통적인 외교, 즉 정부 차원의 공식적 외교의 중요성이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ㄴ. 공식적 외교 주체는 물론 민간 주체들도 외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공식적 외교 주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현상이다.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1회

본문 102~106쪽

1 ④	2 ②	3 ①	4 ②	5 ⑤
6 ③	7 ⑤	8 ②	9 ②	10 ②
11 ③	12 ③	13 ④	14 ②	15 ②
16 ②	17 ⑤	18 ④	19 ①	20 ③

1 지방 자치 이해

문제분석 > 지방 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는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 구성된다. A는 지방 자치 단체장, B는 지방 의회이다.

정답찾기 > ㄱ.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결산의 승인을 할 수 있다.

ㄴ.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역 내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집행 기관이며, 규칙을 제정하고 지역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지방 의회는 조례를 제정 및 개폐할 수 있다.

ㄷ.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모두 지역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다.

오답피하기 > ㄴ.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은 모두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된다. 다만, 지방 의회 의원 중 비례 대표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정부 형태 이해

문제분석 > 대통령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으며,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지위가 일원화되어 있다. 정부 형태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한 학생이 두 명이 있다고 하였고, 갑과 을이 답변을 한 내용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정답찾기 > ②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어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갑과 을이 답변한 내용은 대통령제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고, 병이 답변한 내용은 의원 내각제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정확히 답변한 학생은 갑과 을이 된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내각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모두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다.

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국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하며, 국무 회의 제도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3 근대 민주 정치의 이해

문제분석 A는 근대 시민 혁명이다. 근대 시민 혁명을 계기로 절대 왕정이 무너지게 되었으며, 국민 주권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와 대의제가 발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답찾기 ㄱ. 근대 시민 혁명은 천부 인권 사상, 계몽사상, 사회 계약설 등의 영향을 받았다.

ㄴ. 시민 혁명은 절대 왕정 및 봉건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민 계급이 사회 주도권을 장악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답짜이기 ㄷ. 근대 시민 혁명은 시민의 대표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대의제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ㄹ. 여자, 노예, 외국인을 제외한 성인 남성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이며, 근대 시민 혁명은 재산, 성별 등에 따라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차등 부여하는 한계를 가졌다.

4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의 헌법 재판소 결정문에서 강조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정답찾기 ②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오답짜이기 ① 현대 복지 국가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국민 주권주의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③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④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5 우리나라 국가 기관 간 견제 이해

문제분석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을 갖는 C는 입법부이며, A는 행정부이고, B는 사법부이다.

정답찾기 ⑤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

오답짜이기 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는 기관은 사법부이다.

②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지는 기관은 입법부이다.

③ 국회 의장은 국회에서 국회 의원의 투표로 선출된다.

④ 대통령(행정부)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6 선거 결과 분석

문제분석 현행에서 지역구 의석수는 10석이고, 비례 대표 의석수는 8석이다. 각 정당의 득표율은 A당 15%, B당 20%, C당 30%, D

당 25%, E당 10%이므로, 현행에서 각 정당의 비례 대표 의석은 A당 1석($8 \times 0.15 = 1.2$), B당 2석($8 \times 0.2 = 1.6$), C당 2석($8 \times 0.3 = 2.4$), D당 2석($8 \times 0.25 = 2.0$), E당 1석($8 \times 0.1 = 0.8$)이다. 또한 개편안에서의 각 정당의 의석은 A당 3석($18 \times 0.15 = 2.7$), B당 4석($18 \times 0.2 = 3.6$), C당 5석($18 \times 0.3 = 5.4$), D당 4석($18 \times 0.25 = 4.5$), E당 2석($18 \times 0.1 = 1.8$)이다. 따라서 현행 및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의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석)

정당	현행			개편안
	지역구 의석수	비례 대표 의석수	총 의석수	총 의석수
A당	0	1	1	3
B당	3	2	5	4
C당	4	2	6	5
D당	2	2	4	4
E당	1	1	2	2

정답찾기 ③ A당은 1석에서 3석으로 총 의석수가 증가하고, C당은 6석에서 5석으로 총 의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C당은 개편안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오답짜이기 ① 현행 의회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비례 대표 의원은 각 정당의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유권자는 1인당 1표씩 행사하였다.

② 현행 지역구 선거에서는 선거구당 당선자가 2명 또는 3명이기 때문에 중선거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④ 현행 지역구 선거에서 B당의 득표율은 20%이고, 의석률은 30%이기 때문에 과대 대표되었다. 반면 D당의 득표율은 25%이고, 의석률은 20%이기 때문에 과소 대표되었다.

⑤ D당은 개편 전후의 총 의석수가 4석으로 동일하고, E당도 개편 전후의 총 의석수가 2석으로 동일하다.

7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이해

문제분석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므로, A는 사회권이다.

정답찾기 ⑤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하여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인가?'에 '예'라고 대답한 B는 자유권이 되어야 하고, '아니요'라고 대답한 C는 청구권이 된다.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의 내용에 해당한다.

오답짜이기 ① 사회권은 자유권, 청구권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②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청구권이다. B가 청구권이면, C는 자유권이 된다.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 권리이다.

③ C가 자유권이면, B는 청구권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이기 때문에, (가)에는 해당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

④ (가)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인가?'이면, B는 청구권, C는 자유권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재판 청구권으로서 청구권의 내용에 해당한다.

8 정치 참여 집단 이해

문제분석 정치 참여 집단 중 정치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은 A와 C 중 하나이다. 정당과 시민 단체는 이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당과 시민 단체는 각각 A와 B 중 하나이다. 따라서 A는 정당, B는 시민 단체, C는 이익 집단이다.

정답찾기 ② 정당은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오답피하기 ① 이해관계나 목표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은 이익 집단이다.

③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④ 정치 참여 집단은 모두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한다.

⑤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은 정당이다. 따라서 (가)에는 해당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

9 헌법 재판소의 재판 유형 이해

문제분석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재판을 전제로 하는 심판이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한 A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 된다. '법원의 제청으로 심판이 진행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C는 위헌 법률 심판이며, '아니요'라고 응답한 B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 된다.

정답찾기 ㄱ.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여 이루어진다. 즉, 위헌 법률 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ㄴ.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오답피하기 ㄴ.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다.

ㄷ.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위헌 법률 심판 모두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10 정치 과정 모형 이해

문제분석 정치 과정은 사회 구성원들이 표출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정치 과정 중 투입은 개인이나 집단이 정책 결정 기구인 정부에 대하여 정책을 요구하거나 정부에 대한 지지 또는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산출은 투입된 요구나 지지에 따라 정책 결정 기구가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은 투입, ㉡은 산출이 된다.

정답찾기 ㄱ, ㄴ. 통학 버스 내 어린이 방치 사고가 잇따르자, 통학 버스의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은 투입에 해당한다. ○○ 협회가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에 대한 의무화를 내년부터 실시해 달라고 정부 기관에 요청하는 것도 투입에 해당한다.

ㄴ, ㄷ. 보건 복지부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건 복지부의 대책 발표는 산출에 해당한다. 국회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관련 법 개정도 산출에 해당한다.

11 계약 공정의 원칙 이해

문제분석 ○○ 위원회가 제정한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에는 모바일 게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제한하여 계약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는 민법의 원칙 중 계약 공정의 원칙이 반영된 사례이다.

정답찾기 ③ 계약 공정의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강조한다.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오답피하기 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르면 소유권 행사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해야 한다.

② 사적 자치의 원칙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근거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④ 소유권 절대 원칙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여 개인의 사유 재산은 국가나 다른 사람이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⑤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손해를 발생시킨 위법한 행위라도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12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분석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은 모두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만, ㉢은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찾기 ㄴ. 을이 B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B의 현금과 물건을 가지고 나온 행위는 범죄 전개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이라는 판단인 위법성이 인정된다.

ㄴ. 병이 영장 없이 C를 체포한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에 해당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ㄱ.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 또는 심신 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지만 행위 당시 갑에게는 책임 조각이 가능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ㄷ. ㉠, ㉡에서 갑, 을의 행위는 모두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된다. ㉢에서 병의 행위는 정당 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13 재판상 이혼 사례 분석

문제분석 갑과 을의 재판상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 재산상 손해 배상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양육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 행사 여부 등에 관해 파악해야 한다.

정답찾기 ④ 을은 이혼의 책임이 있는 갑에게 재산상 손해 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 배상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혼인 생활 중 취득한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의 경제권을 누가 가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을은 갑에게 혼인 생활 중 취득한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 법원은 재판상 이혼 시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③ 갑과 을의 재판상 이혼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갑과 을의 이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다.

⑤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해당 자녀에게 면접 교섭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을이 자녀인 병에 대한 양육권을 가질 경우, 갑은 병에게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14 형사 절차 이해

문제분석 갑은 을에 대한 상해죄 혐의로 구속되어 (가)~(라)의 절차를 거쳤다. (가)는 수사 절차, (나)~(라)는 형사 재판 절차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②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갑은 재판 중에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오답짜기 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는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구속 전인 (가) 단계 이전에 법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를 통해 구속 사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갑은 (가)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④ (다) 단계에서 갑은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갑은 수형자가 아니므로 가석방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⑤ 갑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경미한 범죄자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특정한 사고 없이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선고 유예이다.

15 특수 불법 행위 사례 분석

문제분석 (가) 사례는 갑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의 근로자 을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갑은 특수 불법 행위 유형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나) 사례는 A의 자녀 B(5세)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A는 특수 불법 행위 유형 중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찾기 ㄱ.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가해 행위가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감독자 스스로 증명할 경우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짜기 ㄷ.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ㄹ.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이다. 따라서 A가 질 수 있는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다.

16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불명확성의 특징을 가지는 A는 국제 관습

법, 체결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B는 조약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②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체결권 및 비준권은 대통령,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오답짜기 ① 조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에게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③ 국제 관습법과 조약 모두 강제적으로 집행할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국제 관습법과 달리 조약은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성립된다.

⑤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법 상호 간 관계에서 최상위 규범인 헌법보다는 하위에 있다고 본다.

17 근로 계약 사례 분석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사업주 갑과 연소 근로자 을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근로 계약서 내용에 계약 기간, 근로 시간, 근무일 및 유급 휴일, 임금 및 지급 방법,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 등이 제시되어 있다.

정답찾기 ⑤ 취직 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 고용 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 주는 증명서이다. 고등학생 을은 17세로 취직 인허증 없이 근로할 수 있다.

오답짜기 ①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 을의 친권자인 병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법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된다.

② 근로 계약을 맺을 때는 친권자 병의 동의를 얻어 연소 근로자 본인인 을이 직접 사업주 갑과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이므로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④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 을은 친권자 병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18 해고 사례 분석

문제분석 사례에서 갑과 을은 모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를 당했다. 갑에 대한 해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회사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에서는 갑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을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정답찾기 ㄱ.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 근로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회사 노동조합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회사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갑의 정당한 근로 3권 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ㄴ. 을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의 요건 중 해고의 사유와 그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었다.

ㄷ. 을의 경우 ○○회사 노동조합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을의 정당한 근로 3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았다.

오답짜기 ㄹ. 부당 해고의 경우 갑은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 위원회에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19 명확성의 원칙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서 '공익' 개념의 명확성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의 일부이다. 헌법 재판소는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는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이다.

정답찾기 ①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답파헤기 ②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은 관습법은 성문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어서 그 내용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부과하거나 기중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④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의 수준은 비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효력을 그 형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20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이해

문제분석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찾기 ③ 계약 당시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컴퓨터를 판매하였으므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답파헤기 ①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갑이 체결한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미성년자인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 갑과 거래한 상대방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아닌지를 확정하도록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인 갑은 계약 체결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음을 이유로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취소한 미성년자 갑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전 모의고사 2회

본문 107~111쪽

1 ③	2 ⑤	3 ⑤	4 ②	5 ③
6 ②	7 ④	8 ④	9 ③	10 ⑤
11 ④	12 ⑤	13 ③	14 ⑤	15 ①
16 ⑤	17 ④	18 ⑤	19 ⑤	20 ①

1 법의 이념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헌법 제13조 제1항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 민법 제162조 제

1항, 제2항은 시효 제도와 관련한 규정이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시효 제도는 모두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제도이다.

정답찾기 ③ 법적 안정성은 법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폐지되거나 자주 변경되지 않아야 지켜질 수 있다.

오답파헤기 ① 실질적 평등, 배분적 정의를 강조하는 것은 법의 이념 중 정의이다.

②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법의 이념 중 정의이다.

④ “민중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라는 법언에 부합하는 법의 이념은 합목적성이다.

⑤ 해당 시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의 이념은 합목적성이다.

2 법치주의의 유형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법치주의의 유형 중 갑의 관점은 형식적 법치주의, 을의 관점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⑤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가의 법에 따른 지배를 강조하므로 국가의 자의적 지배는 인정하지 않는다.

오답파헤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통치의 정당성을 중시한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정의에 어긋난 법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이라면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다.

④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3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정답찾기 ⑤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의 보장과 최저 임금제 실시는 복지 국가의 원리에 대한 실현 방안이다.

오답파헤기 ①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이다.

②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조항은 국민 주권주의와 관련한 조항이다.

③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조항은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한 조항이다.

④ ‘복수 정당제 및 정당 활동의 자유’는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4 정치 참여 주체의 특징 비교

문제분석 시민 단체와 정당은 이익 집단과 달리 집단의 특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므로 A와 B는 각각 시민 단체와 정당 중 하나이고, C는 이익 집단이다.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정치 참여 주체는 정당이므로 A는 정당이다. 따라서 B는 시민 단체이다.

정답찾기 ㄱ. 정당만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한다. 따라서 ㉠, ㉡에는 모두 ‘아니요’가 들어간다.

ㄷ.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당만의 기능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피해기 > 나.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5 헌법 심판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 재판을 받던 중 갑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으므로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이 진행되었다. 헌법 재판소는 법원의 판단과 달리 '군복 단속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A 원칙은 명확성의 원칙이고, 기본권의 유형 B는 자유권이다.

정답찾기 > ③ 헌법 재판소는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따라 위헌 법률 심판을 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오답피해기 > ①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④ 헌법 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갑은 '군복 단속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⑤ 법원은 당사자의 제청 신청 없이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6 기본권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 수행평가에서 을은 모두 옳게 답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기본권의 유형 A~C를 판단하면 된다. 수단적 권리인 C는 청구권이므로 적극적 권리인 B는 사회권이다. 따라서 A는 자유권이다. 주어진 자료에서 갑은 2점이므로 ㉠에는 옳은 답이 들어가야 하고, 병은 ①, ③ 중 하나에만 옳은 답이 들어간다.

정답찾기 > ② 갑과 을은 ㉠과 ③에 각각 옳은 답이 들어가야 하므로 ㉠과 ③에는 '아니요'가 들어간다.

오답피해기 > ① ㉠에 '예'가 들어가면 옳은 답이다. 따라서 ③에는 옳지 않은 답이 들어가야 하는데 역사상 가장 오래된 권리는 자유권이므로 '예'가 들어간다.

③ 자유권은 청구권과 달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사회권과 청구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⑤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사회권이다.

7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 T+3대에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으므로 T+3대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따라서 여소야대 현상이 1번만 나타나고 정부 형태도 1번만 변화되므로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T대와 T+1대는 대통령제이고, T+2대와 T+3대는 의원 내각제이다.

정답찾기 > ④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회의 탄핵 소추권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인정된다.

오답피해기 > ① 연립 정부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에만 '구성됨'이 들어간다.

② 연립 정부 구성은 의회 의석 점유율 순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A당, C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③ 각료와 의회 의원의 겸직이 가능한 것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다.

⑤ T대~T+3대 중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는 2번 나타난다.

8 정당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 (가), (나)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 A와 B는 각각 양당제와 다당제 중 하나이다. 양당제는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두 정당이 존재하고, 다당제는 정권 획득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3개 이상 존재한다.

정답찾기 > 나.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유권자의 정당 선택의 폭이 넓다.

ㄹ.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 가능성이 높고,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소수의 이익 보호 가능성이 높다.

오답피해기 > 가.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정국 안정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ㄷ.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며,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다.

9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 국무 회의의 부의장은 국무총리이고, 국회는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대통령에게 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국회, B는 국무총리, C는 대통령이다.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 수호 기관의 장인 D는 헌법 재판소장이고, 대법원은 상고심, 재항고심을 담당하므로 E는 대법원장이다.

정답찾기 > ③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 재판소장, 대법원장 모두 국회의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답피해기 >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감사권은 감사원에 있다. 국회는 결산 심사권을 가진다.

② 대법원은 위헌·위법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④ 국무총리, 헌법 재판소장, 대법원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10 선거 결과의 분석

문제분석 > 현재 갑국의 의회 의원은 6명이고 선거구 수도 6개이므로 현행 갑국의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이다. 개편안은 지역구 선거구를 통합하여 3개로 확정하고 각 선거구당 당선자 수가 같으므로 개편안의 선거구 제도는 중·대선거구제이다.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한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수 현황〉

(단위: 표)

구분	가	나	다	라	마	바
A당	700	200	100	100	200	100
B당	300	200	200	100	900	100
C당	500	100	700	100	500	300
D당	400	100	400	400	300	400
E당	100	400	600	300	100	100
합계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선거 결과〉

(단위: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현행	1	1	1	2	1	
개편안	가나/라마/다바	1	1	2	2	0
	가라/나마/다바	1	1	2	2	0
	가라/나다/마바	1	1	2	1	1

정답찾기 ⑤ C당은 선거구 획정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2석을 확보하고, B당은 모두 1석을 확보한다.

오답피하기 ①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보다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② A당과 B당은 현행, 개편안 모두 선거 결과가 동일하다.

③ D당은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선거 결과가 현행과 동일하거나 불리해진다. '가라/나다/마바'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1석을 얻게 된다.

④ '가라/나마/다바'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E당은 1석도 얻지 못한다.

11 친자 관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인 B는 혼인 중 출생자이므로 A와 C는 각각 일반 입양에 의한 양자, 친양자 중 하나이다.

정답찾기 나. 친양자는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단절되므로 (가)에 해당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

르. C가 일반 입양에 의한 양자라면 A는 친양자이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오답피하기 가. 친양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가)에 해당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

디. 인지 절차를 거쳐야 친자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이다.

12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문제분석 A와 B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노트북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와 달리 B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 C는 부모 동의를 위조하여 노트북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모 동의 여부, 동의서 위조 여부 등에 따라 노트북 구매 계약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

정답찾기 디. A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노트북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A의 부모는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르. C는 부모의 동의를 위조하여 노트북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노트북 구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따라서 C와 C의 부모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가. 갑은 판매 당시 A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철

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병이 체결한 노트북 구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므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을은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3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서술형 답지에서 학생이 받은 점수는 2점이므로 2개의 법적 판단만 옳게 진술하였다.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손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님은 피용자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 사용자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동물의 점유자 책임에서 점유자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따라서 (가)에는 옳은 법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다.

정답찾기 디. 사례에서 1차적 책임은 공작물의 점유자인 D에게 있으나 D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공작물의 소유자인 C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르. 공작물의 점유자인 D가 자신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D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가. 행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점유자는 1차적 책임을 진다.

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14 이혼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법원의 판결을 통한 이혼은 재판상 이혼이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이루어진 이혼은 협의상 이혼이다.

정답찾기 ⑤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법원에서의 일정 절차를 거쳐야 이혼이 가능하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것이고, 협의상 이혼은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이혼 숙려 기간,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오답피하기 ① 배우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는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 모두에서 가능하다.

② 이혼 숙려 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라도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③ 이혼의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시 병에 대한 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친권은 가정 법원의 선고로 상실될 수는 있다.

④ 면접 교섭권은 이혼 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해당 자녀에게 인정된다.

15 상속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권은 D의 경우 확정적으로 갖는다. 그러나 B는 혼인 신고 여부, F는 갑의 입양 여부에 따라 법정 상속권 여부가 달라진다. E는 친양자 입양되었으므로 갑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정답찾기 ① 갑이 유효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갑과 B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면 B는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D가 갑의 재산 10억 원 전액을 상속받는다.

오답피하기 ② 법정 상속 개시 당시 갑과 B가 혼인 신고를 하였다면 B는 법정 상속권자이다.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하여 상속을 받지만 F는 공동 상속인이 아니다.

- ③ 법정 상속 개시 당시 갑이 F를 입양하였고, 갑과 B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F는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B는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다.
- ④ 유류분 반환 청구는 법정 상속권자가 할 수 있는데 갑과 B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D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법정 상속권자가 할 수 있는데 E는 친양자로 입양이 되었으므로 법정 상속권자가 아니다.

16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범죄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한다. 사례에서 A 씨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범죄의 성립 요건 중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정답찾기 ⑤ 징역은 1개월 이상 교도소 등에 구금하고 정역을 부과하는 형벌이다. 치료 감호는 보안 처분의 일종이다. 보안 처분은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오답피하기 ① A 씨는 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하였으므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 ② (가)에는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③ 국민 참여 재판은 지방 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인 1심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2심 법원은 고등 법원에서 담당한다.
- ④ 국민 참여 재판은 민사 사건이 아닌 형사 사건에만 적용된다.

17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형사 절차는 크게 수사 → 기소 → 재판 → 형 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정답찾기 ④ 2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한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일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 ②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의자, 피고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 ③ 집행 유예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선고 유예이다.
- ⑤ 갑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구속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8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이해

문제분석 경찰서장이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는 병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갑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을은 10세 미만이다.

정답찾기 ⑤ 검사의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에게만 내릴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 ② 갑~병 중 갑만 형벌을 받을 수 있다.
- ③ 갑, 병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④ 을에게 책임 능력이 없으면 갑, 병만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을

진다.

19 근로자의 권리 보호 절차 이해

문제분석 갑은 부당 해고, 을은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

정답찾기 ㄷ. 노동조합은 부당 해고와 달리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ㄹ. 갑, 을은 모두 부당 해고라고 판단하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행정 소송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다.

ㄴ. 을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므로 을이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국제법의 법원 중 A는 조약, B는 국제 관습법, C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국제 사회에서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포괄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이다.

정답찾기 ㄱ. 국내 문제 불간섭은 국제 관습법의 사례이다. 따라서 (가)에 해당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

ㄴ.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은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ㄷ. 우리나라에서 조약에 대한 체결 및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ㄹ.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헌법보다 하위의 지위를 갖는다.

실전 모의고사 3회

본문 112~116쪽

1 ④	2 ⑤	3 ②	4 ②	5 ⑤
6 ③	7 ④	8 ③	9 ④	10 ③
11 ⑤	12 ⑤	13 ③	14 ④	15 ③
16 ④	17 ①	18 ①	19 ⑤	20 ⑤

1 정치의 의미 이해

문제분석 회사 노동조합의 집회 활동이 정치 현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정치 현상을 넓게 보는 관점이므로 A는 정치 현상을 정치가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이라고 좁게 보는 관점, B는 정치 현상을 넓게 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ㄱ. 정치를 국가 현상에 한정하여 좁게 보는 관점은 다원화된 사회의 정치 현상의 설명에 불리하다.

ㄴ. 정치를 넓게 보는 관점은 정치 현상이 국가 설립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보므로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ㄹ. '국회의 입법 과정'은 정치를 넓게 보거나 좁게 보거나 상관없이 모두 정치 현상으로 본다.

오답피하기 > 다. 국가의 권력 현상과 연관된 것만을 정치 현상으로 보는 것은 정치를 좁게 바라보는 관점이다.

2 사회 계약론자의 사상 비교

문제분석 > 절대 군주제를 옹호한 갑은 홉스, 입헌 군주제를 지지한 병은 로크이다. 따라서 을은 루소이다. 이들은 모두 국가의 존재는 시민의 자연권 보전을 위한 수단적인 것으로 보았다.

정답찾기 > ⑤ 사회 계약론자 중에서 통치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로크이다. 그는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통치 권력을 나누어야 군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민의 의사가 대표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한 학자는 루소이다.

오답피하기 > ① 일반 의지에 의한 국가 수립을 주장한 학자는 루소이다.

② 정부가 국민의 신탁을 배반할 경우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주장한 학자는 로크이다.

③ 로크는 영국의 입헌 군주제를 지지하면서 의회 중심의 대의제를 옹호하였다. 반면에 루소는 대의제를 비판하고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하였다.

④ 사회 계약론자들은 국가의 존재를 인민의 자연권 보전을 위한 수단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국가 권력의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3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이해

문제분석 > 여소야대가 나타나는 시기는 (다)이므로 (다) 시기는 대통령제이고, 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시기는 (나)이므로 (나)는 연립 내각이 구성된 의원 내각제이다. 따라서 정부 형태의 구성은 (가), (나)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고, (다), (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어야 한다.

정답찾기 > ② (다) 시기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므로 행정부 수반인 병은 의원 내각제였던 (나) 시기의 을과 달리 법률안 거부권을 가졌을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제와 달리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다른 인물이므로 의원 내각제였던 (가) 시기의 갑은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인 정과 달리 국가 원수가 아니다.

③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므로 병, 정은 모두 국민이 직접 선출했을 것이다.

④ (가), (나) 시기 모두 의원 내각제이므로 여소야대 정국은 나타날 수 없다.

⑤ (다), (라) 시기 모두 대통령제인데, (라) 시기는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여소야대였던 (다) 시기에 비해 의회와 행정부 간의 협조가 원활하였을 것이다.

4 정치 참여 집단의 특성 비교

문제분석 > 표에서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가?'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므로 C는 정당이고, A와 B는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 중 각각 하나이며, ㉠은 '아니요', ㉡은 '예'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 가.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활동하며,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르. (가)에는 정당과 A가 공통으로 '아니요'로 답하고, B에만 '예'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공익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가?'라는 질문은 B에만 '예'에 해당하므로 A는 시민 단체, B는 이익 집단이다.

오답피하기 > 나.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은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수행한다.

다. A에 환경 단체가 속하면 A는 시민 단체이므로 B는 이익 집단이다. 활동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이다.

5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 대화에서 갑은 형식적 법치주의, 을은 실질적 법치주의로 법치주의를 이해하고 있다.

정답찾기 > ⑤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가 권력의 행사가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답피하기 > ①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법 제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경시하지 않는다.

② 악법에 대한 저항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입장이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경계한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기본권 제한에서 법적 근거를 강조한다.

6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 제시된 헌법 전문에는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의 기본 원리가 각각 나타난다.

정답찾기 > ③ 참정권은 원칙적으로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인정된다. 따라서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외국인에 대해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기는 어렵다.

오답피하기 > 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경우, 헌법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사회 보험의 확충은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이 해당한다.

④ 민주적 선거 제도는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방안이 해당한다.

⑤ 복수 정당제는 자유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주의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실현 방안이다.

7 기본권 유형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 A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함하는 자유권, B는 청원권을 포함하는 청구권, C는 보건권을 포함하는 사회권에 각각 해당한다.

정답찾기 > ④ 청구권과 사회권은 모두 국가를 초월하여 인정되는 천부 인권적인 자유권과는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기본권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오답피해기 ①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방어적, 소극적 성격을 가진다.

② 청구권은 자유권이나 사회권 등 실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절차적 기본권의 특징을 가진다.

③ 사회권은 자유권과 달리 현대 사회에 들어와 복지 국가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것이다.

⑤ (가)에는 청구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을 규정한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청구권으로 분류된다.

8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기능 이해

문제분석 첫 번째 상황은 갑이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두 번째 상황은 재판 진행 중 갑이 법원에 △△법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이다. 세 번째 상황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갑이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정답찾기 나. A는 법원인데, 법원은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처분의 심사권을 가진다.

다.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헌법 소원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

오답피해기 가. 갑에게 지방 자치 단체가 처분을 내린 것은 개인 간의 사적 생활 관계가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와 개인 간의 공적 생활 관계이다.

라. 헌법 재판소가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법 조항을 근거로 재판을 지속하라는 것이지 법원이 갑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9 지방 자치 기관의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는 광역 지방 자치 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시·군·자치구로 구분되며, 광역 지방 자치 단체와 기초 지방 자치 단체는 각각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와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장을 두고 있다. 자료에서 A는 광역 지방 자치 단체, B는 기초 지방 자치 단체, C는 지방 자치 단체장, D는 지방 의회이다.

정답찾기 나. 지방 자치 단체장은 광역 지방 자치 단체와 기초 지방 자치 단체 모두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라. 지방 의회는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 예산 심의 및 확정권 등을 가지며, 지방 자치 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진다.

오답피해기 가. 지방 의회는 광역 지방 자치 단체, 기초 지방 자치 단체 모두 구성된다.

다.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의 의장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

10 선거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자료에서 ○○국 현행 의회는 선거구당 2명씩 선출되는 중 선거구제로 갑당과 을당은 각 2명씩, 병당은 3명, 정당은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선거구 개편안에 따라 실시될 차기 의회 의원 선거

는 현행 정당 득표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표와 같이 당선자가 배출될 수 있다.

현행 선거구	현행 선거구 당선	선거구 분할	개편 선거구	개편 선거구 당선
A	갑당과 을당 후보자	A1	a	을당 후보자
		A2	b	을당 후보자
B	을당과 병당 후보자	B1	c	을당 후보자
		B2	d	갑당 후보자
C	갑당과 병당 후보자	C1	e	갑당 또는 정당 후보자
		C2		
D	병당과 정당 후보자	D1	f	정당 후보자
		D2		

정답찾기 ③ 개편안에 따르면 을당 후보자는 개편 선거구 a, b, c에서 각각 당선되어 을당은 총 3석을 확보할 것이다. b는 종전 A와 B가 분할되어 합쳐진 것인데, 두 선거구 모두 을당의 지지가 가장 높았으므로 b에서도 을당 후보자가 당선된다.

오답피해기 ① 선거구 개편안에 따라 실시되는 차기 의회 의원 선거에서 병당은 0석의 의석 확보가 예상되므로 이 개편안은 병당에 불리할 것이다.

② 각 선거구의 인구수와 분할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선거구 분할이 평등 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갑당은 현행에서 2석, 차기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d 선거구에서 1석을 확보하지만, e 선거구에서는 분할 비율에 따라 당선자를 배출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2석의 의석을 확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차기의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택하므로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투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없다.

11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분석 ㉠은 공정 거래 위원회가 게임 회사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무효라고 한 결정이며, ㉡은 법원이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라고 한 판결을 나타낸 것이다.

정답찾기 ⑤ ㉠, ㉡ 모두 불공정한 사적 계약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 공정의 원칙이 적용된 상황이다. 계약 공정의 원칙은 민법의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수정 원칙이다.

오답피해기 ①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 ㉡ 모두와 거리가 먼 원칙이다.

②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 ㉡ 모두와 거리가 먼 원칙이다.

③ 민법의 수정 원칙은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대두되었는데, ㉠, ㉡ 모두에 해당된다.

④ ㉠과 ㉡ 모두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념이 반영된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기보다는 이를 수정·보완한 민법의 수정 원칙에 따른 것이다.

12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되었다가 무죄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는 경우에는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답셋기 ⑤ 병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유예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병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은 없어지게 된다.

오답피하기 ①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검사에 의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석방되었으므로, 갑은 구금 기간에 해당하는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병은 집행 유예를, 정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병과 정은 판결 즉시 석방된다. 단, 이 경우도 유죄 판결에 해당하므로 형사 보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④ 법원은 을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자유형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벌금 1천만 원이라는 재산형을 선고하였다.

13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의 이해

문제분석 (가), (나)는 갑이나 병의 행위에 의해 을이나 정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거나 사용자 배상 책임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정답셋기 ㄴ. 갑이 책임 능력이 없으면, 을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은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이고, 정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은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다. 따라서 정이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라면 병도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

ㄷ. ㉠이 갑, 을 간 업무와 관련된 관계이면, 을은 피용자 갑의 업무상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며, ㉡은 책임 무능력자 병과 그를 감독할 정 간의 관계로서 병의 가해 행위에 대해 정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오답피하기 ㄱ. 을과 정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나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이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과실 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ㄷ.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 행위가 아니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 미성년자와의 계약 이해

문제분석 사례는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인 을과 계약을 맺은 경우이므로 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취소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도 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정답셋기 ④ 사례에서 갑이 법정 대리인인 병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속임수를 쓴 것도 아니므로 갑과 병은 각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노트북은 현재 상태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

오답피하기 ① 갑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인 병의 동의를 얻어 취소할 필요는 없다.

② 을이 계약 체결에 대한 확답을 촉구하려면, 갑이 아니라 갑의 법정 대리인 병에게 해야 한다.

③ 을의 계약 철회는 계약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⑤ 17세의 고등학생 갑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의사 무능력자는 아니다.

15 혼인의 이해

문제분석 법률혼은 혼인 의사 등의 실질적 요건과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므로 (가)가 이에 해당한다. (다)와 (라)는 혼인 관계의 실질적 요건이 없는 경우로서 법률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 형식적 요건이 없고 실질적 요건만 갖춘 (나)는 사실혼 관계이다.

정답셋기 ③ 일상 가사 대리권은 법률혼이나 사실혼 모두 인정된다.

오답피하기 ① 배우자 간 법정 상속은 법률혼 관계에서만 가능하므로 (가)에서만 가능하다.

② (나)에서 갑, 을 간에 출생한 자녀는 인지를 해야만 부 또는 모의 친자로 인정된다.

④ 사실혼 배우자 간에도 상호 부양 및 협조의 의무가 인정된다.

⑤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는 법률혼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나), (다), (라) 모두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16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분석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범죄 성립의 3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셋기 ㄱ. 갑의 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면,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에 해당될 수 있다.

ㄷ. 갑의 행위가 위법하지만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있으나 책임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에 해당될 수 있다.

ㄷ. 범죄 성립의 3요건에 대한 판단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지, 그리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순서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가)에 책임의 존재 유무를 묻는 질문이 들어가게 된다.

오답피하기 ㄴ. 갑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위법성과 책임이 모두 인정되어 범죄가 된다. 다만, 심신 미약은 형벌의 감경 사유가 된다.

17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갑은 연고가 없는 곳에 발령한 회사의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 행위인 부당 노동 행위라고 여기고 구제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다.

정답셋기 ㄱ. 갑에 대한 인사 조치가 근로 3권의 침해, 즉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회사의 탄압이라면 이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하며, 이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오답피하기 ㄷ.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은 근로자 당사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할 수 있다.

ㄷ.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의 취소를 다루는 소송은 행정 소송으로서 3심제의 적용을 받는다.

18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이해

문제분석 국가 간 이해관계의 충돌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따라서 A는 현실주의적 관점, B

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정답셋기 ①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세력(힘)의 균형을 통해 국가 간 전쟁이 억제되고 국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오답짜이기 ② 국가 간 상호 의존 관계를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③ 국제기구의 표결 방식에서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들에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강대국의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④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의 규범을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개별 국가가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보지 않는다.

⑤ 세력 균형을 통한 국제 평화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집단 안보를 통한 국제 평화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중시한다.

19 상속 관계의 이해

문제분석 (가), (나) 유언장은 유언자의 사망 시에 유언에 의한 상속이 개시될 수 있게 하는 증서인데, 둘 다 유효한 경우 사망 시점에 가까운 것에 따른다. 만일 (가), (나)가 모두 무효일 경우 법정 상속이 진행된다.

정답셋기 ⑤ 제시된 상황에서 1순위의 상속인은 갑의 배우자 병, 갑의 친생자인 을, 친양자 입양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정이다. 이들은 유언에 의하여 법정 상속분의 1/2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오답짜이기 ① 유언장이 둘 다 유효한 경우, 사망 시점에 가까운 (나)에 따라 유언에 의한 상속이 진행된다.

② 유언장이 둘 다 무효이면 법정 상속이 개시되는데, 배우자 병은 자녀 1인의 상속분의 1/2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된다.

③ (가)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면, 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최대 금액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다. 따라서 병은 유류분으로 3억 원, 정은 유류분으로 2억 원까지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을은 최소 9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을의 상속 금액은 최소 9억 원으로서 병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6억 원보다 3억 원 많다.

④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 간 상속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언장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20 국제법의 법원 이해

문제분석 국제법이 존재하는 형식, 즉 국제법의 법원(法源)에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표에서 A는 조약, B는 국제 관습법, C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정답셋기 ⑤ 조약은 원칙적으로 체결한 주체만을 규율하지만 국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이 인정된다.

오답짜이기 ① 조약은 국가와 국가뿐 아니라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회의 비준 동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조약이다. 국제 관습법은 별도의 절차 없이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③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은 국제 관습법의 예이다.

④ 국제 문제의 해결 기준으로는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뿐 아니라 법의 일반 원칙도 활용될 수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는 재판의 준거로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을 활용한다.

실전 모의고사 4회

본문 117~121쪽

1 ③	2 ④	3 ⑤	4 ①	5 ③
6 ②	7 ②	8 ④	9 ④	10 ④
11 ①	12 ③	13 ③	14 ②	15 ①
16 ⑤	17 ⑤	18 ③	19 ②	20 ②

1 정치의 기능 이해

문제분석 정치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고,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셋기 ③ 첫 번째 사례는 송전 선로를 지하에 설치해 달라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지방 자치 단체의 중재로 해결한 경우이고, 두 번째 사례는 B사의 노동조합과 회사 측의 노사 갈등이 정부의 중재하에 해결된 경우이다. 이처럼 정치는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오답짜이기 ① 정치는 공동체의 바람직한 상태를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해 가는 기능을 하지만, 제시된 사례와는 거리가 멀다.

② 제시된 사례는 구성원 간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경우이다. 법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 사례는 아니다.

④ 정치는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제시된 사례와는 거리가 멀다.

⑤ 시민 참여가 확대되면 정책의 투명성이나 민주성은 높아지지만 정책 추진의 효율성까지 높아질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제시된 사례에서 이러한 내용을 찾기는 어렵다.

2 법의 이념 이해

문제분석 법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의 실현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한다. A고등학교가 경시대회를 실시한 결과 점수가 너무 낮은 학생에게도 20% 이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상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를 고민했는데, 이것은 정의의 이념에 비추었을 때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학년 초에 발표한 시상 기준을 신뢰한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 결정이다.

정답셋기 ④ A고등학교는 경시대회에서 일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학년 초에 발표한 20% 시상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의 이념 중에서 정의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였다. 법적 안정성은 국민이 법의 권위를 믿고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오답짜이기 ①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법의 이념 중에서 정의이다.

② 원칙적으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것은 정의 중에서 평

균적 정의에 해당한다. 평균적 정의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우해 주는 형식적 평등을 통해 실현된다.

③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배분적 정의이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과 상황, 필요 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상대적·비례적·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⑤ 시대와 국가에 따라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합목적성을 의미한다. 합목적성은 법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3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A는 형식적인 합법성만을 강조하므로 형식적 법치주의, B는 법의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찾기 ⑤ 위헌 법률 심사제는 법률의 내용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즉,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통해 법적 효력을 상실시킨다. 따라서 법률의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내용의 정당성까지도 중시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오답피하기 ① 저항권은 부정의한 법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하는 권리로서 법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함을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형식적 합법성을 배제하고 법 내용의 정당성만 중시하는 것은 아니다. 법 제정 절차의 합법성과 법 내용의 정당성을 모두 중시한다.

③ 법률에 근거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제한할 경우에도 과잉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④ 법의 이념에서 정의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고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 제정의 절차나 형식만 중시하므로 정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 절차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 내용의 정당성까지 고려하므로 법의 이념 중에서 정의를 가장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4 정당의 기능 이해

문제분석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자신들의 강령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정당은 공익을 도모하는 공약을 제시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은 이를 정책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이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는 등 자신의 활동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답찾기 ① 갑은 ○○당이 주최하는 유권자 워크숍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정당의 업무에 대해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을은 아들이 ◇◇당 사무국에서 일하는 것을 계기로 ◇◇당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보면서 정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즉, 정당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정부와 의회의 매개는 주로 여당이 행정부와 당정 협의

회 등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 등을 말하는데, 제시된 사례에서는 찾을 수 없다.

③ 정당은 각종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대표자를 배출하는데, 이를 정치적 충원 기능이라고 한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찾을 수 없다.

④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집약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조직화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제시된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⑤ 정당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정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제시된 사례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5 국회의 입법 권한 이해

문제분석 (가)는 헌법 개정 절차, (나)는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이다. 모두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정답찾기 ③ 우리나라에서 법률안의 제출은 정부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헌법 개정안의 제안은 대통령과 국회가 할 수 있는데, 국회가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하다.

② 헌법 개정안은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되는데, 국민 투표에서는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일 국회 의원 선거권자가 1,000만 명이고, 투표자가 510만 명이며, 투표자 중에서 헌법 개정안에 찬성한 사람이 300만 명이라면 1,000만 명 중에서 300만 명이 찬성하여 국회 의원 선거권자 중 찬성한 사람이 과반수가 되지 않았지만 헌법 개정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은 확정된다. 따라서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더라도 헌법 개정안은 확정될 수 있다.

④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결 정족수가 다르다.

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한다. 만일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국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6 기본권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가)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므로 사회권, (나)는 신체의 자유로서 자유권이다. A는 사회권에만 해당하는 질문, B는 사회권과 자유권에 모두 해당하는 질문, C는 자유권에만 해당하는 질문이어야 한다.

정답찾기 ② 사회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만 자유권은 국가의 존재와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사회권과 자유권은 모두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 자유권은 개인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삶을 살아나갈 수 있고,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7 기본권의 제한 한계 이해

문제분석 국민 건강 증진법에서는 공공 기관과 학교, PC방, 교통 관련 시설 대합실 등 26곳에 대해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 재판소는 결정했다. 흡연자의 흡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그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정답찾기 ② 헌법 재판소는 공공장소에 대해 금연 구역을 지정한 국민 건강 증진법 조항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방지, 흡연자 수 감소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오답파헤기 ① 헌법 재판소는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호하고 있다.

③ 국민의 여론에 의해 금연 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④ 해당 법률 조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해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⑤ 금연이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것은 아니며, 이 때문에 헌법 재판소가 금연 구역 지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8 정부 형태의 이해

문제분석 갑국과 을국은 각각 서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T기와 T+1기 사이에 갑국과 을국 모두 의회 의원 선거만 있었으므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는 행정부 수반의 변동이 없다.

정답찾기 ④ 갑국에서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지니고 있다면, 갑국은 의원 내각제, 을국은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석수와 관계없이 국민의 선거에 의해 행정부 수반이 선출된다. 또 T기와 T+1기 사이에 을국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가 없었으므로 T기와 T+1기의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같다.

오답파헤기 ① 갑국에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다른 인물이라면 갑국은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 선거에서 일반적으로 제1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선출된다. 그런데 갑국은 T기에서는 A당이 제1당이었지만 T+1기에서는 어느 당이 제1당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에 A당이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을국에서 의회 의원이 내각의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면 을국은 의원 내각제이고 갑국은 대통령제이다. 갑국은 T기에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A당이지만, A당이 제1당인지는 알 수 없다.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석수와 관계없이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이다.

③ 갑국에서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면, 갑국은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별도로 실시되는데, T기와 T+1기 사이에는 의회 의원 선거만 있었으므로 갑국의 A당이 계속 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따라서 T+1기에도 A당은 계속 여당이다.

⑤ 을국에서 행정부 수반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면 을국은 대통령

제, 갑국은 의원 내각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정국을 이끌어 가므로 연립 내각이 수립될 필요가 없다.

9 주민 직접 참여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에서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민 참여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참여 제도에는 주민 투표 제도,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 주민 소환 제도,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주민 소송 제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청원 제도 등이 있다.

정답찾기 을 : 주민은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 제안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를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고 한다.

정 :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주민 감사 청구 제도라고 한다. 만약 재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오답파헤기 갑 :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주민이 조례 제정안이나 개정안, 폐지안을 지방 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는 없다. 지역 주민은 조례 제정안이나 개정안, 폐지안을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라고 한다.

병 : 주민 소환 제도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을 투표를 통해 지역 주민이 해임하는 제도이다.

10 선거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갑국의 현행 의회 의원 선거 제도는 지역구에서만 100개의 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방식이다. 선거 제도를 개편할 경우 <1안>은 지역구 의원 100명과 비례 대표 의원 100명으로 구성한다. <2안>은 지역구 의원을 없애고 200명을 전부 비례 대표 의원으로만 구성한다. <1안>에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적용하여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 대표 의석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계
지역구 의석수	35	40	15	10	100
비례 대표 의석수	45	42	13	0	100
계	80	82	28	10	200

비례 대표 의석은 득표율이 10%를 초과하지 못한 D당을 제외하면 모든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율의 합인 90%에서 해당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 대표 의석수인 100석을 곱하여 산출한다. 그 결과 A당이 44.44석, B당이 42.22석, C당이 13.33석인데, 여기서 정수 부분을 더하면 1석이 모자란다. 나머지 1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가장 큰 A당에 돌아간다.

<2안>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계
비례 대표 의석수	89	84	27	0	200
계	89	84	27	0	200

〈1안〉과 마찬가지로 비례 대표 의석은 득표율이 10%를 초과하지 못한 D당을 제외하면 모든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율의 합인 90%에서 해당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 대표 의석수인 200석을 곱하여 산출한다. 그 결과 A당이 88.89석, B당이 84.44석, C당이 26.67석인데, 여기서 정수 부분을 더하면 2석이 모자란다. 나머지 2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A당과 C당에 1석씩 돌아간다.

정답찾기 ④ 현행 지역구 선거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씩을 뽑지만, 〈1안〉의 지역구 선거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씩을 뽑는다. 2명씩을 선출할 때는 당선된 2명의 표를 제외한 나머지가 사표였지만, 1명을 선출할 경우에는 당선된 1명의 표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사표이므로 현행보다 〈1안〉의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더 많다.

오답피하기 ① D당은 〈1안〉에서는 지역구 의석 10석은 있었으나 〈2안〉에서는 정당 득표율이 10%를 초과하지 못해 의회 진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D당은 〈2안〉보다 〈1안〉을 선호할 것이다.

② C당은 현행 제도에서는 30석이지만, 〈1안〉에서는 28석, 〈2안〉에서는 27석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③ 〈1안〉과 〈2안〉의 의석수 격차는 A당이 9석, B당이 2석으로 A당이 더 크다.

⑤ 〈1안〉과 〈2안〉 모두에서 B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높으므로 과대 대표된다.

11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분석 (가)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신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나)는 을이 A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맺은 금전 차용 계약이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 (다)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 배상을 받은 것이므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정답찾기 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소유권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됨에 따라 수정·보완된 것이다. 이것은 소유권에 대해 공공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서 개인의 소유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답피하기 ② 계약 자유의 원칙은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음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근대 민법의 원칙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내용의 공정성을 강조한 것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서 현대 사회에서 강조된다.

③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업자의 환경 침해나 제조물 책임 등 특수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자나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신의 고의나 과실 없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근대 민법의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④ 불공정 약관을 무효로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⑤ 신의 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으로서 근대 민법의 원칙은 물론이고 오늘날의 수정 원칙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12 채무 불이행 책임의 이해

문제분석 질문자는 A와 부엌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A가 공사를 끝내면서 대금을 달라고 하지만 질문자는 A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약속한 날짜에 공사를 하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한 것을 근거로 A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답찾기 을 : 질문자와 A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계약이 성립했지만 A가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한 것을 근거로, A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병 : A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는 A가 공사를 다시 하여 합의한 수준으로 완료할 때까지는 공사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한다. 이로 인해 질문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A는 손해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오답피하기 갑 :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면 계약을 쓰지 않아도 성립한다.

정 : A가 계약한 내용대로 공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한다.

13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문제분석 갑은 17세로서 미성년자이므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갑이 을과 ○○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 또는 갑의 부모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갑이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③ 갑이나 갑의 부모가 을에 대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을이 갑의 부모에게 계약의 추진 여부의 확인을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은 갑이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을이 거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은 거래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① 갑이나 갑의 부모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갑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자신을 성인으로 믿게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갑이나 갑의 부모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갑과 거래한 을이 거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을이 거래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니까 가능하다. 갑이 을에게 자신은 미성년자이며,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거래 당시에 밝혔다면 을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갑이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의 범위 내에서 ○○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므로 갑 또는 갑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14 사용자의 배상 책임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피해자, 을은 사용자, 병은 피용자이다. 피용자인 병이 바닥의 물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갑이 넘

어져 다쳤는데, 을이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부담했다. 그런데 법원은 피해자인 갑에게도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을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정답찾기 ② 만일 병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면 병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을도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은 병의 행위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용자인 을에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부담시킨 것이다.

③ 을이 사용자로서 병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였다면 면책되었을 것이다.

④ 법원은 갑에게도 손해가 발생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40%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을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 것이다.

⑤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 상속 관계의 이해

문제분석 갑과 병이 사망했는데 둘 다 유언이 없었으므로 법정 상속이 진행된다. 상속의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인데 친양자도 친생자와 똑같이 상속인이 된다. 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배우자 을과 직계 비속 병이다. 이후 병이 사망했는데, 병은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없으므로 2순위인 직계 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갑이 이미 사망했으므로 병의 상속인은 병의 양모 을이 된다.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므로 병의 친생부모인 C와 D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정답찾기 ㄱ. 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직계 비속 병과 배우자 을이다.

ㄴ. 갑의 사망으로 배우자 을은 6억 원, 직계 비속 병은 4억 원을 상속받는다. 이후 병의 사망으로 을은 병의 직계 존속으로 단독 상속인이 되는데 병이 갖고 있던 재산 2억 원과 갑으로부터 받은 상속분 4억 원이 모두 을에게 상속된다. 따라서 갑과 병의 사망으로 을은 12억 원을 상속받는다.

오답피하기 ㄷ. 병은 C와 D의 친생자이지만 갑과 을의 친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었다. 따라서 병의 사망으로 인해 C와 D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ㄹ. 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배우자 을과 직계 비속 병이다. 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병의 직계 존속 을이다. 따라서 A, B, C, D는 상속인이 아니다.

16 범죄 성립의 요건 이해

문제분석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범죄 성립의 3요소라고 하며,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찾기 ⑤ 18세의 대학생이 남의 물건을 훔쳐 처분했으므로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비록 친구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지

만 친구의 오토바이가 아니라 친구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훔쳐 처분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존재한다. 또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도 없으므로 A~C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한다.

오답피하기 ① 9세의 소년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지만 책임이 조각되므로 C에 해당한다.

② B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자녀의 생명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협박을 받아 회사 기밀을 넘긴 것은 책임 조각 사유인 강요된 행위이므로 C에 해당한다.

③ C는 책임 조각 사유이다. 책임이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책임이 없는 경우를 책임 조각 사유라고 한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 심신 상실의 상태인 자의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 등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등을 책임 조각 사유로 규정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다. 투숙한 호텔에 화재가 발생하자 탈출하기 위해 호텔 창문을 깬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④ 현행법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도록 형사 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의한 체포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30세의 회사원이므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7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갑은 을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2심 법원에서 A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처럼 형사 절차는 크게 수사-공판-형의 집행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정답찾기 ⑤ A가 '벌금형'이라면 갑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형사 보상 청구는 형사 피의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형사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 구금된 사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오답피하기 ① 갑이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구속되었는데, 이때 갑의 구속 여부는 판사가 결정한다. 검사가 갑을 구속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판사가 갑을 직접 대면하여 심문(구속 영장 실질 심사)한 후에 갑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던 것이다.

② 갑은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후 구속되었으나 배우자의 구속적부 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져 구속된 지 7일 만에 석방되었다. 이것은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 석방된 것이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되기 전에 받는 것이고, 구속된 이후 기소 전에 구속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구속 적부 심사 제도이다.

③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기소는 검사가 갑으로 하여금 형사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서 아직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갑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은 유지된다.

④ 징역은 정역을 부과하는 자유형에 해당한다.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 자유형에는 금고와 구류가 있다.

18 부당 해고 구제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갑은 회사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쳐 행정 소송까지 진행했다. △△ 지방 노동 위원회에서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지만, 중앙 노동 위원회는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이후 행정 법원에서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정답찾기 나. 갑은 노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ㄷ.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당사자는 갑이다. △△ 지방 노동 위원회에서는 갑의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에 회사 측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신청 당사자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신청 당사자는 다르다.

오답피하기 가. 해고 절차가 정당화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회사 측은 30일 전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했으므로 해고 절차는 적법하다. 다만, 갑은 고객과의 마찰을 이유로 해고당한 것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ㄹ. 행정 소송에서 원고는 갑이지만, 피고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이다. 갑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19 국제 관계의 변천 과정의 이해

문제분석 유럽에서 주권 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는 1648년 30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형성되었다. 이후 유럽에서 주권 국가 체제가 일반화되었으며, 근대적 형태의 국제 질서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리고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거친 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을 이룬 냉전 체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냉전 체제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완화되다가 1980년대 말 몰타 선언을 계기로 소멸되었다.

정답찾기 ② 제1차 세계 대전 후 국제 연맹이 창설(1920)되었으나 미국 등 강대국의 불참으로 국제 연맹은 처음부터 한계에 직면했고,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1939~1945)의 발발을 막지 못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19세기 후반 유럽의 강대국들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국주의 정책을 채택하여 여러 나라에 대한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다.

③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은 이후 국제 사회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이념 대립으로 냉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④ 1969년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회피하는 내용의 선언이다. 이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이 다원화되면서 냉전 체제가 다소 완화되었다.

⑤ 1989년 몰타 선언을 계기로 냉전 체제는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으며, 이후 세계 각국은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리 추구를 강화하게 되었다.

20 국제법의 법원 이해

문제분석 국제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국제법의 법원(法源)이라고 한다.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자국의 영토를 이용함에 있어 타국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오랜 관행으로 법적 확신을 인정받은 것이므로 밀줄 친 부분은 국제 관습법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가. 국제 사법 재판소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 국제법을 적용하여 사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한다.

ㄷ. 우리 헌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제 관습법을 말한다.

오답피하기 나. 명시적인 수용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조약이다. 국제 관습법은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국제 사회에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구속력이 인정된다.

ㄹ.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다.

실전 모의고사 5회

본문 122~126쪽

1 ④	2 ④	3 ③	4 ②	5 ④
6 ④	7 ⑤	8 ④	9 ②	10 ③
11 ①	12 ④	13 ⑤	14 ②	15 ③
16 ③	17 ①	18 ③	19 ⑤	20 ④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에서는 어떤 사회에서든 정치 현상이 나타나며, 그 본질이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답찾기 ④ 부, 명예, 권력, 지위 등을 얻기 위한 경쟁과 갈등을 권위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고 본다는 점에서, 정치 현상을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과정이라고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국회의 입법 활동도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과정과 관련된다.

② 제시문에서 어떤 사회에서든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국가 형성 이전에도 정치 현상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 설명에 적합한 관점이다.

⑤ 제시문은 공동체와 관련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가에 의해서만 행해진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

2 정부 형태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가)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민의 별도 선거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제, (나)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의원 내각제이다.

정답찾기 ④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는 물론 내각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내각이 입법부를 해산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 ② 대통령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한 사람이다.
- ③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 것은 대통령제이다.
- ⑤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제이다.

3 사회 계약론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가)는 홉스, (나)는 루소의 사회 계약론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정답찾기 ③ 홉스는 군주 주권론, 루소는 국민 주권론을 옹호한다고 할 수 있다.

- 오답피하기** ① 홉스의 사회 계약론에 따르면 개인들은 사회 계약을 맺어 주권을 양도하고 안전과 생명 등에 관한 자연권을 보존한다.
- ②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서 주권은 국가에 양도될 수 없다고 본다.
 - ④ 홉스와 루소의 사회 계약론 모두에서 국가는 수단적 도구로 이해되고 있다.
 - ⑤ 홉스의 사회 계약론은 권력 분립을 강조하지 않았다.

4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갑은 실질적 법치주의, 을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정답찾기 ㄱ. 실질적 법치주의는 정치권력의 합법성은 물론 정당성도 강조한다.

ㄷ.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법의 절차와 형식은 물론 그 목적과 내용도 중시한다.

오답피하기 ㄴ. 정의에 부합하는 법만이 권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ㄹ.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 법률에 대한 국민의 불복종을 인정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5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자유권 보장을 넘어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로 구체화된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찾기 ㄴ. 복지 국가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으로 최저 임금제, 공공 부조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ㄷ.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원리이다.

오답피하기 ㄱ.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ㄷ.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6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은 청구권이므로 (가)는 청구권이다. 현대적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회권이므로 (나)는 사회권, (다)는 자유권이다.

정답찾기 ④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오답피하기 ①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 ②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 ③ 청원권, 재판 청구권은 청구권의 내용에 해당한다.
- ⑤ 사회권은 자연권이 아니다.

7 의회 의원 선출 방식의 이해

문제분석 갑국의 중전 지역구 의회 의원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였으며, 그러한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는 유지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가 당선자가 되는 선출 방식(절대다수 대표제)을 도입하였다.

정답찾기 ⑤ ㉠은 단순 다수 대표제, ㉡은 절대다수 대표제이다. 단순 다수 대표제는 최소한의 득표율 기준이 없이 다른 후보자보다 1표라도 더 얻은 후보자라면 무조건 당선자로 결정하는 대표 결정 방식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가 당선자로 결정되는 방식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도 당선자가 될 수 있어 당선자의 대표성 논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오답피하기 ① 군소 정당의 난립은 단순 다수 대표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②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제한은 단순 다수 대표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③ ㉠은 상대적으로 낮은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도 당선될 가능성이 ㉡보다 높다. 따라서 ㉠은 ㉡보다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가 클 가능성이 높다.

④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논란은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한 문제점인데, ㉠, ㉡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과 대비되는 ㉠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8 의회 의원 선거의 결과 분석 및 추론

문제분석 (가), (나) 두 선거구 모두 1차 투표에서 40% 이상의 최다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찾기 ㄴ. (가) 선거구의 1차 투표 정당별 유효 투표 합계가 40만 표이므로 30% 이상 득표자는 A당과 B당 소속 후보자이다. 이런 경우 득표 순위 2등까지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므로 A당과 B당 소속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최다 득표자는 2단계 투표의 유효 투표 과반수를 득표하여 당선자가 될 것이다.

ㄷ. (나) 선거구의 경우 1차 투표 정당별 유효 투표 합계가 35만 표이므로 30% 이상 득표자는 A당 소속 후보자 1명이다. 이런 경우 득표 순위 3등까지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고 최다 득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므로 A당, B당, C당 소속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후보자가 3명이므로 당선자가 되기 위해서는 2차 투표 결과 유효 투표의 최소 3분의 1을 넘는 득표율을 얻어야 한다.

오답피하기 ㄱ. (가), (나) 두 선거구 모두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결정된다.

ㄷ.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성향 변화 등을 모르

므로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이었던 A당 소속 후보자가 최종 당선자가 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9 우리나라의 헌법 기관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A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인 B, 즉 국무 회의의 의장이므로 대통령이다. C는 권한 쟁의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 기관이므로 헌법 재판소이다.

정답찾기 ② 국무 회의는 심의 기구로서 그 결정 사항에 대통령은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오답피하기 ① 국무 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국무총리이다.

③ 헌법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이다.

④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헌법 재판소가 아닌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⑤ 헌법 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의 헌법 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국무 회의의 동의는 필요없다.

10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의 비교 이해

문제분석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중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정당과 시민 단체이다. 따라서 A, C는 각각 정당과 시민 단체 중 하나이며 B는 이익 집단이다. 한편 공식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정당이다. 따라서 A, B,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임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③ 시민 단체는 정당과 달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모두 정치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④ 이익 집단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므로 ㉠에는 '아니요'가 들어간다.

⑤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것은 정당이다. 따라서 (가)에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가?'가 들어가면 ㉡에는 '예', ㉢에는 '아니요', ㉣에는 '아니요'가 들어간다.

11 민법의 원칙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개인 간 혹은 개인과 금융업체가 자유로운 의사를 통해 이자 지급을 약속하였더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다. 즉, 대법원은 자유로운 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사회 질서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약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정답찾기 ① 대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는 민법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문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③ 제시문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④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을 중시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⑤ 민법 원칙 중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12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과 을 모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갑은 거래 상대방에게 속임수으로써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면서 물품을 구입하였고, 을은 거래 상대방도 을이 미성년자임을 안 상태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정답찾기 ④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경우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및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미성년자가 속임수으로써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은 스마트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갑이 부모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갑이 속임수으로써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여 한 거래는 갑의 부모도 취소할 수 없다.

③ 을이 부모의 동의 없이 자전거 거래를 하였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거래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⑤ 병은 을과의 거래 시 을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13 불법 행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첫 번째 사례에서는 폭행이라는 불법 행위, 두 번째 사례에서는 과실에 의한 상해라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였다.

정답찾기 ㉠. 공동 불법 행위자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A는 갑~병 중 특정 개인 혹은 전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무는 정의 업무 관련 감독 등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B의 화상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면제된다.

오답피하기 ㉢. 일반적인 불법 행위와 달리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특수 불법 행위라고 한다. 갑~병은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무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정은 자신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일반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 갑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폭행과 망을 보는 행위 사이에 객관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어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을 질 수 있다.

14 이혼의 유형별 특징 이해

문제분석 이혼의 유형 중 이혼 숙려제의 적용을 받는 것은 협의상 이혼이다. 따라서 A는 협의상 이혼, B는 재판상 이혼이다.

정답찾기 ㉠.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ㄷ.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게 면접 교섭권이 주어진다.

오답피어기 > ㄴ.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ㄹ.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유책 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5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의 내용을 범죄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찾기 > ③ 제시문에서는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 중에서도 명확성의 원칙, 즉 형벌 법규는 범죄의 구성 요건과 그 형벌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다.

오답피어기 > ①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 중 적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②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 중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④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 중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⑤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 중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16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 형사 절차는 수사-공판-형의 집행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경우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제시된 형사 절차는 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공판 결과 무죄가 확정되었다.

정답찾기 > ③ 구속된 피의자는 공소 제기 이전 단계에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어기 > ① 직접적인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고발이 아닌 고소를 할 수 있다.

② 구속 영장은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다.

④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⑤ 무죄를 포함한 형의 선고가 확정되는 것은 대법원 이전 심급에서도 가능하다.

17 연소 근로자의 근로관계 이해

문제분석 > 연소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채용 과정과는 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정답찾기 > 갑 :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

을 : 모든 근로 계약은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오답피어기 > 병 : 최저 임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정 : 모든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18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의 이해

문제분석 >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중 노동조합도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이다. 따라서 A는 부당 해고, B는 부당 노동 행위이다.

정답찾기 > ㄴ. 부당 해고에 대해 근로자는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ㄷ. 부당 노동 행위란 근로자의 근로 3권, 즉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한다.

오답피어기 > ㄱ.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모두에 대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ㄹ.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9 조약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 제시문의 대한민국과 러시아 사이의 일반 여권 사증 면제 협정은 조약의 사례이다.

정답찾기 > ㄷ. 조약은 국가 및 국제기구를 당사자로 하여 맺어지므로 국가는 물론 국제기구도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다.

ㄹ.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오답피어기 > ㄱ.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법의 법원은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이다.

ㄴ.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은 국제 관습법의 사례이다.

20 국제 사법 재판소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 A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미국이 불복하였지만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강제할 마땅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답찾기 > ④ 국제 사법 재판소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제재할 자체적 수단이 없다. 다만, 분쟁의 일방 당사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분쟁 상대국이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오답피어기 > ①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다수결에 따른다.

② 국제 사법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가 간 분쟁에 대해 강제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가 이용하는 재판 규범은 조약과 국제 관습법 이외에도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으로, 국가만이 제소할 수 있다.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1회

본문 104~108쪽

1 ④	2 ③	3 ①	4 ④	5 ④
6 ②	7 ①	8 ⑤	9 ④	10 ⑤
11 ③	12 ③	13 ⑤	14 ①	15 ③
16 ②	17 ④	18 ②	19 ②	20 ⑤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정치를 국가 수준에서 발생하는 정치권력 획득 및 행사 과정이라고 보는 것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보는 관점이고, 정치를 국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조정 및 해결 과정이라고 보는 것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보는 관점이다. 제시문의 맥락상 (가)에는 좁은 의미의 정치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나)에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찾기 ㄱ. 새로운 복지 법안 마련을 위한 국무 회의는 국가 수준의 정치권력 행사 과정이므로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ㄴ. 현장 체험 학습 장소 선정을 위한 학급 회의는 국가가 아닌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조정 과정이므로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ㄷ. 아파트 경비원 임금 인상안 협의를 위한 입주민 총회도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조정 과정이므로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ㄹ. 신규 사업 투자 여부 결정을 위한 그룹 이사회는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조정 및 해결 과정이므로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2 정치 참여 집단 파악

문제분석 정당은 공익을 추구하며 정치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 시민 단체는 정당과 마찬가지로 공익을 추구하지만 정치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을 추구하며 시민 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정답찾기 ㄴ. ㉠이 이익 집단이면 (가)는 공익 추구, (나)는 정치적 책임이므로 ㉠은 정당이다.

ㄷ. (가)가 공익 추구이면 (나)는 정치적 책임이므로 ㉠은 정당이다.

오답피하기 ㄱ. ㉠이 시민 단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가 공익 추구나 정치적 책임 중 어떤 것이 되더라도 ㉠은 시민 단체가 될 수 없다.

ㄷ. (나)가 정치적 책임이면 (가)가 공익 추구가므로 이익 집단은 ㉠이다.

3 전형적인 정부 형태 이해

문제분석 (가)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입법부를 구성하고, 입법부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므로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이다.

(나)는 국민이 입법부와 행정부 수반을 각각 별도의 선거에 의해 선출하므로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다.

정답찾기 ㄱ :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한다.

을 :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오답피하기 ㄴ : 의원 내각제와 달리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이 있어 의회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정 : 의원 내각제와 달리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의회 의원이 행정부의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4 직접 민주 정치 이해

문제분석 전체 주민의 직접 참여로 예산안을 확정하는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타운 미팅, 지역의 모든 주민이 모여 주법을 표결하거나 공무 담당자를 선출하는 란츠게마인데는 모두 직접 민주 정치의 사례이다.

정답찾기 ④ 일정 수의 국민이 헌법이나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인 국민 발안제는 직접 민주 정치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직접 민주 정치에서는 중우 정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② 고대 아테네에서는 여자나 외국인, 노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제한된 민주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③ 현대 사회에서 등장한 전자 민주주의를 통해 직접 민주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⑤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가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탄핵 제도는 직접 민주 정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양당제와 다당제의 특징 비교

문제분석 갑국은 소수 대표제를 사용하고 있고 의석수가 을국의 2배라고 하였으므로,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명씩 총 16명이 당선된다. 을국은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만 당선되므로 총 8명이 당선된다.

〈갑국〉				〈을국〉				(단위 : %)
㉠당	㉡당	㉢당	㉣당		A당	B당	C당	D당
62	17	8	13	1선거구	28	27	19	26
77	9	6	8	2선거구	33	26	38	3
64	13	11	12	3선거구	24	31	32	13
72	13	4	11	4선거구	27	23	29	21
61	16	17	6	5선거구	32	30	31	7
23	49	24	4	6선거구	26	28	29	17
82	6	3	9	7선거구	29	27	20	24
68	14	15	3	8선거구	31	18	32	19

* : 당선자

위와 같이 당선자가 결정되어, 갑국은 ㉠당 7석, ㉡당 5석, ㉢당 3석, ㉣당 1석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어 다당제가 나타난다. 을국은 A

당 3석, C당 5석으로 양당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가)는 다당제, (나)는 양당제이다.

정답셋기 ㄴ. 다당제는 여러 정당이 서로 견제가 가능하므로 양당제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할 것이다.

ㄷ.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좁을 것이다.

오답피하기 ㄱ. 양당제는 두 개 중 하나의 정당이 정권을 잡기 때문에 다당제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할 것이다.

ㄷ. 다당제는 여러 개의 정당이 있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양당제에 비해 소수의 이익 보호에 유리할 것이다.

6 언론의 기능 이해

문제분석 대중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권력 집단의 대중 조작 메시지에 선동될 수 있다. 이렇게 권력 집단이 대중 조작을 위한 수단으로 언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언론의 역기능으로 볼 수 있다.

정답셋기 ㄱ. 권력 집단은 언론을 활용하여 권력 집단에 유리한 뉴스만을 제공하게 하고 대중들이 무비판적으로 권력 집단에 동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ㄷ. 권력 집단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언론을 이용하여 정보를 조작하고, 이러한 정보 왜곡은 대중의 관심이나 사고방식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대중이 획일화된 정치적 신념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오답피하기 ㄴ. 언론은 특정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라도 사실 그대로 보도하여 정확하게 대중에게 전달해야 한다.

ㄷ. 언론이 대중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순기능에 해당한다.

7 헌법의 법적 의의 이해

문제분석 헌법의 법적 의의 중 (가)는 헌법이 국가 통치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의 조직 수권 규범, (나)는 헌법이 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의 최고 규범, (다)는 헌법이 국가 권력의 분립과 권력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을 제한한다는 의미의 권력 제한 규범이다.

정답셋기 ① 헌법이 최고 규범이라는 의미는 헌법이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므로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국가 권력 작용 등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② 헌법이 권력 제한 규범임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 이전의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도 나타났다.

③ 헌법이 권력 제한 규범임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공권력 행사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④ 헌법이 최고 규범임은 우리나라의 헌법 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등 헌법 재판의 근거가 된다.

⑤ 헌법이 조직 수권 규범임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도 나타난다.

8 선거 결과 분석

문제분석 지역구의 개수가 200개이고 지역구 의석수가 200석이므로 1선거구당 1명의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당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계
지역구 득표율(%)		47.1	47.5	3.1	1.3	1.0	100
정당 득표율(%)		40.2	49.7	4.1	2.2	3.8	100
지역구 의석수(석)		96	99	2	2	1	200
지역구 의석률(%)		48	49.5	1	1	0.5	100
비례 대표 의석수(석)		21	27	2	0	0	50
총 의석수(석)		117	126	4	2	1	250
총 의석률(%)		46.8	50.4	1.6	0.8	0.4	100

정답셋기 ⑤ D당과 E당의 경우 정당 득표율이 각각 2.2%, 3.8%임에도 불구하고 비례 대표 의석을 단 1석도 배분받지 못했다는 것은 정당 득표율이 일정 득표율을 넘는 정당에만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한다는 봉쇄 조항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선거 결과 B당은 총 의석률이 50.4%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여 의회 의사 결정을 주도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결정을 위한 정당 간의 연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② 소선거구제가 시행되었으므로 지역구 선거구 간에 인구 편차로 인한 지역구 선거구 간 표의 등가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A당은 정당 득표율이 40.2%인데 총 의석률은 46.8%로 정당 득표율에 비해 총 의석률이 더 높지만, D당은 정당 득표율이 2.2%인데 총 의석률은 0.8%로 정당 득표율에 비해 총 의석률이 더 낮다.

④ B당은 지역구 득표율이 47.5%인데 지역구 의석률은 49.5%로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고, C당은 지역구 득표율이 3.1%인데 지역구 의석률은 1%이므로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었다.

9 국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이해

문제분석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각각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입법부는 탄핵 소추권, 국정 감사·조사권,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및 국무총리·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으며 탄핵 소추권,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동의권 등으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행정부는 법률안 거부권, 임시 국회 소집 요구권 등으로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으며 사면·감형·복권권,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 등으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사법부는 행정 재판권,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으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등으로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정답셋기 ④ ㉠이 '법률안 거부권'이면 C는 행정부, A는 입법부, B는 사법부이므로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이 '위헌 명령 심사권'이면 B는 사법부, A는 행정부, C는 입법부이다.

② ㉠이 '사면권'이면 B는 행정부, C는 사법부, A는 입법부이다. 국무원의 직무 감찰권은 행정부 내 감사원의 권한이다.

③ ㉠이 '탄핵 소추권'이라면 C는 입법부이므로 A가 아닌 C가 국가 예산의 결산 심사권을 가진다.

⑤ '국정 감사·조사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B가 입법부이면 '국정 감사·조사권'은 ㉠이 아니라 ㉡에 들어갈 수 있다.

10 기본권의 특징 파악

문제분석 A는 국가 기관의 주요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인 선거권이 포함되는 기본권이므로 참정권이다. B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인 재판 청구권이 포함되는 기본권이므로 청구권이다. C는 평등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정답찾기 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로 (나)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지는가?”로 대체하여도 B, C는 변함이 없다.

오답피하기 ① 참정권은 근대 시민 사회에서도 존재했던 기본권이다. 현대 복지 국가 성립과 함께 등장한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②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③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④ (가)에 “사회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인가?”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A가 평등권으로 변한다.

11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이해

문제분석 (가)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나)는 교육의 의무, (다)는 환경 보전의 의무, (라)는 납세의 의무에 관한 헌법 조항이다.

정답찾기 ㄷ. 납세의 의무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와 달리 현대 복지 국가 이전에도 존재했던 고전적 의무이다.

ㄹ. 국민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한 이유는 헌법에 규정된 경우와 헌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ㄱ. 교육의 의무와 환경 보전의 의무 모두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다.

ㄴ. 납세의 의무는 의무의 성격만을 갖고 있지만, 환경 보전의 의무나 교육의 의무 등은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의 성격도 갖고 있다.

12 계약의 성립 및 소비자의 권리 이해

문제분석 계약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을 뜻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과 이를 받아들일겠다는 의사 표시인 승낙이 합치될 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찾기 ③ ㉮는 갑이 구입하겠다고 물어본 청약의 의사 표시에 대해서 구입하겠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승낙’의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소비 전력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 중 ‘알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의미한다.

② 갑의 청약만으로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을의 승낙까지 이루어져야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되면 갑에게는 제품 값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을에게는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④ 계약 성립의 확정은 당사자 간 의사 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다.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13 특수 불법 행위 이해

문제분석 A는 B의 사용자이므로, 피용자인 B가 업무와 관련하여 C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E는 공작물의 소유자이고 D는 점유자인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일차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며, 면책될 경우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정답찾기 ⑤ A는 B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면책될 수 있다. D는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고 소유자인 E가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오답피하기 ① 손해 배상은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한다.

② A는 C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 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B는 C의 손해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A의 책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B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③ B의 행위에 고의가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 배상에서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④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일차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 해당된다.

14 유언과 상속의 이해

문제분석 갑은 을과 혼인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법률혼 부부 관계이다. 갑의 사망으로 인한 법정 상속인은 직계 비속인 병과 정뿐이며 이혼한 을과 직계 존속인 무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다. 정이 갑과 인연을 끊고 산 것은 법정 상속분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병과 정은 상속분은 동일하다.

정답찾기 ① 병과 정은 모두 갑의 직계 비속으로 법정 상속 1순위자이며, 동일한 상속액을 상속받는다.

오답피하기 ② 갑과 을의 협의상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었으므로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을 것이다.

③ 협의상 이혼은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와 상관없이 당사자 간의 이혼 의사의 합치로 성립된다.

④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했으므로 이혼 전에는 법률혼 관계였다. 을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이므로 법정 상속권이 있었다.

⑤ 갑이 전 재산을 A 기관에 기증한다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었다면, 갑의 전 재산은 A 기관이 받게 되며, 이후 법정 상속인인 병과 정은 A 기관에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5 주택 매매 절차 이해

문제분석 일반적인 주택 매매 절차는 먼저 주택의 위치, 가격 등을 조사하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하여 소유권 및 기타 권리 관계를 파악한다. 계약 당사자가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다. 계약금 지급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는 통상 계약금만큼의 해약금을 지불한다.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완료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정답찾기 ③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할 때는 갑구에 기재된 소유권자와 주택을 팔려는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중도금 지급 이전에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여겨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한다.

② 주택 매매 계약은 주택 매매에 대한 의사 표시가 합치되면 이루어진다.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주택 매매 계약은 일상 가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위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일반적인 주택 매매 절차 순서는 (마)-(바)-(다)-(가)-(나)-(라)이다.

16 범죄의 성립 요건 파악

문제분석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성 요건 해당성이란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은 위법성, ㉡은 책임, ㉢은 법률이다.

정답찾기 ②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 정당 행위가 포함된다.

오답피하기 ① 위법 행위를 했다는 데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 가능성은 책임을 의미한다.

③ 해당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가치 판단이 가능한 경우는 위법성을 의미한다.

④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인 피해자의 승낙은 책임 조각 사유가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포함된다.

⑤ ㉢에 들어갈 말은 “법률”이다.

17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갑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가)에서 갑에 대한 재판은 판사가 3인이므로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졌음을, 배심원이 있으므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④ 집행 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뤘다가,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선고이다. 따라서 갑은 형의 집행이 이뤄지므로 즉시 석방된다.

오답피하기 ①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부의 판결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② 1심 재판 이후 항소를 하면 항소 법원에서 2심이 열린다. 항소는 갑 또는 검사가 할 수 있다.

③ 1심이 합의부였으므로 (나)의 항소 법원은 고등 법원이 된다.

⑤ 선고 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무죄 판결이 아닌 유죄 판결이다. 따라서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8 사회법의 의미 이해

문제분석 (가)는 근로 기준법, (나)는 국민 연금법, (다)는 소비자 기본법의 조항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등을 사회법이라 한다.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 또는 제 3의 영역이라 불리운다.

정답찾기 ② 사회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법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오답피하기 ① 사회법은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허용하는 법이다.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③ 사적 자치의 원칙을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되, 개인의 사유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하고자 한다.

④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뜻한다. 사회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는 법이다.

⑤ 사회법은 개인의 법적 지위와 재산 관계에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는 법이다.

19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갑은 국제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국제 사회를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을은 국제 사회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인정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국제 사회를 보고 있다.

정답찾기 ㄱ.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도 규범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국제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기구의 역할을 기대할 것이다.

ㄴ. 현실주의적 관점은 세력 균형 전략을 통해 자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자유주의적 관점은 집단 안보 전략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ㄷ. 복잡한 국제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한계를 지닌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ㄹ. 국제 사회에 보편적인 선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20 국제법의 법원 이해

문제분석 국제법의 법원(法源)에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가)는 조약, (나)는 국제 관습법이다.

정답찾기 ⑤ 조약의 효력은 체결 당사국에 한해서만 발생하지만, 국제 관습법은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해 포괄적 구속력을 갖는다.

오답피하기 ① 우리나라에서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에는 주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

②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에 포함된다. 국제 관습법에는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 등이 있다.

③ 조약과 국제 관습법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 판결의 준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실전 모의고사 2회

본문 109~113쪽

1 ①	2 ④	3 ④	4 ②	5 ①
6 ⑤	7 ②	8 ③	9 ④	10 ④
11 ⑤	12 ④	13 ③	14 ③	15 ⑤
16 ④	17 ②	18 ④	19 ②	20 ⑤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 제시문에서 권력관계는 국가의 통치 행위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치를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고 있다.

정답찾기 > ① 선거에서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은 정치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관점 모두에서 정치라고 본다.

오답피하기 > ② 국가 형성 이전에는 정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은 정치를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③ 위에서 아래로의 지배와 통제만이 정치의 기능이라고 보는 관점은 정치를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관점에 더 부합한다.

④ 넓은 의미의 정치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⑤ 국가 수준에서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것만을 정치라고 보는 관점은 정치를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2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의 이해

문제분석 >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실시했으며, 민회는 모든 시민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 사안을 다루었다.

정답찾기 > ④ 고대 아테네에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성인 남성만이 누릴 수 있었으며, 노예·여성·외국인에게는 부여되지 않았다.

오답피하기 > ① 고대 아테네의 시민은 민회뿐만 아니라 500인회 등을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② 노예·여성·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참여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지 않았다.

③ 권력 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치 체제는 현대 민주 정치이다.

⑤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는 추천이나 윤번제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였다.

3 홉스의 사상 이해

문제분석 > 사회 계약의 동기를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본 근대 사회 계약론자는 홉스이다.

정답찾기 > ④ 홉스는 인민이 계약을 통해 각자가 가지는 자연권을 포기하고 정치 사회를 만들어, 모든 자연권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한다고 하였다.

오답피하기 > ① 주권은 대표될 수 없다고 본 근대 사회 계약론자는 루소이다.

② 계약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분립되어야 한다고 본 근대 사회 계약론자는 로크이다.

③ 홉스는 군주 주권론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자연권 보장을 위해서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두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근대 사회 계약론자는 로크와 루소이다.

⑤ 자유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해 인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근대 사회 계약론자는 로크이다.

4 정당 제도 이해

문제분석 > A는 양당제, B는 다당제이다.

정답찾기 > ② 양당제는 일반적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지만, 다당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존재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다당제에서는 소수 정당이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수 이익이 보호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양당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존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당제에 비해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③ 양당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존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④ 다당제보다 양당제가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⑤ 다당제보다 양당제가 과반수 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높다.

5 정부 형태 이해

문제분석 > 갑국의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가)는 의원 내각제이며, 국민의 선거로 행정부 수반을 직접 선출하는 (나)는 대통령제이다.

정답찾기 > 가.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내각의 각료를 겸직할 수 있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겸직할 수 없다.

나.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다.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라.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이 융합된 형태이고,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이다. 따라서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6 선거 결과 분석

문제분석 > 갑국은 125개의 선거구에서 250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구 제도는 중선거구제이다. 최근 실시된 갑국의 ○○대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정당	지역구 의석률(%)	비례 대표 의석수(석)	총 의석수(석)	총 의석률(%)
A당	52.4	18	149	49.7
B당	33.6	15	99	33.0
C당	8.0	10	30	10.0
D당	6.0	7	22	7.3
합계	100.0	50	300	100.0

정답찾기 > ⑤ 중선거구제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선거구 내 당선자 간 득표율이 달라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C당의 정당 득표율은 20.0%이고, 총 의석률은 10.0%이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과 총 의석률은 일치하지 않는다.

② 지역구 선거의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이다. 중선거구제는 소수 대표제와 결합하여 운영된다.

③ 갑국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 대표 선거를 별도로 실시한다. 비례 대표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별도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지역구 선거 결과 A당의 득표율은 43.0%이고, 의석률은 52.4%이며, D당의 득표율은 13.0%이고, 의석률은 6.0%이다. 따라서 A당은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고, D당은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었다.

7 정치 참여 집단 이해

문제분석 A는 이익 집단, B는 정당이다.

정답찾기 ② 정당은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오답피하기 ① 이익 집단은 공익보다는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다.

③ 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이다.

④ 이익 집단, 정당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⑤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정당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8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가)는 국제 평화주의, (나)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정답찾기 ③ 평화 통일 지향은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헌법의 기본 원리이다.

오답피하기 ① 국제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권을 인정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④ 외국인에 대해서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⑤ 현대 복지 국가의 헌법과 관련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9 기본권 이해

문제분석 A는 사회권, B는 참정권이다.

정답찾기 ㄴ. 복지 국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ㄷ. 소극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이기에 때문에, 해당 질문에 둘 다 "아니요"라고 답변을 해야 한다.

오답피하기 ㄱ.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기에 때문에, 해당 질문에 둘 다 "아니요"라고 답변을 해야 한다.

ㄴ.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는 청구권이기에 때문에, 해당 질문에 둘 다 "아니요"라고 답변을 해야 한다.

10 국회의 기능 이해

문제분석 국회는 회기 중에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④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다시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②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집회되는 것은 임시회이다.

③ 정부 제출 법률안인든 국회의원 제출 법률안인든 모두 원칙적으로 상임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⑤ 법률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 민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제적 강자의 계약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기 위하여 등장한 민법의 기본 원리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정답찾기 ㄷ.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계약 공정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로 한다. ㄷ.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의 근로 계약은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근로 계약이므로 계약 공정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의 근로 계약을 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오답피하기 ㄱ.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해 일정 정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과 관련된다.

ㄴ.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과 관련된다.

12 특수 불법 행위 이해

문제분석 점유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찾기 ④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의 경우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감독자 스스로가 증명할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개의 점유자로서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동물 점유자 책임을 진다.

② 동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을은 병의 감독자인 정에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아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갑은 동물 점유자 책임, 정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갑, 정 모두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13 부동산 거래 이해

문제분석 갑은 을의 주택을 매수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마친 상태이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진다.

정답찾기 ③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청구에 기재된다.

오답피하기 ① 주택 매매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모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병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마친 상태이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갑이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된다.

④ 병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마친 상태이지만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아 우선 변제권이 형성되지 않았다.

⑤ 병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지게 되지만, 갑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는 관련이 없다.

14 이혼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갑과 을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갑과 을의 이혼은 협의상 이혼에 해당하며, A와 B는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A와 B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③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해당 자녀에게 면접 교섭권이 발생한다.

오답피하기 ① 협의상 이혼은 해당 관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협의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

④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혼인 생활 중 취득한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이 발생한다.

⑤ 협의상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15 죄형 법정주의 이해

문제분석 헌법 재판소는 개념 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면, 법 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할 여지가 높다고 보았다. 이는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찾기 ⑤ 명확성의 원칙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관습 형벌 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

② 적정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③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

④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

16 형사 절차 이해

문제분석 집단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갑에게 1심 법원은 갑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정답찾기 나.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갑이 청구한 구속 적부 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되었기 때문에 구금된 상태에서 갑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리.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된 갑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가. 구속 영장 청구, 기소는 모두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디. 갑은 기소 전에는 피의자, 기소 이후에는 피고인 신분이다.

17 근로자의 권리 이해

문제분석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찾기 가. 임금 관련 내용은 근로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디.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오답피하기 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직,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라 하는데, 제시된 사례의 근로 계약에서는 부당 노동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

리.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18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이해

문제분석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찾기 ④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오답피하기 ① 을은 갑이 환불을 거절하여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한 것이지, 제조물물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 구제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을이 소비자 8대 권리 중 안전할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신청은 당사자 일방이 신청 가능하다.

⑤ 을은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신청과는 별도로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 국내법과 국제법의 비교

문제분석 ㉠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국내법에 해당하고, ㉡은 국가 간 합의로 체결된 조약으로 국제법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ㄱ.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를 당사자로 하여 상호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이다.

ㄴ. 국제 사회에서는 국제법 집행을 강제할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법은 국내법에 비해 법 위반에 대한 강제적 제재가 어렵다.

오답피하기 ㄴ. 우리나라에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 사형을 금지하기 시작한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비준 당사국이 된 이후부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시행된 1989년 7월부터이다.

ㄷ. 소년법은 국내법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적용이 되며, 조약은 원칙적으로 체결한 당사국에만 효력이 미친다.

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분석 A는 총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정답찾기 ⑤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으면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지만, 국제 사법 재판소가 직접 제재하기는 어렵다.

오답피하기 ①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은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②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군사적 제재를 할 수 있다.

③ 국제 연합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④ 총회는 1국 1표 원칙이 적용되며,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안전 보장 이사회의 표결 방식보다 총회의 표결 방식이 자유주의적 관점에 부합한다.

오답피하기 ①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이다.

②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치주의 수립,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 확립 등을 들 수 있다.

③ 국제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나라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지만, 방어를 위한 전쟁은 허용한다.

④ 국제 평화주의 실현 방안으로는 국제법 존중,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참여, 외국인의 지위 보장 등이 있다.

2 사회 계약론자들의 사상 비교 이해

문제분석 A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다고 보므로 홉스, C는 대의제 실시를 주장하므로 로크, B는 루소이다.

정답찾기 ⑤ 로크는 개인의 권리를 의회와 같은 특정 집단에 위임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루소는 개인의 권리는 특정 집단에 위임할 수 없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① 일반 의지에 따라 정치 공동체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홉스가 아닌 루소이다.

②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실정법, 재판관, 집행 권력 등이 없는 상태로 보는 것은 루소가 아닌 로크이다.

③ 사회 계약을 통해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가 등장한다고 보는 것은 로크가 아닌 홉스이다.

④ 사회 계약론자들은 모두 국가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본다.

3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법치주의 유형 중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①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든 실질적 법치주의든 기본적으로 인치를 부정한다.

오답피하기 ②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한다.

③ 우리나라의 위헌 법률 심사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림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기에 실질적 법치주의에 비해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기 쉽다.

⑤ 형식적 법치주의든 실질적 법치주의든 모두 법치, 즉 법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를 추구한다.

4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비교

문제분석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다. 따라서 A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B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다.

정답찾기 ③ 의회와 행정부가 융합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오답피하기 ①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할 수 있다.

②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법률안은 의회 의원만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만의 특징이다.

⑤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 모두에서 의회 의원은 유권자의 투표로 선출한다.

실전 모의고사 3회

본문 114~118쪽

1 ⑤	2 ⑤	3 ①	4 ③	5 ④
6 ②	7 ②	8 ④	9 ①	10 ①
11 ③	12 ④	13 ①	14 ①	15 ④
16 ②	17 ③	18 ⑤	19 ⑤	20 ①

1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가)는 자유 민주주의, (나)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정답찾기 ⑤ 국제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나라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5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비교 이해

문제분석 A는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이라 볼 수 있으며, B는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이라 볼 수 있다.

정답찾기 ㄴ.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ㄹ. 정치를 국가와 관련된 활동만으로 보는 것은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이며, (가)에 이 질문이 들어가면 ㉠에 들어갈 답변은 “예”이다.

오답피하기 ㄱ. ‘의회에서의 법률 제정 활동’은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보든 넓은 의미로 바라보든 모두 정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ㄷ. 정치를 오직 정치권력의 획득·행사·유지 활동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에 들어갈 답변은 “아니요”이다.

6 조약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국가 간 비준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고 상호 간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국제법은 조약으로, 제시문의 나고야 의정서는 조약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ㄱ. 조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에만 효력이 미친다.

ㄷ. 국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는 국가이다.

오답피하기 ㄴ. 유럽 연합은 국가의 범위를 넘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국가적 행위에 해당한다.

ㄹ.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국회는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7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이해

문제분석 갑의 관점은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자유주의적 관점에 부합하며, 을의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부합한다.

정답찾기 ② 을은 복잡한 국제 관계를 정치적 권력 관계로 단순화하여 보는 특징이 있다.

오답피하기 ① 국가 간 동맹 등으로 이룬 세력 균형을 통한 국가의 안전 보장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③ 국제 사회가 보편적 윤리와 규범에 의해 지배받는다 고 보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 아닌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④ 현실주의적 관점보다 자유주의적 관점이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⑤ 현실주의적 관점은 군비 경쟁을 통해 힘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자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8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이해

문제분석 A는 자유권, B, C는 (가)의 질문에 따라 각각 사회권과 청구권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

정답찾기 ④ (가)에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인가?”가 들어가면 B는 사회권, C는 청구권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자유권이 사회권이나 청구권보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기본권이다.

② 국가 성립 이전에도 인정되는 자연권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자유권이다.

③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⑤ 바이마르 헌법에서 사회권을 처음으로 규정하였으며, 사회권은 자유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9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의 비교 이해

문제분석 A는 이익 집단이며, B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시민 단체, C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당이다.

정답찾기 ㄱ. 이익 집단은 현대 사회에서 직능 대표의 역할을 일부 수행한다.

ㄴ. 시민 단체는 비영리성, 비권력성을 특징으로 한다.

오답피하기 ㄷ. 정치 참여 활동이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정당이 아닌 이익 집단이다.

ㄹ. 시민 단체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정당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10 헌법 기관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의 내용에서 A는 대통령, B는 국무총리, C는 국무회의, D는 감사원임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① 상고심 담당 법원은 대법원이다.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오답피하기 ②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헌법 기관이다.

③ 국무 회의의 구성원인 국무 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무총리는 국무 위원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있다.

④ 국무 회의 심의 결과를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무 회의의 장은 대통령이므로 별도의 임명 및 국회 동의 절차가 불필요하다.

11 선거 제도의 분석

문제분석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 선거의 정당별 득표율로 각 정당의 의석 총수를 결정하는데, 정당별로 결정된 의석 총수보다 지역구 의원 당선자가 적을 경우에는 비례 대표 의원을 할당하고, 정당별로 결정된 의석 총수보다 지역구 의원 당선자가 많을 경우에는 비례 대표 의원은 할당하지 않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정답찾기 ③ 정당별로 결정된 의석 총수보다 지역구 의원 당선자가 많을 경우 초과 의석수가 그대로 인정된다. 한편 정당별로 결정된 의원 총수보다 지역구 의원 당선자가 적을 경우는 정당별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회 의원의 총수는 의회 의원 정수인 200석을 초과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지역구 의원 선출 선거구 제도가 소선거구제임은 알 수 있지만, 대표 결정 방식은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② 갑국의 유권자들은 의회 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선출에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에 1표를 행사하므로 1인당 2표를 행사한다.

④ 정당별 의석수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할당된 의석수를 초과할 수 있다.

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할당된 의석수 내에서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에 따라 비례 대표 의원 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정당별 지역구 의원의 수와 비례 대표 의원의 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12 위헌 법률 관련 헌법 심판의 유형 구분

문제분석 (가)는 청구 주체가 법원이므로 위헌 법률 심판이고, (나)는 청구 주체가 법원이 아니므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정답찾기 나. (나)는 법원이 아니라 재판 당사자가 신청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ㄷ.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의 청구 주체는 재판 당사자이다.

오답피하기 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경우 재판 당사자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헌법 재판소에 의해 기각된 경우에는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ㄷ. 상고심을 담당하는 법원은 대법원을 의미하는데,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는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으로 대법원이 아닌 지방 법원, 고등 법원 동일 수도 있다.

13 소년법상 보호 처분 및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갑은 14세 미만이므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처벌보다는 선도에 초점을 두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을은 14세로서 죄를 범한 소년으로 인정되며 죄의 경중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거나 일반 형사 사건 절차에 따르게 된다.

정답찾기 ㄱ. 갑은 14세 미만이므로 형벌이 부과될 수 없다.

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은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오답피하기 ㄷ. 을의 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는 죄의 경중에 따라 소년 보호 사건 처리 절차나 일반 형사 사건 절차에 따르게 된다.

ㄷ. 검사가 을의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다루어 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 을은 형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14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소가 필요하며, 기소 이후 법원(재판부)은 검사와 피고인을 당사자로 하여 피고인의 형사 책임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하고 선고를 하게 된다.

정답찾기 ㄱ. 기소의 주체는 검사이다.

나. 재판부 구성 시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경한 사건은 단독 판사, 중한 사건은 합의부(3명의 판사)로 구성한다.

오답피하기 ㄷ.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ㄷ.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명예형이나 재산형이 선고되는 경우, 혹은 실형에 대한 집행 유예, 선고 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피고인이 반드시 교정 시설에 수감되는 것은 아니다.

15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은 사유 재산권 존중(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자기 책임)의 원칙으로 나타나는데,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보완되었다.

정답찾기 ④ (가)는 개인의 재산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강제 수용된 상황과 관련되므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나)는 계약 내용이 편의점을 운영하려는 을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때 훼손될 수 있는 원칙을 의미하므로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오답피하기 ① 계약 자유의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동일한 내용이라 볼 수 있으며 제시된 내용과는 두 원칙 모두 거리가 있다.

② (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아니다.

③ (나)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

⑤ (가)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지만, (나)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아니다.

16 이혼의 유형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고 이혼 숙려 기간이 필요한 이혼의 유형 A는 협의상 이혼이며,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고 이혼 숙려 기간이 필요 없는 이혼의 유형 B는 재판상 이혼이다.

정답찾기 ②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로써 강제로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재판상 이혼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부부가 협의상 이혼을 신청할 경우 양육하여야 할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③ 이혼의 유형이나 이혼에 대한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이혼 당사자는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유지되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해당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면접 교섭권이라 하며, 원칙적으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⑤ 협의상 이혼에서 이혼의 효력은 이혼 신고를 한 때에,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의 효력은 법원이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

17 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가)는 형사 보상 제도, (나)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이다.

정답찾기 나.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도 이용할 수 있다.

ㄷ. (가)는 형사 보상 제도, (나)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이다.

오답피하기 ㄱ. 형사 보상 제도는 미결 구금된 상태에서 형사 절차를 거쳤던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국가가 그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리된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르. 형사 보상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의 구조와 관련된다.

18 유언과 상속의 이해

문제분석 갑이 법적 요건을 갖춘 유언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했으므로 민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한편 B는 갑의 친양자로 직계 비속에 해당하므로 다른 직계 비속인 A와 동일하게 1순위 상속자가 된다.

정답찾기 ⑤ 법정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인 A, B 및 배우자인 을이다. 이때 상속 비율은 A : B : 을(배우자) = 1 : 1 : 1.5로 각자의 상속액은 A는 2억 원, B는 2억 원, 을은 3억 원이 된다.

오답피하기 ① 법정 상속인은 을과 A, B이다.

② 병은 2순위 상속인인 직계 존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있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다.

③ 을은 A보다 1억 원을 더 많이 상속받는다.

④ 을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인은 A, B이다.

19 부당 해고의 구제 절차 이해

문제분석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는 것을 부당 해고라 한다.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으므로 부당 해고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답찾기 ⑤ 부당 해고의 구제 절차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과 노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오답피하기 ①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직,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제시문에서 갑은 노동조합 관련 내용으로 해고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 측의 해고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근로 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일반에 적용되는 법률로,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근로 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다.

③ 개인의 해고에 대해 노동조합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④ 중앙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0 위법성 조각 사유의 이해

문제분석 A의 행위는 긴급 피난, B의 상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사례이지만, C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니다.

정답찾기 ㄱ.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긴급 피난이라 한다.

ㄴ. B의 상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ㄷ. C의 행위는 청구권 실행 불능이나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즉, 자구 행위로 볼 수 없다.

ㄹ. 명백히 범죄로 성립되지 않을 사례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A와 B의 행위이다.

실전 모의고사 4회

본문 119~123쪽

1 ⑤	2 ⑤	3 ③	4 ③	5 ④
6 ⑤	7 ③	8 ③	9 ⑤	10 ②
11 ④	12 ④	13 ③	14 ②	15 ④
16 ⑤	17 ④	18 ③	19 ④	20 ①

1 정치의 의미 파악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부각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찾기 ㄷ.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행사하는 것과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을 정치라고 이해한다.

ㄹ.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정치를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국가나 정부에 한정된 권력적 활동으로 보고 국가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한다.

오답피하기 ㄱ.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ㄴ.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 수준에서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2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A는 실질적 법치주의, B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인(人)의 지배’를 배척하고,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법에 구속을 받도록 한다.

오답피하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형식적 합법성만을 강조한 결과 실질적 정당성을 간과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보다 법의 지배 자체에 목적을 둔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정의 실현 등에 구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므로 정의의 실현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는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④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는 모두 외형상 통치의 합법성을 충족하고 있는 법치주의 유형이다.

3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이해

문제분석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갑국이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③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행정부(내각)는 의회 의원의 임기 만료 전에 새로운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요구할 수 있는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총리는 국가 원수를 겸하지 않으며 행정부의 수반으로 의회의 신임에 구속을 받는다.

② 갑국 의회에 무소속 의원은 없으므로 총 의석수와 정당별 의석수

를 근거로 자료에 나타난 A~C당 이외에 다른 정당이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다.

④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의회 의원은 내각의 각료를 겸직할 수 있으며,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거나 각료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⑤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내각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A는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기본권으로 국가에 대한 방어권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자유권에 해당하며, B는 권리의 보장을 위해 국가에 권리 구제 절차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이므로 청구권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③ 자유권은 청구권과 달리 소극적 성격의 권리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한다.

오답파헤기 ① 자유권은 근대적 의미의 헌법에서부터 보장되었던 권리이다.

② 사회권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이다.

④ 다른 기본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청구권은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으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평등권은 본질적 기본권으로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된다.

⑤ 자유권은 청구권과 달리 포괄성을 갖는 권리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5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권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의 A는 국무총리, B는 국무 회의, C는 대통령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안과 법률 개정안에 나타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 개정 절차, 법률안 의결 절차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찾기 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해당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오답파헤기 ① 국무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③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며,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⑤ 헌법 개정안에는 필수적 국민 투표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국민 주권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6 정부 형태와 정당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갑국과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근거로 갑국에는 양당제, 을국에는 다당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⑤ 을국에서 b당의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면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국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답파헤기 ① 갑국과 을국은 서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갑국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라면 을국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을국에서는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연립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② 갑국과 을국은 서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을국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라면 갑국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 행정부 수반이 속한 정당인 원내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갑국에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할 가능성이 작다.

③ 양당제에 비해 다당제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용이하다.

④ 양당제에서는 사실상 두 개의 주요 정당이 정국을 주도하기 때문에 다당제에 비해 정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정책 추진에 따른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7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법적 효과 이해

문제분석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응답을 촉구할 권리와 철회권 등)를 파악해야 한다.

정답찾기 ③ 사례는 갑의 부모가 을에게 일정 기간 내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갑의 부모는 갑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오답파헤기 ① ㉠은 갑의 부모가 을에게 취소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갑의 부모는 을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갑의 부모는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을에게 계약 취소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따라서 갑의 부모가 을이 아닌 갑에게 취소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취소권 행사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을이 계약 당시 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을은 갑 또는 갑의 부모에게 먼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 을이 갑의 부모에게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응답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부모는 을이 아닌 갑에게 계약 취소의 의사 표시를 하였을 뿐이고 을에게는 의사 표시의 통지가 없었다. 따라서 갑의 부모가 갑이 체결한 법률 행위를 추인한 것이 되어 갑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8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 비교

문제분석 A~C는 각각 정치 참여 집단인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질문 (가)~(다)에 따라 A~C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 집단이 구분된다.

정답찾기 ③ (다)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는가?"가 들어가면, B는 정당에 해당한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참여 집단이다.

오답파헤기 ① (가)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가 들어가면 A는 정당에 해당하고, B와 C 중 하나가 시민 단체가 된다. 이익 집단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단체와 달리 특정 분야에서 집단적 특수

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부와 국민, 정부와 의회를 이어 주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는가?”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뿐이므로, (나)에 해당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

④ B가 이익 집단이고 C가 시민 단체라면, A는 정당에 해당한다. A~C 모두는 국민의 정치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⑤ A가 정당이고 B가 시민 단체라면, C는 이익 집단에 해당한다.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뿐이므로, (다)에 해당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

9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A는 자유주의적 관점, B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ㄴ.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이해하므로 국제 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ㄷ.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 안보는 잠재적인 공격자를 저지할 수 있는 세력 균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본다.

ㄹ.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국제 사회가 보편적 선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이해하므로,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규범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ㄱ.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한다.

10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분석 술만 마시면 정신을 잃는 갑이 친구의 지갑을 훔친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며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 다만 행위 시점에 갑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으므로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이를 판단해야 한다.

정답찾기 ㄱ. 갑이 친구의 지갑을 훔친 시점에 갑에게 고의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갑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갑에게 책임이 인정되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ㄷ. 갑이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심신 상실을 야기한 경우 책임이 조각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갑이 친구의 지갑을 훔친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며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므로, 갑이 친구에게 사과하고 이를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ㄹ. 갑이 심신 장애 상태에서 친구의 지갑을 훔쳤거나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므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 감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11 형사 절차의 흐름 이해

문제분석 사례에서 갑이 을과 병을 체포한 행위는 체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담당 검사 결정 전 조사 제도를 활용한 후, 병을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로 송

치고 을을 기소하였으므로 병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을은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정답찾기 ④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병에 대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결정하면, 병은 이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이 을과 병을 체포한 행위는 체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 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공판 절차에서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③ 특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을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⑤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이 국가에 일정 한도의 구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 절차 이해

문제분석 갑과 을이 체결한 근로 계약과 사업자의 임금 지급 과정에서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정답찾기 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이 주어진다. 을은 근무일에 개근하였으므로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ㄹ. 근로 계약서상 을의 근로 시간은 8시간이지만 을이 매일 1시간씩 연장 근로를 하였으므로 을은 갑에게 하루 임금으로 81,000원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근로자의 노동 3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하는데,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부당 노동 행위를 파악할 수 없다.

ㄷ. 갑과 을이 연장 근로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연장 근로 시에는 통상 임금의 50%를 연장 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갑이 시급을 모두 9,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된다.

13 선거 제도 분석

문제분석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되는 갑국 의회는 4개의 선거구에서 각 선거구별로 동일하게 2명의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하므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은 선거구제를 개편하여 의회 전체 의석수를 12석으로 하고, 한 정당이 지역구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제인 소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의회 전체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인 4석을 제외한 8석을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여 선출하고자 한다.

정답찾기 ③ 선거 제도 개편 전 B당은 2석, C당은 3석을 차지하였지만, 선거 제도 개편 후 B당과 C당 모두 지역구에서 1석, 비례 대표제에서 2석을 확보하여 B당과 C당의 의석수는 동석이 된다.

오답피하기 ① 모든 선거구에서 유권자 수는 동일하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으므로 최근 선거 결과 ‘다’ 선거구에서 발생한 사표가 가장 많다.

② 선거 제도 개편으로 A당은 과대 대표되고, B당은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한다.

④ 선거 제도 개편 전 C당의 득표율은 30%이고 의석률은 37.5%이며, 선거 제도 개편 후 C당의 득표율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석률은 25%로 선거 제도 개편 후 C당은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 정도가 줄어든다.

⑤ 현행 선거 제도에서 A당은 3석, B당은 2석, C당은 3석을 확보하였고, 선거 제도 개편으로 A당은 5석, B당과 C당은 각각 3석, D당은 1석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선거 제도에서보다 선거 제도를 개편할 경우 C당과 달리 A, B, D당은 의석수 확보에서 유리해진다.

14 사법과 사회법의 비교 분석

문제분석 A는 개인 간의 생활 관계를 다루는 법 영역으로 '사법(私法)'에 해당하며, B는 국가의 사적 영역에 대한 개입을 인정하므로 '사회법'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②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제3의 법 영역이다.

오답피하기 ① 사회법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 영역에 해당한다.

③ 근대 민법의 원칙이 수정·보완되면서 사법(私法)에도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더불어 무과실 책임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④ 사회법은 국가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⑤ 사법(私法)과 사회법은 모두 법률관계 형성을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인정한다.

15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분석 A는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해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 관습법에 해당하며, B는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만을 구속하므로 조약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④ 조약과 달리 국제 관습법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일반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승인되어 법적 확신을 가지게 되면 성립한다.

오답피하기 ① 우리나라에서 국제 관습법은 헌법보다 하위의 법규범에 해당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조약은 대통령이 체결·비준하며, 국회는 일정한 경우 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국제 사회에서는 입법부와 같은 권위적인 법 제정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⑤ 국제 관습법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조약의 경우에도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해서만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조약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6 유언과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 이해

문제분석 사례에서 갑과 을이 병의 아들 A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법률 효과를 이해해

야 한다. 이후 갑과 을이 이혼하고 을은 정과 재혼한 후 정은 딸 B를 합법적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을과 정은 함께 여행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사례를 근거로 을과 정은 사망 순서와 유언의 효력에 따른 법률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정답찾기 ⑤ 정은 유언이 무효이고 을의 사망 후 정이 사망한 경우 우선 을의 사망으로 정은 3억 원, A와 B는 각각 2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이후 정이 사망하였으므로 정의 상속 재산은 38억 원이 되고, 이를 B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B는 이 경우 40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오답피하기 ① A는 입양으로 갑과 을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병과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② "모든 재산을 ○○ 재단에 기부한다."는 정은 유언이 유효한 경우 유류분권자의 반환 청구가 없으면 ○○ 재단은 최대 38억 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정은 유언이 유효한 경우, A는 유류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재단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정은 유언이 무효인 경우 법정 상속이 개시되며, 을이 21억 원을, B가 14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이후 을이 사망하게 되면 을의 전 재산인 7억 원과 정은 사망으로 상속받은 21억 원이 상속되는데, A와 B는 법정 상속인이므로 각각 14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정은 유언이 무효이고 정은 사망 후 을이 사망한 경우, A는 14억 원, B는 28억 원을 상속받는다.

17 부동산 임대차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 이해

문제분석 사례에서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2월 1일에 A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 신고를 마치고, 다음 날 확정 일자를 받았으므로, 갑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갑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A 주택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를 근거로 법률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정답찾기 나. 갑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별도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없이 남은 기간 동안 A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르. 병이 정에게 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에서 A 주택이 3억 원에 매각된 경우, 임차인 갑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가지므로 정은 매각 대금에서 채권액 중 일부만 변제 받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가. 갑은 2017년 2월 2일 0시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2017년 2월 2일 확정 일자를 받은 직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다. 정은 저당권이 A 주택에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갑과 정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8 우리나라 헌법 기관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A는 대법원, B와 C는 질문 (가)에 따라 각각 대통령과 국회 중 하나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③ (가)에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가?"가 들어 가면 B는 대통령이고 C는 국회가 된다. 대통령은 헌법 재판소 재판

관 9인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오답피하기 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 (가)에 “국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가?”가 들어가면 B는 대통령이고, C는 국회에 해당한다. 정부는 정당 해산 심판 제소권을 가진다.

④ (가)에 “조약의 체결·비준권을 가지는가?”가 들어가면 C는 대통령이고 B는 국회에 해당한다. 국회는 대법원장이 헌법에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한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⑤ (가)에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 부의권을 가지는가?”가 들어가면, C는 대통령이고 B는 국회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통해 국회를 견제한다.

19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이해

문제분석 사례를 통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과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의 성립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정답찾기 ④ 을이 B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을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을의 부모는 B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사례에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병이 과실로 A에게 배달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은 A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을이 치킨을 배달한 행위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갑은 B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인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⑤ 제시된 사례에서 병의 A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갑, 을, 병이 A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분석 그림의 질문 (가), (나)를 근거로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인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의 특징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정답찾기 ㄱ. (가)에 “국제 연합의 최고 의결 기관에 해당하는가?”가 들어가면, A는 총회에 해당한다.

ㄴ. (가)에 “원칙적으로 관할권을 승인한 국가들 간의 분쟁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가 들어가면, A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고 B와 C는 각각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 중 하나에 해당한다.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는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오답피하기 ㄷ.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은 총회로 (나)에는 해당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

ㄹ. (가)에 “표결 방식에 강대국의 힘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는가?”가 들어가면 A는 안전 보장 이사회에 해당한다. 국제 사법 재판소와 총회는 안전 보장 이사회와 달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들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없으므로 (나)에 해당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

실전 모의고사 5회

본문 124~128쪽

1 ⑤	2 ④	3 ③	4 ③	5 ④
6 ③	7 ②	8 ③	9 ②	10 ⑤
11 ⑤	12 ④	13 ⑤	14 ②	15 ⑤
16 ②	17 ①	18 ③	19 ③	20 ②

1 사회 계약설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이권 분립을 주장합니까?”라는 질문으로 B, C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A는 로크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A, B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B는 홉스이다. 따라서 C는 루소이다.

정답찾기 ⑤ 일반 의지에 근거한 정치 공동체의 구성을 주장한 것은 루소이다.

오답피하기 ①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는 것은 홉스이다.

② 왕권 신수설은 왕권을 신이 부여했다는 의미이다. 사회 계약설은 인간의 계약에 의해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홉스, 로크, 루소 모두 왕권 신수설과는 거리가 멀다.

③ 로크는 자연권을 침해한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한다.

④ 홉스, 로크, 루소 모두 국가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본다.

2 법치주의의 유형 비교

문제분석 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B는 형식적 법치주의, 법의 목적이나 내용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실질적 평등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는 A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찾기 ㄴ.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ㄹ.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ㄱ.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의 효력을 심판을 통해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법의 목적이나 내용을 중시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 제도로 볼 수 있다.

ㄷ.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중시한다.

3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비교

문제분석 감국은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를 각각 시행하므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을국은 의회 의원 선거만 실시하고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서 선출되므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찾기 ③ 감국에서 t기에는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과 의회 의석 과반수 정당이 일치하고, t+1기에는 일치하지 않는다.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과 의회 의석 과반수 정당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일치하는 경우보다 높다.

오답피하기 ① 감국에서는 t기에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의회 의석 과반수 정당이므로 여대야소 현상이 나타났다.

② 을국에서는 t기의 경우 의회 의석 과반수 소속 정당이 없으므로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을 것이고, t+1기의 경우에는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과 의회 의석 과반수 정당이 일치하므로 단독 정부가 구성되

있을 것이다.

④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제에서와 달리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인정된다.

⑤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제에서와 달리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이 가능하다.

4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 비교

문제분석 정당은 의회 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공천하므로 A는 정당, 공익과 관련한 환경 관련법을 강조하는 B는 시민 단체, C는 노동 조합으로 이익 집단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③ 정당은 선거에서 공약을 제시하고 이것의 실천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 정치적 책임을 진다.

오답짜이기 ①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은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②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은 모두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한다.

④ 이익 집단은 정당, 시민 단체와 달리 공익보다 집단의 특수 이익을 우선시한다.

⑤ 정부와 의회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당이다.

5 기본권의 특징 비교

문제분석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본권 A는 자유권, 수단적 권리인 B는 청구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C는 사회권이다.

정답찾기 ㄱ.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ㄴ. 청구권, 사회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ㄷ.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는 포괄적 권리이다.

오답짜이기 ㄴ.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6 우리나라 국가 기관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 국가 기관 중 A는 국회, B는 국무총리, C는 대통령, D는 감사원장, E는 대법원장이다.

정답찾기 ㄴ. 국무총리를 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 중 하나이다.

ㄷ. 대통령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등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오답짜이기 ㄱ.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ㄷ.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을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7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관련 헌법 규정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인 것을 통해 A는 국민 주권주의임을 알 수 있다.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기본 원리이다.

정답찾기 ㄱ. 국민 주권주의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과 해

석의 기준이 되며,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와 정책 결정 방향을 제시하는 의의를 갖는다.

ㄷ.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에는 민주적 선거 제도 규정, 국민 투표제 실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이 있다.

오답짜이기 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ㄷ. 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8 헌법 심판 제도 이해

문제분석 법률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B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국민이 직접 청구하지 않는 C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따라서 A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정답찾기 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취소 또는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ㄷ.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의 제청으로 이루어진다. 법원이 제청하는 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오답짜이기 ㄱ.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ㄷ.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위헌 법률 심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모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9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이해

문제분석 감은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을은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을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을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찾기 ㄱ.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의 감독자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A는 감의 감독자인 감의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감은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

오답짜이기 ㄴ. 을은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B는 을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미성년자의 감독자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10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가)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나)는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다)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속임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정답찾기 ⑤ (가)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갑과 감의 부모는 자전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나)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는 없었으나 속임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갑과 감의 부모는 자전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오답짜기 ① 갑이 동의를 위조하는 등의 속임수를 썼다면 갑과 갑의 부모는 자전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의 부모에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③ 갑이 자전거 매매 계약을 취소할 경우 부모의 동의는 필요 없다.

④ 부모의 동의를 얻은 (가)의 경우에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므로 을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한 (다)의 경우에는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을 경우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례에서 계약 체결 시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을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11 부동산 관련 계약 이해

문제분석 주택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며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받는다. 주택 매매 계약은 해당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 목적을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다.

정답찾기 ⑤ 갑은 인도 후 전입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대항력을 갖춘 갑은 주택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오답짜기 ①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갖는다.

② 저당권 설정 내용은 등기부 등기에 기재된다.

③ 주택 매매 계약 시 중도금 지급 이전에는 해약금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주택의 소유권은 등기 내용이 등기부 갑구에 기재되어야 이전된다.

12 상속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나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갑은 유언장을 남겼으나 유언의 법적 효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병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병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정답찾기 ④ 병과 정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은 병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권이 없다. 혼인 외 출생자인 C에 대해서는 병이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병과 C는 친자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C도 법정 상속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 2순위인 병의 노모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

오답짜기 ① 갑과 을은 B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는데, 이는 친양자와 달리 입양과 동시에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갑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권자는 배우자 을, 친생자 A, 일반 입양된 B이다.

③ 갑의 노모는 법정 상속 2순위이므로 법정 상속을 받지 못한다.

⑤ 병이 C를 인지했다면 C는 병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권자이지만 사실혼 배우자인 정은 법정 상속권자가 아니다.

13 구속 수사와 관련한 형사 절차 이해

문제분석 판사 갑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판사 을은 구속 적부 심사를 진행 중이다. 피의자를 수사할 경우에는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를 거쳐 영장을 발부하고,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구속 적부 심사 제도라고 한다.

정답찾기 ⑤ 판사 갑의 판단에 따라 A는 구속되지 않으나, 판사 을의 판단에 따라 B의 구속 수사는 계속된다.

오답짜기 ① A와 B는 모두 피의자이다.

② 형사 보상은 미결 구금된 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의 확정 등을 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A는 지금은 불구속 상태이지만 나중에 법정 구속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갑의 판단에 의해 A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검사와 달리 갑은 A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④ 을의 판단에 따라 B는 계속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지 기소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14 소년법 적용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가)의 사례는 형벌, 소년법상 보호 처분 모두 부과할 수 없는 사례이고, (나)는 형벌 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사례이며, (다)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나 형벌은 부과할 수 없는 사례이다.

정답찾기 ② 17세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연령인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도 부과할 수 있다.

오답짜기 ① 10세는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부과할 수 있다.

③ 심신 상실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 따라서 심신 상실자에게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25세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다.

④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다. 형벌은 형사 재판을 통해 부과하는 것이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가정 법원(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부과한다.

⑤ (다)의 사례에 해당하는 소년에게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

15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형사 절차는 국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과 범죄자에 관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어 형벌이나 보안 처분을 부과하고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크게 수사 → 공판 → 형의 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정답찾기 ㄷ. 피고인의 유죄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한다.

ㄹ.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수형자)가 개전

의 정이 현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집행 유예 중인 자에게는 가석방 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

오답피하기 > ㄱ. 갑이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ㄴ.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피해자는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

16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절차 이해

문제분석 > 갑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을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을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이다.

정답찾기 > ㄱ. 갑은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ㄴ.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는 지방 노동 위원회 → 중앙 노동 위원회 → 행정 법원 → 고등 법원 → 대법원으로 진행된다. 행정 소송은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다.

ㄷ.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민사 소송이다.

17 국제 연합 주요 기관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 국제 연합 주요 기관 중 (가)는 총회, (나)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정답찾기 > ㄱ. 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며, 국제 평화에 대한 권고, 안전 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선출 등의 기능을 한다.

ㄴ.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오답피하기 > ㄷ. 안전 보장 이사회, 총회 모두에서 1국 1표 원칙이 적용된다.

ㄴ. 안전 보장 이사회, 총회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가지고 있다.

18 국제법 법원(法源)의 특징 비교

문제분석 > 국제법의 법원 중 A는 법의 일반 원칙이고 별도의 체결 절차가 필요한 B는 조약이며, C는 국제 관습법이다.

정답찾기 > ㄴ. 국내 문제 불간섭은 국제 관습법의 사례이다.

ㄷ. 법의 일반 원칙은 국제 분쟁 발생 시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재판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ㄱ.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ㄴ. 조약은 국제 관습법과 달리 문서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 지역구 선거에서 갑국은 50개의 지역구에서 100명의 의회 의원을 선출하므로 갑국의 선거구 제도는 중·대선거구제이고, 을국은 100개의 선거구에서 100명의 의회 의원을 선출하므로 을국의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이다.

정답찾기 > ③ 중·대선거구제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당선되므로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갑국에서 비례 대표 의원은 지역구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므로 갑국의 유권자는 1인 1표를 행사하고, 을국에서 비례 대표 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므로 을국의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한다.

② 지역구 선거에서 갑국의 대표 결정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고, 을국의 대표 결정 방식은 다수 대표제이다. 다수 대표제에서는 소수 대표제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④ 소선거구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보다 다수당에 유리하여 양당제가 촉진된다.

⑤ 갑국과 을국의 비례 대표 의원 배분 시 각각 지역구 의석 점유율, 지역구 의석수 등을 고려하므로 양국 모두 지역구 선거 결과가 영향을 준다.

20 선거 결과 분석

문제분석 > 갑국과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갑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을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구분	a당	b당	c당	d당	구분	A당	B당	C당	D당
지역구 의석수	30	34	31	5	지역구 의석수	40	36	20	4
정당 득표율	40	30	26	4	정당 득표율	50	40	5	5
비례 대표 의석수	41	32	27	0	비례 대표 의석수	52	42	6	0
총 의석수	71	66	58	5	총 의석수	92	78	26	4

정답찾기 > ② A당의 의회 의석 점유율은 46%, C당의 의회 의석 점유율은 13%이므로 A당 의회 의석 점유율이 C당 의회 의석 점유율의 3배보다 크다.

오답피하기 > ① 지역구 선거 결과 a당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은 30%, 정당 득표율은 40%이므로 a당은 과소 대표되었고, c당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은 31%, 정당 득표율은 26%이므로 c당은 과대 대표되었다.

③ 을국의 D당, 갑국의 d당은 모두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다.

④ 의회 의석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갑국의 경우 a당, 을국의 경우 A당이다.

⑤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과반수 의회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다. 따라서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연립 정부가 구성될 것이다.

08 국제 문제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카슈미르 지역의 분쟁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영유권 분쟁이 핵심이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갈등이 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영유권 다툼, 수자원 문제 등 자원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정답찾기 나. 카슈미르 지역의 분쟁은 종교적 갈등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인더스강 상류의 수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로 확대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다. 카슈미르 지역의 분쟁은 인도와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의 우호 증진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그 결과 국제 사회의 평화 정착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다.

르. 카슈미르 분쟁에서도 국제 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의 노력이 나타난다. 국제 사회에는 통일된 중앙 정부는 없지만 다양한 국제기구의 노력을 통해 국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

오답피하기 가. 카슈미르 지역의 분쟁은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정치적 이념 대립이 아니라 종교, 영토, 수자원 등 신념 또는 국가 이익을 둘러싸고 나타난 갈등 양상이다.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1회

본문 104~108쪽

1 ⑤	2 ③	3 ⑤	4 ②	5 ④
6 ⑤	7 ④	8 ⑤	9 ⑤	10 ④
11 ④	12 ②	13 ③	14 ④	15 ①
16 ②	17 ⑤	18 ①	19 ②	20 ④

1 불법 행위의 이해

문제분석 민법 제760조 제2항에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례에서 갑~병 중 누가 던진 돌로 인해 정 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는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책임 능력이 없는 병을 제외한 갑, 을에게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정답찾기 ⑤ 공동 불법 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 채무를 부담하므로, 정은 누구의 돌에 맞아 자동차가 파손되었는지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갑 또는 을을 상대로 공동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17세인 갑과 16세인 을은 모두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갑과 을이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정한 경우 갑의 부모와 을의 부모가 각각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경우 갑의 부모와 을의 부모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② 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갑의 부모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을은 자기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을 증명할 경우 정 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병은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병의 가해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병의 부모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감독자의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은 아니다.

2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이해

문제분석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 A는 대통령제이다.

정답찾기 ③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의 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정해진 임기 동안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의회를 중심으로 권력의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②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의회는 국민의 선거로 구성되며, 행정부 수반 역시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④ 행정부가 의회 의원의 임기 만료 전에 새로운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요구할 수 있는 의회 해산권을 가진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⑤ 행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3 헌법의 의미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 개념의 변천을 나타낸 것으로 (가)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 (나)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⑤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기초 위에 복지 국가의 이념이 구현된 헌법을 의미한다.

오답짜이기 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가 통치 기관의 존립 근거가 될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소극 국가를 지향한다.

②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③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모두 국가 기관의 조직·구성과 권한에 대해 규정한 조직 수권 규범이다.

④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모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 규범이다.

4 실질적 법치주의 이해

문제분석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절차적 합법성은 물론 법 내용에 대한 실질적 정당성까지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오답짜이기 ①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를 강조한다.

③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치주의의 본래 목적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고 본다.

④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정의의 실현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⑤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위헌·위법적인 국가 작용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위헌 법률 심사제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5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권한 이해

문제분석 국회는 입법 기능, 국가 기관 구성 기능, 국정감사 및 통제 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가진다.

정답찾기 ④ 국무총리는 국무 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 및 해임 건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오답짜이기 ① 헌법 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② 조약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다.

③ 국정감사는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으로 법률에 근거하

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⑤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의결을 위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일반 의결 정족수로 법률안 의결 정족수와 동일하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6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이해

문제분석 갑은 을이 운영하는 세탁 편의점에 값비싼 패딩 점퍼를 맡겼는데, 세탁 과정에서 세탁물이 변색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갑은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

정답찾기 ⑤ 한국 소비자가원이 세탁 편의점을 운영하는 을에게 갑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권고한 경우 강제력이 없으므로 을은 이를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

오답짜이기 ① 갑이 침해당한 소비자의 권리는 안전할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므로 제시된 사례에서 갑이 을에게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③ 갑은 한국 소비자가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을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경우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7 주택 임대차 계약 이해

문제분석 갑은 임대차 계약 후 전입 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도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을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마친 상태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도 받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정답찾기 ④ 을이 집주인 C의 요구에 따라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될 수 없다.

오답짜이기 ① 갑은 전입 신고를 마쳤지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새로운 소유자인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A는 임차인 갑의 동의 없이 B와 연립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갑은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면 그에 기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법적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을과 C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면, 을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⑤ 갑은 전입 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도 받았지만 을과 달리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8 정치의 의미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표에서 (가)는 좁은 의미의 정치, (나)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ㄷ.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모두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국가 기관의 의견 조율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ㄹ. '국회의 국정 감사 활동'은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모두에 해당하는 사례이며, '축제 예산을 분배하는 학생회 활동'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오답피하기 ㄱ.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정치 주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한다.

ㄴ.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를 국가의 고유한 현상으로 이해하므로,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정치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9 선거 제도 분석

문제분석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 의회는 지역구 의석수 100석(총 100개의 선거구)과 비례 대표 의석수 100석(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으로 구성된다. 향후 총 의석수는 유지하지만 의회가 비례 대표 의원으로만 구성되도록 선거 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

정답찾기 ㄷ. 변경될 선거 제도를 최근 선거 결과에 적용하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립 정부가 구성될 것이다.

ㄹ. 변경될 선거 제도를 최근 선거 결과에 적용하면, 65석인 B 정당의 의석수가 70석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답피하기 ㄱ. 최근 선거 결과 A당은 105석을 확보하게 되므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ㄴ. 최근 선거 결과 정당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낮은 정당은 B당과 C당이다.

10 집행 유예와 선고 유예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가)는 선고 유예, (나)는 집행 유예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④ 선고 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자격 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거나 자격 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지 않고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오답피하기 ①, ② 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는 모두 유죄 판결에 해당하며,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다.

③ 형사 미성년자와 심신 상실자는 형사상 책임 무능력자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을 수 없다.

⑤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소년 보호 사건에서 부과될 수 있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없다.

11 정당과 시민 단체의 특징 비교

문제분석 A와 B는 모두 정치 참여 주체로 A는 정당, B는 시민 단체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④ 정당과 시민 단체는 모두 대의 민주제에서 정책 결정과

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에 “대의 민주제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시민 단체와 정당은 모두 기본적으로 공익을 도모한다.

②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책 수행으로 국민의 신임을 잃게 되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③ 시민 단체와 정당은 모두 정치 체계의 투입, 환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⑤ 정당은 정부와 국민, 정부와 의회를 이어 주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나)에 이와 관련된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

12 계약 체결의 법적 효과 이해

문제분석 갑은 을이 소유한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을과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한 후 갑이 90만 원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을의 의사를 받아들였으므로 갑과 을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다.

정답찾기 ② 갑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도 갑과 을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갑과 을은 모두 계약 체결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오답피하기 ① 갑이 먼저 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 표시를 하였어도 일정한 경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이 매매 계약 체결에 합의하였으므로 을이 소유한 노트북을 갑이 구매하는 매매 계약은 성립하였다.

④ 갑이 계약 성립 후 을에게 계약 취소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갑은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을이 갑과 약속한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갑에게 노트북을 넘겨주지 않은 경우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1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투명한 정부 운영과 국민 참여 확대, 국민의 참정권 확대 등의 선거 공약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찾기 ③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오답피하기 ① 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②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④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⑤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 조치의 실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14 부당 해고 구제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경력 사원 모집 시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채용된 갑에게 A 회사가 징계 해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 회사가 취업 규

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고 갑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징계 해고된 갑이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정답셋기 ④ 갑은 A 회사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오답짜기 ① 제시된 사례에서 A 회사의 갑에 대한 징계 해고를 사용자 갑의 노동 3권을 침해한 경우로 볼 수 없다.

② 갑은 A 회사의 부당 해고를 이유로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부당 해고의 경우 노동조합이 구제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

⑤ 갑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경우 A 회사는 갑에 대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5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A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청구권을 의미하며, B는 국민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대표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참정권을 의미한다.

정답셋기 ①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오답짜기 ② 근대 시민 혁명 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참정권은 보통 선거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된 현대 민주 정치에서 확립되었다.

③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④ 행복 추구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권리이다.

⑤ 참정권과 청구권은 모두 헌법에 명시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16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이해

문제분석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급 형법의 제정과 법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하나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정답셋기 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법은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오답짜기 ①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 실현을 위해 필요한 원칙이다.

③ 범죄와 형벌이 의회가 제정하는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성문 법률주의(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라고 한다.

④ 범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⑤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17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이해

문제분석 A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B는 근대 민주 정치에 해당한다.

정답셋기 ⑤ 직접 민주 정치를 실시한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와 달리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시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대의 민주제가 실시되었다.

오답짜기 ① 입헌주의 사상과 권력 분립의 원리는 근대 민주 정치에서 등장하였다.

② 보통 선거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된 것은 현대 민주 정치에서부터이다.

③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참정권 확대 운동으로, 근대 민주 정치에서 현대 민주 정치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④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일정한 재산을 가진 사람인 시민의 자유권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18 안전 보장 이사회의 역할 이해

문제분석 UN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이다.

정답셋기 ① 평화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 연합의 형식상 최고 의결 기관은 총회이다.

오답짜기 ② 안전 보장 이사회는 10개의 비상임 이사국과 5개의 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은 실질적 사항에 관한 결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표결 방식에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④ 안전 보장 이사회는 UN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무력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⑤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에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19 형사 절차의 흐름 이해

문제분석 검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청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던 갑을 긴급 체포한 직후 갑의 집을 압수·수색하였다. 검사는 갑을 긴급 체포한 후 40시간이 지나 구속 영장 등을 청구하였는데, 이후 형사 절차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정답셋기 ② 피의자와 피고인은 수사 절차나 형사 재판 절차에서 진술 거부권을 가진다. 수사 절차에서 수사 기관은 피의자에게, 형사 재판 절차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오답짜기 ① 검사가 갑을 긴급 체포한 행위는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갑은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별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

④ 갑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갑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게 된다.

⑤ 법원에서 갑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갑은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분석 1969년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조약법 협약')은 관습법으로 적용되어 오던 것을 성문화한 규정으로 조약에 관한 모든 규정을 망라하고 있어 조약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1969년 조약법 협약 내용을 근거로 국제법의 법원(法源)이 가진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정답셋기 > 나. 국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국제 관습법이 조약이 된 경우에도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르. 국가들은 국제 관습법으로 적용되던 것을 성문화를 통해 조약의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오답피하기 > 가. 1969년 조약법 협약에 따라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 체결한 합의는 조약으로 인정된다.

디. 조약은 조약 체결의 권한이 있는 자가 체결 절차를 완료해야 성립 가능하다. 따라서 별도의 체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원칙적으로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실전 모의고사 2회					본문 109~113쪽
1 ⑤	2 ④	3 ④	4 ②	5 ④	
6 ②	7 ②	8 ⑤	9 ④	10 ①	
11 ①	12 ①	13 ②	14 ①	15 ③	
16 ③	17 ②	18 ⑤	19 ⑤	20 ①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 (가)는 정치를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고 있고, (나)는 정치를 좁은 의미에서 바라보고 있다.

정답셋기 > ⑤ 넓은 의미의 정치, 좁은 의미의 정치 모두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정치라고 본다.

오답피하기 > ① 정치 활동이 소수의 정치 엘리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의 정치이다.

②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③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보다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④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모두 지방 자치 단체의 지역 사회 갈등 해결을 정치로 본다.

2 민주 정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 중간 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개별 국민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 정치 형태인 A는 직접 민주 정치이고, 국민이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형태인 B는 간접 민주 정치이다.

정답셋기 > ④ 직접 민주 정치, 간접 민주 정치 모두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간접 민주 정치보다 직접 민주 정치에서 중우 정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② 간접 민주 정치는 대표자에 의해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③ 간접 민주 정치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한 다음에는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무관심은 직접 민주 정치보다 간접 민주 정치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⑤ 우리나라에서 국민 발안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3 법치주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셋기 > 나. 실질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정의 실현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르.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 가. 실질적 법치주의는 자연법 사상에 입각한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디.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자의 자의적인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4 정부 형태 이해

문제분석 > 갑국은 대통령제, 을국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이다.

정답셋기 > 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의회 의원이 각각 별도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디. 대통령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나. 의원 내각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르.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5 선거 결과 분석

문제분석 > 갑국의 지역구 선거구 수는 250개인데, 지역구 의석수가 250석이므로 갑국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총 의석수가 300석인데 지역구 의석수가 250석이므로, 비례대표 의석수는 50석이다.

정답셋기 > 가. 갑국의 비례 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들이 선거구 전체에서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B, C당 모두 지역구 선거의 득표율이 24%이므로, 비례 대표 의석수도 12석으로 같다.

나. 갑국의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이므로 다수 대표제의 대표 결정 방식과 결합하여 운영된다.

르. 갑국의 유권자는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에게만 투표를 하고 정당에 투표를 하지 못한다. 이는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있어서 유권자가 정당에 직접 투표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오답피하기 > 디.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는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이다.

6 정당 제도 이해

문제분석 > 갑국은 양당제, 을국은 다당제가 형성되어 있다.

정답셋기 > 가.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디. 다당제는 정당 간 대립이 발생할 경우 다른 정당이 중재하기가 용이하다.

오답피하기 > 나.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르. 양당제는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는 정당 제도이다.

7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가)는 국민 주권주의, (나)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찾기 ②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 평화주의이다.

오답피하기 ①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③ 복지 국가의 원리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고자 한다.

④ 복지 국가의 원리는 빈부 격차 심화, 독과점 발생, 경제 공황 등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⑤ 헌법의 기본 원리는 모두 법령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된다.

8 기본권 이해

문제분석 자유권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며,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찾기 ⑤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사회권이므로 A는 사회권이다. 신체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은 자유권이며, A가 사회권이므로 자유권은 B, C 중 하나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사회권과 청구권은 국가 성립 이후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②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는 청구권이다.

③ 소극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이다.

④ 청원권은 청구권에 해당하는 권리고, 근로의 권리는 사회권에 해당하는 권리가기 때문에 A는 자유권이 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9 헌법 기관 분석

문제분석 A는 대통령, B는 감사원, C는 국무총리, D는 국무 회의, E는 대법원이다.

정답찾기 ④ 감사원장은 국무 회의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오답피하기 ①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제70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②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헌법 기관으로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공무원의 직무 감찰 등을 담당한다.

③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진다.

⑤ 국무총리, 대법원장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10 헌법 소원 심판 이해

문제분석 모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갑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은 이

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갑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정답찾기 ㄱ. 갑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갑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

ㄴ. 헌법 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ㄷ.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는 헌법 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다.

ㄹ. 헌법 재판소의 상급 법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다.

11 미성년자 계약 이해

문제분석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로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사례처럼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 능력자인 것처럼 믿도록 속인 경우는 미성년자 측에서의 취소권 행사가 제한된다.

정답찾기 ① 갑은 형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상대방을 속였기 때문에 취소권이 배제되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②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상대방을 속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을은 거래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대한 갑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④ 갑 또는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을 촉구할 필요가 없다.

⑤ 계약의 효력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12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이해

문제분석 일반적인 불법 행위와 달리 책임의 성립 요건이 경감되거나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를 특수 불법 행위라 한다.

정답찾기 ①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면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되며, 그렇게 되면 감독자인 을의 특수 불법 행위도 성립하지 않게 된다.

오답피하기 ② 갑은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무는 갑의 감독자인 을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과 병이 공동으로 정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므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을의 주장이 맞다면, 피용자인 종업원이 부주의하여 정이 다친 것이다. 사용자인 병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다.

⑤ 무의 주장이 맞다면, 무는 을에게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 상속 이해

문제분석 상속은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을 따른 뒤 법정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정답찾기 ② B의 유언이 유효하지 않다면 법정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제1순위 직계 비속인 D와 F가 상속을 받고, 배우자 E가 D, F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다. D와 F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하다.

오답피하기 ① B의 직계 존속인 A는 제2순위 상속인이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B의 유언이 유효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 ○ 재단은 증여를 받을 수 없다.

④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가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E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계 존속인 A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이해

문제분석 주택을 소유한 자(을)는 주택을 빌리고자 하는 자(갑)에게 주택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 등록 이전을 해야 대항력이 형성되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형성된다.

정답찾기 ① 임대차 계약 당시에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동안 거주하는 것이 보장된다.

오답피하기 ②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우선 변제권이다.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

③ 갑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 등록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병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⑤ 주택을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갑구에 기재된다.

15 위법성 조각 사유 이해

문제분석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정답찾기 ③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데, 법원은 갑의 행위가 을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정당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데, 법원은 병의 행위가 방법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므로 정당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답피하기 ①, ②, ④, ⑤ 긴급 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자구 행위는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하거나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16 형사 재판 이해

문제분석 형사 재판은 검사의 기소에 의해서 진행된다. 검사는 을을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을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을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정답찾기 ③ '○○ 지방 법원 합의부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라는 부분을 통해서 해당 재판은 2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을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② 모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④ ○○ 지방 법원 합의부는 갑이 을의 개에게 물린 것은 갑의 중대한 실수로 보았으며, 을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을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⑤ 형사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을이 구금되었어야 하는데, 을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7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 분석

문제분석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찾기 ㄱ.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ㄴ. 갑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중앙 노동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오답피하기 ㄴ. 중앙 노동 위원회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부당 노동 행위라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갑의 근로 3권이 침해당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ㄷ. 중앙 노동 위원회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였고, 1심 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기 때문에 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중앙 노동 위원회와 1심 법원이 같게 판단하였다.

18 소비자 구제 절차 이해

문제분석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찾기 ⑤ 사업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보상 여부와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소비자가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의뢰한 경우 한국 소비자원은 사실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한다.

③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④ 민사 소송 과정에서 재판을 제기한 갑이 원고, 상대방인 을이 피고가 된다.

19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A는 현실주의적 관점, B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정답찾기 ⑤ 상대국에 대한 힘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평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오답피하기 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 이익은 조화될 수 없다고 본다.

②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법 및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한다.

③ 자국 이익의 배타적 추구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④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가의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20 국제법의 이해

문제분석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 국제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이며,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을 국제법의 법원으로 하고 있다.

정답찾기 ① 제시문의 국제 사법 재판소는 '초국경 환경 피해 방지 원칙이 국제 관습법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 '초국경 환경 피해 방지 원칙'을 국제법의 법원으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다.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다.

③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은 당사국이 셋 이상인 다자 조약이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에 관한 체결 및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비준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⑤ 조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국에만 구속력을 갖지만,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다른 국가에 대하여도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③ 흡스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④ 직접 민주제를 옹호한 근대 사회 계약론자는 루소이다.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은 실질적 법치주의, ㉡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입장에 있다.

정답찾기 ㉠.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에 어긋난 법률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위헌 법률 심판 제도 실시를 강조할 것이다.

㉡.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므로 합법적인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뿐 아니라 정당성도 중시한다.

오답피하기 ㉢.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에 의한 통치를 중시한다.

3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가)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 (나)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이다.

정답찾기 ⑤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 인물이다.

오답피하기 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기본으로 하지만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등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②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행정부는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③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수단에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내각 불신임권,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의회 해산권이 있다.

④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4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가)는 시민 단체, (나)는 이익 집단, (다)는 정당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 집단이다.

정답찾기 ⑤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모두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한다.

오답피하기 ① 정당은 집단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② 시민 단체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지만, 이익 집단은 집단의 특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③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모두 여론 형성 기능을 한다.

④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5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국의 선거구 제도는 중·대선거구제이고 비례 대표 의원은 따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를 토대로 선출한다. 을국의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이고, 지역구 의원을 선출을 위한 선거와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따로 실시한다.

정답찾기 ② 갑국에서는 각 정당이 지역구 선거구당 1명만 공천할 수

실전 모의고사 3회					본문 114~118쪽
1 ⑤	2 ④	3 ⑤	4 ⑤	5 ②	
6 ⑤	7 ④	8 ①	9 ②	10 ④	
11 ②	12 ①	13 ⑤	14 ②	15 ④	
16 ④	17 ②	18 ④	19 ④	20 ④	

1 근대 사회 계약론자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하는 A는 로크,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보지 않는 B는 홉스, C는 루소이다.

정답찾기 ⑤ 홉스, 로크, 루소는 모두 국가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았다.

오답피하기 ① 루소는 일반 의지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②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았다.

있으므로 하나의 정당이 모든 지역구에서 당선되더라도 지역구 의석 점유율이 50%이다. 또한 비례 대표 의원을 지역구 의석 점유율에 비례하여 선출하므로 역시 최대 50%이다. 따라서 갑국에서는 의회 내 과반수 정당이 나타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의회 의원 선거에서 갑국은 1인 1표제, 을국은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③ 소선거구제에서는 중·대선거구제에서보다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④ 갑국과 을국 모두 정당 공천을 받은 비례 대표 후보자가 당선된다.

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동일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문제분석 갑국과 을국의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갑국〉			〈을국〉		
구분	지역구 의석수(석)	비례 대표 의석수(석)	구분	지역구 의석수(석)	비례 대표 의석수(석)
A당	80	40	E당	80	50
B당	70	35	F당	70	20
C당	30	15	G당	30	20
D당	20	10	H당	20	10

정답찾기 ⑤ 갑국은 정당별 지역구 의석 점유율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한다. F당은 갑국의 방식대로 하면 비례 대표 의원의 의석수가 35석이 되어 현 방식보다 많아진다. G당은 갑국의 방식대로 하면 15석이 되어 현 방식보다 적어진다. 따라서 F당은 G당과 달리 비례 대표 의원 선출에 있어서 갑국의 제도 도입에 찬성할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B당의 의회 의석수는 105석, F당의 의회 의석수는 90석이다.

② C당의 지역구 선거 정당 득표율은 10%, 지역구 의석 점유율은 15%이므로 과대 대표되었다. D당의 지역구 선거 정당 득표율은 15%, 지역구 의석 점유율은 10%이므로 과소 대표되었다.

③ A당의 비례 대표 의원 의석수는 40석, D당의 비례 대표 의원 의석수는 10석이다. 따라서 A당의 비례 대표 의원 의석수는 D당의 비례 대표 의원 의석수의 4배이다.

④ E당의 의회 의석수는 130석으로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을국이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한 국가라면 단독 정부가 아닌 연립 정부가 구성될 것이다.

7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가)는 복지 국가의 원리, (나)는 국민 주권주의 원리, (다)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찾기 ㄱ. 법률을 통한 근로자의 근로 조건 보호,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의 보장과 최저 임금제 실시 등은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해 해당한다.

ㄴ. 국민 주권주의 원리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ㄷ. 문화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해 종교·학문·예술 활동의 보장, 평생 교육의 진흥, 의무 교육 제도 실시 등이 있다.

오답피하기 ㄴ. 복수 정당제 실시는 국민 주권주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8 기본권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가)는 자유권, (나)는 청구권, (다)는 사회권이다.

정답찾기 ① 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②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체포되었다면 자유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③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모두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자유권은 사회권, 청구권과 달리 천부 인권적 성격을 갖는다.

⑤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중 자유권만 포괄적 권리에 해당한다.

9 우리나라 국가 기관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가)는 국회, (나)는 국무 회의, (다)는 대통령, (라)는 감사원, (마)는 대법원이다.

정답찾기 ② 국회의원은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이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국가 예산안 심의·의결권 및 결산 심사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한다.

③ 국회는 감사원장,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갖는다.

④ 국회 의장은 국회의원이 선출한다.

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10 헌법 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정답찾기 ㄱ.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당사자의 제청 신청뿐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ㄷ.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재판 당사자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ㄴ.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취소 또는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11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사례에서 미성년자인 갑은 부모의 동의 없이 고가의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다. 이때 오토바이 구매 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셋기 ㄱ. 미성년자인 갑이 부모 동의 없이 오토바이 구매 계약을 한 경우 미성년자인 갑이 단독으로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갑이 부모 동의서를 위조했다면 미성년자의 속임수에 해당하여 갑 또는 갑의 부모는 오토바이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오답짜이 ㄷ. 갑이 성년 의제된 상태라면 오토바이 구매 계약을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했다는 이유로 갑 또는 갑의 부모가 취소할 수 없다.

ㄹ. 계약은 구두 합의로도 성립한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라도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성년자 본인 및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12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 소유의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간판이 떨어져 차가 파손된 것은 특수 불법 행위 중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에 해당하는 사례이고, 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 정이 음식을 쏟아 손님의 노트북을 망가뜨린 것은 사용자 배상 책임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정답셋기 ① 공작물 등의 점유자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 정은 손님의 노트북을 직접 망가뜨린 당사자이므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아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오답짜이 ②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되면 공작물 등의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③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일차적으로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④ 손님은 병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 종업원 정에게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만약 정이 가해 행위가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사용자인 병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13 민사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은 민사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려고 한다. 정식 소송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어떤 해결 절차가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정답셋기 ⑤ 민사 조정 제도는 정식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는 아니다.

오답짜이 ① 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소송 이전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강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

③ 내용 증명 우편은 분쟁의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려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다.

④ 계약 시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았다면 소송을 통한 판결 없이도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4 이혼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가)는 재판상 이혼, (나)는 협의상 이혼 사례이다.

정답셋기 ㄱ.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이다. 그러나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선고에 의해 친권이 상실될 수 있다.

ㄴ. 협의상 이혼은 양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하다.

오답짜이 ㄷ.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시 모두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이혼 숙려 기간은 자녀의 유무와 상관없이 거쳐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양육할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다르다.

15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범죄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한다. 제시된 사례에서 법원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를 찾는 문제이다.

정답셋기 ㄴ. 을의 행위는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한 것이므로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갑과 을의 행위는 모두 구성 요건에는 해당한다. 다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오답짜이 ㄱ. 비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갑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ㄹ. 갑의 행위는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인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을의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16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형사 절차는 크게 수사 → 공판 → 집행의 단계로 진행된다.

정답셋기 ④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당연히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도 그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면 항소할 수 있다.

오답짜이 ① 수사는 고소 및 고발, 현행범의 체포, 수사 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시작된다.

② 검사는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검사의 기소로 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된다.

⑤ 집행 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므로 을은 구금되지 않는다.

17 소년법 적용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이며, 형법상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4세 이상인 자이다. 갑, 을, 병은 모두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병은 형법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셋기 ㄱ. 병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에 해당하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ㄷ. 을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벌을 받지 않

지만, 병은 14세 이상이므로 형법이 적용되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 나. 검찰로 송치된다는 것은 형법이 적용되어 기소될 수 있는 연령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병만 검찰로 송치될 수 있다.
 르. 갑, 을 모두에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8 형사 보상 제도, 배상 명령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 (가)는 억울하게 구금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형사 보상 제도이고, (나)는 민사 소송 제기 없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손해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배상 명령 제도이다.
정답찾기 > 가. 형사 보상 제도는 피의자로서 구속 수사 후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도 활용할 수 있다.
 나. 배상 명령 제도는 상해죄 등 일정한 사건의 형사 재판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다. (가)는 형사 보상 제도, (나)는 배상 명령 제도이다.
오답피하기 > 르.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19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 (가)는 자유주의적 관점, (나)는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정답찾기 > ④ 국가 간 상호 의존 관계를 경시하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오답피하기 > ① 현실주의적 관점은 홉스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한다.
 ② 현실주의적 관점은 동맹을 이용한 세력 균형 전략을 통해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자유주의적 관점은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 유지를 강조한다.
 ⑤ 냉전 시대의 군비 확장 경쟁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부합하는 예이다.

20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 국제법의 법원 중 (가)는 조약, (다)는 국제 관습법이다.
정답찾기 > 나. 법의 일반 원칙은 조약, 국제 관습법 등과 같은 적용 법규가 없을 경우 재판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르. 국내 문제 불간섭은 국제 관습법의 예이다.
오답피하기 > 가. 조약은 체결 당사국에만 효력을 미친다.
 다. 법의 일반 원칙, 국제 관습법은 조약과 달리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국가 간에 효력을 갖는다.

실전 모의고사 4회					본문 119~123쪽
1 ③	2 ②	3 ④	4 ③	5 ③	
6 ③	7 ⑤	8 ⑤	9 ⑤	10 ④	
11 ③	12 ②	13 ②	14 ②	15 ④	
16 ⑤	17 ⑤	18 ②	19 ②	20 ④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이해

문제분석 > 갑은 정치를 넓은 의미로 보고 있지만, 을은 국가와 관련된

활동으로 이해하여 정치를 좁은 의미로 보고 있다.
정답찾기 > ③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국가와 연관된 정치권력 현상으로서 을의 관점에서 정치에 해당한다. 을이 정치로 인정하는 활동은 모두 갑이 인정하는 정치의 범주에 포함된다.
오답피하기 > ① 국가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을의 관점이다.
 ② 갑이 을보다 정치 활동의 주체를 다양하게 본다.
 ④ 정치를 소수 권력 엘리트와 연관된 현상으로만 보는 것은 정치를 국가의 정치권력 현상과 연관시켜 좁은 의미로 보는 관점이다.
 ⑤ 정치를 사회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해소와 이해관계의 조절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정치를 넓은 의미로 보는 관점이다.

2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 비교

문제분석 > 제시문의 A는 자연 상태를 불안정한 상태로 인식한 로크이며, B는 주권의 양도나 자연권의 신탁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루소이다. 따라서 C는 홉스이다.
정답찾기 > ② 근대 민주주의의 사상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천부 인권 사상, 국민 주권 사상 등을 핵심으로 한다.
오답피하기 > ① 사회 계약론자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개인들의 자연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았다. 즉, 국가를 목적적 존재가 아닌 수단적 존재로 인식한 것이다.
 ③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2권 분립을 강조하였으며, 사법권의 독립은 몽테스키외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④ 로크와 루소 중 대의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루소이다.
 ⑤ 홉스나 로크는 군주의 위상과 역할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루소와 달리 통치자로서의 군주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3 시기별 민주 정치 이해

문제분석 > 표에서 대의제를 채택하지 않은 C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보통 선거제가 시행된 B는 현대 민주 정치이고 나머지 A는 근대 민주 정치이다.
정답찾기 > ④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는 중우 정치의 폐단이 나타났다.
오답피하기 > ① 계몽사상은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기반임과 동시에 근대 민주주의 발달의 초석이 되었다.
 ②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다양한 사회 집단의 참여가 보장되는 참여 민주 정치가 활성화되었다.
 ③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 추첨제, 운번제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공직을 맡았다.
 ⑤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는 자유민 성인 남자로 시민의 자격을 제한하였고,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재산이나 성별 등에 따라 정치 참여에 제한을 두었으므로 (가)에는 '정치 참여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4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전개 과정 이해

문제분석 > 우리나라는 9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으로 여러 번의 정부 형태 변화와 권력 구조의 변화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탄생하고 정권 연장의 시도가 이어졌으며, 이를 저지하고 바꾸려는 4·19 혁명이나 6월 민주 항쟁과 같은 시민들의 투쟁이 맞물리면서 민주 정치가 발전하였다.

정답선택기 ㄴ. (나)는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 정부(의원 내각제, 양원제 국회)를 1962년 헌법 개정으로 다시 대통령제로 전환 시킨 것이다.

ㄷ. (다)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에 의한 현행 헌법의 내용에 해당한다. 현행 헌법은 제5공화국의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단일제와 국회 권한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을 골자로 만들어졌다.

오답피하기 ㄱ. (가)는 권위주의 정권이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한 1972년 유신 헌법의 내용에 해당한다. 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위적 통치가 행해졌으며, 국회는 유명무실해져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 분립의 원리가 훼손되었다.

ㄹ. 헌법 개정이 행해진 순서는 (나) → (가) → (다)이다.

5 정치 참여 집단의 비교

문제분석 그림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A)이고, 직업적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이익 집단(B)이다. 따라서 나머지는 시민 단체(C)이다.

정답선택기 ③ 이익 집단의 등장과 확산은 현대 사회의 다원화 경향, 정당의 과두제화, 지역 대표제의 한계 등이 작용한 결과이다. 즉, 지역 대표제의 한계 때문에 이익 집단이 쇠퇴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정당은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② 정치 사회화의 기능은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의 공통된 특징이다.

④ 시민 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정당과 달리 권력을 잡으려는 목적과 무관하게 정치 참여가 나타나며, 이익 집단과 달리 공익을 추구하는 참여가 나타난다.

⑤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특수 분야에서 형성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직능적인 요구가 적절히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6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표에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는 복지 국가, B는 국민 주권주의, C는 국제 평화주의의 원리이다.

정답선택기 ③ 복지 국가의 원리는 사회권의 보장을 비롯하여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의 보장과 최저 임금제의 실시 등을 주요 실현 방안으로 한다.

오답피하기 ① 분단 현실이 반영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헌법의 기본 원리는 '평화 통일 지향'의 헌법 원리이다.

② A는 복지 국가의 실현을 목표로 하지만, C는 복지 국가 실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④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적합하지만, 선거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참정권을 저해할 수 있어 적합하지 않다.

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원칙적으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부여된다.

7 우리나라 헌법상 행정부 구성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에서 A는 국무총리, B는 대통령, C는 국무 회의이다.

정답선택기 ⑤ 대통령이 각부 장관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지만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의 동의의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국무총리의 존재는 의원 내각제 요소가 반영된 것이다.

②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행정에 대한 감찰을 주요 임무로 하는 것은 감사원이다.

③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 위원 겸직이 허용된다.

④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만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8 지역구 선거와 비례 대표 선거 방식 이해

문제분석 표에서 갑국은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를 채택한 지역구 선거 제도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대표를 당선시키는 비례 대표제를 함께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선택기 ⑤ 갑국의 지역구 선거에서는 300개의 지역구에서 300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므로 다수 대표제(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국 안정에 유리한 정당제인 양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오답피하기 ① 지역구 선거에서는 다수 대표제(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② 지역구 선거에서 과대 대표된 정당은 A, B이며, C, D, E는 과소 대표되었다.

③ 비례 대표 선거에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정되었다.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득표율 이상의 정당에만 의석을 배정하는 제도는 자료에서 찾을 수 없다.

④ 비례 대표 선거에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였으며, 제시된 자료에서 지역구 선거의 득표율이나 지역구 선거 의석률에 연동하여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였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9 헌법 소원과 위헌 법률 심판 이해

문제분석 그림은 갑의 형사 재판 중에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형법 조항 A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이 행해지는 것을 나타낸다. 갑이 제기한 A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된다. 만일 갑의 신청이 기각되면 갑은 직접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선택기 ⑤ (나)는 헌법 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이지만, (가)는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뿐 아니라 합헌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경우이며, (다)는 헌법 재판소가 헌법 소원을 기각하거나 각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이다.

오답피하기 ①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것은 법원이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② 헌법 소원 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가)는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한 경우이므로 헌법 재판소는 헌법 소원 심판이 아닌 위헌 법률 심판을 한다.

④ 갑이 A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

어 직접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

10 사용자 배상 책임 이해

문제분석 사례는 피자 가게의 종업원 을과 병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 갑의 배상 책임에 대한 것이다. 사용자 배상 책임은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에서 병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는 사무 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갑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찾기 ④ C는 자신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야기한 병에게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 갑에게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병의 행위는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① 을의 교통사고와 A의 피자 주문과의 인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교통사고는 을의 과실이 원인이다.

②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③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⑤ 갑이 을의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사용자 배상 책임에 해당한다.

11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이해

문제분석 법률안은 (가)와 같이 정부가 제출할 수도 있고, (나)와 같이 국회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③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여 의결되면, 국민의 생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행정부의 심의 기관인 국무 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오답피하기 ① 우리나라에서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제도로서 의원 내각제의 요소에 해당한다.

②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④ 정부나 국회를 통해 제출된 모든 법률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국회 의장이 본회의에 곧바로 직권 상정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⑤ 법률안이 의결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요구된다.

12 기본권의 유형별 특성 파악

문제분석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중에서 적극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청구권과 사회권이므로 C는 자유권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ㄱ. 자유권은 청구권이나 사회권보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기본권이다.

ㄴ. A가 사회권이면, B는 청구권이므로 (가)에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입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청구권이나 사회권은 국가의 성립을 전제로 인정된다. 따라서 A와 B에 모두 ‘예’가 되어야 한다.

ㄷ. 현대에 들어와 강조된 기본권은 사회권이므로 B는 사회권이 된다. 그러면 A는 청구권이 되어 C가 구제 절차를 포함한 기본권이냐는 선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13 유언과 상속 이해

문제분석 재산 상속은 유언 상속과 법정 상속이 있는데, 유효한 유언을 전제로 유언 상속이 법정 상속보다 우선한다. 만일 유언이 무효라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빛도 상속되므로 빛이 상속 재산보다 많거나 불확실하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도 고려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②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유언장의 효력이나 빛의 규모와 상관없이 을은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유언장은 법률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유효하고, 비록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형식에 맞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빛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면 모든 상속인들은 각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④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언 상속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에 가능한데, 유언 상속을 받는 무는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상속 재산의 규모와 빛의 규모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누구나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4 구성 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조각 사유 파악

문제분석 첫 번째 사례에서 법원은 갑의 사직 권유 행위가 협박이 아니므로 강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두 번째 사례에서 법원은 을이 아버지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정답찾기 ㄱ. 갑, 을의 행위는 모두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으므로 형벌도 당연히 받지 않는다.

ㄴ. 을의 행위에는 정당방위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

오답피하기 ㄴ. 갑, 을이 위법 행위를 이유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책임의 판단 이전에 갑, 을의 행위에는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ㄷ. 갑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을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5 금전 대차 계약 이해

문제분석 사례는 갑과 을이 금전 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갑이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정답찾기 ④ 내용 증명 우편의 발송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사례에서는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주장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이자를 은행 정기 예금 금리 수준으로 받기로 한 특약

이 불공정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 ② 계약은 구두 계약도 가능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반드시 계약일이라고 볼 수 없다. 사례에서는 2017년 7월 21일이 계약일이다.
- ③ 채무 불이행은 불법 행위와 마찬가지로 손해 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
- ⑤ 소액 사건 심판 청구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16 혼인의 법적 효과와 이혼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사례는 갑과 을이 협의상 이혼을 진행한 것을 나타낸다. 협의상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것 등 차이가 있다. 한편, 미성년자는 혼인 적령(18세)이 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이 가능하며, 혼인한 경우 성년 의제를 적용받는다.

정답찾기 ⑤ 을이 혼인한 뒤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년 의제를 적용받으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 오답피하기** ① 혼인 당시 을은 18세로 미성년자이였으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 ② 이혼 숙려 절차는 협의상 이혼의 과정에서 밟아야 하는 것이고, 이혼 신고 이후에 밟는 것은 아니다.
- ③ 을은 병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므로 면접 교섭권은 갑이 가진다.
- ④ A 아파트는 혼인 이전부터 갑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므로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아니다.

17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가)~(마)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의 선고에 이르는 형사 절차를 나타낸다. 인신 구속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구속 영장 실질 심사제)나 구속 적부 심사제를 두어 피의자의 구속이 타당하지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찾기 ⑤ 법관은 배심원들의 유·무죄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피하기** ① '미란다 원칙'은 변호인의 선임권, 불리한 진술 거부권 등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고 체포하도록 한 것이다.
- ②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법원이 구속 영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③ 피의자는 구속 중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감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갑의 신분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이지만, 기소 이후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피고인'이 된다.

18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 이해

문제분석 근로자 갑, 을은 모두 해고의 구제를 위해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 갑은 노동조합도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보아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구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을은 부당 해고를 이유로 구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답찾기 ㄱ.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한 경우이므로 갑은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갑, 을 모두 지방 노동 위원회 및 중앙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에서도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갑, 을 모두 해고를 당한 상태이므로 지방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ㄷ. 갑, 을의 해고 사유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을 바탕으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개인 간의 자유로운 법률 행위를 존중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권리의 실질적 보호가 어렵다.

19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분석 표의 A는 손해 배상 의무, 신의 성실의 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이며, B는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 등 국제 관습법이다. 이 외에도 조약이 주요한 국제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정답찾기 ㄱ. A는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국제 사회의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의미한다.

ㄴ.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법을 준거로 재판하는데, 재판의 주요한 준거에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오답피하기 ㄴ.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국들에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의 법원은 조약이다.

ㄷ. 국제 관습법이나 법의 일반 원칙은 모두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국제 사회에서 세계 다수의 국가들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20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갑은 힘에 의한 균형과 국익 우선을 토대로 한 국제 관계 형성을 강조하므로 현실주의적 관점, 을은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선(善) 의지와 상호 협력을 강조하고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의한 국제 문제 해결을 강조하므로 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정답찾기 ④ 세력 균형에 의한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를 강조하는 입장은 자유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국가 간의 현실적 국력의 차이를 강조하므로 국제기구의 의결에서 모든 국가가 동등한 표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② 냉전 시대의 트루먼 독트린(1947년)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 진영 국가에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역량을 지원한다는 정책으로서 현실주의적 관점을 지지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③ 갑은 현실주의적 관점, 을은 자유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있다.

⑤ 갑, 을이 국제 사회를 이끌어 가는 강력한 중앙 정부의 부재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는 있으나 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진 을은 국제 사회가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있다고 보므로 국제 사회가 무정부적 자유방임 상태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실전 모의고사 5회

본문 124~128쪽

1 ⑤	2 ④	3 ⑤	4 ③	5 ②
6 ①	7 ⑤	8 ⑤	9 ①	10 ⑤
11 ②	12 ①	13 ④	14 ③	15 ②
16 ⑤	17 ④	18 ④	19 ③	20 ⑤

1 정치의 의미 이해

문제분석 ㉠ 현상은 정치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 현상은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이다. 갑은 두 현상 모두 정치라고 보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의 정치를 생각하고 있다. 을은 ㉠ 현상만 정치로 보고 있으므로 좁은 의미의 정치를 생각하고 있다.

정답찾기 ⑤ 오늘날에는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많고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의 정치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넓은 의미의 정치를 말하고 있다.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국가의 통치 작용을 포함하여 국가가 아닌 사회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의 조정까지도 정치로 보고 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국가 성립 이전의 사회에서도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②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의 활동은 나타난다.

③ 을은 정치인의 권력 활동만을 정치라고 보고 있으므로 정치 활동의 주체는 국가 권력과 관련된 정치인뿐이다. 이에 비해 갑은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모든 사람을 정치 활동의 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갑이 생각하는 정치 활동의 주체가 을보다 더 광범위하다.

④ 입법부의 입법 활동은 정치권력의 유지나 행사와 관련되므로 좁은 의미의 정치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갑과 을의 입장에 모두 부합한다.

2 사회 계약설의 이해

문제분석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홉스는 군주 주권설, 로크는 국민 주권설을 주장하였다.

정답찾기 ④ 로크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려는 목적에 맞게 권력을 행사해야 하며,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답피하기 ① 홉스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고 보았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본 사람은 로크이다.

② 로크는 국가가 개인의 신약을 위반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치권자인 군주의 절대적 지배를 옹호한 사람은 홉스이다.

③ 홉스와 로크 모두 국가를 자연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⑤ 갑은 전제 군주 정치를, 을은 대의제를 주장했다.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한 사람은 루소이다.

3 민주 정치 발전 과정의 이해

문제분석 모든 구성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은 현대 민주 정치이다. 대의 민주제를 기본으로 한 것은 근대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이다. 따라서 A는 현대 민주 정치, B는 아테네 민주 정치, C는 근대 민주 정치이다.

정답찾기 ⑤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부르주아 등 일부 계층에게만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여성, 노동자, 농민 등에게는 아직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는 여성, 노예, 외국인을 제외한 성인 남성에게만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과 ㉡에는 모두 '아니요'가 들어간다. 근대와 현대 민주 정치 모두 대의 민주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에는 '예'가 들어간다.

오답피하기 ①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누구나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선거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보통 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는 민회가 중요한 의사 결정 기관이었다. 민회에서는 법률 제정이나 과세와 같은 주요 정책에 관해 시민들이 모여 서로 토론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③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성별이나 재산 등에 따라 제한되었다. 당시 노동자, 여성 등 일부 계층에게는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아 참정권 확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④ 아테네 민주 정치는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다.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민주 정치가 이루어졌고, 오늘날 보통 선거제의 확립으로 현대 민주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4 법치주의의 이해

문제분석 법치주의란 국가의 운영이 의회가 미리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민주 정치의 원리를 말한다.

정답찾기 ③ 형식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합법성만 강조했다기 때문에 법률을 도구로 한 합법적 지배가 가능했다. 따라서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하기도 했다.

오답피하기 ① 법치주의는 사람에게 의한 지배를 배척하고 국가 권력을 법에 구속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②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이라는 형식과 절차만 갖추면 그 법의 내용이 어떠한 상관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내용이 정의에 위배되는 악법이라도 그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므로 악법도 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④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내용과 목적이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의 형식과 절차인 통치의 합법성도 당연히 중시한다.

⑤ 일반적으로 법치주의는 법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을 추구하지만, 민주 정치는 시대의 변화, 국민의 여론 등을 반영하는 일이 많으므로 법치주의에 비해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5 정당과 정부 형태의 이해

문제분석 갑국과 병국은 양당제, 을국은 다당제 형태에 가깝다.

정답찾기 ㄱ. 갑국이 의원 내각제라면 제1당이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집권당이 되어 단독으로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ㄴ. 을국은 다당제 형태에 가까우므로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

기가 쉽다. 그러나 병국은 양당제에 가까운 형태이므로 다양한 의사의 반영이 힘들 것이다.

오답피하기 > 나. 연립 정부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구성된다.

르. 을국과 병국이 의원 내각제라면 을국은 과반수 정당이 없으므로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병국은 제1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므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6 대표자 결정 방식의 이해

문제분석 > A국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하므로 다수 대표제, B국은 득표순으로 2명까지 당선시키므로 소수 대표제, C국은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가 결합된 방식이다.

정답찾기 > ① B국에서는 득표순 2명을 당선자로 하므로 당선자 간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② A국은 다수 대표제를 실시하므로 사표가 많이 발생하여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B국은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으므로 사표가 적게 발생하여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줄어든다.

③ 사표는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이다. B국의 선거 제도는 2명의 당선자를 뽑고, A국의 선거 제도는 1명의 당선자를 뽑는 방식이므로 A국의 선거 제도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④ C국은 지역구 선거 이외에 정당별 비례 대표 의원을 함께 선출하므로 소수 정당이라도 정당 득표율이 높을 경우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A국은 다수 대표제이므로 거대 정당에 유리하여 소수 정당의 의석 진출 가능성이 낮다.

⑤ C국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을 따로 선출해야 하므로 2표씩을 행사한다. 반면 B국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만 선출하므로 1표씩을 행사한다.

7 헌법의 기본 원리의 이해

문제분석 > 밑줄 친 '이것'은 국민 주권주의이다.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소수의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찾기 > 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근로 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오답피하기 > ① 국민 투표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식의 직접 민주제 요소이다.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국민이 국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국가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③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해야 국민은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당을 설립하여 정책 제안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또 복수 정당제를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정치를 맡길 수 있다. 이때의 선거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8 기본권의 성격 이해

문제분석 > 재판 청구권은 청구권에 해당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A는 청구권, B는 사회권이다.

정답찾기 > 나. (다)에는 청구권과 사회권의 공통된 특징을 묻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청구권과 사회권은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다. (가)에는 청구권만의 특징을 묻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르. (나)에는 사회권만의 특징을 묻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권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권리이다.

오답피하기 > 기.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9 국회의 권한 이해

문제분석 > 국회의 여야 원내 대표가 만나 국회 임시회 일정을 합의한 내용이다. 교섭 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국정 조사, 법률안 처리 등을 임시회에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정답찾기 > ①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는데, 정기회는 매년 1회 열린다. 임시회는 정기회가 아닌 때에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린다.

오답피하기 > ② 교섭 단체는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고 조정하여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미리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은 위원회 제도이다.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국무 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④ 국회의 국정 조사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국정 감사이다.

⑤ 법률안의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0 위헌 법률 심판 제정의 이해

문제분석 > 자료는 판사 갑이 재판 도중 △법률 제45조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헌법 재판소에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한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이 제청이 있을 경우 위헌 법률 심판을 한다.

정답찾기 > 다. 법원이 해당 법률 조항을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45조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르. 법률의 위헌 결정은 헌법 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에 찬성해야 한다. 9인 중에서 4인은 합헌에 찬성하고, 5인은 위헌에 찬성했다면 합헌 결정이 내려지므로 △법률 제45조는 효력을 유지한다.

오답피하기 > 기. 제시된 자료는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법률 제45조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청구이다. 따라서 이 결정 자체만으로 해당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여 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에 찬성해야 해당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

나. 재판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결정할 수도 있다.

11 계약 공정의 원칙 이해

문제분석 ▶ 고객의 민원으로 보험 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 사유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약관 조항은 보험 설계사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즉, 약관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밑줄 친 '이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정답찾기 ▶ ②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계약 당사자 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 ① 계약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 체결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말한다.

③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④ 본인 소유의 재산이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⑤ 법률관계의 형성은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12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의 이해

문제분석 ▶ 미성년자인 갑이 방화하여 을의 차가 소실되었는데, 법원은 갑의 부모에게 갑에 대한 감독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행위에 대해 부모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다.

정답찾기 ▶ ㄱ. 갑은 행위 당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 무능력자였기 때문에 갑의 부모가 감독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ㄴ. 갑의 부모가 갑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갑의 행위에 대해 갑의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였다.

오답피하기 ▶ ㄷ. 갑이 을의 손해를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갑의 부모가 감독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인정은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과는 관계없다.

ㄹ. 불법 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행위도 요건이 된다. 따라서 갑의 행위가 고의에 의하지 않고 과실에 의한 것일 때도 갑의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13 민사 분쟁 해결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 갑이 을에게 4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을이 갚지 않자 갑은 (가) 민사 소송 제기, (나) 가압류 신청, (다) 내용 증명 우편 발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정답찾기 ▶ ㄴ.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은폐나 매각을 막아 채권자의 승소 시 강제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압류는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원에 의해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면 등기부 갑구에 관련 내용이 기재된다.

ㄹ.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내용 증명 우편을 상대방에게 보내 사건 해결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

다. 따라서 사례에서 갑은 내용 증명 우편 발송 → 가압류 신청 → 민사 소송 제기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답피하기 ▶ ㄱ. 민사 조정은 조정 담당 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 위원회 등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민사 소송에 비해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민사 소송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

ㄷ. 내용 증명 우편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그 우편에 기재된 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14 이혼의 법적 효과 이해

문제분석 ▶ 갑과 을은 법률혼 부부로 아들 A와 친양자인 딸 B가 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된다.

정답찾기 ▶ ③ 협의상 이혼은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오답피하기 ▶ ① 갑과 을은 협의상 이혼을 하게 되므로 이혼 속력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② 현재 모든 재산이 갑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두 사람이 혼인 중 노력하여 얻은 재산이므로 이혼 시 을은 갑에 대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B는 갑과 을의 친양자이므로 갑과 을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 B와 병의 친족 및 상속 관계는 단절되므로 병이 사망할 경우 B는 병의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⑤ 이혼 후 부부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다른 일방은 그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15 부동산 임대차 관계의 이해

문제분석 ▶ 제시된 자료에서 ○○주택의 소유자는 A이고, 임차인은 B이다. A의 ○○주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이 주택을 담보로 D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A가 D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D는 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채권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때 임차인 B가 자신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냐가 문제이다.

정답찾기 ▶ ②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즉, 매매 등에 의해 집주인이 바뀌어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더라도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입주와 전입 신고가 필요하다. B는 2017년 8월 1일에 입주를 했지만 전입 신고는 8월 8일에 했으므로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것은 2017년 8월 8일이다.

오답피하기 ▶ ① 등기부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기재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기재한다.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을구에 기재한다. 따라서 (가)는 을구이다.

③ 저당권자는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등기부에 기재만 해놓고 있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에 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처분함으로써 채권액을 변제받게 된다.

④ D가 저당권자가 된 것은 2017년 8월 3일이고, B가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날은 2017년 8월 8일이다. 따라서 D가 B보다 선순위 권리자이므로 경매에서 D가 B에 우선하여 채권액을 변제받는다.

⑤ A는 C에 대해 5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을 뿐 ○○주택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주택의 경매와 관계없이 A와 C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16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분석 ▶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정답찾기 ▶ **ㄷ.** 형사 미성년자 및 심신 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등은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병은 심신 상실자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ㄹ. 맹견이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것은 현재의 위난 상태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정이 남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정 의 무단 침입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 **ㄱ.**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없는 것은 책임 조각 사유이다. 갑이 형사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가 아니며 또한 강요에 의해 빵을 훔친 것도 아니므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절도죄의 구성 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을은 이미 친구의 가방에서 돈을 훔쳤으므로 절도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었다. 친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해서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7 유추 해석 금지 원칙 이해

문제분석 ▶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란 적용할 조항이 없는 경우, 그것과 유사한 상황에 대한 규정이라 하더라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유추 해석을 형사 사건에 적용할 경우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데도 비슷한 행위를 했다고 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정답찾기 ▶ ④ 제시된 판례는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이라는 조항은 반드시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에서의 모욕이어야 하는데, 전화 통화로 모욕한 것을 면전 모욕과 비슷한 행위라고 하여 균형법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또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해야 처벌하는데,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까지 비슷하다고 포함시켜 주민등록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도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 ①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명확성의 원칙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명확하여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⑤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18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 갑은 17세이므로 형법과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연령이다. 형법은 14세 이상의 자에 대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까지의 소년에게 적용한다.

정답찾기 ▶ ④ 검사는 갑의 행위가 중하여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갑을 기소하여 형사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형사 재판의 단독 판사 병은 갑이 소년법 적용을 받아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가정 법원 소년부로 갑을 송치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 단계에서 피의자는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 석방될 수 있다. 가석방은 형이 확정되어 수형 생활을 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② 기소되면 갑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다.

③ 검사의 기소에 의해 갑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인 을은 원고가 아니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소년원 송치 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다.

19 부당 해고의 이해

문제분석 ▶ 해고는 근로자의 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로 정당한 요건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해고의 사유와 그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며,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한다.

정답찾기 ▶ **ㄴ.** 근무 태도나 업무 실적이 아닌 연장자순으로 해고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연령에 의한 차별로서 불합리한 기준이다. 따라서 부당 해고로 볼 수 있다.

ㄷ.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한다. 갑은 전날 해고 통보를 받았으므로 해고 절차를 무시했다. 따라서 부당 해고로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 **ㄱ.** 해고의 사유는 정당하고 불가피해야 한다.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면 회사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ㄹ.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해고 통지를 문서로 해야 한다.

20 국제법의 법원 이해

문제분석 ▶ A는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문서로 명시되었으므로 조약이다. B는 국제 사회의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은 것이므로 국제 관습법이다. 따라서 C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정답찾기 ▶ **ㄷ.**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원칙'은 대부분의 문명국가가 법의 공통된 원칙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ㄹ. 국제 사법 재판소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을 모두 재판에서 적용한다.

오답피하기 ▶ **ㄱ.** 우리나라에서 조약에 대한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ㄴ.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오랜 관행으로서 이미 법적 확신을 얻은 것이므로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도 일반적으로 국내에 적용된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감소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정답셋기 ⑤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며, 국제 사회는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된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① 국제 연합은 초국가적 행위체로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② 바젤 협약은 국가 간 명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된 조약이다.

③ 바젤 협약은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만 적용된다.

④ 국제법을 제정하는 입법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06 국제 분쟁의 해결 방식 이해

문제분석 (가)는 외교적 해결 방식, (나)는 법적 해결 방식, (다)는 대안적 해결 방식이다.

정답셋기 ㄱ. 외교적 해결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ㄴ. 법적 해결 방식은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 시 강제적 구속력을 행사하기 곤란하다.

오답피하기 ㄷ. 대안적 해결 방식으로서의 조정은 제3자에 의한 해결안이 제시되지만 권고적 성격을 갖는다.

ㄹ. 일반적으로 법적 해결 방식이 외교적·대안적 해결 방식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

07 법의 일반 원칙 이해

문제분석 비자 면제 협정은 조약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다.

정답셋기 ⑤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법의 일반 원칙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국내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다.

오답피하기 ① 문서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조약인 비자 면제 협정이다.

② 합의한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은 조약인 비자 면제 협정이다.

③ 국제법 제정을 위한 공식적인 입법 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의 일반 원칙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국제 사회에서 반복적 관행에 의해 묵시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제 관습법이다.

08 국제 분쟁 이해

문제분석 사례는 갑국과 을국이 아프리카 최대 호수인 빅토리아 호안의 일부 섬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답셋기 ⑤ 국제 분쟁은 국제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 갈등의 완전한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양국 간 조약의 체결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강대국에 의한 문화적 권리 침해는 나타나지 않는다. 국가 간 영유권 분쟁 사례이다.

③ 종교 갈등은 사례에서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

④ 국제 사법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 모두가 동의하여 제소할 경우 재판이 가능하다.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1회

본문 104~108쪽

1 ①	2 ①	3 ②	4 ⑤	5 ②
6 ②	7 ③	8 ②	9 ②	10 ①
11 ③	12 ②	13 ④	14 ②	15 ③
16 ④	17 ①	18 ②	19 ②	20 ①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이해

문제분석 A는 정치를 좁은 의미에서 바라보고 있고, B는 정치를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고 있다.

정답셋기 ① 좁은 의미의 정치란 정치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는 활동으로 국가의 공권력 동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오답피하기 ② 넓은 의미의 정치 개념에는 좁은 의미의 정치 개념도 포함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정치 개념은 국가와 정치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는다.

③ 정치 활동이 소수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 개념에 가깝다.

④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주체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중시한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정치 개념보다는 넓은 의미의 정치 개념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 개념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

⑤ 정치를 위에서 아래로의 통제와 지배로 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의 정치 개념에 더 부합한다.

2 법치주의를 보는 관점의 이해

문제분석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정답셋기 ㄱ.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자의적 통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ㄴ.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의 한 수단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들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ㄷ. 실질적 법치주의도 형식적 법치주의와 마찬가지로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을 인정한다.

ㄹ. 법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을 법치의 필수로 보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3 루소와 홉스의 사회 계약론 비교 이해

문제분석 갑에 해당하는 사회 계약론자는 루소, 을에 해당하는 사회 계약론자는 홉스이다.

정답셋기 ②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투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대 군주에 의한 강력한 통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루소는 대의 민주 정치의 유용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③ 루소는 일반 의지에 따른 통치를, 홉스는 절대 군주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다. 사회 계약론자 중 권력 분립을 주장한 것은 로크이다.

- ④ 루소와 홉스 모두 국가 권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 ⑤ 루소와 홉스 모두 주장하지 않은 내용이며, 사회 계약론자 중 권력 분립을 주장한 것은 로크이다.

4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문제분석 표는 '우리 사회 부패 발생 원인'에 대해 주체에 따라 각각 달리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답찾기 ㄴ. 불합리한 법과 제도 및 규제가 우리 사회 부패 발생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기업인(25.1%), 전문가(17.8%), 일반 국민(16.2%), 공무원(11.3%)의 순이다.

ㄷ. 모든 주체들이 부패 유발적인 사회 문화를 우리 사회 부패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ㄹ.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부패 발생 원인 중 개인의 윤리 의식 부족은 16.7%, 불합리한 법·제도·규제는 17.8%로 불합리한 법·제도·규제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오답피하기 ㄱ. 개인의 윤리 의식 부족을 부패 발생 원인으로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은 27.2%, 공무원은 19.2%로 일반 국민에서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5 선거 제도 및 결과에 대한 분석

문제분석 갑국은 전형적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또 t대, t+1대 모두 의석수 합계는 200개이다.

정답찾기 ② t대 의회 의원 선거에서 A당은 47.5%를 득표하였지만 의석수는 200석의 43.5%인 87석으로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가 4%p인 반면, t+1대 의회 의원 선거에서 A당은 45.5%를 득표하였지만 의석수는 200석의 51.5%인 103석으로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가 6%p이다.

오답피하기 ①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므로 갑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B당의 t대 의회 득표율은 38.8%, 의석률은 50.5%, t+1대 의회 득표율은 40.3%, 의석률은 41.5%이다.

④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국가이므로 의회 내 다수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배출될 것이다. 따라서 t대 의회 시기의 행정부 수반은 B당, t+1대 의회 시기의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일 것이다.

⑤ t대를 기준으로 한 t+1대의 정당별 의석수 변동률을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정당	t대 의석수	t+1대 의석수	의석수 변동률
A당	87	103	18.4%
B당	101	83	-17.8%
C당	10	11	10.0%
D당	2	3	50.0%

따라서 A당의 의석수 변동률이 C당의 의석수 변동률보다 크다.

6 정당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갑국은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A당과

B당에 의한 양당제가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ㄱ. 한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50%를 넘고 양당제가 정착된 상황에서는 집권당에 의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ㄷ. 과반수의 의석을 지닌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존재하기에 연립 정권 수립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ㄹ. 양당제에서는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어려운 편이다.

7 정부 형태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가)에 해당하는 것은 의회이다. 의회와 행정부가 별도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정답찾기 ㄴ.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행정부 구성원이 될 수 없다.

ㄷ. 전형적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는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ㄹ. 내각 불신임권은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8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내용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즉 자유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답찾기 ② 최저 임금제 시행은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된다.

오답피하기 ①, ③, ④, ⑤ 모두 자유 민주주의 원리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9 기본권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가)는 참정권, (나)는 사회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답찾기 ② 사회권이 최초로 헌법에 규정되어 등장한 것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오답피하기 ① 참정권은 능동적 권리이다.

③ 참정권이 사회권보다 역사적으로 먼저 등장하였다.

④ 모든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즉, 참정권과 사회권도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⑤ 참정권과 사회권은 그 자체 실현이 중시되며, 수단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청구권이다.

10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서류는 특정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청구인 ☆☆☆이 변호사를 통해 국가 기관 A에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법률 혹은 그 일부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 법률 심판 제도와 해당 사건의 당사

자가 국가 기관 A, 즉 헌법 재판소에 직접 청구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제도로 구분된다. 제시된 서류는 개인이 직접 청구한 것으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제도와 관련된다.

정답선택기 ① 3심제의 상고 및 재상고는 대법원이 담당한다.

오답피하기 ②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가)에 해당하는 용어는 '헌법 소원 심판'이다.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청구 및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청구 모두 헌법 소원 심판과 관련되기에 청구서는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의 형식을 갖춘다.

④ 명령·규칙·처분이 헌법 및 법률에 어긋나는지 여부의 심사는 법원에서 담당한다.

⑤ 헌법 재판소가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청구인의 청구 취지가 옳다, 즉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11 감사 기관 및 역할의 이해

문제분석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이며, 행정부 내부 감사를 하는 헌법 기관은 감사원이다. 따라서 A는 국회, B는 감사원이다.

정답선택기 ③ 국회는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B의 장(長), 즉 감사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

오답피하기 ① 국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기관은 국회이다.

② 감사원은 행정부의 한 기관으로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④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는 회계 검사 및 직무 감찰이 포함된다.

⑤ 국회의 감사, 즉 국정 감사는 매년 1회 정기회 실시 전에 행해지며(단, 정기회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감사원의 감사는 필요시 수시로 행해진다.

12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비교 이해

문제분석 (가)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나)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관점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정답선택기 ㄱ.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를 흡수가 바라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는 자연 상태와 비슷하다고 본다.

ㄴ. 국제 연합의 존재 의의는 자유주의적 관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답피하기 ㄴ. 세력 균형을 통한 국가 안전 보장은 현실주의적 관점의 주장이다.

ㄷ. 국가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13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가)는 조약, (나)는 국제 관습법, (다)는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정답선택기 ④ 국제 관습법은 특정한 체계·공포 절차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오답피하기 ① 조약 체결 주체가 동일 경우에는 양자 간 조약, 셋 이상일 경우에는 다자 간 조약이라 한다.

②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은 국제 관습법의 대표적 예이다.

③ 법의 일반 원칙으로는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⑤ 법의 일반 원칙은 국제 관습법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를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지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과 같은 명확한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14 소유권 행사의 한계 사례 분석

문제분석 제시문에 따르면 법원은 토지 소유권과 주민들의 골목길 통행권 사이에서 통행권이 우선한다고 판결하였다.

정답선택기 ② 제시된 사례에서 법원은 정당한 토지 소유권을 지녔을지라도 그 토지를 경유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능한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갑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토지 소유권과 통행권이라는 자유권이 충돌할 경우 자유권이 무조건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례에서는 주민들이 해당 골목길을 이용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능하여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본 것이다.

③ 제시문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④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진술로 제시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⑤ 제시문에서 권리 행사자의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15 미성년자와의 계약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갑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서 계약을 하였으며, 갑의 부모는 계약 취소를 통해 물품 대금을 환불받고자 하고 있다.

정답선택기 ③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통해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행동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갑과 갑의 부모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반드시 계약서라는 형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전거 거래를 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이다.

④ 을은 이 경우 반드시 확답을 촉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갑의 속임수로 인한 계약이기 때문에 갑의 부모는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16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은 직접 병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개가 병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병의 부모에게 소송을 당할 처지에 있다.

정답선택기 ㄱ, ㄴ. 점유하고 있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병의 부모는 갑에게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동물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ㄴ. 민사 조정 제도는 간편한 민사 분쟁 절차 중의 하나로 제시된 사

례에서도 정식 소송 제기 전에 이 제도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 르. 민사 책임을 묻기 위해 해당 사건이 형법상 범죄와 관련될 필요는 없다.

17 유언의 효과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 (가), (나) 모두 유효하게 작성된 자필 증서 유언장이며, 갑, 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는 혈족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갑은 현재 결혼 상태의 배우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찾기 > ① 유언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은 A는 갑의 전 재산 5억 원, B와 ○○ 복지 재단은 각각 을의 재산 10억 원의 1/2인 5억 원 씩이다.

오답피하기 > ② 이혼을 한 전처 A는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므로 별도의 유증(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 행위)을 통해 재산을 받을 수 있다.

③ (가)의 경우 A가 재혼을 하였더라도 전 재산 5억 원을 유증받을 수 있다. 재혼한 전처는 법정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나 유효한 효력을 가진 유언장에 의한 유증은 가능하고, 유류분을 받을 자격은 없다.

④ (나)의 유언장이 없었다면 을의 직계 존·비속이 없으므로 B는 10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18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 형사 사건에서 국가가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 형벌이나 보안 처분을 부과하고 형을 집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형사 절차라 한다.

정답찾기 > 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받아 입건된 사람을 피의자라 한다.

다.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오답피하기 > 나. 기소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이다.

르. 유죄 선고에 해당하는 것은 실형, 벌금형, 집행 유예, 선고 유예 등이 있으며,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실형 중에서도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었을 때만이다.

19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 (가)는 자구 행위, (나)는 긴급 피난, (다)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 가. (가)는 자구 행위이다. 자구 행위는 법적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호하기 불가능하거나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 (가)의 자구 행위와 (다)의 정당 방위 모두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 나. (나)는 긴급 피난이다. 정당 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르. (나), (다) 모두 범죄의 구성 요건은 갖췄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이다.

20 근로자의 권리 보호 절차 이해

문제분석 > 근로 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할 때에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 중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두어야 한다. 제시된 사례에 서는 근로 시간이 원래의 근로 계약 내용과 다르며, 더구나 야간 근무 시에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답찾기 > 갑 : 고용주가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을 : 야간 근무 시에는 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 기준법 내용의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답피하기 > 병, 정 :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직,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제시된 사례는 이러한 부당 노동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병과 정의 조언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실전 모의고사 2회

본문 109~113쪽

1 ③	2 ①	3 ⑤	4 ①	5 ④
6 ②	7 ②	8 ③	9 ③	10 ④
11 ②	12 ④	13 ②	14 ③	15 ②
16 ③	17 ①	18 ④	19 ⑤	20 ④

1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 비교

문제분석 > 홉스, 로크, 루소는 사회 계약론을 주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회 계약론은 국가를 목적이 아니라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정답찾기 > ③ c는 로크와 루소의 공통 부분이다. 로크와 루소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오답피하기 > ① a는 홉스에게만 해당한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 보았다.

② b는 홉스, 로크, 루소의 공통 부분이다. 여기에는 사회 계약론의 내용이 해당하는데, 사회 계약론은 국가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았다.

④ d는 루소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했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⑤ e는 로크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대의제를 바탕으로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2 정부 형태와 정당 제도 이해

문제분석 > 표는 정당 제도와 행정부 수반 선출 방식에 따라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지닌 국가를 구분한 것이다.

정답찾기 > ① 대통령제 국가인 A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인 B국과 달리 여소야대 정국이 나타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② B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이므로 대통령제 국가인 C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③ 다당제 국가인 C국은 양당제 국가인 A국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이 용이하다.

④ 의원 내각제-다당제 국가인 D국은 대통령제-양당제 국가인 A국과 달리 연립 내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⑤ 의원 내각제 국가인 D국은 대통령제 국가인 C국에 비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3 민주 정치 이념 이해

문제분석 A는 민주 정치의 근본 이념인 인간 존중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는 B, 평등은 C이다. 자유는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평등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찾기 ⑤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자유는 국가의 간섭만 받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이지만 이러한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참정권은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자유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의 실질적 보장과 관련된다.

오답피하기 ① 인간 존중은 인간을 수단적 존재가 아닌 목적적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다.

② 소극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기본권은 자유권에 해당한다.

③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평등의 실질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빈부 격차를 줄이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한다.

④ 평등은 모든 국민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4 권력 기관 간 견제 수단 이해

문제분석 표는 권력 기관 간 견제 주체와 견제 대상을 구분하여 견제 권한을 정리한 것이다.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므로 견제 주체인 (다)는 행정부, 견제 대상인 (나)는 입법부이다. (가)는 나머지 권력 기관인 사법부이다.

정답찾기 ① A 탄핵 소추권은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고, B 사면권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고, C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고, D 명령·규칙·처분 심사권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오답피하기 ②, ③, ④ 예산안 심의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5 정부 형태 이해

문제분석 A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치하므로 대통령제, B는 동거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원 정부제, C는 의원 내각제이다.

정답찾기 ④ 대통령제는 의원 내각제와 달리 법률안 거부권이 있으므로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대통령제의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안할 수 없다.

② 이원 정부제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난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당 간 연합을 통해 연립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⑤ 이원 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혼합된 정부 형태이다.

6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 이해

문제분석 국무 회의는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이다. 국무 회의의 심의 내용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문서로 하며,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부가하여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전제를 막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계 국무 위원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이다.

정답찾기 ② 대통령은 국무 회의 심의와 문서 및 부서에 의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국정 처리를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대통령이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권한 행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③ 정책 추진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④ 지속적인 정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⑤ 국무 회의 심의와 문서 및 부서 제도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 방식으로 행정부 자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통제 방식은 입법부의 부당한 간섭의 방지와는 관련이 없다.

7 선거 소송 이해

문제분석 그림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나타낸 것이다. 선거 무효 소송이란 후보자 개인의 불법 선거 혐의가 아닌, 선거 절차의 흠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 관할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정답찾기 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소송은 단심제이므로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나. 판결 내용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므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러므로 ㉠에는 '원고'가 들어간다.

오답피하기 다. 선거 무효에 대한 소송은 해당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은 해당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라. 원고가 승소했다면 선거는 무효가 되므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A정당의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다.

8 주택 임대차 절차 이해

문제분석 주택 임대차 절차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임대인)이 주택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임차인)에게 대가를 받고 주택을 빌려주는 과정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등기부 을구를 통해 해당 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당 주택 입주 후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야 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정답찾기 ③ 주민 등록 이전만으로는 해당 주택의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확정 일자까지 받아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권이나 전세권 등은 등기부 을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② 계약서 작성 시에는 해당 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와 신분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 ④ 계약금 지급 후 잔금 지급 전에는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라)~(마) 단계에서 만약 입주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항력은 실제 거주 및 전입 신고를 해야 발생한다.

9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이해

문제분석 그림은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직업적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등장한 단체이므로 이익 집단, (나)는 시민의 관심 분야의 다양화로 정부가 반영하지 못하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이므로 시민 단체이다.

정답찾기 ㄴ. B는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공통 부분이므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이 들어갈 수 있다.

ㄷ. C는 시민 단체에만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비영리성', '보편적 이익 추구'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A는 이익 집단에만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집단의 특수 이익 추구', '영리성'이 들어갈 수 있다. '정권 획득 추구'는 정당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ㄹ. '공익의 추구'는 시민 단체의 특징이므로 C에 들어갈 수 있다.

10 언론의 역할 이해

문제분석 스핀 닥터(spin doctor)는 홍보·기획, 메시지 관리, 정책 의제 설정 등의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정치 홍보 전문가를 지칭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 생각이나 여론을 정책으로 구체화 시키는 물론 특정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정치 홍보 전문가로 통한다.

정답찾기 ㄴ. '자기 진영에 유리하도록 홍보력을 발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을 왜곡하거나 조작' 등의 내용을 통해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유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ㄹ. '국민의 생각이나 여론을 정책으로 구체화'라는 내용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대중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활용하여 홍보 및 정책 의제 설정 등을 함으로써 여론을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다.

ㄷ. 특정 정치인이 유리하도록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지, 모든 국민에게 의사 표출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11 유언에 의한 상속 이해

문제분석 갑은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해 △△ 사회복지 재단에 전 재산을 기부하였다. 사망 당시 갑의 재산은 12억 원, 빚이 2억 원이므로 실제 상속액은 10억 원이다. 갑의 어머니 정, 갑의 동생 무는 후순위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갑의 친자인 병만 법정 상속 대상이므로 병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직계 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이다.

정답찾기 ② 병이 유류분으로 5억 원을 청구하여 받을 경우, △△ 사회복지 재단은 5억 원을 받게 된다.

오답피하기 ① 갑의 유언 방식은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③ 병은 직계 비속이므로 법정 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고, 정은 직계 존속이므로 법정 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으나 제1순위 상속인인 병이 존재하므로 정은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경우에는 병만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병은 10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⑤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면 병만 상속받을 수 있고, 무와 정은 상속받을 수 없다.

12 국회 운영 이해

문제분석 국회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9월 1일에 개최되 그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회는 1회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 진행 등 모든 회의 방식과 절차는 정기회와 동일하다. 국회의결은 일반 의결 정족수와 특별 의결 정족수로 구분한다.

정답찾기 ④ 헌법 개정안 의결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특별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지만, 법률 제정은 일반 의결 정족수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국정 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정기 국회 기간 중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하도록 되어 있다.

③ 일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⑤ 다른 권력 기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여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해 특권을 국회의원에게 부여한다. 이를 통해 국회 운영의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13 수사 절차 이해

문제분석 A는 피의자, B는 피고인이다. 수사 절차는 수사 개시 → 수사 → 검찰 송치 → 수사 종결의 순으로 진행된다. 범인으로 상당한 의심이 가지만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을 용의자,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되면 수사 대상이 되므로 피의자가 된다. 수사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 확신이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은 피고인이 된다.

정답찾기 ② 수사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 대상이 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 등의 인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그들과 조사 기관과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③ 원칙적으로 국가 기관인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 형벌권 내지 형사 소추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개인적 감정이나 집단적 이해관계 또는 여론에 좌우되지 않도록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객관적 입장에서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 것이다.

④ 피고인은 기소되었어도 신문 또는 질문에 대해 재판 중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

⑤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각각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때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4 선거 결과 분석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의회 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며,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와 정당 투표를 별도로 실시했음을 보여준다. 선거 후에도 행정부 수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A당 소속이라는 것을 통해 대통령제 정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③ A당, B당 중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C당의 협조를 받으면 법안 의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답피하기 ①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A당은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입법 과정에서 단독으로 가결하지 못할 것이다.

②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므로 행정부 구성을 위한 정당 간 연합은 필요하지 않다.

④ B당은 득표율이 있음에도 의석이 없으므로 소수당의 의회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

⑤ 정당별 지역구 의석률과 정당 득표율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 투표와 정당 투표를 동일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15 소비자 권리 이해

문제분석 그림은 소비자가 물품 구입 이후 단순 변심으로 청약 철회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은 총동구 매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안에는 계약 체결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청약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방문 판매 및 전화 권유 판매는 계약일(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전자 상거래 판매는 7일 이내이다.

정답찾기 ㄱ.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라도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 책임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ㄷ.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의뢰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환불 또는 교환 불가 항목에 체크했다더라도 이러한 항목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ㄹ.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소송은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6 국제 사법 재판소와 국제 연합 이해

문제분석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 국제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이다. 국제 연합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 예방, 국제 분쟁 해결 등을 통한 전 세계적 범위의 평화 유지를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강대국이 주도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기구이다.

정답찾기 ㄴ.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에 대해 국제법을 적용하므로 개인, 단체 등은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ㄷ.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국제 연합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구이다.

오답피하기 ㄱ.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쟁 당사국 간 합의가 있어야 재판이 가능하다.

ㄹ. 국제 사법 재판소와 국제 연합은 모두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17 선거와 대표의 의미 이해

문제분석 대의 민주주의는 영토와 인구의 대규모화로 인해 직접 민주주의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근대 이후 등장한 것이다. 국민은 자신들의 의사를 대신할 대표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대표는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이 원하는 사람이 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공정한 선거로 선출된 대표라고 해도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답찾기 ㄱ.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대표성 확보는 별개이다.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도 대표로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거나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ㄴ. 정당이 대리인을 추천하여 선거에서 당선되면 국민이 당선된 대표에게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는 것이 대의제이다.

오답피하기 ㄷ. 공천 관리 위원회의 공천 과정은 기본적으로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이지만, 실제로 각 정당마다 다양한 형태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ㄹ. 민주적으로 정당의 후보로 공천되었어도 실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8 국제 사회 행위 주체 이해

문제분석 국제 사회 행위 주체는 기본 단위인 국가, 국가의 범위를 넘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국가적 행위체, 한 국가의 일부이지만 독자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는 국가 내부적 행위체, 강대국의 전직 국가 원수 등 국제적 영향력이 강한 개인으로 구분한다.

정답찾기 ㄴ. 지방 자치 단체, 한 국가 내부의 소수 인종이나 민족 등은 국가 내부적 행위체에 해당한다.

ㄹ. 정부 간 국제기구나 비정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은 초국가적 행위체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ㄱ. 국제 사회에서 각국의 주권은 평등하다고 하나 실제 주권 행사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 강대국의 주권 행사가 약소국의 주권 행사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ㄷ.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국가이다.

19 심급 제도 이해

문제분석 심급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급을 두어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심제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중(重)한 사건은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에서 1심, 고등 법원에서 2심, 대법원에서 3심을 담당한다. 경(輕)한 사건은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부에서 1심,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에서 2심, 대법원에서 3심을 담당한다.

정답찾기 ⑤ 위헌 법률 심판 제정은 해당 재판의 관할 법원이 하는 것

- 이므로 (가), (다)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권한이 있다.
- 오답피하기** ① 대통령 선거 소송은 단심제이므로 대법원만 담당한다.
 ②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할 수 있다.
 ③ (다)는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이므로 중대한 사건의 1심을 담당한다.
 ④ (나)는 경한 사건의 2심 법원, (다)는 중한 사건의 1심 법원이므로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이다.

20 이혼 유형 이해

문제분석 이혼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한 협의 이혼과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이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해도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협의 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있다.

- 정답찾기** ㄱ.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의 청구가 가능하다.
 ㄷ. 협의 이혼의 효력은 이혼 의사 확인서가 발급될 때가 아니고 이혼 신고를 한 때에 발생한다.
 ㄹ. 협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ㄴ. 사실혼은 혼인 신고가 없으므로 법률적 효과를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혼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실전 모의고사 3회					본문 114~118쪽
1 ②	2 ①	3 ②	4 ②	5 ②	
6 ④	7 ①	8 ④	9 ③	10 ④	
11 ⑤	12 ①	13 ⑤	14 ⑤	15 ④	
16 ④	17 ③	18 ③	19 ④	20 ②	

1 흄스, 로크, 루소의 사상 비교

문제분석 계약을 통하여 주권을 군주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갑은 흄스, 국가가 일반 의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을은 루소,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는 병은 로크이다.

정답찾기 ㄱ. 자연 상태에 대해 흄스는 자기 보존 욕구, 경쟁심, 명예에 대한 갈망 등과 같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본다.

ㄷ. 흄스, 로크, 루소는 모두 국가를 개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낸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오답피하기 ㄴ. 로크와 루소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보았다.

ㄹ. 로크는 간접 민주 정치, 루소는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했다.

2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정답찾기 ①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오답피하기 ②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 보장으로 정책의 계속성이 확보되나,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③ 대통령제는 국가 기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이다.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됨으로써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이다.

④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모두 의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으나 대통령제에서는 겸직할 수 없다.

3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법치주의의 유형 중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찾기 ㄱ.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헌법에 비추어 그 내용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법률은 인정될 수 없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을 반영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ㄷ.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권력과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오답피하기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권력과 통치의 합법성과 함께 정당성도 강조한다.

ㄹ.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4 정치 참여 주체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정치 참여 주체 중 A는 시민 단체, B는 이익 집단, C는 정당이다.

정답찾기 ② 정부와 의회의 매개적 기능을 하는 것은 정당이다.

오답피하기 ① 이익 집단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결성한 집단이다. 이에 반해 시민 단체는 공공선과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정당은 각종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함으로써 정치적 충원 기능을 한다.

④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은 모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

⑤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은 모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식과 관심을 증진시키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의 헌법 관련 규정은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된 것이다.

정답찾기 ㄱ.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과 최저 임금제 실시는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므로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르. 복지 국가의 원리는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난 빈부 격차, 독과점, 경제 공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강조되었다.

오답피하기 > 나.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ㄷ. 국가 권력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 원리와 관련된다.

6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의 특징 비교

문제분석 > (가)는 참정권, (나)는 자유권, (다)는 청구권이다.

정답찾기 > ④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오답피하기 > ①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② 국민 투표권, 공무 담임권은 참정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다.

③ 자유권은 참정권과 달리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⑤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중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7 헌법 및 법률의 제·개정 절차 이해

문제분석 > (가)는 국회의결, 국민 투표를 거쳐 공포하는 헌법 개정 절차, (나)는 법률 제·개정 절차이다.

정답찾기 > ① 헌법 개정 제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오답피하기 > ②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 투표를 거치게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③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대통령의 임기를 바꿀 수 있다.

⑤ 대통령은 법률 개정에 대한 공포를 하기 전에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 회의는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이다.

8 헌법 재판소의 역할 이해

문제분석 > 헌법 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이며 기본권 보장 기관으로 총 9인의 재판관이 헌법 심판을 담당한다.

정답찾기 > ④ 헌법 소원 심판 중 재판을 전제로 한 경우에 당사자인 국민이 청구하는 것을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한다.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재판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 ① 헌법 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 9인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헌법 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의 제청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 심판이다. 법원은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고, 당사자의 제청 신청을 통해 제청할 수도 있다.

⑤ 정당 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것으로 정부가 청구할 수 있다.

9 선거구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 갑국에서는 지역구 의원 100명을 100개의 지역구에서 선출하므로 지역구당 당선자가 1명이다. 따라서 갑국의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이다. 을국에서는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100개의 지역구에서 지역구당 동일한 당선자 수로 선출하므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찾기 > ③ 소선거구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보다 지역구당 당선자의 수가 적으므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사표는 선거에서 유효한 표이지만 낙선한 후보를 지지하여 당선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표를 말한다.

오답피하기 > ① 소선거구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보다 당선자의 수가 적으므로 후보자의 수도 적을 것이다. 따라서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보다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용이하다.

②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하므로 다수당에 유리하여 양당제를 촉진한다.

④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보다 소수 정당이나 신인 정치인의 의회 진출에 불리하다.

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하므로 다수 대표제와 결합하고,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므로 소수 대표제와 결합한다.

10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 갑국은 비례 대표 의원을 전국 단위로 정당 투표를 통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을국은 비례 대표 의원을 전국 단위로 지역구 의원 의석률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따라서 갑국의 유권자는 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1인 2표를 행사하고, 을국은 1인 1표를 행사한다.

정답찾기 > 나. 을국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지역구 선거구당 2인을 선출하며, 각 정당은 지역구 선거구당 1명만 공천할 수 있으므로 한 개의 정당이 모든 지역구 선거구에서 당선되더라도 100명이 된다. 따라서 지역구 의원 의석률이 과반인 정당이 나타날 수 없다.

르. 을국에서는 비례 대표 의원을 전국 단위로 지역구 의원 의석률에 비례하여 배분하므로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가 비례 대표 의원 배분에 영향을 준다. 반면 갑국은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정당 투표를 따로 실시하므로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 가. 갑국과 을국의 선거구 수는 모두 지역구 선거구 100개, 전국구 선거구 1개로 101개이다.

ㄷ. 갑국은 정당 투표를 따로 하여 비례 대표 의원을 배분하는데, 을국은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로 비례 대표 의원을 배분한다. 따라서 갑국이 을국보다 직접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11 계약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계약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이다. 계약을 체결하면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정답찾기 ㄷ. 채무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를 입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공증은 계약의 내용을 국가가 지정한 사람이 확인하는 것으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았다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짜기 ㄱ. 공증을 받아야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ㄴ. 미성년자가 성년 의제되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을의 부모가 을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12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중 (가)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나)는 동물의 점유자 책임, (다)는 사용자 배상 책임과 관련이 있다.

정답찾기 ㄱ.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점유자가 1차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ㄴ. 건물 점유자인 갑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중 공작물 등 점유자 책임을 질 수 있고, 피용자인 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오답짜기 ㄷ. 점유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동물의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ㄹ. 불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만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과실에 의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불법 행위는 성립한다. 따라서 무의 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무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손님은 무 또는 정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3 가족 관계와 관련 법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사실혼과 법률혼 관계에서의 혼인 관계 해소 방법 차이, 상속 문제 등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찾기 ⑤ 갑은 을과 사실혼 관계에서 병을 낳았고 인지 절차를 거쳐 갑과 병 간에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후 갑은 정과 혼인하였지만 병과의 친자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갑이 사망하고 유언장의 효력이 없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병은 상속 1순위인 직계 비속에 해당하므로 갑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오답짜기 ①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 관계(배우자 및 인척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③ 사실혼 관계, 법률혼 관계 모두 혼인 관계가 해소될 때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면 모든 재산은 무에게 준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행사되면 무가 받는 재산이 줄어들 수 있다. 사례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인 정, 사실혼 관계에서의 자녀 병이 있다. 이들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1/2이므로 결국 유류분을 주더라도 무가 가장 많은 재산을 받는다.

14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주택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정답찾기 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인은 주택을 빌려줘야 할 의무,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임차인은 주택을 사용할 권리, 임대차 보증금을 줄 의무를 갖는다.

ㄷ. 대항력은 입주 후 전입 신고를 하면 발생하며, 임차인은 제3자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ㄹ.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등기부상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사례에서 ○○은행은 병이 우선 변제권을 획득한 시기보다 늦게 저당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병이 ○○은행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오답짜기 ㄱ.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등기부 갑구의 내용이 변경되고, 저당권과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15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대법원은 ○○ 지방 법원과 달리 갑의 행위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정답찾기 ④ 집행 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일정 기간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선고 유예이다.

오답짜기 ① 제시문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표현을 통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범죄와 형벌 등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으로 볼 수 있다.

② ○○ 지방 법원에서 2심을 담당하였다면 구체적으로 ○○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2심을 담당한 것이다. 따라서 1심은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였을 것이다.

③ 징역은 1개월 이상 교도소 등에 수감하고 노역을 부과하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다.

⑤ 사회 봉사 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무보수로 일정 기간 동안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사회 질서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인 보안 처분의 일종이다.

16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가)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나 위법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나)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조건을 다 갖추었으므로 범죄가 성립되고, (다)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은 갖추었으나 책임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찾기 ④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 조각 사유이므로 (가)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현행범을 체포하여 경찰에 인도한 경우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 행위이다. 따라서 (가)에 해당한다.

②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하면 책임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이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나)에 해당한다.

③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하므로 (나)에 한정된다.

⑤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이 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책임이 조각되나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는 범죄가 성립되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다.

17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처벌 이해

문제분석 소년은 심신의 성장이 미숙한 상태인 사람이므로 이들의 범죄는 성인 범죄와는 달리 특별한 취급을 하여 소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③ 병은 소년법상 소년이며 형벌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가 아니므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이다. 따라서 병은 형법이 적용되어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가정 법원 소년부는 소년법상 소년에게 보호 처분을 줄 수 있는 것이지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오답피하기 ① 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이므로 형사 미성년자이다.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벌을 받지 않는다.

② 갑은 소년법상 소년이 아니므로 19세 이상인 자이다. 따라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지 않는다. 정은 소년법상 소년이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가 아니고 형벌도 받지 않으므로 10세 미만인 자이다. 따라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④ 10세 미만인 자는 소년법상 소년이지만 형벌도 받지 않고, 보호 처분도 받지 않는다.

⑤ 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이므로 보호 처분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 따라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도 받지 않는다. 병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이다. 따라서 검찰로 송치되어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8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소비자가 안전할 권리가 침해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원, 한국 소비자원 내의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한 손해 배상 청구 등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답찾기 ③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배상 여부와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의뢰를 하면 한국 소비자원은 사실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한다.

④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 등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그 유통 관여자 등이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제조업자 등은 무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19 국제 연합 주요 기구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A는 총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정답찾기 ④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국은 국제 연합의 회원국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총회의 표결 방식은 1국 1표 원칙이 적용된다.

②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상임 이사국 중 1개국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이 부결된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힘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 즉, 기본적으로 분쟁 당사국 간 합의가 있어야 재판이 가능하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는 당사국의 판결 불복 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안전 보장 이사회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경제·외교적 제재 등을 하기도 한다.

20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국제법의 법원 중 국가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약속인 (가)는 조약,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인 (나)는 법의 일반 원칙, (다)는 국제 관습법이다.

정답찾기 ㄱ. 조약은 양자 간 조약뿐만 아니라 다자간 조약도 가능하다. ㄴ. 조약과 달리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오답피하기 ㄴ.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ㄷ. 국내 문제 불간섭은 국제 관습법에 해당한다.

실전 모의고사 4회

본문 119~123쪽

1 ④	2 ④	3 ③	4 ④	5 ⑤
6 ④	7 ②	8 ③	9 ⑤	10 ⑤
11 ⑤	12 ④	13 ②	14 ③	15 ③
16 ③	17 ②	18 ⑤	19 ④	20 ③

1 사회 계약설 이해

문제분석 갑은 홉스이고, 을은 로크이다. 사회 계약설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합의나 계약에 의해 국가가 발생하였다는 학설이다.

정답찾기 ④ 홉스는 전제 군주제를 주장하였고,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오답짜이기 ① 홉스는 인간을 악하게 보았다.

② 홉스와 로크 모두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사회 계약설을 주장하였다.

③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 등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본 것이다.

⑤ 사회 계약설은 근대 유럽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2 정치 과정 이해

문제분석 그림은 정책 결정 과정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정답찾기 나. 정책 결정 기구는 주로 국가 기관을 의미한다. 의회와 정부가 대표적 사례이다.

ㄹ. 환류는 정부의 정책, 입법, 사법부의 결정 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선거는 환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답짜이기 ㄱ.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산출에 해당하며, 투입은 국민 개개인, 집단 등의 정부에 대한 정책 요구, 지지 혹은 불만 표시를 의미한다.

ㄷ. 시민 단체, 정당은 투입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 산출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의회와 정부 등이다.

3 우리나라의 정치 이해

문제분석 표는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에서 개정된 주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③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의 선출 방식이 직선제와 간선제 중심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의원 내각제에서의 행정부 수반도 선출되었다.

오답짜이기 ① 양당제가 확립되었는지의 여부는 자료만 가지고 파악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가 대선거구제인지 소선거구제인지 자료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

④ 대통령 단임제는 8차 개헌에서 이루어졌다.

⑤ 3차 개헌에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가 채택되었다.

4 대통령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가)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와 다른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이다.

정답찾기 나.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한다.

ㄹ. 의원과 각료를 겸직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이며,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겸직이 불가하다.

오답짜이기 ㄱ. 사법부의 독립은 두 정부 형태 모두에서 인정된다.

ㄷ.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모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5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 이해

문제분석 (가)는 직접 민주제, (나)는 간접 민주제이다. 직접 민주제는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을 하는 제도이고, 간접 민주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정답찾기 ⑤ 직접 민주제는 대표자가 아닌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결정을 하므로 간접 민주제보다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적다.

오답짜이기 ① 정치 참여에 따른 고비용 문제의 극복은 간접 민주제에서 더 유리하다.

②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 모두 참여 방식의 차이일 뿐 민주 정치의 원리에 부합한다.

③ 간접 민주제에서는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대표를 통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가)와 (나) 모두 국민 자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6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이해

문제분석 그림의 선거구 변경 후에 특정 정당이 보다 유리한 선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변경 전 선거구에서 A당, B당, C당의 당선자 수는 1 : 1 : 1이다. 변경 후 선거구에서는 A당, B당, C당의 당선자 수는 2 : 0 : 1로 A당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찾기 ④ 게리맨더링이 나타났다.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에서는 A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타났다.

오답짜이기 ① 선거구 변경 전·후 모든 유권자가 투표하였으므로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해지지 않았다.

② 변경 전 선거구에서는 사표가 10표였으나, 변경 후 선거구에서는 15표, 65표, 40표가 각각 발생하였다.

③ 선거구 변경 전에는 선거구별 유권자 수가 최소 90명, 최대 110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선거구 변경 후에는 최소 60명, 최대 120명으로 선거구에 따라 편차가 심해졌다. 즉, 선거구 간 표의 등가성이 낮아져 평등 선거의 원칙에 덜 충실해졌다.

⑤ 대표자의 임기 보장 여부는 알 수 없다.

7 선거구 제도 이해

문제분석 (가)는 소선거구제, (나)는 중·대선거구제이다.

정답찾기 ② 당선자가 한 명인 소선거구제에 비해 당선자가 여러 명인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소수 정당이 소수의 지지를 받고도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수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오답짜이기 ①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선자가 1명일 경우에 크다. 사표는 선거에서 유효한 표지만 낙선한 후보를 지지하여 당선자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표를 말한다.

③ 중·대선거구제에서는 당선자가 여러 명이므로 다양한 시민의 의사 반영에 유리하다.

④ 후보자 수가 적은 것은 일반적으로 당선자가 1명인 소선거구제이다.

⑤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로 인해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차이가 크며, 이는 과대 대표, 과소 대표의 문제로 나타난다.

8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에 의한 통치만을 강조하나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법의 제정과 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정의에 부합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정답찾기 ③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합법성과 함께 법의 내용과 목적의 정당성도 증시한다.

오답피하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는 정치권력의 합법성만을 강조할 것이다.

② 부당한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은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인정할 것이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이라면 법의 목적과 내용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뿐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을 중시할 것이다.

9 정당 제도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정국 불안 가능성이 크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가)는 다당제이고, 정국 불안 가능성이 낮고, 책임 소재가 명확한 (나)는 양당제이다. 다당제란 정치권력의 획득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이 존재하는 정당 제도이다. 양당제란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두 정당이 존재하는 정당 제도이다.

정답찾기 ㄷ. (가)는 다당제, (나)는 양당제이다.

ㄹ. 다당제보다 양당제가 유권자의 정당 선택의 범위가 좁다.

오답피하기 ㄱ. 다당제는 소수 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소수 대표제란 득표순으로 일정 인원을 당선시키는 제도로 중·대선거구제와 결합한다.

ㄴ. 양당제에서는 2개의 정당 중 1개의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0 우리나라 헌법 조항 이해

문제분석 (가)는 헌법 제10조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나)는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 기본권 제한의 요건, 방법,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정답찾기 ⑤ 헌법 제10조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표현에서 자연법 사상을 도출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인 목적,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②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이 나타나 있다.

③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④ 헌법 제37조 제2항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1 우리나라 헌법 기관 이해

문제분석 (가)는 국회, (나)는 국무 회의, (다)는 행정 각부의 장, (라)는 감사원이다.

정답찾기 ⑤ 행정 각부의 장과 달리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오답피하기 ① 국무 회의는 심의 기관이므로 대통령은 국무 회의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 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한다. 행정 각부 장의 권한이 아니다.

③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독립적 헌법 기관이다.

④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국회는 탄핵 소추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12 주택 임대차 이해

문제분석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방법에 대한 대화이다. 전세권은 등기부 등구에 기재된다.

정답찾기 ④ 갑은 전세권을 통해서, 을은 대항력과 확정 일자자를 통해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갑과 을이 확보한 권리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우선 변제권이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확보된다.

오답피하기 ① 전세권은 등기부 등구에 설정되지만 확정 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받는다.

② 전세권 설정은 주택 소유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 확정 일자는 주민 등록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주민 센터에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③ 을은 이사,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받았으므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였다.

⑤ 갑과 을 모두 후순위 권리자보다 임차 보증금(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13 국민 참여 재판 이해

문제분석 그림은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들에 의해 작성된 서류이다. 국민 참여 재판이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유죄의 경우 양형 의견을 개진하면 이를 참고하여 판결이 이루어지는 재판이다.

정답찾기 ㄱ. 평결 및 양형 의견서는 판사의 판결을 구속하지 않는다. ㄷ. 국민 참여 재판은 중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개척된다.

오답피하기 ㄴ. 국민 참여 재판은 지방 법원 형사 합의부(1심) 사건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개척된다. 즉, 중한 형사 재판에서 가능하다.

ㄹ.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일정한 전과를 가진 사람, 변호사, 경찰관 등의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14 상속 이해

문제분석 사례에서 유언이 유효하다면, 정과 무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과 무의 유류분액은 법정 상속 시 받는 상속액의

1/2이다. 유언이 유효하지 않다면 사실혼 배우자인 을은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상속 받을 수 없고, 병, 정, 무가 직계 비속으로 1순위 상속권자가 되며, 1:1:1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정답선택기 ③ 유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 상속으로 진행 되더라도 병은 1순위 상속권자이다.

오답피하기 ①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을 경우 을은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상속권자가 아니다. 법률혼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 유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면 을은 상속권자가 아니라 유증자로부터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된다.

② 유언의 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정이 받을 금액은 무가 받을 금액과 동일하다.

④ 유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면 유언장의 내용대로 진행되나 정과 무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유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면 을과 병은 유류분 반환 청구가 아닌 유언장의 내용대로 재산을 받을 수 있다.

15 이혼 이해

문제분석 을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을 낭비하고 괴롭힌 갑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협의 이혼은 갑과 을의 합의로 이루어지고,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지는 이혼이다.

정답선택기 ③ 이혼 후 병을 양육하지 않는 갑은 병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오답피하기 ① 협의 이혼은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조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거쳐야 한다.

② 갑과의 합의가 없어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다면 을은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혼인 생활 중 취득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가능하다.

⑤ 협의 이혼 시 친권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16 불법 행위 이해

문제분석 사례는 피용자(을)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다. 을은 일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며, 병은 을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선택기 ③ 병은 갑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는 특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과실에 의해서도 일반 불법 행위는 성립하므로 을은 갑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은 갑에게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있다.

④ 병이 직접 갑에게 가해하지 않았더라도 을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⑤ 병이 을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에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갑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17 상소 제도 이해

문제분석 그림은 상고 사건 재판에 대한 판결문의 일부이다.

정답선택기 ㄱ.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급을 두어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심급 제도와 관계가 있다.

ㄴ. 대법원에서의 판결이므로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3심제가 원칙이다.

오답피하기 ㄴ. 고등 법원은 일반적으로 2심을 담당하나 지역구 시도 의원 선거 등의 선거 재판에서 1심을 담당한다.

ㄷ.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채 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임해야 한다.

18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이해

문제분석 그림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일부이다. ㉠은 갑으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순으로 기재되며, ㉡은 을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정답선택기 ⑤ 확정 일자를 받으면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된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임차 보증금 잔금 지급 전 등에서 등기부를 확인하면 보다 안전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갑이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받더라도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2013년 7월 5일이므로 △△은행이 선순위 권리자이다.

③ ㉠은 갑으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순으로 기재된다.

④ 갑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경우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19 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제도 이해

문제분석 (가)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이고, (나)는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이다.

정답선택기 ④ (가)의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나)의 형사 보상 제도는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서 국가가 그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오답피하기 ①, ② 배상 명령 제도는 상해죄, 폭행죄 등 일정한 사건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가), (나) 사례와는 관계가 없다.

③, ⑤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검사가 구속 영장 발부를 청구한 경우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가), (나) 사례와는 관계가 없다.

20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갑은 현실주의적 관점, 을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자국의 이익 추구로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이나 갈등이 반복되며, 군사 동맹 등으로 세력 균

형 유지를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는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국제기구나 국제법으로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 유지를 주장한다.

정답셋기 ㄴ.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국제 평화를 위해 군사적 동맹을 통한 힘의 균형을 강조한다.

ㄷ.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가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국제 행위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ㄱ.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 유지를 강조하는 입장은 자유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ㄹ.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개별 국가의 이익과 전체 국가의 이익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실전 모의고사 5회

본문 124~128쪽

1 ②	2 ③	3 ③	4 ④	5 ③
6 ④	7 ⑤	8 ⑤	9 ③	10 ①
11 ④	12 ⑤	13 ⑤	14 ⑤	15 ②
16 ②	17 ③	18 ③	19 ⑤	20 ③

1 정치의 의미 이해

문제분석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로 구분할 수 있다. A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B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정답셋기 ②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서로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인 B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인 A는 국가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③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인 B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국회나 정당에 관련된 활동도 정치로 간주한다.

④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인 B는 사회 집단에 의한 정치적 변화나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⑤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인 A에 비해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인 B가 정치 주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2 정치 과정에서 투입과 산출, 환류 이해

문제분석 정치 과정에서 ㉠은 투입, ㉡은 산출, ㉢은 환류에 해당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보다 ㉠과 ㉢의 영향력이 강하며, ㉠과 ㉢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수록 시민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정답셋기 ㄴ. 개정 법률에 따라 청소년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ㄷ. 환류는 정치 참여 주체의 산출에 대한 반응으로 새로운 수준의 요구와 지지를 창출해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치 참여 주체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산출된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새로

운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오답피하기 ㄱ.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소극적이므로 ㉠보다 ㉡이 활성화된다.

ㄹ. 시민 단체와 언론은 투입과 환류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과 ㉢ 모두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3 민주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정부나 의회에 매개되지 않는 국민의 참여를 토대로 한 자치의 방식인 A는 직접 민주제, 국민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사람에게 권력을 위임하여 대표를 통해 운영되는 자치의 방식인 B는 간접 민주제이다.

정답셋기 ㄴ. 직접 민주제는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므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낮은 반면, 간접 민주제의 경우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ㄷ. 간접 민주제는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형태로 정치 참여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므로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오답피하기 ㄱ. 간접 민주제에 비해 직접 민주제는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여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

ㄹ.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은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국민이 직접 공공의 문제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제를 시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토가 확대되고 사회가 전문화된 국가에서는 직접 민주제에 비해 간접 민주제가 적합하다.

4 사회 계약설 이해

문제분석 외적의 침입과 상호 간의 권리 침해에 따른 투쟁 상태에서 인민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힘을 한 인물 또는 하나의 합의체인 리바이어던에게 부여하고, 인민 개개인의 의지를 리바이어던의 판단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근대 정치 사상가는 '홉스'이다.

정답셋기 ④ 홉스는 인민이 자기 보존을 위해 주권을 제3자인 리바이어던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① 홉스는 인민이 자기 보존을 위해 제3자에게 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인민의 의사가 주권자의 권력 행사를 구속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② 홉스의 경우 인민이 제3자인 리바이어던에게 주권을 양도하였다고 보았으므로 주권자의 권력 행사가 의회 입법권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국가가 공공선을 반영한 일반 의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근대 정치 사상가는 루소이다.

⑤ 홉스는 국가 권력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타난 인위적 질서이자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5 정치 참여 집단의 이해

문제분석 (가)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므로 이익 집단에 해당하며, (나)는 정치적 강령을 내세워 선거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집단이므로 정당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③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은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고 국민을 대신할 대표자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진다.

오답짜이기 ①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으로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와 국민을 이어 주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

② 이익 집단은 정치 참여자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직접 공공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④ 이익 집단과 정당은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며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⑤ 이익 집단과 정당은 모두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결사체로 정치 과정에서 투입과 환류 기능을 담당한다.

6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19세기 후반에 법치주의가 내용적으로 축소되고 형식화되면서 형식적 법치주의로 변질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의 모든 통치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 정의의 실현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확장되었다.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정답찾기 ④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오답짜이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치주의를 소극적으로 정의하여 행정과 재판이 법률에 적합하기만 하면 그 법률 자체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합법성뿐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에 목적을 두어 실질적 정당성 확보도 강조한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가의 모든 통치 행위가 정의의 이념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지배가 아닌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지배를 강조한다.

7 헌법 소원 심판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부당 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해당 법률 조항이 자신의 해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정답찾기 ㄷ. 재판 중 갑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이 재판이 계속되던 중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였을 것이다.

ㄹ. 헌법 재판소가 부당 해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을 자의적이고 불균형한 형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해당 법률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오답짜이기 ㄱ.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에 해당한다.

ㄴ. 갑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며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은 해고의 자유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8 선거구제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갑국은 소선거구제(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득표를 한 1인을 선출하므로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선거구제 변경안을 확정하여 한 선거구에서 2인의 대표자를 득표순으로 선출하게 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정답찾기 ⑤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동일 선거구에서 1위로 당선된 자와 2위로 당선된 자 간에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오답짜이기 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해도 유권자와 지역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대표성은 유지되지만, 군소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커져 정국의 혼란이 우려된다.

②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후보자 개인의 선거 운동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③ 사표가 많을 경우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심화되는데, 이는 소선거구제(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④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정치 신인이나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9 정부 형태의 이해

문제분석 갑국은 행정부가 의회와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의회의 신임과 무관하게 존속하므로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하나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찾기 ③ 행정부 수반이 A당 소속인 상태에서 실시된 총선 결과 B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 의회 내 제1당이 되었으므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오답짜이기 ① 총선 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정당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②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B당이 의회 내 제1당이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을 주도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각 불신임권은 의원 내각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므로 B당이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④ 내각이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⑤ 행정부 수반이 A당 소속이고 의회 내 제1당이 B당이므로,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통해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헌법 제119조 제2항을 근거로 우리 헌법이 복지 국가의 원리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①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오답짜이기 ② 복지 국가의 원리는 사회·경제적으로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합리적 차별을 인정한다.

- ③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실질적 평등을 위한 국가의 노력으로 복지 국가의 원리에 따라 실시된다.
- ④ 복지 국가의 원리에 따라 국민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개인의 생활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사회에 대한 책임까지 강조한다.

11 법률 행위의 효력 이해

문제분석 (가)에 나타난 유언은 법이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맞게 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무효가 된다. (나)에서 미성년자인 을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을 또는 을의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④ 을의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법률 행위가 성립할 때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갑의 아버지가 한 유언이 유효한 경우 갑의 형은 갑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의 아버지가 한 유언이 법이 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인 경우 갑과 갑의 형 모두 상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유언의 효력과 관계없이 갑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유언은 법이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맞게 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③ 미성년자인 을은 다이어트 식품 매매 계약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인 을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이나 을의 법정 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률 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

12 공동 불법 행위 이해

문제분석 갑(17세)과 을(21세)이 병(20세)과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말다툼 끝에 갑이 병을 폭행하고 을이 옆에서 망을 본 경우 갑과 을은 병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이때 피해자인 병은 갑 또는 을을 상대로 치료비와 별도의 위자료를 손해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금전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갑 또는 을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병은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 소송과 별도로 폭행을 이유로 수사 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 후 검사가 갑 또는 을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된다.

정답찾기 ⑤ 병이 갑과 을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해서 형사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가) 시점에 갑과 을의 병에 대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한다.

② (나)에서 17세인 갑은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병은 갑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 (나)에서 병은 을에게 치료비 이외에 별도로 정신적 손해 배상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④ 병이 손해 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 을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부

에 해당 사실이 기재되며, 을의 부동산 처분이 제한된다.

13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주민 등록)를 마치면서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을이 갑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한 후, 임차인 갑이 주민 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정답찾기 ⑤ 정이 갑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주민 등록을 이전한 갑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정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갑이 을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갑과 을의 의사 표시가 합치된 2015년 5월 20에 성립되었다.

② 갑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도와 전입 신고(주민 등록)가 요구되므로 주민 등록을 이전할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③ 을은 임차인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병에게 매도할 수 있다.

④ 병이 정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당권자인 정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주택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경매에서 주택이 매각되면 정은 매각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병이 정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이 자동적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4 형의 선고와 집행 이해

문제분석 회사 동료인 을에 대한 명에 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은 갑은 법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 유예는 유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단지 형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 유예를 받고 죄를 범하지 않은 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찾기 ㄷ. 항소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검사와 갑 모두 상고할 수 있다.

ㄹ. 선고 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자격 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거나 자격 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지 않고 2년의 유예 기간을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선고 유예 기간 중 갑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오답피하기 ㄱ. 선고 유예는 유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형 선고만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로 유예 기간이 지나면 갑은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15 형사 절차 이해

문제분석 갑은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가)~(다)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가)는 수사 절차에, (나)는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 절차를 종결하는 수사 종결 절차에, (다)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공판 절차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② (나)에서 검사가 갑에게 혐의가 없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구속된 피의자인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파헤기 ① (가)에서 구속된 갑은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다)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갑은 이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④ 갑이 집행 유예 판결을 받고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⑤ (가), (다) 모두에서 갑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16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분석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나)는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유로, (가)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긴급 피난, (나)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강요된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정답찾기 ㄱ.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가게 유리창을 파손한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 (가)에 해당한다.

ㄷ.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는 행위이지만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오답파헤기 ㄴ.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는 자구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ㄹ.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 모두 범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적용된다.

17 근로자의 권리 보호 절차 이해

문제분석 갑은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을 받고 연봉 삭감이라는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한 ○○ 회사의 행위는 갑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③ ○○ 회사가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어야 한다.

오답파헤기 ① 갑은 근로 3권 침해를 이유로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갑이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경우 ○○ 회사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④ 갑이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을 통한 분쟁 해결은 행정 소송에 해당하여 3심제가 적용된다.

18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흡스의 자연 상태를 기반으로 한 패러다임은 현실주의이다. 현실주의에 따르면 보편적 윤리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이해하고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국가들 스스로 힘을 기반으로 자국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답찾기 ㄴ.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현실주의이다.

ㄷ.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군사적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 전략을 강조하는 관점은 현실주의이다.

오답파헤기 ㄱ.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현실을 간과하는 관점은 자유주의이다.

ㄹ. 국제 사회에 보편적 선이나 윤리가 작동한다고 보고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을 중시하는 관점은 자유주의이다.

19 국제기구와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분석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가 간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에는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 경제 사회 이사회, 사무국 그리고 국제 사법 재판소 등이 있다.

정답찾기 ㄷ.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에서 반복적 관행이 묵시적 합의에 따라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ㄹ. 조약은 국가 상호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되는 문서 형식의 합의로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국만 구속한다.

오답파헤기 ㄱ.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해 책임을 지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ㄴ.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법상 핵무기 사용'에 관한 권고적 의견 요청에서 이를 허용하는 국제 규범이나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국제 사법 재판소는 ㉠에 관한 국제 규범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20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분석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합리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은 소유권 절대 원칙, ㉡은 계약 자유 원칙, ㉢은 과실 책임 원칙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③ 과실 책임 원칙의 경우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져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오답파헤기 ①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의 경우에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때 소유자가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② 권리 남용 금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이다.

④ 소유권 절대 원칙과 계약 자유 원칙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전제로 성립하는 원칙이다.

⑤ 소유권 절대 원칙과 계약 자유 원칙 모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되었지만, 두 원칙은 여전히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이나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대체된 것은 아니다.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1회

본문 104~108쪽

1 ⑤	2 ⑤	3 ④	4 ④	5 ②
6 ③	7 ②	8 ①	9 ③	10 ⑤
11 ①	12 ④	13 ③	14 ③	15 ①
16 ⑤	17 ⑤	18 ②	19 ⑤	20 ④

1 민주 정치 형태 분석

문제분석 그림 (가)는 직접 민주 정치, (나)는 간접 민주 정치, (다)는 혼합 민주 정치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는 모두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방식이며, 국민 자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정답찾기 ⑤ 간접 민주 정치와 혼합 민주 정치는 대표의 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치 과정에 의회가 필수적인 기관으로 존재한다.

오답피하기 ① 정치적 무관심은 간접 민주 정치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② 직접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에 비해 국민 자치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③ 선동가에 의한 정치 혼란은 직접 민주 정치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④ 혼합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에서 나타난 국민의 직접 참여 제약이라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의제에 직접 민주 정치 요소인 국민 투표나 국민 소환 등의 방식을 포함시킨 것이다.

2 사회 계약론자의 사상 비교

문제분석 A는 홉스, B는 루소이다. 이들은 모두 국가를 목적이라기보다 인민의 자연권 보전을 위한 수단적인 것으로 보았다.

정답찾기 ⑤ 사회 계약론자들은 모두 국가를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단적인 것으로 여겼으며, 국가의 형성 근거를 시민들에 의한 사회적 합의에서 찾았다.

오답피하기 ① 사회 계약론자들은 모두 주권이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② 홉스나 루소 모두 권력 분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③ 홉스는 자연 상태의 극복을 강조하였다.

④ 홉스나 루소 모두 국가를 수단적인 것으로 여겼다.

3 정치 참여 집단의 특성 이해

문제분석 표에서 '정치적 충원 기능을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예'로 답한 A는 정당, '아니요'로 대답한 B와 C는 각각 시민 단체나 이익 집단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ㄱ. 표에서 A는 정당이다. 정당은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ㄴ.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치 사회화 기능이나 정책 결정에 영향력 행사 등이 들어갈 수 있다.

ㄷ.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집단은 이익 집단이다.

오답피하기 ㄹ. 제시된 정치 참여 집단 중에서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집단은 정당이나 시민 단체이다. 따라서 C는 시민 단체이다.

4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A)로 전락하여 독재에 악용되기도 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실질적 법치주의(B)로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정답찾기 ㄴ. 법의 정당성은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강조된다.

ㄹ.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제도적 장치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로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흔히 채택된다.

오답피하기 ㄱ. 통치의 합법성은 형식적 법치주의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중시한다.

ㄷ. 의회에 의해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특별히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만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5 단순 다수 대표제와 결선 투표 제도 이해

문제분석 갑국은 최고 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되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을국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병국은 유권자가 출마한 모든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는 선호도 순위에 따라 기입하는 투표 방식(선호 투표제)을 채택하고 있다.

정답찾기 ㄱ. 병국은 여러 후보자에게 순위를 매겨 투표해야 하므로 한 사람의 후보자만을 정하여 투표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하여 투·개표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ㄹ. 갑국은 후보자가 난립하여 당선자가 과반수 득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당선자가 득표한 표보다 낙선자들에게 투표한 표가 더 많아서 대표의 정당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반면, 을국이나 병국의 경우에는 당선자는 늘 과반수 득표를 하게 되므로 대표의 정당성 확보에 유리하다.

오답피하기 ㄴ. 병국의 경우 투·개표 과정이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을국의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결선 투표를 다시 하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을국과 병국 모두 갑국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나, 병국이 을국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ㄷ.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은 결선 투표제나 선호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을국이나 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6 투표 방식에 대한 자료 분석

문제분석 병국의 투표 방식은 최하위 득표자를 1선호로 투표한 유권자의 표를 동일한 선호 유형의 2선호 후보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행해져, 궁극적으로 최종 당선자가 과반수 득표를 하여 당선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답찾기 ③ 후보자 중에서 과반수의 1선호 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으므로 가장 적은 1선호 표를 얻은 후보자(C)에게 투표한 20만 명의 표를 동일한 선호 유형의 2선호 후보자인 B에게 넘겨주면, B는 51만 표로 과반수 득표를 하게 되어 당선된다. 1선호만으로는 A 후보자가 가장 득표수가 많았지만, 최하위 득표자의 2선호 표를 동일한

선호 유형의 2선호 후보자에게 넘겨준 결과, 1선호 표가 두 번째로 많았던 B 후보자가 당선된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1선호 집계를 한 1차 집계 결과만으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서 당선자를 확정할 수 없다.

② 결과적으로 ㉠의 선호를 가진 투표자는 당선에 기여한 표가 된다.

④ 1선호의 최하위 득표자 C에게 투표한 ㉡ 선호의 표가 2선호 후보자 B에게 넘어가게 된다.

⑤ 투표자의 2선호 표가 넘겨지는 과정은 한 차례이다.

7 정부 형태와 정당 제도 비교

문제분석 표에서 의회 총선 결과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갑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②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를 동일한 인물이 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의회 해산권은 의원 내각제의 행정부 수반이 갖는다.

③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행사는 의원 내각제의 의회가 가지는 권한이다.

④ 총선 전 여대야소의 상황이 총선 후 여소야대의 상황으로 바뀌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유기적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다.

⑤ 갑국 의회는 양당제 형태를 취하므로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8 사회권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A는 근로기준법, B는 기초연금법, C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들은 노동관계, 사회보장, 공정한 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법률들로서 공통적으로 사회권을 근거로 형성된 것이다.

정답찾기 ① 사회권은 20세기에 들어와 강조된 기본권으로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적극적으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추구하는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오답피하기 ② 기본권의 역사가 가장 긴 것은 자유권이다.

③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과 관계 깊은 내용이다.

④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청구권이다.

⑤ 국가 의사 결정에의 참여를 요구하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9 국회의 권한과 운영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 국회의 권한을 분석하는 경우,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이지만 의원 내각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답찾기 ③ ㉡의 법률안 제출은 정부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서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권한이다.

오답피하기 ①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②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④ 국회의 고유 권한은 입법에 대한 것으로 법률안의 제·개정, 헌법 개정안 발의·의결,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등이다.

⑤ 국정 조사는 정기적, 포괄적으로 행해지는 국정 감사와 달리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수시로 행해질 수 있다.

10 헌법재판소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제도 이해

문제분석 그림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 제기된 것을 나타낸다. 이는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청구하는 것과 ‘당해 사건’이라는 단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⑤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피고인’이라는 단서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②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헌법 소원이다. 이것은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자료는 형사 재판 진행 중에 재판의 전제성을 근거로 제기한 것이므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③ 헌법 소원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제기할 수 없다.

④ 그림의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이고,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11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분석 민법의 기본 원칙은 근대부터 확립된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 소유권 공공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보완되어 시행되고 있다.

정답찾기 ㄱ. ㉠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서 사유 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하려는 원칙이다.

ㄴ.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들의 관계가 대등하지 못하여 계약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강자의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원칙이다.

오답피하기 ㄴ. 근대 민법의 원칙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를 수정·보완하는 원칙은 이것으로 인한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 근거를 마련하면서 확립된 것이다.

ㄷ. 특수 불법 행위 중 공동 불법 행위자의 연대 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

12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상황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다.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

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찾기 ④ 공작물 점유자인 을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소유자인 병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병의 손해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오답피하기 ① 갑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서 1차적인 책임은 점유자에게 있다.

③ 을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병이 지는 손해 배상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⑤ 점유자 을이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병은 소유자로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13 이혼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갑은 가정 법원에 이혼의 의사를 확인 받았으므로 협의 이혼을 한 경우이며, 을은 가정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이다.

정답찾기 나. 협의 이혼에서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 속려 기간을 거처야 한다.

다. 이혼을 한다는 것은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법률혼을 전제로 한다. 사실혼 관계인 부부에게 법률적 이혼이란 존재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가.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협의 이혼의 사유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르. 이혼의 유형과 상관없이 이혼 당사자들은 모두 재산 분할 청구권을 가진다.

14 주택 임대차 보호와 등기부 구성 이해

문제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거주와 전입 신고 완료에 따른 대항력 인정과 이에 더하여 확정 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보장, 임대차 기간의 2년 보장에 의한 임차인 보호 등이 핵심이다.

정답찾기 다. ㉠의 조치에 따라 갑은 대항력을 인정받게 되었는데, 대항력은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르. ㉡과 ㉢에 따라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된 갑은, 선순위 저당권자인 △△은행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못하지만, 후순위 저당권자인 ○○은행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오답피하기 가. 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여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라는 문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저당권과 같은 소유권 이외의 사항은 등기부상의 을구에 기재된다.

15 유언의 효력과 법정 상속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상속은 유언 상속을 우선하므로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 상속이 행해진다. 이 경우 유언장이 요식에 적합한지 여부, 유류분 반환 청구 문제 등이 주요 고려 사항으로 대두된다.

정답찾기 가. 유언장이 무효라면, 법정 상속이 개시되는데, 6억 원

의 상속 재산이 상속인 병과 정에게 각각 3억 원씩 상속된다. 을은 사실혼 관계이므로 상속분이 없다.

나. 유언장이 효력이 있고,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인 을과 2순위 상속인인 무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자격이 없으며, 법정 상속도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무는 상속 자격이 없다.

오답피하기 다. 유효한 유언으로 전 재산이 종교 단체에 유증되었다 하더라도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은 1/2 한도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르. 한정 승인은 상속인의 소극 재산인 빚의 규모가 불분명하여 상속을 받을 경우, 오히려 채무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 때,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 표시이다. 갑의 경우 채무가 없으므로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할 이유가 없다.

16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그림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검사의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정답찾기 ⑤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검사가 기소할 이후에는 피고인으로 불린다.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여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수사 개시의 단서는 신고, 고소, 고발, 현행범 체포, 경찰의 범죄 단서의 인지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② 피의자가 인신 구속되는 경우, 구속 영장 발부를 위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하게 된다.

③ 검찰 송치는 피의자와 서류를 모두 검찰로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④ 기소 여부는 기소 독점주의라 하여 검사의 고유 권한이다.

17 범죄의 성립 요건의 이해

문제분석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갑~정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져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정답찾기 다. 병의 행위는 범죄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졌다. 다만, 범죄 행위의 동기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

르. 갑의 경우는 정당 행위나 긴급 피난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고, 정의 경우는 긴급 피난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가. 갑의 행위는 주거 침입죄라는 범죄의 구성 요건 자체는 갖추었다. 다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나. 을은 12세로서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책임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을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에 위배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18 소비자의 권리 이해

문제분석 소비자기본법상에서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피해를 보상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안전하

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등 소비자의 8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정답찾기 ㄱ, ㄷ. 알 권리는 제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로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한 권리이다. 또,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는 소비자가 제품의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료의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오답피하기 ㄴ, ㄹ. 안전할 권리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고, 의견을 반영할 권리는 정부 정책,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이다. 두 권리 모두 자료에서 침해되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19 부당 해고와 구제 절차 이해

문제분석 대화는 근로자 갑이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의 기각과 관련하여 다른 구제 수단을 모색해 보는 내용이다.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이나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⑤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은 재심 판정이 있기 전에는 할 수 없지만,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판정과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② 부당 해고의 재심 신청은 근로자 갑이 제기하였고, 이것이 기각되었다면,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단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자의 해고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③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은 중앙 노동 위원회가 담당한다.

④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성격은 민사 소송이다.

20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분석 국제법의 법의 존재 형식은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으로 존재한다. 제시문에서 A는 조약, B는 국제 관습법을 의미한다.

정답찾기 ㄱ. 조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국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ㄴ. 조약은 국가 간 뿐 아니라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도 체결될 수 있다.

ㄷ. 국제 관습법은 체결 국가가 아니더라도 효력을 가지므로 모든 국가들에게 효력을 가진다.

오답피하기 ㄹ.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제 관습법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효력을 가진다.

실전 모의고사 2회

본문 109~113쪽

1 ②	2 ⑤	3 ⑤	4 ②	5 ⑤
6 ②	7 ④	8 ②	9 ④	10 ①
11 ③	12 ②	13 ③	14 ⑤	15 ①
16 ③	17 ②	18 ②	19 ③	20 ⑤

1 형식적 법치주의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글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하면 그 법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 법에 따라 행정을 하거나 재판을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을 통해 밑줄 친 ‘이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ㄱ. 통치자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악용하여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ㄷ.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실질적 평등과 같이 정의에 부합하는가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나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ㄴ. 형식적 법치주의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의회의 입법 기능을 바탕으로 한다.

ㄹ.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정당성보다는 합법성을 중시한다. 이에 비해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정당성과 합법성 모두 중시한다.

2 시민의 의미 변화 이해

문제분석 시민의 의미는 고대 아테네와 근대 민주 사회, 현대 사회에서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정답찾기 ㄷ. 근대 민주 사회는 제한 선거로 인해 선거권이 차등 부여되었으나, 현대 민주 사회에서는 보통 선거의 실시로 모든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대중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

ㄹ.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근대 민주 사회에서 역시 시민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으므로 특권적 지위를 누렸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고대 아테네의 시민은 선거가 아니라 운번제, 추첨제를 통해 평의회 구성원이 되었다.

ㄴ. 근대 민주 사회는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진술이다.

3 정치의 의미 이해

문제분석 갑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고, 을은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정답찾기 ㄷ.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정치란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활동으로 이해하므로 국가 형성 이전에는 정치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ㄹ.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정치란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인간 활동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오답피하기 ㄱ.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ㄴ. 정치를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는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4 국민 주권의 원리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헌법 조항들을 통해 국민 주권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국민 주권의 원리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정답찾기 ㄱ. 국민 주권주의를 명시적으로 밝힌 헌법 조항이다.
ㄷ.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은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오답피하기 ㄴ. 자유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 지향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ㄹ.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5 정당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민주 국가의 정당 제도의 유형 중, 정국 불안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A는 다당제, 정국 불안 가능성이 낮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한 B는 양당제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⑤ 다수 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최고 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다당제보다 양당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오답피하기 ①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은 정당 제도는 정당의 수가 많은 다당제이다.

② 양당제에서는 의회 내 과반수 정당의 출현이 용이하다.

③ 정당 간 극한 대립은 다당제보다 양당제에서 나타나기 쉽다.

④ 단정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6 입헌주의의 이해

문제분석 A는 군주의 강력한 지배를 인정하면서도 명목상으로는 권력 분립과 기본권 보장을 규정한 입헌주의이고, B는 단순히 헌법에 의한 형식적 통치를 넘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입헌주의이다.

정답찾기 ㄱ. A는 통치자를 의회와 사법부의 통제권 밖에 두어 특권 화시켰다.

ㄹ. A와 달리 B는 실질적 입헌주의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ㄴ. A, B 모두 원칙적으로 성문화된 헌법을 바탕으로 한다.

ㄷ. A, B 모두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인정한다.

7 중·대선거구제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동일 지역구에서 소속 정당이 같은 후보자가 두 명 혹은 그 이상 출마했을 수 있으므로 ○○국이 채택한 선거구 제도는 중·대선거구제임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ㄴ.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다당제를 촉진할 수 있다. 양당제를 촉진할 수 있는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이다.

ㄹ. 중·대선거구제는 동일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오답피하기 ㄱ. 중·대선거구제는 2명 이상을 선출하므로 동일 정당 소속일지라도 갑, 을 모두 당선될 수 있다.

ㄷ. 갑, 을은 동일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념이나 정책 측면에서 공약 내용이 매우 상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8 우리나라 정당 제도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정당 제도는 복수 정당제, 민주적 운영, 당원에 의한 정당 운영 등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ㄱ.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누구나 정당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는 복수 정당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 기관 및 집행 기관, 당비 납부를 통한 재정 마련 등을 통해 우리나라는 당원에 의한 정당 운영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제15조를 통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을 알 수 있다.

ㄹ. 당원에 의한 정당 운영은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내 의사 결정을 모든 당원들이 모여 결정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 제29조에 정당 내부에 대의 기관 및 집행 기관을 두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9 언론의 역할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글은 요즘 언론이 사건에 대한 아무런 가치 판단 없이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균형만을 고려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정답찾기 ④ 제시된 글은 언론은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사람들에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의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글과는 관련이 없다.

② 이는 오히려 제시된 글이 비판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

③ 제시된 글과는 관련이 없다.

⑤ 제시된 글은 중립적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0 정치 과정의 이해

문제분석 정책 결정 과정 중 투입과 환류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활발한 민주 사회임을 의미한다.

정답찾기 ㄱ. 정당은 투입 기능을 담당하는 정치 참여자이다.

ㄴ. 행정부라는 정책 결정 기구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물이므로 산출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ㄷ. 민주 사회일수록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되어 투입 기능이 활발해지므로 산출 기능이 투입 기능보다 활발해진다고 할 수 없다.

ㄹ. 권위주의 사회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도가 낮으므로 환류 내용이 산출 내용에 반영되는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11 기본권의 이해

문제분석 A는 참정권, B는 자유권, C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중시하므로 소극적·방어적 권리에 해당한다.

다. 참정권과 사회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인정되는 국가 내적 권리이다.

정답찾기 > 공무 담임권은 참정권, 구속 적부 심사제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유권, 환경권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한 것이므로 사회권에 해당한다.

12 정부 형태의 이해

문제분석 > 갑국은 총선에 의해 새로운 다수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선출되었으므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을국은 새로운 과반수 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 ②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오답피하기 > ①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은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행정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④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 정책의 계속성 유지에 유리하다.
⑤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적,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적 성격이 강하다.

13 부동산 거래의 이해

문제분석 > 제시된 사례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임대인)이 주택을 빌리 고자 하는 사람(임차인)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답찾기 > ③ 계약은 청약자의 청약의 의사 표시와 승낙자의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된 때에 성립한다. 사례에서 2015년 6월 7일에 두 사람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이 날짜부로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된다.

오답피하기 > ① 저당권은 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부동산 등 기부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② 갑은 경매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④ 우선 변제권은 이사 및 전입 후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갖게 된다. 확정 일자 취득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파악할 수 없다.
⑤ 보증금 회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는 알 수 없다.

14 특수 불법 행위의 이해

문제분석 > 사례는 특수 불법 행위 유형 중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과 관련 있다.

정답찾기 > 나, 다. 아파트 점유자인 B가 1차적인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르. 아파트 소유자인 C는 점유자인 B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무과 실 책임을 진다.

오답피하기 > 가.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 제조물 책임법의 이해

문제분석 > (가)는 제조물이 손해를 유발하였다는 사실과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므로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경우이고, (나)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정답찾기 > 가. (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제조자에게 보다 쉽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이다.

나. 제조물 책임법은 피해자의 입증 책임 완화를 내용으로 한다.

오답피하기 > 다. 제조물 책임법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인 과실 책임의 원칙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르. 무과실 책임을 바탕으로 한 제조물 책임법이 민법보다 소비자 권리 보호에 유리하다.

16 소유권 공공의 원칙 이해

문제분석 > 제시된 헌법 조항은 개인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지만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공공복리에의 적합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정답찾기 > ③ 제시된 헌법 조항은 근대 민법의 원칙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오답피하기 > ① 재산권에 제한을 가한다고 해서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제시된 헌법 조항과는 관련이 없다.

④ 소유권 공공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수정한 것이므로 틀린 진술이다.

⑤ 관련이 없는 진술이다.

17 위법성 조각 사유의 이해

문제분석 > 자료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유죄로 판결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답찾기 > ② 정당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답피하기 > ①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긴급 피난과는 관련 없다.

④ 책임 조각 사유에는 형사 미성년자 및 심신 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등이 포함되는데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⑤ '집회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틀린 진술임을 알 수 있다.

18 사회법의 이해

문제분석 > A법은 사회 보장 기본법, B법은 근로기준법, C법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모두 사회법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 ② 근로 3권, 즉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다.

오답피하기 ① 사회 보장 제도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③ 기업 간 담합 행위의 금지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사회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법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으로서,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한다.

⑤ 사회법은 자유방임 경제에서 심화되었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노사 간 대립, 독점 기업 발생 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19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형사 절차는 수사 개시 →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 공판(심리) → 선고 → 집행으로 이루어진다.

정답찾기 ③ 구속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다. 기소는 검사의 권한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구속 재판을 받은 경우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A는 구속 상태에서 1심을 받았으므로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② 1심에서 A는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으므로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징역은 자유형, 벌금형은 재산형에 해당한다.

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A는 동일 내용으로 인해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

20 국제법의 이해

문제분석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은 국제법 중 조약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⑤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 비준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가 모든 조약에 대해 비준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국제 연합은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를 추구하며, 이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자유주의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②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은 다수의 국가들 간에 체결되었을 것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다자 간 조약에 해당한다.

③ 조약은 체결 당사국만 구속한다.

④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두 법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였다.

실전 모의고사 3회

본문 114~118쪽

1 ⑤	2 ②	3 ②	4 ①	5 ⑤
6 ④	7 ④	8 ④	9 ①	10 ②
11 ⑤	12 ③	13 ④	14 ⑤	15 ⑤
16 ②	17 ④	18 ④	19 ⑤	20 ②

1 사회 계약설 이해

문제분석 대표적인 근대 사회 계약론자는 홉스, 로크, 루소다. 홉스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고 보았다. 루소는 바람직한 정치체제로 직접 민주제를 옹호했다. 그러므로 갑은 홉스, 을은 로크, 병은 루소다.

정답찾기 ⑤ 근대 사회 계약론자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으므로,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홉스, 로크, 루소는 모두 사회 계약의 목적이 자연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오답피하기 ① 국가의 목적이 개인의 생명, 자유,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고 본 것은 로크(을)이다.

② 일반 의지를 강조한 사상가는 루소(병)이다.

③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본 사상가는 홉스(갑)이다.

④ 국가 권력의 분립을 주장한 사상가는 로크(을)이다.

2 정부 형태 특징 비교

문제분석 갑국은 의회 의원 선거와는 별도로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므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다. 을국은 행정부 수반에 대한 별도의 선거 없이, 의회 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배출되므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이다.

정답찾기 ②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된다. 이에 반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와는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의원 내각제의 총리는 임기 중에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하면 임기 중이라도 사퇴해야 하므로 정해진 임기가 온전히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대통령제는 의원 내각제와 달리 행정부가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원 내각제는 의회 의원이 내각 각료를 겸직할 수 있고, 대통령제는 겸직할 수 없다.

⑤ 탄핵 소추는 대통령제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

3 법치주의의 유형 비교

문제분석 A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의해 통치하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B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정한 법률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률의 목적이 국민의 권리 보장에 있지 않으므로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정답찾기 ㄱ.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정당성이 결여된 법률에 의한 통치를 견제하는 장치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ㄴ.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 즉 형식만을 강조하므로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오답피하기 ㄴ.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치의 형식만 고려할 뿐 법치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ㄷ. 통치의 합법성은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에 해당한다.

4 정당의 기능 이해

문제분석 정당은 각종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하는 정치 충원 기능과 국민의 의사와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를 통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제시문은 당정 협의회 사례로, 이는 정당과 행정부의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다양한 국정을 논의하면서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찾기 ① 여당은 당정 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한다.

오답피하기 ② 정책 결정과 집행은 행정부의 기능이다.

③ 정당의 공직 선거 후보자 배출 기능은 당정 협의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 정당은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조직하고 수렴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정권을 획득하여 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사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⑤ 정치 사회화는 정당의 기능이지만 이 사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5 국제 사회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은 우리나라의 '비자 면제 협정' 체결 확대에 관한 설명이다.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가들 간의 비자 면제 협정 체결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답찾기 ㄴ. 국가 간 공통의 이익이 존재해야 국제 협력이 가능해진다.

ㄷ. 입국 허가(비자)없이도 여권 확인만으로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국제법의 성립을 보여주고 있으나, 상대국에 대한 신뢰를 제도화한다는 것을 통해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ㄴ. 당사국들의 필요에 의해서 협정을 통해 입국과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모든 국가를 구속하는 국제 규범의 존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6 헌법 재판의 이해

문제분석 어린이집 운영자 갑이 소송 중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항소심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직접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한

사례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답찾기 ④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법 해당 조항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

② 항소심 중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갑의 신청을 기각한 법원은 1심 법원이 아닌 2심 법원이다.

③ 담당 법원은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고, 헌법재판소는 갑의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법률에 대한 갑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불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갑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이 헌법 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으므로 여전히 유효한 법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갑의 처벌 여부는 헌법 소원 이후의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시문에는 헌법 소원 이후의 법원의 재판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갑의 상고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7 시기별 민주 정치의 특징 파악

문제분석 (가)는 모든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므로 고대 아테네, (나)는 제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므로 근대, (다)는 보통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의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현대 서구 민주 정치를 의미한다.

정답찾기 ④ 성인 여성의 정치 참여는 보통 선거가 정착된 현대 민주 정치에서 보편화되었다.

오답피하기 ① 입헌주의는 근대 서구 민주 정치에서 정립되었다.

②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여성이나 노동자의 정치 참여, 공무 담임권이 제한되었다.

③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대의제를 바탕으로 직접 민주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를 시행했던 고대 아테네보다 자치의 원리가 충실하게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직접 민주 정치는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클수록 실현하기 어려워진다.

8 법률 개정 절차 이해

문제분석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지만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정부도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찾기 ④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오답피하기 ①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그러므로 제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정부가 제안하는 법률안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환부 거부하지 않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9 미성년자의 민·형사상 책임 이해

문제분석 갑(9세), 을(10세)은 민·형법상 미성년자이며 민·형사상 책임 능력이 없다.

정답찾기 ① 갑과 을은 형법상 미성년자(14세 미만),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이며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② 범죄 소년은 형벌 법령을 위반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한다.

③ 을은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을의 부모는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을의 부모는 을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형사상 책임은 타인이 대신하여 질 수 없다.

⑤ 타인에 의해 사망한 자의 가족(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배우자)은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 을은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병의 가족은 갑, 을의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10 주택 임차인의 권리 이해

문제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 신고(또는 주민등록 이전)를 요건으로 한다.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면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경우 소액 보증금에 대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찾기 ㄱ.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고,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다.

ㄴ. 우선 변제권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오답피하기 ㄷ. 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입주+전입 신고+확정일자이다.

ㄹ.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만, 그 임차보증금 중 최대 3,400만 원까지만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11 형 선고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가)는 무죄, (나)는 선고 유예, (다)는 집행 유예, (라)는 실형 선고이다.

정답찾기 ⑤ (나), (다), (라) 모두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하는 유죄 판결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가석방은 유죄가 확정되어 자유형을 집행 받고 있는 수형인이 대상이다.

② 선고 유예도 유죄 판결이므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불복할 경우 상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집행 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보안 처분과는 다르다.

④ 형벌의 집행은 검사가 담당한다.

12 국제 사회의 특징과 다양한 행위 주체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 유엔 무기거래조약은 국제법 법원 중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조약이다. ㉡, ㉢, ㉣은 다양한 국제 사회 행위 주체이다.

정답찾기 ③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행사하는 주권 행사 능력은 현실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유엔 무기거래조약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묵시적 합의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조직 범죄 단체는 포괄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B국 총기협회는 이익 집단으로 특수 이익을 추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자유주의 관점은 국가 간의 협력과 평화 건설이 가능하다고 본다. A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조약을 체결했으므로 자유주의 관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13 정부 형태와 정당 제도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은 어느 당도 단독으로는 정권을 창출할 수 없어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답찾기 ④ ○○국의 총의석수는 210석이므로 그 과반수 의석인 106석 이상을 확보해야 집권할 수 있다. A당, C당, D당이 연합할 경우 108석을 확보하므로 연립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국은 다당제 구도가 나타난다. 의원 내각제에서 다당제가 형성될 경우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②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연립 내각이 들어설 경우 정당 간 합종연횡(복수의 사람이나 단체가 서로 연대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임)으로 인해 정국이 불안해지고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③ 대다수의 의회 의원이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타국과의 마찰 가능성이 높은 대결적 외교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⑤ 복지의 형평성은 보편적 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이념이다. A당, D당은 C당과 달리 모든 의원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복지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볼 수 있다.

14 내용 증명 우편의 이해

문제분석 내용 증명은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우편 제도로,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다는 것은 앞으로 발송인이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의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신자가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반응을 유도하는 기능도 있다.

정답찾기 ⑤ 내용 증명 우편은 재판에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주장을 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된다.

오답피하기 ① 내용 증명 우편은 우체국이 발송 사실을 증명해 준다. ②, ③ 내용 증명 우편에 기재된 내용은 그 자체로 사실 관계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④ 내용 증명에 기재된 내용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내용 증명 우편만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다.

15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 감사의 이해

문제분석 (가)는 공무원 직무 감찰을 담당하는 행정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나)는 국회의 국정 감사로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정답찾기 ⑤ (가)는 행정 내부 통제, (나)는 삼권 분립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통제이다.

오답피하기 ①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직무상으로도 독립된 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사는 행정부 내부 통제 수단이다.

② 감사원 감사는 결산의 확인, 회계 검사, 공무원 직무 감찰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③ 국정 감사는 국정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④ 국정 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수단이다.

16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A는 정당, B는 이익 집단, C는 시민 단체이다.

정답찾기 ㄱ. 정당은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ㄷ. 시민 단체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ㄴ. 비영리성과 비정부성은 시민 단체의 특징이다.

ㄹ. 정치적 충원의 기능은 정당이 수행하는 기능이다.

17 부동산 매매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계약의 성립 시점은 계약서 작성 시점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한 시점이므로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은 2014년 5월 5일에 성립되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취소는 중도금 지급 이전에 가능하며,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의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한다.

정답찾기 ④ A(매도인)는 2014년 5월 9일 현재 계약금만을 받은 상황이므로 계약금의 2배인 200만 원을 B(매수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계약 성립 시점은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시점인 2014년 5월 5일이다.

② 5월 10일에 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을 행사하려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⑤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된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가 변경된다.

18 근로 계약의 이해

문제분석 갑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며 1일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불공정한 근로 조건을 요구 받았다.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근로 계약 조항으로, 이 경우 근로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계약 조항은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정답찾기 ㄱ. A법은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ㄹ.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불공정한 계약이 된다.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오답피하기 ㄴ.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다. 제시문에는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 있지 않다.

ㄷ. 근로 시간이 법률의 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하고 있으며,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 조항을 두는 등 상당히 불공정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

19 국제 평화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이해

문제분석 (가)는 국제 평화주의, (나)는 국민 주권주의 또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정답찾기 ⑤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국가 권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헌법의 기본 원리이다.

오답피하기 ①은 복지국가의 원리이다.

②은 국민 주권주의이다.

③은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④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20 소비자 피해의 구제 절차 이해

문제분석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상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찾기 ②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고, 제조물에 의해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제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제조업자는 제조 과정에서 과실이 없어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갑은 제조업자의 제조상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재판부는 갑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③ 제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④ 제조물 책임에서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는 추정된다.

⑤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실전 모의고사 4회

본문 119~123쪽

1 ②	2 ④	3 ⑤	4 ⑤	5 ⑤
6 ⑤	7 ⑤	8 ⑤	9 ④	10 ⑤
11 ④	12 ④	13 ①	14 ②	15 ④
16 ①	17 ④	18 ②	19 ④	20 ⑤

1 근대 정치 사상가의 이론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은 대의 민주제를 강조하므로 로크이고, 을은 군주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보므로 홉스이며, 병은 루소이다.

정답찾기 ㄱ. 루소는 국민들의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들의 주권을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여 형성한 일반 의지, 즉 모두를 위해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일반 의지에 따라 직접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ㄴ. 홉스, 로크, 루소는 모두 사회 계약설을 주장하였으며, 사회 계약설은 국가 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국가는 개인들의 자발적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오답피하기 ㄴ. 홉스, 로크, 루소는 모두 국가를 목적이 아닌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일종의 수단적 장치라고 보았다.

ㄷ. 루소는 주권을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라고 말함으로써 직접 민주제를 강조하였다.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비교

문제분석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이고,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찾기 ㄱ. 형식적 법치주의는 정치권력의 행사 절차가 합법적이기만 하면 독재 정치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ㄴ.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법률이 국민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을 반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ㄷ. 형식적 법치주의는 정치권력의 행사 절차가 합법적이기만 하면 되므로 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악법에 의한 정치권력의 행사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오답피하기 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법에 근거하여 통치자의 통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3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 비교

문제분석 갑국에서는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나타났으므로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다. 을국에서는 의회 의원 선거에서 60%를 차지한 정당 소속의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되었으므로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이다.

정답찾기 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실효성 있는 견제의 수단이며, 의회 해산권은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

오답피하기 ①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인 반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는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이다.

②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되므로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반면,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므로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와 국가 원수가 따로 존재한다.

④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국이 안정적인 가능성이 높고,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의 행정부 수반인 총리는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정국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4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국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100개의 지역구에서 총 100명이 선출되므로 소선거구제가 적용되어 선출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을국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100개의 지역구에서 지역구별로 동일한 수의 의원 총 200명이 선출되므로 중선거구제가 적용되어 선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⑤ 소수 대표제는 득표순으로 일정 인원을 당선시키는 제도로 중·대 선거구제와 결합되는 대표 결정 방식이다. 다수 대표제는 최다 득표자 한 명을 당선시키는 제도로 소선거구제와 결합되는 대표 결정 방식이다. 따라서 갑국은 다수 대표제, 을국은 소수 대표제의 대표 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소선거구제에서는 중·대선거구제에서보다 선거구당 후보자의 수가 적어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더 용이하다.

②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유권자가 따로 투표를 하지 않아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선거구제에서는 여러 후보 중 한 사람만 당선되기 때문에 중선거구제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④ 중·대선거구제에서는 2인 이상이 당선되기 때문에 당선자 간 득표율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일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 정당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갑국에서는 집권당이 A당과 B당 중 1개의 정당이므로 양당제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을국에서는 집권당이 여러 개의 정당이었으므로 다당제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찾기 ㄷ. 양당제에 비해 다당제에서는 군소 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높아 정국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

ㄴ. 다당제에서는 양당제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에 용이하고, 소수의 이익이 보호될 가능성이 더 높다.

오답피하기 ㄱ. 을국에서는 연립 정부가 구성된 경우가 있으므로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나. 다당제에 비해 양당제에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6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가)는 복지 국가의 원리, (나)는 국민 주권주의 원리이다.

정답찾기 ⑤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원리이다. 사회권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헌법적 보장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대 민주 정치에서부터 복지 국가의 원리가 강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피하기 ①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가에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의 증진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 보장 등을 실현 방안으로 한다.

③ 민주 공화국은 군주국이 아닌 국가,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하며, 일정한 임기에 의해 교체되는 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조항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민 주권주의 원리와 관련된다.

④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민 주권주의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7 기본권의 특징 비교

문제분석 A는 청구권, B는 참정권, C는 자유권이다.

정답찾기 ⑤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오답피하기 ① 자유권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 받지 않을 권리이다. 영장 제도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두 피의자 등의 인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③ 사회권은 국가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④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8 헌법상 국가 기관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나)는 국무 회의이고, (다)는 감사원이다.

정답찾기 ⑤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답피하기 ①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과정은 제안 → 공고 → 국회의결 → 국민 투표 → 공포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에 의해 이루어지며, 국회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따라서 (가)에 ‘헌법 개정안의 제출 및 의결권’이 들어갈 수 있다.

② 국무 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이지 의결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무 회의의 결정 내용

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③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서의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므로 대법원은 상고심을 담당한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단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 소송을 담당한다.

④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9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가)는 위헌 법률 심판,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다)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정답찾기 나.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기본권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과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모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이루어진다.

오답피하기 ㄱ.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의 권한이고 국민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다.

ㄷ.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모두 위헌 여부를 심판받고자 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10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사례에서 미성년자인 아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고가의 노트북을 판매하였다. 이때 미성년자의 판매 계약에 대한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다.

정답찾기 ⑤ 사례의 노트북 판매 계약은 시장 가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피하기 ①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하였다면 부모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하였다면 미성년자 본인도 계약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하였다면 계약은 일단 유효하다. 다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④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법률혼을 하였다면 성년 의제되므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11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첫 번째 사례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고, 두 번째 사례는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 배상 책임과 관련된다.

정답찾기 ④ 피용자인 을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고, 사용자인 병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오답피하기 ① 미성년자인 갑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면 갑의 부모는 특수 불법 행위 중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미성년자인 갑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승용차 주인은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화상을 입은 손님은 종업원(피용자)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사용자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⑤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갑의 부모는 감독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도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갑의 부모와 병이 손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12 민사 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민사 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사례에서 갑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정답찾기 ④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민사 조정 제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한다.

② 내용 증명 우편은 우편에 기재된 내용의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③ 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정식 소송에 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 제도이다. 사례에서는 1,100만 원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액 사건 심판의 적용 대상이다.

⑤ 민사 소송 시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13 상속에 대한 사례 분석

문제분석 사례에서 갑과 을은 사실혼 상태에 있었으며, A와 B는 법률혼 상태에 있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 관계에서와 달리 배우자 간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답찾기 ㄱ. 갑과 을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갑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권이 없다.

ㄴ. 갑이 병을 인지했다면 병은 갑의 재산에 대해 직계 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갖는다. 사례에서는 상속권자가 병밖에 없으므로 병이 10억 원을 모두 상속받는다.

오답피하기 ㄷ. A의 유언이 유효하지 않다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직계 비속인 C와 배우자 B가 A의 재산을 1:1.5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따라서 C는 4억 원(10억 원×2/5), B는 6억 원(10억 원×3/5)을 상속받는다.

ㄹ. A의 유언이 유효한 경우에는 유류분을 고려해야 한다. B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3억 원(법정 상속분 6억 원×1/2)이며 이때 C는 7억 원의 재산을 물려 받는다. 따라서 C가 B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는다.

14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사례에서 갑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였

으나, 이사 후 전입 신고만 하였다. 이후 갑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집주인 을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병에게 해당 주택을 매도하였다. 이때 임차인 갑의 권리는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정답찾기 ② 갑이 이사 후 전입 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획득한 후 확정 일자까지 받았다면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

오답피하기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등기부 등구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③ 소유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해서 근저당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갑은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바뀌어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므로 등기부 등구에 기재되고,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등기부 등구의 내용이 변경된다.

15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범죄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한다. (가)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아니며, (나)는 책임이 없으므로 범죄가 아니다. (다)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범죄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ㄱ. 갑자기 덩벼드는 개를 발로 차서 다치게 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인 긴급 피난에 해당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ㄷ. 심신 미약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한 행위는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

오답피하기 ㄹ.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이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 미성년자로 책임이 조각되어 (나)에 해당하지만 가정 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에 해당하여 보호 처분을 받는 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16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형사 절차는 크게 수사 → 기소 → 공판 → 판결 → 집행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구속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보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① 구속 수사를 받은 갑에게 검사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 항소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다.

③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집행 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정은 구금되지 않고 석방된다.
- 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가지고 있다.

17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이해

문제분석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 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찾기 ㄱ.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이다.

ㄴ.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될 수 있다.

ㄷ.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처럼 노동 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바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오답피하기 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18 소년법상 소년의 형사적 절차 적용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이다. 갑은 8세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 미성년자이다. 을은 12세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며 형사 미성년자이다. 병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이지만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다.

정답찾기 ② 을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을에게는 형벌을 줄 수 없다. 따라서 기소될 수 없는 을에게 검사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 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가정 법원(지방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보호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8세로 형사 미성년자이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도 아니다. 따라서 갑에게는 보호 처분뿐만 아니라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③ 병은 17세로 소년법상 소년이지만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다. 따라서 보호 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때 가정 법원(지방 법원) 소년부는 병에게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 결정만 내릴 수 있다. 형벌에 대한 선고는 형사 법원에서 내린다.

④ 소년법상 소년이 받는 보호 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⑤ 을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받지 않는다.

19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A는 자유주의적 관점이고, B는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정답찾기 ㄱ.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가가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고,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 윤리 등을 통해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국제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ㄴ. 현실주의적 관점은 인간을 본래 이기적이라고 보는 홉스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를 본다.

ㄷ. 현실주의적 관점은 각국은 국제 사회에서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하며, 세력 균형을 위한 전략으로서 동맹을 이용해야 한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ㄴ. 국가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하고, 정치적 권력 관계로 한정하여 설명하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20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가)는 조약, (나)는 국제 관습법, (다)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정답찾기 ㄴ. 법의 일반 원칙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이 있다.

ㄷ. 조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체결 절차가 필요하지만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도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ㄷ.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판례, 학설 등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이다.

오답피하기 ㄱ.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국내법 중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실전 모의고사 5회

본문 124~128쪽

1 ④	2 ⑤	3 ⑤	4 ②	5 ④
6 ④	7 ③	8 ③	9 ①	10 ②
11 ③	12 ③	13 ③	14 ④	15 ①
16 ④	17 ①	18 ①	19 ①	20 ④

1 사회 계약설 이해

문제분석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정답찾기 ④ 홉스는 전제 정치를, 로크는 2권 분립에 기초한 간접 민주 정치를 주장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홉스는 인간을 이기적이고 악하게 보았다.

② 홉스도 시민들의 동의에 기초한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③ 로크는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하였다고 보았다.

⑤ 로크의 사상은 시민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2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의회 의석 분포 현황에서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과 원내 제당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⑤ B, C, D 시기는 여소야대 정국이므로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A 시기보다 크다.

오답피하기 ①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② 행정부 수반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의원 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책임에 둔감하다.

③ 의회 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별도로 이루어진다.

④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소수당에서 연립 내각을 구성하지 않기도 행정부 수반을 배출할 수 있다.

3 선거구 법정주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선거구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게리맨더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⑤ 게리맨더링을 예방하기 위해 선거구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선거구 법정주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오답피하기 ① 다수 대표제는 최다 득표자 한 명을 선출하는 대표 결정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

② 의회 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보다 공정한 원칙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

③ 선거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부담하는 제도는 선거 공영제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니다.

④ 직능 대표제는 직업별로 의회에 그 대표자를 내보내는 대표 결정 방법이나 문제 해결의 방안이 아니다.

4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 요소 이해

문제분석 그림은 의원 내각제 정부가 구성되는 방식을 간략하게 나

타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원 내각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정답찾기 ㄱ. 국무 회의는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ㄴ. 국회가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요소이다.

ㄷ.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별도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것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요소이다.

5 정당과 이익 집단 이해

문제분석 강령을 통해 (가)는 정당, (나)는 이익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④ 이익 집단은 추구하는 이익 실현을 위해 정당을 이용하기도 하며, 정당도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 이익 집단을 이용한다.

오답피하기 ① 의회와 정부의 매개 역할을 하는 집단은 정당이다.

②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정당이며, 이익 집단은 사익을 추구한다.

③ 정당은 사회 전 분야에 관심을 가지나 이익 집단은 특수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

⑤ 정당과 이익 집단 모두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6 법률 제정 절차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그림은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의 일부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정답찾기 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오답피하기 ①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가 한다.

② 상임 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한다.

③ 본회의에서는 상임 위원장의 심사 보고, 질의 토론을 거쳐 법률안을 의결한다. 이 밖에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시정 연설, 각 교섭 단체의 대표 연설 및 대정부 질문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7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가)는 국민 주권주의, (나)는 복지 국가의 원리임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ㄴ. (가)를 실현하기 위해 참정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이 보장된다.

ㄷ. (나)를 실현하기 위해 최저 임금제 실시, 여성 및 근로자의 특별 보호 등이 보장된다.

오답피하기 ㄱ. 사회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는 (나)이다.

ㄷ. (나)는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실현된다.

8 심급 제도 이해

문제분석 그림을 통해 우리나라의 심급 제도를 알 수 있다. 원칙적으로 3심제로 운영된다.

정답찾기 ③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오답피하기 ① 심급 제도의 운영은 오히려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된다.

② 법원의 독립과 직접 관계가 없다.

④ 공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직접적인 취지는 아니다.

⑤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9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이해

문제분석 (가)의 사례는 부당 해고, (나)의 사례는 부당 노동 행위이다.

정답찾기 ① 갑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 노동 위원회 → 중앙 노동 위원회 → 행정 법원 → 고등 법원 → 대법원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갑은 노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을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에 불복할 경우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가)는 부당 해고, (나)는 부당 노동 행위의 사례이다.

⑤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10 미성년자의 단독적 법률 행위 이해

문제분석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며,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찾기 갑, 병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 등이다.

오답피하기 을 : 18세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 : 17세인 미성년자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17세는 연소 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에 해당한다.

11 형사 절차 이해

문제분석 그림의 (가)~(다)는 형사 절차의 일부이다. 형사 절차는 형사 사건에서 국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 형벌이나 보안 처분을 부과하고 형을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정답찾기 ③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를 받은 경우 석방된다.

오답피하기 ① 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기소 전에 할 수 있다.

② 구속 적부 심사는 기소 전에 한다.

④ 형사 보상 청구는 구금된 상태에서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신청할 수 있다.

⑤ (가), (나) 단계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12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해

문제분석 (가)는 재판상 이혼, (나)는 협의 이혼이다.

정답찾기 ③ (가), (나)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에게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오답피하기 ① (가)는 민법이 정하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② (가)는 이혼 판결이 내려지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나)는 이혼 신고가 처리된 때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정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나)의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13 상속 이해

문제분석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남긴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찾기 (라) 유효한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마)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

오답피하기 (가) 현금과 같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 대상에 포함된다.

(나) 사망자가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자가 상속인이다.

(다) 상속 포기는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채무만 상속 포기할 수 없다.

14 친양자 제도 이해

문제분석 자료는 친양자 입양의 심판 청구서이다.

정답찾기 ④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을은 갑의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오답피하기 ①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한다.

②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갑의 성을 따라야 한다.

③ 친양자 입양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을의 친생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15 특수 불법 행위 이해

문제분석 그림은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 배상 책임의 사례이다. 특수 불법 행위는 일반적인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과 달리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나 공동으로 저지른 행위, 사람 또는 물건의 관리 감독 소홀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정답찾기 ㄱ. 갑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ㄴ. 병은 사용자로서 갑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 갑의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오답피하기 > 다. 병이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였다면 손해 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르. 갑과 병이 사무 관계가 있고, 갑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병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6 상속 이해

문제분석 자료는 법정 상속이 아닌 유언 상속 사례이다. 상속권자는 A, B, D이며, 1.5:1:1 비율의 법정 상속액에서 유류분으로 1/2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찾기 > 나. 직계 비속은 유언 상속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액의 1/2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르. 유류분 청구권자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로 A, B, D이며, 각각 3억 원, 2억 원, 2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가. A는 법정 상속액의 1/2인 3억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디. C는 갑의 직계 비속이 아니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17 부동산 권리 관계 이해

문제분석 부동산 관련 권리 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의 순위 관계를 파악한다.

정답찾기 > 가. B는 경매 금액에서 채권액 회수가 곤란하다.

나. C는 입주와 전입 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였고, 확정 일자도 받았으므로 우선 변제권도 갖추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은 경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오답피하기 > 다. C가 받은 확정 일자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르. D의 저당권 설정이 C의 확정 일자보다 빠르므로 D가 C보다 선순위 권리자이다.

18 특수 불법 행위 이해

문제분석 그림은 특수 불법 행위 중 동물 점유자 책임의 사례이다.

정답찾기 > ① 점유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오답피하기 > ② 을이 애완견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동물의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을은 20세인 성년이므로 책임 능력이 있다.

④ 공동 불법 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한다.

⑤ 을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

19 부동산 매매 절차 이해

문제분석 (가)~(라)는 부동산 매매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정답찾기 > 가. (가)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가격, 위치, 주변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한다.

나. (나)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자와 실제 소유자와의 일치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오답피하기 > 다. (라)에서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르. (라)에서 등기 완료 후 등기부 갑구에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공시되었는지 확인한다.

20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가)는 현실주의적 관점, (나)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정답찾기 > 나. (가)는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을 강조한다.

르. (나)는 국제기구, 국제법 등 상호 협력을 통한 평화 유지를 강조한다.

오답피하기 > 가. 국제 윤리에 바탕을 둔 낙관론적인 세계관은 (나)의 관점이다.

디. 힘의 논리에 의한 질서 유지는 (가)의 관점이다.

라 법의 일반 원칙이나 유력한 학자의 학설 등을 심리에 적용할 수 있다.

② 국제 연합의 가맹국뿐 아니라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안전 보장 이사회와 총회에서 재적 국가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⑤ 국제기구는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청에 대해 국제 사법 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지만 구속력은 가지지 않는다.

10 국제기구의 분류 이해

문제 분석 국제기구는 국제 관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회원 자격에 따라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와 민간 차원의 비정부 간 국제기구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는 지리적 범위에 따라 범세계적 국제기구와 지역적 국제기구로 나눌 수 있고, 기능적 범위에 따라 포괄적 국제기구와 제한적 국제기구로 나눌 수 있다.

정답 찾기 ㄱ. 국제 연합(UN)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은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ㄴ. 국제 사면 위원회(AI)는 인권 침해, 그린피스(Green Peace)는 환경에 대한 제한적 기능을 하는 제한적 국제기구에 속하는 반면, 국제 연합(UN)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은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포괄적 국제기구에 속한다.

ㄷ. 국제 사면 위원회(AI)와 그린피스(Green Peace)는 활동 영역을 전 세계로 하는 범세계적 국제기구인 반면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 유럽 연합(EU)은 활동이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는 지역적 국제기구에 속한다.

오답 피하기 ㄷ.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는 제한적 국제기구이지만 유럽 연합(EU)은 포괄적 국제기구에 속한다.



실전 모의고사

1회

본문 138~142쪽

1 ②	2 ④	3 ③	4 ②	5 ⑤
6 ①	7 ④	8 ④	9 ⑤	10 ⑤
11 ②	12 ②	13 ③	14 ④	15 ④
16 ③	17 ④	18 ④	19 ⑤	20 ②

1 고대 아테네 정치의 특징에 대한 분석

문제 분석 모든 시민들은 민회에 참가하여 법을 만들고 공직을 맡을 수 있으며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할 규범이고 공직은 개방되어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시민들은 민회에 참가하여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악법이 만들어지면 그 희생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시문에서 악법에 대한 저항권을 도출하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아테네는 소수의 시민 공동체였으므로 모든 시민은 정치에 참여하여야 했고 공적인 영역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바보라고 불리며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③ 아테네의 정치는 시민만이 주체가 되었고, 여자, 노예, 외국인들은 제외되었다.

④ 공동체의 중요한 일은 대표자에게 맡기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민회에 참여하여 결정하였다.

⑤ 시민은 누구나 추천이나 윤변제 등으로 공직을 맡을 수 있었으므로 다스리기도 하면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였다.

2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혼합형 정부 형태에 대한 분석

문제 분석 갑국은 프랑스의 의원 정부제, 을국은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둘 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정부 형태이다.

정답 찾기 ㄴ. 갑국과 을국 모두 대통령과 의회 의원이 각각 별개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므로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ㄷ. 갑국도 대통령이 존재하면서 내각이 의회에서 선출되므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을국도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의회의 총리 등에 대한 해임 건의권 등으로 볼 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갑국의 내각은 의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여 사퇴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을국보다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ㄷ. 대통령제(을국)에서 여당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을 말하는데, 입법부에서 소수당일 수 있으므로(여소야대), 여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과 해설

3 다양한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한 분석

문제 분석 갑은 정당, 을은 이익 집단, 병은 시민 단체, 정은 언론을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되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찾기 ③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정권의 획득을 통하여 지지하는 정책의 실현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익 집단이나 시민 단체는 정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① 정당과 시민 단체는 공익의 실현을 추구한다.
 ② 정당은 추구하는 정책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정치적 요구를 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
 ④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등을 통한 정치 참여는 공통적으로 집단을 통한 참여 방식이다.
 ⑤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등을 통한 참여가 있다.

4 대표제와 선거구제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A당은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높고 B당과 C당은 그 반대이다. 즉, A당은 과다 대표되었고, B당과 C당은 과소 대표되었다. (가) 선거 제도하에서는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크고, (나) 선거 제도하에서는 작다. 이것은 선거 제도가 바뀌어 의석에 기여하지 못하는 표, 즉 사표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찾기 ㄱ.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는 사표가 발생한 비율을 말하는데, 그 비율이 (가)보다 (나) 선거 제도에서 감소하였으므로 사표가 적어졌음을 알 수 있다.

ㄷ. 비례 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할당하는 제도이므로 사표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 B당과 C당이 A당보다 비례 대표제의 확대에 찬성할 것이다.

오답 피하기 ㄴ.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를 작게 나누어 선거구당 1위 득표자만 당선이 되고 2위 이하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가 되므로 사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당 2명 이상 선출하는 제도인데, 소선거구제보다 사표의 발생이 적어진다. 따라서 (가)가 소선거구제라면 (나)는 중·대선거구제일 것이다.

ㄹ. 1위 득표 후보자만 당선되는 단순 다수 대표제는 사표의 발생을 늘리므로 사표가 감소한 (가)에서 (나)로의 변화와 관련이 없다.



더 알아보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당 최고 득표자 1명만을 당선시키므로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개선택으로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나 비례 대표제의 확대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득표율과 의석률이 비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는 않지만, 지역별 대표성의 확보도 중요하다. 선거구별로 2, 3명의 국회의원이 나온다면 그 지역의 이익을 하나로 결집하기 힘들 것이다. 1명이 책임지고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미국, 영국 등에서도 하원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하고 있다.

5 다수결의 원칙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문제 분석 절대 군주 치하에서 국민 다수의 생각에 반하는 군주의 권력 행사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국민 다수의 생각에 따른 재산권 등 권리의 침해가 문제라는 것이다. 51%에 불과한 다수의 의견이 민주 정치라는 이름으로 49%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다수의 횡포를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통하여 방지하여야 한다.

정답 찾기 ⑤ 의회 의원이 국민들의 뜻 또는 다수의 뜻을 수동적으로 따를 때 다수의 횡포는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전제 군주는 사라졌지만 다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독재는 여전히 존재하며, 다수의 횡포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② 다수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뜻에 따른 정치 또는 민주 정치를 하더라도 헌법에 근거한 정치, 즉 입헌주의에 의한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④ 다수의 정치가 다수의 횡포나 중우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6 국민 주권의 원리에 대한 분석

문제 분석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대의제하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권 행사 방법이다. 이외에도 국민 투표나 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 등 직접 참여 방식도 있다.

정답 찾기 ①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성은 국민의 의무이며 국민 주권주의와 직접 관련이 없다.

오답 피하기 ② 대의제하에서 민주적 선거는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 ③ 국민 투표권은 대의제하에서 인정되는 직접 민주적인 정치 참여 방식이다.
 ④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하여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정당 설립의 자유는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에 필요하다.
 ⑤ 3권 분립 제도는 절대 권력의 출현을 막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7 정치 문화의 유형에 대한 분석

문제 분석 정치 문화는 정치적 지식, 감정, 가치 판단 등을 가리키는 말인데, 정치 체제, 투입, 산출, 정치 주체를 기준으로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는 향리형, (나)는 신민형, (다)는 참여형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ㄴ. “정부에 당신의 생각을 말한다면 얼마나 수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정치 체제에서 정책 결정 기구에 대한 투입 의식을 알아볼 수 있다. 향리형 정치 문화에서 참여형보다 정치적 투입이 중요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적을 것이다. 즉, 부정적인 응답이 많을 것이다.

ㄹ. “다른 사람과 공적인 사회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정치적 주체로서 자아에 대한 의식을 나타낸

다. 향리형보다 참여형 정치 문화에서 긍정적 응답이 많고 부정적 응답이 적을 것이다.

오답 피하기 ㄱ.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정치 체제 자체에 대한 의식을 알 수 있는 문항이다. 따라서 향리형보다 신민형 정치 문화에서 긍정적 응답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신민형 정치 문화에서 국가 의식이 투철한 것과 관련된다.

ㄷ. “정부가 마련한 법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산출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신민형과 참여형 모두 정부 정책이나 법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나)와 (다) 모두 긍정적 응답이 많을 것이다.

8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 분석

문제 분석 한 정치학자는 민주주의의 확산 과정을 시기별로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로 분류하였는데, 제1의 물결은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민주주의 발달을 의미한다. 갑국은 미국이고 을국은 영국이라고 할 수 있다. 갑국은 독립하면서 무산 대중에 의한 권력의 독점을 우려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권력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재산권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 하였으며 자유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지향하였다. 을국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거의 제한을 받지 않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으며 대의제적 원리에 충실하였다.

정답 찾기 ④ 갑국은 권력의 엄격한 분리, 성문 헌법, 연방제, 자유 민주주의 강조 등의 특징이 있으므로 대통령제임을 알 수 있다. 을국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지배하고 성문 헌법이 없으며 연방제라는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립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영국의 의원 내각제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민주주의의 제1의 물결 시기는 근대 민주주의를 의미하므로 갑국과 을국 모두 현대 국가의 특징인 복지 국가와는 거리가 멀다.

② 갑국이 인민의 정부보다 법 아래에 있는 정부를 선호하였다는 것은 민주 정치보다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가 중시되었다는 의미이다.

③ 국민 자치의 원리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형적으로 구현되었다. 즉, 아테네에서는 시민 생활의 사적 영역에만 몰두하지 말고 공적 영역에 참여할 것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갑국에서 시민들은 사적 영역을 정부로부터 절대적으로 보장받았으므로 국민 자치의 원리가 그만큼 훼손되었다. 을국에서는 아테네처럼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보다 대표자를 뽑아서 권력의 행사를 위임하였으므로 역시 자치의 원리가 훼손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비교했을 때 갑국과 을국 모두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 아니었다.

⑤ 갑국과 을국 모두 간접 민주주의였다.

9 과잉 금지 원칙의 사례 분석

문제 분석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 또는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을 이용한 명예 훼손, 언어 폭력, 허위 정보 등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증가하며 다른 대체적 방법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정답 찾기 ㄴ. 본인 확인제를 통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되는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민주 사회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제약된다. 또 개인 정보가 회사에 과도하게 누적됨으로써 해킹 등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본인 확인제를 통하여 얻는 공익과 상실되는 이익 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ㄷ.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열람만 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

ㄹ. 악성 댓글을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은 본인 확인제에 의하지 않더라도 IP 추적, 명예 훼손 소송 및 형사 처벌, 악성 댓글 삭제 등 표현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달성이 가능하다.

오답 피하기 ㄱ. 오늘날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과급력 및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된 반면,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 등을 이용한 언어 폭력, 명예 훼손, 불법 정보의 유통 등 역기능도 함께 증가하였다. 본인 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가 그와 같은 정보를 게시할 경우에는 향후 신원 확인을 통하여 형사 처벌 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여 표현 내용에 신중을 기하고 불법 정보 등의 게시를 자제하도록 함과 아울러, 게시판 이용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게시판을 보다 책임 있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 등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된다.

더 알아보기 과잉 금지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계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더라도 가능한 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피해의 최소화),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

10 재판의 불복 절차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1심 법원에서 패소하고 2심 법원에 항소하였지만 항소 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본안 재판을 받지 못하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이 가난하여 2심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였지만 불성실하게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가난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고인을 위하여 단순히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을 촉구하거나 변호인을 교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답과 해설

정답 찾기 ⑤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가난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유죄, 무죄를 선언하는 판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결정이나 명령을 내리는데,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2심 법원에 항고,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2심 법원(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청원권이 아니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②, ③ 상고는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④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11 우리 헌법상 3권 분립에 관한 이해

문제 분석 우리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대통령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고 상호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견제 수단과 다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②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국회는 장관 등을 불신임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국회가 장관 등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대법원장의 제정 필요)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유신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으나 현행 헌법에서는 불가능하다.

⑤ 탄핵 소추는 국회가 행정부 등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12 무과실 책임 원칙의 사례에 대한 분석

문제 분석 감염병이 만연했을 때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의 법률은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에 비추어 예방접종의 결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국가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② 국가의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여 예방접종과 인과관계가 없는 피해까지 국가가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과관계의 입증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애매하며 어렵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엄격한 입증은 필요없지만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

오답 피하기 ① 감염병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 특별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상, 사회 복지 이념 등의 이유로 무과실 책임이 적용된다.

③ 몸이 아픈 상태라면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연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했다면 당사자의 과실일 수 있으나 법률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④ 가능성이 낮더라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부작용을 예고했다고 보상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⑤ 제조물 책임의 경우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피해를 예측할 수 없어 그에 합당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없지만,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었더라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13 미성년자의 계약 관계에 대한 분석

문제 분석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동의 없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더라도 소득 범위 내의 지출이었고 부모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묵시적으로 부모의 처분 허락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답 찾기 ③ 신용카드 사용은 물품을 신용으로 구매하는 계약인데, 원고가 소득 범위 내에서 사용하였고 부모가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인 허락이 있었다는 것이 원고 패소의 이유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가맹점은 신용카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의 카드 사용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② 원고가 행위 당시 18세로 미성년자이었지만 성년에 근접한 나이였고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 또는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라는 점이 강조되었다면 원고가 승소하였을 것이다.

⑤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발급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면 원고가 승소하였을 것이다.

14 민법상 손해 배상 사례에 대한 분석

문제 분석 B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D는 동물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였으며, F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고, H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를 끼쳤으므로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답 찾기 ㄱ. B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A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D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E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ㄴ. C의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 E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ㄷ. F의 행위는 심신 상실 중의 행위이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초

래된 것이므로 책임성이 있다. H의 행위는 8세 아이의 행위로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책임성이 없다.

오답 피하기 르. 손해 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사죄 광고를 제외한 적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I와 G 모두 금전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15 상속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석

문제 분석 상속분을 따질 때 우선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날인이 없으므로 유언장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정은 갑의 양자나 친양자가 아니므로 직계비속이 아니고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상속은 배우자인 을과 직계비속인 병이 1.5:1의 비율로 이루어진다.

정답 찾기 ④ 정은 갑의 양자나 친양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을과 병이 10억 원을 1.5:1의 비율로 상속하므로 을의 상속분은 6억 원, 병의 상속분은 4억 원이 된다.

- 오답 피하기** ① 날인이 없으므로 유언은 효력이 없다.
 ② 전 재산을 정에게 준다는 유언이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분을 정할 때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정은 상속인이 아니다.
 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동순위의 상속인이고 상속분은 1.5:1이다.



더 알아보기 유류분

유언이나 유증은 자유이므로 유언으로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상속인의 생활 보장 등의 필요가 있으므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을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이 사례에서 유언이 효력이 있었다면 상속 재산의 1/2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1.5:1의 비율로 상속되었을 것이다.

16 주택 임대차 보호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지불하고 실제 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전입신고를 통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 부여받아야 한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으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 일자를 부여받음으로써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그러나 소액 보증금의 경우 우선 변제권이 없어도 대항력만 있으면 일정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대항력이 있으면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살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은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기재된다.
 ②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위임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할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⑤ 대항력이 있으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았어도 소액 보증금인 경우 일정액은 보호를 받는다.

17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분석

문제 분석 (가)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형법의 내용이고 (나)는 죄형 법정주의를 규정한 형법이다. (가)의 형법이 나온 시대적 배경은 19세기 말 범죄가 급증하자 형벌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지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죄형 법정주의는 성문 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정답 찾기 ④ 직접 적용될 형벌 법규가 없을 때 유사한 법률로 처벌한다는 것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피하기** ① (나)에서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관습 형법은 금지된다.
 ② 범죄 행위에 대하여 과도한 형벌이 부과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될 것이므로 적정성의 원칙은 죄형 법정주의의 한 요소이다. (나)에서 적정성 원칙 위반을 찾아볼 수 없다.
 ③ (나)에서 소급 입법이 금지되고 있다.
 ⑤ (나)는 범죄와 형벌이 특정되므로 (가)보다 형법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다양한 현실을 반영할 수 없을 것이다.

18 형사 절차의 신체의 자유 보장 제도 분석

문제 분석 범죄에 대한 인지, 고소, 고발 등이 있으면 수사가 개시되는데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도 있고 사전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해서 수사할 수도 있다. 구속될 때에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며 구속되었더라도 기소되기 전이라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구속된 채 기소되었다면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복역 실적이 양호한 경우 등의 조건을 갖추면 가석방될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기소된 이후 피고인은 구속 상태일 수도 있고 불구속 상태일 수도 있으나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판 준비의 공평성 등의 이유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 기소되기 전 단계의 피의자도 구속 상태일 수도 있고 불구속 상태일 수도 있다.

- 오답 피하기** ①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소년범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선도위원의 선도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선고 유예를 할 수 있고,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집행 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⑤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즉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과 해설

19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분석

문제 분석 갑은 비정규직으로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고, 을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은 최저 임금보다 더 무늬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정답 찾기 ㄷ.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도 최저 임금을 보장받으며, 최저 임금 이하를 받기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 임금과 같은 금액을 임금으로 인정받는다.

ㄹ.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 인권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 인권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야간 근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것은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부당 노동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당 노동 행위란 근로자의 노동 조합 조직·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의 운영 등을 지배·방해하는 행위,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게을리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나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를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기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 그리고 성희롱을 한 사업주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있지만, 성희롱 처벌에 관한 형법 규정은 없다.

20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분석

문제 분석 (가)는 미국 헌법의 내용이며, (나)는 우리 헌법의 내용이다. (가)에서는 헌법 아래에서 연방 법률과 조약이 최고 법률의 지위를 가지며, (나)에서는 헌법 아래에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정답 찾기 ② 연방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이나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 관계에 있어서 연방 법률 또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오답 피하기 ① 자치 규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으로 이어지는 법의 단계상 조례나 규칙에 해당되고,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자치 규정은 조약보다 하위의 규범이다.

③ 조약은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그대로 국내에 적용된다.

④ (가)에서 모든 주의 법관은 국가의 최고 법률인 조약에 구속되며 (나)에서 지방 자치 단체는 법률보다 하위의 규범만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하였더라도 조약은 헌법보다 하위의 규범이므로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된다.



실전 모의고사

2회

본문 143~147쪽

1 ⑤	2 ④	3 ②	4 ④	5 ④
6 ④	7 ③	8 ②	9 ②	10 ③
11 ③	12 ③	13 ④	14 ⑤	15 ③
16 ②	17 ①	18 ①	19 ⑤	20 ②

1 사회 계약론의 비교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의 내용을 보면 갑은 루소, 을은 로크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갑, 을 모두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한 수단적 존재라고 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루소는 직접 민주제를 가장 바람직한 정치 제도로 본다.

② 삼권 분립을 주장한 것은 몽테스키외이다.

③ 루소의 이론에서 인민은 지배자와 계약을 맺은 바 없으므로 지배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저항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로크는 일부 권리를 자신의 안전 등을 위해 국가에 양도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 재산 등이 권력에 의해 침해당할 경우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로크와 루소 모두 국민 주권론을 주장한다.

2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정책 결정은 하나의 정치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정치 체계는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요구를 실현하는 일련의 투입-산출 체계이다. 정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하여 사회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정답 찾기 ㄴ. 정책 결정 기구는 투입된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구로, 최근에는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ㄹ. 선거는 정치권력이 수행한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통해 권력에 대한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성격을 지니며, 대의 민주제에서 대표적인 환류 방법이다.

오답 피하기 ㄱ. 입법 과정은 투입 및 환류 과정과도 관련되지만 주로 정책 결정 기구의 정책 결정 과정에 해당한다.

ㄷ. 정당, 언론, 시민 단체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투입과 환류 과정이다.

3 입헌주의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민주 정치의 원리는 입헌주의이다. 이러한 입헌주의는 구체화된 법규범을 통해 실현된다.

정답 찾기 ㄱ. 입헌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ㄴ. 민주주의 이념, 즉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자의적 지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사람에 의한 지배'에서 벗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ㄴ, ㄷ. 국민 주권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4 기본권의 비교 이해

문제 분석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자유권이다. 그리고 국가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사회권이다. 즉, (가)는 자유권, (나)는 청구권, (다)는 사회권이다.

정답 찾기 ④ 자유권은 천부 인권적 성격을 띠며, 따라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자유권은 수동적·소극적 성격을 갖는다.

②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의 행사를 위한 기본권, 수단적 기본권이다.

③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자유권이다.

⑤ 기본권에서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법익의 형량을 따지거나 상호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

5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표를 기준으로 할 때 A는 이익 집단, B는 시민 단체, C는 정당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만,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그렇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의회와 정부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당이다.

② 세 집단 모두 공공 정책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

③ 두 집단 중 어느 쪽의 자발적 참여도가 더 높은지는 말하기 곤란하다.

⑤ 시민 단체와 정당은 비영리적 집단이며, 이익 집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과 비영리 집단이 혼재되어 있다.

6 정부 형태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민주 국가의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의미한다. 표에서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제이므로,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원도 각료를 겸할 수 있다.

ㄷ.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분리되고 의회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구성원인 의원이 각료를 겸할 수 있으므로 행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겸하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ㄷ.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히 보장되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



더 알아보기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의미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의원 내각제는 영국에서 발달한 정부 형태를 기준으로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적합한지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의 요소가 강하지만 미국에는 없는 국무 회의 등을 들어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말한다. 다만 미국적 요소라고 해서 모두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부합한다고 볼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단원제 국가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양원제, 단원제는 정부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와는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는 미국과 영국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행정부의 구성 방법 및 의회와의 관계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 의회 자체의 구성, 사법부의 구성, 지방 자치 유형 등은 이러한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7 선거 제도 및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분석 주어진 표를 보면 갑국의 총 의석수는 t대, t+1대 모두 200석이며,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만 의회가 구성된다. 한편 A당은 t대 의회에서 득표율이 48.5%이지만 과반수의 의석을 가지며, 심지어 t+1대에서는 43.7%밖에 되지 않는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의석을 보이고 있다. B당은 t+1대에서 득표율은 A당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였지만, 무려 12석이나 적은 의석을 얻었을 뿐이다. 즉,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률 간에 괴리가 상당 정도 존재한다.

정답 찾기 ③ A당의 의석률은 t대에서 54.0%, t+1대에서 51.5%이며, 득표율은 각각 48.5%, 43.7%이다.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는 t대에서는 5.5%, t+1대에서는 7.8%로 t+1대에서 그 격차가 더 크다.

오답 피하기 ① t대, t+1대 모두 선거구 수와 의석수가 일치하므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소수파의 의회 진출에 유리한 대표 결정 방식은 소수 대표제인데, 소선거구제는 다수 대표제 방식이다.

④ t+1대에서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가장 높은 것은 A당이다.

⑤ t대를 기준으로 한 t+1대의 정당별 의석수 변동률의 경우 B당은 $(91-86)/86=0.058$, D당은 $|(1-2)|/2=0.5$ 로 D당이 더 크다.

8 정치 제도에 대한 분석 및 이해

문제 분석 표를 보면 갑국은 A당과 B당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되는 양당 체제를 보이고 있다. 또 표의 하단을 보면 두 번에 걸쳐 모두 과반수 득표율을 보이지 못했고 의석률도 과반수를 보이지 못하





정답과 해설

는 B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정답 찾기 ㄱ.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ㄴ. 양당제의 특징이다.

오답 피하기 ㄴ. 동거 정부는 이원 정부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ㄷ. 제시된 표를 보아도 C당과 D당의 영향력은 매우 약한 편이며, 일반적으로 양당제에서는 군소 정당 난립에 따른 정국 불안 우려가 적은 편이다. 군소 정당 난립에 따른 정국 불안 우려가 큰 것은 의원 내각제 하의 다당제이다.

9 정치 문화의 분포에 대한 분석

문제 분석 (가) 사회는 신민형 문화가, (나) 사회는 참여형 문화가, (다) 사회는 향리형 문화가 압도적이다. 향리형 문화는 전통 사회에서, 신민형 문화는 권위주의 사회에서, 참여형 문화는 민주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정치 문화 유형이다.

정답 찾기 ② 참여형 정치 문화가 압도적인 사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정치 주체들이 투입에 가장 적극적인 사회일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전근대적 전통 사회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다) 사회이다.

③ 중앙 집권적 권위주의 사회에 가까운 것은 (가) 사회이다.

④ 합리적 여론인가 분산적 여론인가는 정치 문화 유형에 따라 사회를 구분한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즉, 어떤 사회이든 합리적 여론과 분산적 여론이 나타날 수 있다.

⑤ (나)에 비해 (다) 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약하게 나타나는 하지만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10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의 비교 이해

문제 분석 A는 법의 지배, B는 법에 의한 지배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정답 찾기 ③ 절대 왕정 시대의 법치는 왕의 의지를 법이라는 명칭으로 신민들에게 부여하고 지키게 하지만 왕은 그 법 위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지낼 수 있는 것이었다. 즉, 법의 지배보다는 법에 의한 지배가 절대 왕정 시대의 법치에 가까웠다.

오답 피하기 ①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 즉 B이다.

② 법 앞에서 만민이 평등함을 강조하는 것은 법의 지배이다.

④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할 때에도 그 법은 의회에서 제정될 수 있다. 즉, 어느 기관에서 만들어지는가가 아니라 누구(국민, 절대 군주 혹은 독재자)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지 여부가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를 구분 짓는다.

⑤ 법의 목적과 내용의 타당성을 모두 강조하는 것은 법의 지배이다.

11 의사 무능력자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상황을 보면 갑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 경우 타인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찾기 ③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19세인 성년자로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는 않기에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유형화하여 정해 놓지 않았으며, 법률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대체로 젓먹이, 만취자 등을 의사 무능력자로 본다. 즉, 갑은 만취자로 인정되면 상해 행위를 한 것이 무효로 인정되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의 폭행 행위는 당연히 법질서에 위배되며, 문제는 위배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이다.

② 갑은 생존해 있는 상태로 당연히 권리 능력을 지니며 이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

④ 갑은 19세이기에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별도의 조건이 없기에 갑은 완전한 행위 능력을 지닌 성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12 미성년자의 계약 행위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갑은 18세이므로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를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의 한 유형으로, 제한 능력자는 일반 성년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를 부모(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의 부모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취소 사유이지 무효 사유는 아니다. 다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하다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순간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된다.

④ 제한 능력자 제도는 제한 능력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제한 능력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⑤ 갑이 부모 동의하에 법률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했다면 아직 미성년이지만 성년 의제에 의해 민법상 성년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경우 계약은 일반 성년자가 한 계약으로서 유효하다.

13 피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의 내용을 보면 갑은 정상적인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의해 피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정답 찾기 ④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대리인에 의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나 법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 행위는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①, ② 제한 능력자 제도는 재산상 행위 등에만 영향을 미칠 뿐 신분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속인이 되는 것 역시 자신의 적극적 재산상 행위라기보다는 신분상 관계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갑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이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⑤ 갑은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

제한 능력자 제도 중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인 사람들이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을 때 일정 범위에서 후견인을 통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가 정신적 제약이 더 심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피한정 후견인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14 조정 제도의 의의와 특징 이해

문제 분석 B 신문사의 정정 보도 요청 거부에 A사가 언론 중재 위원회에 일반적으로 일정 행위(㉠)를 요청한 상황이며, 이 경우 ㉠에 해당하는 제도는 언론 조정이다.

정답 찾기 ⑤ 언론 조정은 조정 제도의 일종으로 피해자와 언론사의 분쟁을 언론 중재 위원회가 합의를 유도해 해결하는 절차이다. 조정 제도는 자율적인 협상이 어려운 경우,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의 하나로 일방의 제기에 의해 진행된다. 제3자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모두 합의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오답 피하기** ① 분쟁 당사자들이 결정을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다. 분쟁 당사자들의 결정 수용 의무가 있는 제도는 중재이다.
- ②, ④ 민사 소송에 관한 내용이다.
- ③ 협상에 관한 설명이다.

더 알아보기 **조정과 중재**

조정과 중재는 모두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로 제3자의 개입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 조정은 일방에 의해 제기되기에 제3자의 결정을 양자가 모두 받아들일 때에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반면, 중재는 중재를 신청할 때부터 양자의 합의에 의해 중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중재 합의를 제출하기에 중재 결과를 분쟁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

15 소송 유형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그림의 (가)는 민사 소송 절차, (나)는 형사 소송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정답 찾기 ③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 소송에서만 가능하다.

- 오답 피하기** ①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다.
- ② 형사 소송은 죄형 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기에 관습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④ 민사 소송의 원고는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이며, 형사 소송의 원고는 검사이다.
- ⑤ 동일 사건에 대해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이 함께 진행될 수 있다.

16 항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고등법원에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판단한다는 점에서 ㉠은 항소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 1심 판결에 대해 상소하는 것은 항소이다.

㉡. 2심이 고등법원인 경우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에서 사건을 담당할 경우이다.

- 오답 피하기** ㉢. 형사 1부에서 담당할 사건인 점을 감안하면 선거 관련 형사 소송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에서도 보이듯 형사 소송의 원고는 검찰(검사)이며, 이 경우 피고인인 지역 신문 대표가 승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2심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고'라고 한다.

17 상속의 이해

문제 분석 부부가 이혼하면 상호 간에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므로 상속인의 자격도 없어진다. 따라서 병은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한편 을은 갑과 법률상 혼인 관계를 맺지 못하였기에 역시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정답 찾기 ① 을과 병이 상속인의 자격을 갖지 못하므로 갑의 재산은 딸인 정에게만 상속된다.

- 오답 피하기** ② 병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정만 상속을 받는다.
- ③ 병의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병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 ④ 병의 재혼 여부는 정만 상속을 받는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⑤ 을은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유언의 효력 유무는 상속 상황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8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공무원이 금품을 제공받고 정당한 신청을 반려하였다면 공무와 관련하여 불법적 행위로 개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행정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찾기 ㉠. 위법한 직무 행위로 인한 개인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 주는 제도를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라 한다.

㉡. 행정상 손해 배상은 민사상 손해 배상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오답 피하기 ㄷ. 위법한 직무 행위에 대해 행정 기관이 책임을 지더라도 원래의 위법 행위를 한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 기관은 구상권 행사나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ㄹ.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는 위법한 직무 행위 외에 영조물 하자로 인한 것도 포함되지만, 사례는 영조물 하자와 관련이 없다.

19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을 때, 그 구제는 기본적으로 노동 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정답 찾기 ㄴ. 부당 해고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 위원회를 거쳐야만 한다.

ㄷ. 행정 소송은 3심제로 운영된다.

ㄹ. 부당 해고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행정 소송과 무관하게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부당 해고의 피해 당사자로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 개인이다.

20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가)는 국제 관습법, (나)는 법의 일반 원칙, (다)는 조약의 예이다.

정답 찾기 ② 법의 일반 원칙은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재판의 준거로 사용할 수 있기에, 불완전한 국제법 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피하기 ① 국제 관습법은 헌법 제6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가 없더라도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③ 조약이 관련된 국제 분쟁에 대해 국제 사법 재판소는 기본적으로 강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을 수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체결·공포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모든 관습법 등이 무조건 우리 헌법 질서 내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적용 등을 거부할 수는 있다.

⑤ 조약은 조약을 맺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실전 모의고사		3회	본문 148~152쪽		
1 ④	2 ④	3 ⑤	4 ④	5 ④	
6 ⑤	7 ④	8 ④	9 ⑤	10 ⑤	
11 ④	12 ④	13 ③	14 ①	15 ⑤	
16 ⑤	17 ①	18 ④	19 ⑤	20 ④	

1 민주주의의 유형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A는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를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제이고, B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정치를 담당하는 간접 민주제이다. 간접 민주제는 국가의 규모와 기능 확대, 사회의 복잡성·다양성·전문성 심화 등으로 인해 등장하게 되었다.

정답 찾기 ④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큰 민주주의 유형은 간접 민주제이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정책을 결정하므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직접 민주제에서 보다 더 높다.

오답 피하기 ① 간접 민주제는 국가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고,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전문성이 심화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의 증가는 간접 민주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②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직접 민주제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③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제도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투표 제도만 실시하고 있다.

⑤ 모든 국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제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대표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간접 민주제에 비해 효율성 및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더 알아보기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제도**

국민 발안 제도란 국민이 입법에 관한 제안을 하는 것으로서 직접 민주제의 한 형태이며,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부터 행해졌다. 우리나라는 제5차 개정 헌법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도 있었으나, 현행 헌법에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국민 소환 제도란 선거로 뽑은 공직자를 일정 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시키는 것으로 국민 파면 또는 국민 해직이라고도 한다. 이 역시 현행 헌법에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2 사회 계약론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인간을 악하고 이기적 존재로 보고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파악하므로 홉스이다. 을은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였고, 계약을 위반한 통치자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므로 로크이다.

정답 찾기 ④ 홉스는 시민들이 계약을 맺어 개인의 자연권 전부를 통치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보므로 절대 군주제를 옹호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루소는 정치 공동체가 국민의 일반 의지에 입각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주권은 국민에 있다고 보았다. 홉스는 주권이 통치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② 로크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과 법을 집행하는 집행권의 분리, 즉 2권 분립을 주장하였다. 홉스는 통치자에게 모든 권력을 다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국민 주권에 따른 직접 민주제를 주장한 것은 루소이다.

⑤ 사회 계약론은 개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맺고 국가를 구성하였다고 보는 것이므로 국가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본 것이다.

3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 형태인 A는 의원 내각제이다. B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에서는 공통적으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한다.

정답 찾기 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원수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가능하나, 대통령제에서는 겸직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 출현의 우려가 있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되므로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정국이 안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의원 내각제에서 총리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행사로 인해 임기가 불안정하다.

③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된 정부 형태이고,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이다.

④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융합된 정부 형태이므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조가 용이하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의회 구성을 각각 국민의 선거로 하므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수 있어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다수당에 의해 내각이 구성되므로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정치 참여 주체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정치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치 참여 주체 (가)는 정당,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집단인 (나)는 이익 집단,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인 (다)는 시민 단체이다.

정답 찾기 ㄴ. 정당은 이익 집단이나 시민 단체와 달리 공식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표자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ㄷ.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정치 참여 주체로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조직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오답 피하기 ㄱ. 정당과 시민 단체는 공익을 추구하지만 이익 집단은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다.

ㄷ.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은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에 해당한다.

5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는 t+1기의 각 정당의 의회 의석수와 득표율만 제시되어 있고, t기는 A당의 지역구 의석수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t기의 각 정당의 의회 의석수를 알 수 없다. 또한, t기와 t+1기에 유권자의 투표율은 일치하지만, 각 시기의 유권자의 수를 알지 못하므로 정확한 득표율을 알기는 어렵다.

정답 찾기 ㄴ. 과소 대표 여부는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하여야 한다. B당은 지역구 득표율이 30%이고, 지역구 의석률이 $55/200 \times 100 = 27.5\%$ 이므로 과소 대표되었다. C당은 지역구 득표율이 20%이고, 지역구 의석률이 $35/200 \times 100 = 17.5\%$ 이므로 과소 대표되었다.

ㄷ. t+1기의 D당의 비례 대표 의원 의석률은 $10/100 \times 100 = 10\%$ 이고, 지역구 의원 의석률은 $20/200 \times 100 = 10\%$ 이다. 따라서 비례 대표 의원 의석률과 지역구 의원 의석률이 일치한다.

오답 피하기 ㄱ. t기의 A당의 의회 의석률은 지역구 의석수만 제시되어 있고 비례 대표 의석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ㄷ. t기에 비해 t+1기에 전체 투표율은 똑같지만 A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권자의 수를 비교할 수가 없으므로 t기에 비해 t+1기에 A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수가 더 많은지 여부는 알 수 없다.

6 선거구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t기에 지역구 의석수는 t+1기와 같은 200석이었으나, 지역구 선거구의 수는 1/2인 것으로 보아, t기의 지역구 선거구의 수는 100개이다. 따라서 t기에는 선거구 100개에서 의원 200명을 선출하고 선거구마다 선출되는 의원의 수가 모두 같으므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t+1기에는 지역구 의원의 수와 지역구 선거구의 수가 같으므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정답 찾기 ⑤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당 1인의 대표를 뽑고, 선거구의 범위가 중·대선거구제에 비해서는 작다. 따라서 지역적 인물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오답 피하기 ①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당 1인의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수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을 경우보다는 적고, 지역적 범위가 작다. 따라서 선거 관리가 용이하다.

② 사표란 선거에서 유효한 표이지만 낙선한 후보를 지지하여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를 말한다. 소선거구는 선거구당 1인의 대표만 선출되므로 2인 이상이 선출되는 중·대선거구제보다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③ 소선거구제는 다수당에 유리하여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이 어렵다.

④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는 후보자의 수가 중·대선거구제보다 적으므로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용이하다.





7 참정권(선거권)과 평등권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집행 유예 기간 중인 자가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데 있어 범죄의 경중이 고려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 유예 기간 중인 자의 A를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A는 참정권(선거권)을 의미한다. 또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 및 집행 유예 기간 중인 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B를 침해한다는 것으로 보아 B는 평등권이다.

정답 찾기 ㄱ. 선거권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ㄴ. 평등권은 사회생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기본권이며,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포괄적 권리이다.

ㄷ. 참정권(선거권)은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능동적인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ㄹ.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8 법률 제·개정 절차 및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가)는 법률 제·개정 절차, (나)는 헌법 개정 절차이다. 법률은 정부나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며, 헌법 개정은 일정수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회 의결 및 국민 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정답 찾기 ④ 법률 제·개정 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 제안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오답 피하기 ①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헌법 개정을 위한 공고 및 공포는 모두 대통령이 한다.

③ 헌법 개정 시 국민 투표를 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⑤ 법률 제·개정 시 대통령의 거부로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경우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반면,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의결 시에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결의 경우에 더 많은 재적 의원의 출석이 필요하다.

9 헌법 재판 제도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재판을 받던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10조가 위헌이라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때 갑이 제기한 헌법 소원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을은 소송 중 특가법 제10조가 위헌이라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며 법원에서 인용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의 헌법 재판 제도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정답 찾기 ㄴ. 특가법 제10조가 위헌 결정이 낮으므로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갑과 을은 특가법 제10조를 근거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ㄷ. 을의 항소심 법원은 을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법원은 특가법 제10조에 대해 위헌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ㄹ.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ㄱ.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은 재판 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한 것이므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

10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하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 을은 국가의 모든 통치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 정의의 실현 등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정답 찾기 ⑤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식적 합법성과 함께 법의 내용이 법의 본래 목적을 충족시키는 실질적 정당성도 중시하므로 실질적 정당성이 결여된 악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하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이로 인해 법이 다수당의 횡포나 통치권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② 형식적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에 비해 엄격한 권력 분립을 강조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형식적 법치주의를 강조할 때 엄격한 권력 분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

③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 목적인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한다. 다만,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도 중시한다.

11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지방법원이 호프집 사장 을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호프집 간판과 연결된 전선을 공작물로 보고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갑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갑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어 과실 상계가 되었다.

정답 찾기 ㄱ.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 등을 증명해야 한다.

ㄷ. ○○지방법원은 간판을 점유하고 있던 호프집 사장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다.

ㄹ. 간판을 점유하고 있던 을이 간판 전선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했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방법원이 을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을이 간판 전선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ㄴ. ○○지방법원은 갑의 손해에 대해 갑의 책임을 40%로 보고, 호프집 사장 을의 책임을 60%만 인정했으므로 갑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면 갑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지방법원은 갑 자신이 입은 손해의 일부만 배상 받는다고 판단한 것이지 을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12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갑이 을의 멧견에 의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물의 점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무가 정에 의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 및 정희의 사용자인 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을 및 병의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다.

정답 찾기 ㄴ.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이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ㄹ. 무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가해자인 정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도 되고, 사용자인 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도 된다.

오답 피하기 ㄱ. 동물의 점유자인 을과 정희의 사용자인 병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정은 직접적인 가해자이므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ㄷ. 동물의 점유자인 을, 정희의 사용자인 병은 자신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은 직접적인 가해자이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므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13 의사 능력 및 행위 능력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갑은 18세이지만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성년 의제되어 제한 능력이 아니다. 을은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한정 후견인이다. 병은 지속적으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으므로 의사 무능력자이다. 정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태이지만 법원의 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다.

정답 찾기 ③ 병은 의사 무능력자이고, 의사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의 효과는 무효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은 미성년자이지만 성년 의제되어 제한 능력이 아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갑 또는 갑의 부모가 취소할 수 없다.

② 을은 피한정 후견인이다.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률 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정은 법원의 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다. 따라서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⑤ 갑은 행위 능력자이고 을은 제한 능력자이다. 따라서 갑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범위가 더 넓다.

14 계약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계약은 특정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합의 또는 약속으로 조건을 정해 계약을 청약하는 의사와 이를 승낙하는 의사가 합치된 때에 성립한다.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까지 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답 찾기 ㄱ. 계약서에는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을 통해 갑은 을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와 나중에 돈을 갚을 의무, 을은 갑에게 돈을 줄 의무와 나중에 을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ㄴ. 공증은 계약의 내용을 국가가 지정한 사람이 확인하는 것으로 다툼이 생겼을 때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며, 내용에 따라서는 재판관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ㄷ. 내용 증명 우편 제도는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이다. 이는 분쟁의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해결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려 반응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계약은 조건을 정해 계약을 청약하는 의사와 이를 승낙하는 의사가 합치된 때에 성립한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갑과 을은 (가)에서 청약과 승낙을 하였으므로 이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15 감독자 책임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을에게 병을 폭행하자고 했다. 물론 갑은 망을 보았지만 단순 가담자도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심지어 갑은 폭행을 의뢰한 당사자이다. 그러나 갑과 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병의 부모가 손해 배상을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감독자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감독자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 찾기 ㄷ. 을은 17세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이다. 따라서 을 본인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을의 부모가 미성년자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만큼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ㄹ. 갑과 을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병의 부모는 을의 부모에게만 손해 배상액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오답 피하기 ㄱ. 갑은 13세로 책임 능력 유무를 판단해봐야 알지





정답과 해설

만 책임 능력이 있다면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나. 갑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 병의 부모는 갑에게 책임을 물어 도 되고 갑의 부모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 도 된다.

16 소년법 적용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갑은 13세로서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을은 17세이므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다. 따라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갑과 을은 모두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에 해당하므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정답 찾기 ⑤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은 사건의 죄질 및 범법 의도를 살펴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19세 미만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고 지역의 범죄 예방 위원들에게 선도를 위촉하는 내용의 처분이다. 을은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 연령이므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이 가능하지만,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도 가능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은 13세인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갑과 같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 보호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보호 처분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을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는 것은 보호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③ 형사 미성년자인 갑과 달리 을은 형벌을 받을 수 있다.

④ 보호 처분에는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호 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은 소년법상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에 저지른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또한 비행소년을 발견한 경우 소년의 보호자나 학교장, 사회 복지 시설의 장, 보호 관찰소장 등은 수사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이를 직접 통고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후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 처분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독과 보호를 맡기는 처분,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관의 단기·장기 보호 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 아동 복지 시설, 병원, 요양소, 소년원 등에 위탁 또는 송치하는 처분 등이 있다.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처분으로서 전과로 기록되지 않아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7 법정 상속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상속은 자연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일정 범위의 친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유언에 의한 상속과 법정 상속이 있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을 따르고, 유언이 없거나 무효가 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이 개시된다. 동일한 사고에서 사망을 했더라도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가 증명된다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찾기 ① 갑이 사망하면 갑의 직계비속인 병과 배우자인 을

이 1:1.5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따라서 병은 10억 원 $\times 2/5 = 4$ 억 원, 을은 10억 원 $\times 3/5 = 6$ 억 원을 상속받는다.

오답 피하기 ② 병이 사망하면 병의 직계비속인 무와 배우자인 정이 1:1.5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따라서 무는 10억 원 $\times 2/5 = 4$ 억 원, 정은 10억 원 $\times 3/5 = 6$ 억 원을 상속받는다. 갑은 병의 직계존속이므로 상속 2순위이다. 상속 1순위인 무가 있으므로 갑은 상속 받지 못한다.

③ 무가 사망하면 직계존속인 병과 정이 1:1로 상속받는다. 따라서 병은 8억 원 $\times 1/2 = 4$ 억 원, 정은 8억 원 $\times 1/2 = 4$ 억 원을 상속받는다.

④ 동일한 사고에서 병이 사망한 후 무가 사망했다면, 병이 사망했을 때 병의 재산을 무와 정이 1:1.5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따라서 무는 4억 원, 정은 6억 원을 상속받는다. 그런데 이후 무가 사망을 하였으므로 무의 재산 12억 원을 직계존속인 정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따라서 정이 18억 원을 모두 상속받으며 갑과 을은 상속 받지 못한다.

⑤ 동일한 사고에서 무가 사망한 후 병이 사망했다면, 무가 사망했을 때 무의 재산을 병과 정이 1:1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따라서 병과 정은 4억 원씩 상속받는다. 이후에 병이 사망하였으므로 병의 재산 14억 원을 병의 직계존속인 갑, 을과 배우자인 정이 1:1:1.5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따라서 갑은 14억 원 $\times 2/7 = 4$ 억 원, 을은 14억 원 $\times 2/7 = 4$ 억 원, 정은 14억 원 $\times 3/7 = 6$ 억 원을 상속받는다. 결국 정은 무의 재산에 대한 상속분 4억 원과 병의 재산에 대한 상속분 6억 원을 합하여 모두 10억 원을 상속받는다.

18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갑국의 ○○법 제1조와 제2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갖는다. 특히 정부에 막강한 권한을 주어 입법부를 비롯한 다른 권력 기관을 무력하게 만든다. 이는 정당한 정치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찾기 ④ 정치권력은 합법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법에 근거해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치권력 행사의 형식적 근거이다. 갑국의 ○○법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정치권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제1조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률을 정부가 제정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②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갑국의 행정부도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법에 의한 지배를 하려는 것이다.

③ 갑국의 ○○법은 행정부의 합법적인 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⑤ 제2조에 정부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은 헌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했으므로 헌법이 최고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9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주택 임대차 계약은 주택을 빌리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와 보증금의 안

전한 회수를 보장하고, 임대인의 횡포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는 임대차 기간 2년 보장,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인정,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인정 등이 있다.

정답 찾기 ⑤ (다)에서 을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주택이 경매된 경우 병보다 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병이 변제 받은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을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어 순위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소액이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임대차 기간은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2년 동안 거주하는 것이 보장된다.

② 대항력은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를 하면 갖게 된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을은 병의 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우선 변제권을 가졌으므로 경매 시 병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되어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④ 주택을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등기부 갑구의 내용이 바뀌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변동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부 을구의 내용이 바뀐다.

20 부당 해고 구제 절차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면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적으로 사용자의 행위가 정당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자는 근로자이지만 그 이후 중앙 노동 위원회, 행정법원 등에 불복하는 주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될 수 있다.

정답 찾기 나. 중앙 노동 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은 행정 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행정 소송에 해당한다.

ㄷ. 갑이 중앙 노동 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오답 피하기 가. ○○고등법원은 카지노 업체에 다니던 갑이 중앙 노동 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므로, 1심 법원은 원고(갑)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즉, 1심 법원은 갑에 대한 해고를 부당 해고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갑이 2심 법원에 항소할 이유가 없으며, 항소는 중앙 노동 위원회가 하였을 것이다.

ㄷ. ○○고등법원이 갑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았지만 아직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므로 갑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전 모의고사

4회

본문 153~157쪽

1 ②	2 ①	3 ③	4 ④	5 ③
6 ⑤	7 ②	8 ①	9 ①	10 ⑤
11 ③	12 ③	13 ⑤	14 ①	15 ②
16 ②	17 ⑤	18 ④	19 ③	20 ①

1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원 내각제 요소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정답 찾기 ② 행정부 수반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권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③, ④, 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것, 국회가 국무총리 해임 건의권을 갖고 있는 것, 대통령이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것 등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2 홉스와 로크의 사회 계약설 이해

문제 분석 (가)는 홉스, (나)는 로크의 사회 계약설 내용이다.

정답 찾기 ①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이 계약을 맺고 질서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절대 권력을 수립하였다고 보았다. 홉스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그러나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것이라는 왕권신수설이 아니라 사회 계약설을 통해서였다. 홉스의 견해가 왕권신수설을 뒷받침하였다는 것은 옳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 피하기 ② 로크는 개인들이 불확실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생명, 자유, 재산을 더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만약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로크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가 최고의 권력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집행권을 의회로부터 분리한 정부 형태를 주장하였다.

④ 홉스는 로크와 달리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⑤ 홉스와 로크는 공통적으로 사회 계약에 의해 국가가 수립되었다고 보았다.

3 법치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법치주의는 사람이 아니라 법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의 제정 절차와 형식 등만을 강조하는 관점에 따라 법치주의가 합법적 독재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법치주의에 대해 합법성과 함께 정당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는데, 이것





정답과 해설

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내용이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를 형식적 법치주의, 후자를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한다. 제시문의 ㉠은 형식적 법치주의, ㉡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 찾기 ③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한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도 강조한다.

오답 피하기 ① 법의 내용을 중시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제정 절차나 형식과 함께 목적과 내용도 중시하는 관점이다.

④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강조한다. ⑤ ‘법에 의한 지배’는 군주나 독재자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 법치주의든 형식적 법치주의든, 법치주의는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되는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한다.

4 선거 결과 자료의 분석

문제 분석 지역 대표 10명을 선출하는데 5개 선거구의 당선자 수가 동일하므로 한 선거구당 2명씩을 선출한다. 각 정당은 선거구당 1명씩만 공천한다고 하였으므로 지역 대표 의원은 A당:B당:C당:D당=2명:0명:3명:5명이다. 비례 대표 10명을 지역구 의석률에 따라 배분하면 A당:B당:C당:D당=2명:0명:3명:5명이다. 따라서 지역 대표와 비례 대표를 합산하면 A당:B당:C당:D당=4명:0명:6명:10명이다.

정답 찾기 ④ A당의 지역구 의석률이 20%, D당의 지역구 의석률이 50%이므로 평균 득표율과 비교할 때 A당은 과소 대표, D당은 과대 대표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대통령제 국가라면 대통령이 어느 정당에서 나오더라도 의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여대야소 정국은 나타날 수 없다.

②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 의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연립 정부 수립이 불가피할 것이다.

③ B당은 의회 의석을 1석도 가져가지 못하였다.

⑤ 평균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면 A당과 B당은 각각 1석이 늘어나고, C당과 D당은 1석이 줄어든다. 평균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면 이익을 보는 정당과 손해를 보는 정당의 수는 같다.

5 법률 제·개정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법률 제·개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법률안 제출·발의 → 상임위 심사 → 법제 사법 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정답 찾기 ③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는 일반 의결 정족수, 즉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오답 피하기 ①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헌법 제89조에 따라 반드시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방 위원회와 법제 사법 위원회는 모두 상임 위원회이다. 상임

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나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진행한다.

④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이의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더 알아보기

국회의 위원회 제도

위원회 제도는 안건을 분담함으로써 안건의 효율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안건 심의를 위원회 단위로 소수화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의원들로 하여금 특정의 정책 분야를 분담하고 이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의원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우리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로 나뉜다. 상임 위원회는 현재 국방 위원회, 법제 사법 위원회 등 16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별 위원회의 사례로는 평창 동계 올림픽 및 국제 경기 대회 지원 특별 위원회,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별 위원회 등이 있다.

6 국제 사법 재판소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 중 사법적 절차를 적용하여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정답 찾기 ㄷ.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분쟁에 대한 강제적 관할권이 없어 기본적으로 분쟁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해 재판이 가능하다.

ㄹ.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에 따라 사법적 절차를 적용하여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이다.

오답 피하기 ㄱ. 국제 사법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 하더라도 직접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ㄴ.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국가만이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다국적 기업은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7 정치 참여의 과제 추론

문제 분석 자료에서는 계층 간 정치 참여 불평등 문제 해결이 주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 계층의 정치 참여 증진 및 상류 계층의 정치 참여 독점 해소 방안 등이 필요하다.

정답 찾기 ㄱ. 개인의 정치 참여 비용 절감 및 보전은 상대적으로 정치 참여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빈곤 계층의 정치 참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ㄷ. 물질적 지원 방안과 함께 빈곤 계층의 정치 참여 의지를 고양하려는 홍보나 교육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오답 피하기 ㄴ. 성숙한 정치 참여를 위한 교육은 사익을 앞세운 정치 참여에 따른 사회적 혼란 문제의 해결 방안이지, 계층 간 정치 참여 불평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ㄹ. 자료에서 정치 참여의 전체적인 양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치 참여의 확대나 과도한 참여의 자제는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8 기본권의 종류별 성격 이해

문제 분석 헌법 제12조 제2항은 신체의 자유에 속하는 고문 받지 않을 권리와 진술 거부권을,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모두 자유권이 규정된 헌법 조항들이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재판 청구권, 제30조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내용으로 한다. 모두 청구권이 규정된 헌법 조항들이다. 따라서 (가)는 자유권, (나)는 청구권이다.

정답 찾기 ㄱ. 자유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거나 방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다.

ㄴ.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 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으로서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오답 피하기 ㄷ.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이고,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ㄹ.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규정된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9 민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었던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은 심각한 빈부 격차와 대기업의 독점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다.

정답 찾기 ① 제시문은 강자의 논리에 따라 약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계약 공정의 원칙과 가장 관계가 깊다. 계약 공정의 원칙은 개인 간의 법적 관계가 각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나 그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오답 피하기 ② 과실 책임의 원칙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③ 계약 자유의 원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④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사회적 위험이나 환경 오염 등을 초래한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⑤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자신이 모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이나 국가가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10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 실질적 평등,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한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과 규제 등은 우리 헌법의 기

본 원리 중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계가 깊다.

정답 찾기 ⑤ 제34조 제1항은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헌법 조항으로서, 우리 헌법이 복지 국가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답 피하기 ① 제6조 제2항은 우리나라가 헌법의 기본 원리로 국제 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제8조 제1항은 국민의 주권 행사와 자유 민주적 질서 유지의 근간이 되는 헌법 조항으로서, 우리 헌법이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 제18조는 우리 헌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④ 제24조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갖는다는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주의가 내포된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와 연결된다.

11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과 권한 이해

문제 분석 국무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따라서 A는 국무총리, B는 대통령이다.

정답 찾기 ③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오답 피하기 ①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② 국무총리는 행정 각 부 장관과 달리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한다. 이는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한다.

⑤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을, 국무총리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12 청소년의 근로 이해

문제 분석 근로 계약을 체결한 을은 17세이므로 근로 계약 시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의 취업 동의가 필요한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③ 연소 근로자는 법정 대리인의 취업 동의를 받아 근로 계약을 직접 체결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연소 근로자는 근로 계약 체결 시 법정 대리인의 취업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빼면 7시간이다. 연소 근로자의 1일 정규 근로 시간은 7시간이다. 단,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에 한하여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④ 연소 근로자는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임금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⑤ 연소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똑같이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 임금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계약서의 임금 내용은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무효이고, 계약 내용에 상관없이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13 민사 분쟁 해결 방법의 이해

문제 분석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민사 소송 외에도 민사 조정 제도나 소액 사건 심판 제도 등이 있다. 또한 민사 분쟁 해결 과정에서 내용 증명 우편, 공증, 가압류 등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민사 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더라도 갑에게 돈이 없다면 재판은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을은 가압류 제도를 이용하여 갑이 재산을 감추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공증을 받지 않았어도 차용증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공증을 받아 두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공정 증서를 작성하면서 강제 집행을 하기로 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속한 대로 금전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② 내용 증명 우편은 편지를 보내는 이가 받는 이에게 일정한 내용의 문서(편지)를 특정한 날에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고 해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언제 상대방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③ 소액 사건 심판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인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④ 특수 불법 행위는 책임의 성립 요건이 경감되거나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한다. 감독자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 등이 그에 속한다. 을이 준비하고 있는 소송은 갑의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특수 불법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1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

문제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둘째,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면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대항력이 생겨 남은 임대차 기간에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셋째,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정답 찾기 ㄱ. 갑은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의 조건을 갖추어 대항력과 경매 시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갖고 있다.

ㄴ. 을은 '입주+전입신고'의 조건을 갖추어 대항력을 갖고 있다.

오답 피하기 ㄷ. 주민 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ㄹ.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갑, 을은 최소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는다.

15 행정 구제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행정상 쟁송 제도는 행정법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인데,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이 있다. 행정 심판은 행정 기관의 하나인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 행정상 분쟁을 처리하는 제도이고, 행정 소송은 법원이 소송 절차를 통해 행정상 분쟁을 처리하는 정식 재판이다. ㉠은 행정 심판, ㉡은 행정 소송이다.

정답 찾기 ②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은 행정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 모두 사후적 행정 구제 수단이다.

④ 위법한 직무 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는 행정상 손해 배상이고,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의미하는 사법 국가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는 행정 소송이다. 행정 기관을 통해 행정상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 심판은 사법 국가주의 구현 수단으로 볼 수 없다.

16 형의 선고와 집행 이해

문제 분석 피고인 갑과 검사 을이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심 판결의 내용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하면서 징역 형과 함께 집행 유예를 선고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였다.

정답 찾기 ② 판결문에 명시된 '선고 전 구금 일수 25일' 문구를 통해 구속되었던 기간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으나, 형사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죄 판결이 필요한데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사 보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오답 피하기 ① 범죄 혐의를 받아 입건된 자의 경우 수사 기관에 의해 입건된 때부터 기소되기 이전까지는 피의자 신분, 기소되어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피고인 신분을 갖는다.

③ 집행 유예는 유죄 판결과 함께 내려지는 것이고, 집행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④ 가석방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형 집행이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갑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채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징역 형이 집행되지 않으므로 가석방은 불가능하다.

⑤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아 재판부는 갑이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17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비교

문제 분석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대표적인 정치 참여 집단이다. '공익을 추구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은 정당과 시민 단체이다. 따라서 (가)는 정당과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정답 찾기 ⑤ ㉠이 '예'이면 정당과 시민 단체는 (가), (나)에 들어가야 하므로 (다)는 이의 집단이다. 이때 A에 '집단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중시합니까?'가 들어가게 되면 이의 집단은 '예'라고 답해야 하는데, 자료에 '아니요'라고 되어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이 '아니요'이면 (다)에 이의 집단이 들어가므로 시민 단체는 (가)와 (나) 중 한 군데에 들어간다.

②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까?'라는 질문에는 정당, 이의 집단, 시민 단체가 모두 '예'라고 답해야 하므로 A에 이 질문은 들어갈 수 없다.

③ A가 '정권 획득을 추구합니까?'이면 '예'라고 답한 (나)는 정당, 따라서 (가)는 시민 단체, (다)는 이의 집단이 된다. 이의 집단은 '공익을 추구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해야 한다.

④ (다)가 시민 단체라면 (가)가 정당이 된다. 정당은 '선거에 공천을 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해야 하는데, '아니요'라고 되어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18 특수 불법 행위의 이해

문제 분석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 배상 책임은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지는 책임을 의미한다.

정답 찾기 ④ 직원 병의 과실에 대해 사장 정은 직원 병의 사무 감독에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상관없이 직원 병은 자신의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일반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진다.

오답 피하기 ① 만약 을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 즉 일반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이다.

② 범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③ 사용자 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만약 직원 병에 대한 사무 감독에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즉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사장 정은 사용자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⑤ 병에게 고의가 없어도 과실이 있으면 불법 행위가 인정되고, 정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19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 이해

문제 분석 국제 사회는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에 따른 주권 국가의 등장, 제국주의에 기초한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확보 경쟁, 두 차례의 세계 대전, 냉전 체제의 성립과 완화, 그리고 해체를 겪으면서 변천해 왔다.

정답 찾기 ③ 트루먼 독트린은 1947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에서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것을 선언한 미국 외교 정책의 원칙이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 간의 대립을 심화시켜 냉전 체제 성립에 영향을 끼쳤다.

오답 피하기 ①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에 따라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유럽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② 제국주의에 기초한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확보 경쟁이 과열되어 발생한 사건이 제1차 세계 대전이다.

④ 중·소 국경 분쟁은 공산권의 다원화를 촉진하여 국제 사회가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데 기여하였다.

⑤ 몰타 선언은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만나 이념 대결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자고 합의한 선언이다. 이는 냉전 체제 종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더 알아보기 트루먼 독트린과 몰타 선언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 체제의 성립, 몰타 선언은 냉전 체제의 종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 **트루먼 독트린** : 미국이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외교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1947년 공산 세력의 확대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리스, 터키의 반공 정부에 대해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가 제공되었다.
- **몰타 선언** : 1989년 12월 3일 지중해 몰타에서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 사이에 이루어진 회담의 결과로 나온 선언이다. 두 나라의 정상은 대립의 시대를 접고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상호 군비 축소, 소련의 동유럽 민주화 불간섭,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 소련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지원 등을 선언에 담았다.

20 소비자의 권리 이해

문제 분석 소비자의 8대 권리에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다.

정답 찾기 ① 알 권리는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소비자가 제공받을 권리이다. 안전할 권리는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받을 권리이다. 우선, 자료에 제시된 소비자 정책의 주요 내용 중 서비스 분야 상품 가격 비교 정보 공개, 학원비 정보 공개 등은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다. 다음으로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한 위생 관리 강화, 몸에 직접 닿는 제품의 유해 물질 사용 규제 범주 적용 등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따라서 (가)는 알 권리, (나)는 안전할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②, ③, ④, 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이다. 의견을 반영할 권리는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이다.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는 소비자가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이다. 선택할 권리는 거래의 상대방,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이다.





정답과 해설



실전 모의고사

5회

본문 158~162쪽

- | | | | | |
|------|------|------|------|------|
| 1 ⑤ | 2 ③ | 3 ① | 4 ③ | 5 ⑤ |
| 6 ④ | 7 ② | 8 ⑤ | 9 ③ | 10 ① |
| 11 ① | 12 ① | 13 ② | 14 ④ | 15 ⑤ |
| 16 ④ | 17 ⑤ | 18 ③ | 19 ④ | 20 ② |

1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이해

문제 분석 직접 민주주의의 특징과 간접 민주주의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정답 찾기 (가)는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를 거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는 직접 민주주의이며, (나)는 의회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는 간접 민주주의이다.

⑤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는 모두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답 피하기 ① 중우 정치는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를 이르는 말이다. 중우 정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간접 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이다.

② 직접 민주주의의 경우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와 정책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③ 국민의 대표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 간접 민주주의에서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높게 나타난다.

④ 대표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 간접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대표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2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이해

문제 분석 집행 권력과 입법 권력이 모두 국민의 선택으로 구성되는 A는 대통령제, 입법 권력만 국민의 선택을 받는 B는 의원 내각제이다.

정답 찾기 나.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가지며,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

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의회를 통해 구성된다.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적 성격을 갖는데 비해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오답 피하기 가.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행사로 인해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정책의 계속성의 확보가 대통령제보다 어렵다.

라. 의회 의원이 각료직을 겸임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3 사회 계약설 이해

문제 분석 근대 정치 사상가인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정답 찾기 갑은 자연 상태의 인간이 자연법에 따라 자유롭고 평화롭게 생활하지만 분쟁으로 자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은 로크이다. 을은 국가가 일반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

았다. 을은 루소이다. 병은 자연 상태의 인간이 서로를 위협하는 투쟁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병은 홉스이다.

① 로크는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나누어 집행권의 행사를 의회의 입법권에 의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약을 배반한 정부에 대한 저항권 행사를 인정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시민의 자연권 보호를 위해 대의 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은 로크이다.

③ 홉스는 시민들의 계약을 통해 자신이 지닌 자연권을 전부 양도한다고 보았다.

④ 로크와 홉스는 사회 계약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욕구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⑤ 홉스는 군주 주권론을, 로크와 루소는 국민 주권론을 옹호하였다.



더 알아보기

사회 계약설의 비교

구분	홉스	로크	루소
인간 본성	성악설	백지설	성선설
자연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자연법 위반자 때문에 갈등 발생	원래는 자유롭지만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사슬에 묶임
주권 이론	군주 주권론	국민 주권론 (간접 민주주의)	국민 주권론 (직접 민주주의)
정부 형태	절대 군주정	입헌 군주정	민주 공화정

4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이해

문제 분석 (가)에는 이익 집단, 시민 단체와는 다른 정당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하며, (나)에는 정당, 시민 단체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나. 활동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이익 집단이나 시민 단체는 활동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정당과 시민 단체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특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오답 피하기 가.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정치 사회화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5 선거구 제도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A선거구 제도는 새로운 인물의 정계 진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통해 소선거구제임을 알 수 있다. B선거구 제도는 소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의 의회 진출이 활발하다는 사실을 통해 중·대선거구제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다.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해 정국 불안이 우려될 수 있는 것은 중·대선거구제이다.

라. 소선거구제에서는 1명의 당선자만을 배출하기 때문에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일반적으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한다.

오답 피하기 ㄱ.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중·대선거구제이다.

ㄴ.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에서는 지역적 인물의 당선이 유리하고,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전국적인 인물의 당선이 용이하다.

6 권력 분립의 원리 이해

문제 분석 삼권 분립은 정치의 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분리·독립시켜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키고 이들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정치권력의 절대화를 방지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원리이다.

정답 찾기 ㄱ.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 행정 각 부의 장, 법관 등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는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여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ㄴ. 사법부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명령이나 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심사권'을 통해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ㄷ. (가)가 국정 감사이면 A는 국회이다. 국회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국민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다. (나)가 법률안 거부권이면, B는 행정부이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선거로 선출된다.

오답 피하기 ㄷ. (가)가 'B의 수장 임명'이면 A는 행정부, B는 사법부이다. '국정 조사'는 입법부의 권한이다.

7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의 이해

문제 분석 (가)는 국가 권력의 통제나 소극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이다. (나)는 국가 기관 구성에 참여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참정권이다. (다)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사회권이다.

정답 찾기 ②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될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국가에 의한 자유'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이다.

③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④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⑤ 국가 성립 이전에도 인정되는 권리는 천부 인권적 성격을 지닌 자유권에 해당한다. 참정권은 능동적 권리, 사회권은 적극적 권리로 국가 성립 이후에 인정될 수 있는 권리이다.

8 국회의 입법 과정 이해

문제 분석 법률안은 10인 이상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은 상임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일반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다. 대통령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국회에서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답 찾기 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오답 피하기 ①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② 상임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하여 심의하는 합의체로 상임 위원회의 심의로 법률안이 폐기될 수 있다.

③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법률안을 공포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④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국회에서 재의결할 때, 또는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때에 법률로서 확정된다.

9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이해

문제 분석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 권한과 헌법 소원 심판 권한 등을 갖는다.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헌법 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다.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청구한다.

정답 찾기 ㄴ. (나)에서 A씨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행해진 이후 (다)에서 A씨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를 통해 법원이 A씨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이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ㄷ. 헌법 소원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과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 A씨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이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가) 이전에는 소송이 진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없다.

ㄷ.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합헌으로 결정할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은 유지된다. A의 유죄, 무죄 여부는 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10 부당 해고 구제 절차 이해

문제 분석 정당한 해고의 요건이 하나라도 누락되면 부당 해고이다. 부당 해고의 경우 노동 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부당 해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 노동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앙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지방 노동 위원회, B는 중앙 노동 위원회이다.





정답과 해설

정답 찾기 ① 부당 해고에 대해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고 무효 확인의 소의 경우 회사를 피고로 한다.

오답 피하기 ② 갑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2주 후에 해고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계획을 예고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해고 요건을 위반하여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갑이 을의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에 대해 지방 노동 위원회는 부당 해고로 인정하였다.

③ 부당 해고에 따른 지방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은 부당 해고를 당한 개인이 가능하다.

④ 지방 노동 위원회에서 갑의 해고를 부당 해고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을 회사는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 노동 위원회에서도 부당 해고임을 인정하였다.

⑤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민사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중앙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행정 소송이다.



더 알아보기

정당한 해고의 요건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해고는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 30일 전까지 해고 계획을 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한다.

11 형사 재판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형사 사건은 수사, 검사의 기소, 법원의 선고 순으로 진행된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죄 추정 원칙, 진술 거부권, 구속 적부 심사 제도, 미란다 원칙 등이 적용된다. 피고인에게도 무죄 추정, 진술 거부권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는 구속 적부 심사 신청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①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법질서에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정당 행위,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을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병은 현행범인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의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② 절도죄의 현행범인 병에 대한 수사는 을의 고소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③ 피의자나 피고인 모두 진술 거부권이 인정된다. 현행범인이라는 이유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④ 구속 적부 심사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검사의 공소 제기 이후에는 구속 적부 심사의 신청이 불가능하다.

⑤ 집행 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다.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병은 법원의 집행 유예 선고로 교도소에 복역하지 않고 2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더 알아보기

집행 유예, 선고유예, 기소 유예

- 집행 유예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단기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 선고 유예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 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한다.
- 기소 유예 :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1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

문제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주택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다. 대항력은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 변제권은 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자신의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우선 변제권을 통해 자신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으려면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입주, 전입 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정답 찾기 ① 갑은 입주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② 병은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갑은 입주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선 변제권을 갖지 못한다.

③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남은 임대차 기간에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을과 병은 모두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는다.

④ 임대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⑤ 임대차 계약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체결이 가능하다.

13 특수 불법 행위의 이해

문제 분석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이를 감독자 책임이라고 한다.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의 과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이를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한다.

정답 찾기 ㄱ. 갑의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법원은 갑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갑의 아들인 을이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묻은 것이다.

ㄴ. 사용자인 병에게도 법원이 책임을 묻은 것은 병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정의 선임 및 사무 감독의 과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ㄷ. 갑이 을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B는 병과 정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가 반드시 정에게 먼저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이후 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 제한 능력자 제도 이해

문제 분석 일정한 정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많은 경우를 객관적으로 정해놓은 뒤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고 있다.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다. 법원의 선고를 받지 않은 A는 미성년자이다. 법원의 선고를 받은 제한 능력자 중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는 피성년 후견인(C)이다.

정답 찾기 ④ 피한정 후견인은 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법률 행위를 제외하고는 온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대리에 의해 법률 행위를 한다.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나 법원이 단독으로 하도록 정한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한정 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피성년 후견인보다 더 넓다.

오답 피하기 ①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피한정 후견인은 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률 행위 외에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의 심판 청구는 본인도 할 수 있다.

⑤ A~C는 행위 능력을 제한 받고 있다. 의사 능력은 자신이 행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의사 능력은 법률 행위 당시를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15 이혼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이혼은 인위적으로 부부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당사자 간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경우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다. (가)에서 갑과 을은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어 법원을 통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 (나)에서 병과 정은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정답 찾기 ⑤ 협의 이혼의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이혼 의사 확인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이혼 의사의 합치를 확인하고 법원이 발급한다.

② 병과 정은 이혼은 재판상 이혼에 해당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에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이혼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게 면접 교섭권이 발생한다.

④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의사 확인서를 행정 기관에 제출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더 알아보기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6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권리 이해

문제 분석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연소 근로자라 하여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에 이루어진다. 갑은 17세에 해당한다. 을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법률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8세이다.

정답 찾기 ㄱ. 상속을 위한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는 17세이다. ㄷ. 갑은 17세, 을은 18세로 갑보다 을의 나이가 많다.

ㄹ.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득이 가능한 나이는 18세이다. 을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득이 가능하다.

오답 피하기 ㄴ. 을은 18세의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 행위를 한 경우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17 민사 소송 절차 이해

문제 분석 민사 소송은 당사자 간의 분쟁이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주로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증거를 들어 제시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항변을 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내린다.

정답 찾기 ⑤ 을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를 갚지 않으면 갑은 을의 재산을 지정하여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에서 승소하였다고 갑이 직접 을의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다.

오답 피하기 ① 내용 증명 우편 제도는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제도이다. 우편에 기재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하며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금전에 관한 청구권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가 가압류이다.

③ 조정은 자율적인 협상이 어려운 경우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방식이다. 제3자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모두 합의한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④ 갑의 민사 소송 제기로 인해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의 지위를 갖게 된다.





정답과 해설

18 상속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사실혼의 경우 상속의 자격이 없다.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子)로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인지라고 한다. 인지를 할 경우 자녀는 상속인의 자격을 갖는다. 갑의 사망으로 A, B, C가 상속인이 된다.

정답 찾기 ③ A, B, C는 모두 갑의 자녀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병은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A, B, C에게 각각 3분의 1씩 균분 상속된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의 사망으로 인해 갑의 부채와 재산 모두 상속된다. 10억 원의 부동산과 1억 원의 임대 보증금 모두 상속된다.
 ② 갑의 인지로 인해 갑과 C 사이에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A, B와 병 사이의 친족 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
 ④ C가 상속을 포기하면 A, B에게 상속된다.
 ⑤ 갑의 상속인은 A, B, C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병은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19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사례의 두 나라는 국제 정치에서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실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들 간의 문제는 대부분 힘에 의해 해결되고 결국 강자만이 자기 이익을 관철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찾기 ④ 국가 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국제 규범에 따른 집단 안보를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②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③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국제 사회에 도덕과 윤리가 존재한다고 본다.
 ⑤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치한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에 부합한다.

20 국제 연합의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 이해

문제 분석 A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평화적 해결안 권고, 경제적 제재나 군사력 사용 등으로 국제 분쟁에 개입한다. B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총회이다. 총회는 국제 연합의 형식상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정답 찾기 ㄱ.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임 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힘의 원리가 반영된 다수결이라고 할 수 있다.

ㄴ. 총회에서 모든 회원국은 1국 1표로 표결한다. 따라서 형식상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오답 피하기 ㄴ. 안전 보장 이사회가 문화적, 인도적 활동을 지휘·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ㄷ.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군사력 사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실전 모의고사		6회	본문 163~167쪽		
1 ④	2 ②	3 ④	4 ①	5 ④	
6 ③	7 ①	8 ④	9 ⑤	10 ③	
11 ⑤	12 ⑤	13 ④	14 ①	15 ①	
16 ②	17 ②	18 ⑤	19 ③	20 ②	

1 사회 계약 사상의 이해

문제 분석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 A는 로크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이지만 권리의 보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을 더 확실하게 보전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④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불확실하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① 불평등 문제의 해결 원리로 일반 의지를 강조한 것은 루소이다.
 ②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상태로 본 것은 홉스이다.
 ③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직접 민주 정치로 루소가 주장하였다.
 ⑤ 로크는 국민의 자연권을 침해한 정부에 대해 저항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2 선거구제와 대표 결정 방식의 이해

문제 분석 갑국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고 있다. 그리고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할 때 총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절대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을국은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 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정답 찾기 ㄱ.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ㄴ. 비례 대표제는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절대 다수제보다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오답 피하기 ㄴ. 절대 다수제는 총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로 단순히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상대 다수제보다 일반적으로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

ㄷ. 절대 다수제는 과반수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이므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와 결합할 수 없다.

3 의원 내각제의 이해

문제 분석 의원 내각제는 의회가 직접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내각은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또는 연립으로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정책을 주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원 내각제는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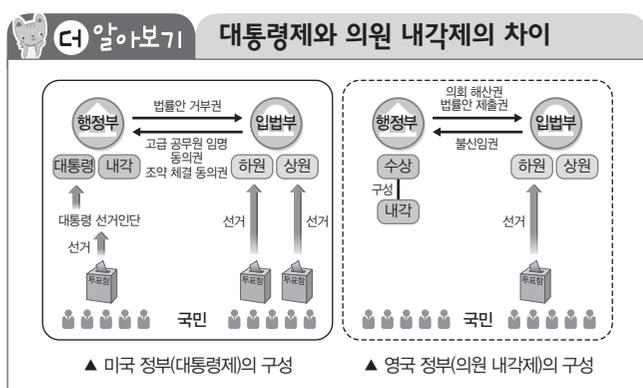
정답 찾기 ④ 행정 수반이 입법부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거부권을 가지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오답 피하기 ①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제에서는 행정 수반과 국가 원수의 역할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이 분리된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 선거 결과 다수당이 없어서 세력이 비슷한 여러 정당이 연립 내각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당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내각 구성이 어려워지거나 연합이 깨지는 등 정국이 불안정해지기 쉽다.

⑤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을, 입법부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게 된다.



4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같은 형식적 법치주의, 이른 실질적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정답 찾기 ㄱ.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보다는 법의 형식과 절차에서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찾는다.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의 지배'를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오답 피하기 ㄷ.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통치의 합법성을 정당성의 요건으로 본다.

ㄹ.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제정 절차와 같은 형식적인 합법성도 중시한다.

5 양당제와 다당제의 이해

문제 분석 2010년과 2014년의 갑국 의회 선거 결과를 비교하면 2010년에는 다당제적 경향이, 2014년에는 양당제적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2014년은 2010년에 비해 양당제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2010년보다 소수 의견 반영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2014년 선거에서 무소속 의원이 있으므로 비례 대표제만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2010년은 2014년과 달리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으므로 의회 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③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소야대가 나타날 수 없다.

⑤ 2014년 A당은 의회 내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하였으므로 2010년과는 달리 다른 정당과 연합할 필요 없이 집권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양당제와 다당제의 장·단점 비교		
구분	양당제	다당제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적인 두 정당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획득하는 유형 정당이 여러 개 있지만 실제 정권 획득 경쟁을 벌이는 정당이 2개인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는 유형 어느 하나의 정당이 의회 내 과반수를 차지하기 어려운 유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국 안정에 기여 강력한 정책 추진 가능 정치적 책임 소재 명확 유권자의 정당 선택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민의 반영 소수의 이익 보호 정당 간 대립 시 중재 용이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 넓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민의 반영 곤란 다수당 횡포로 소수 이익 무시 양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어려움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 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의 불안정 우려 강력한 정책 수행 곤란 책임 소재 불분명
국가	미국, 영국 등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6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이해

문제 분석 이익 집단은 공통의 목표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로 압력 단체라고도 한다. 시민 단체는 공공선이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단체로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과 구분된다.

정답 찾기 ③ 특수 이익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은 이익 집단이다.

오답 피하기 ① 이익 집단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당이다.

②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모두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공공선과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시민 단체이다.

⑤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모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정치 문화의 이해

문제 분석 정치 문화는 개인의 정치적 정향에 따라 향리형 정치 문화, 신민형 정치 문화, 참여형 정치 문화로 분류할 수 있다. 향리형 정치 문화는 정치 역할이 미분화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며 구성원들이 정치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신민형 정치 문화는 중앙 집권적인 권위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





정답과 해설

며 구성원들이 정치 공동체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참여에는 소극적이다. 참여형 정치 문화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며 구성원들이 정치 공동체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정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정답 찾기 ㄱ. 향리형 정치 문화는 정치 역할이 미분화된 전통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정치 문화로서 구성원들이 정치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므로 정치 주체로서의 의식을 가지지 못한다.

ㄴ. 중앙 집권적인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정치 공동체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정치적 참여가 소극적이므로 신민형 정치 문화가 주로 나타날 것이다.

오답 피하기 ㄷ. 향리형 정치 문화와 신민형 정치 문화 모두 구성원들이 정치적 참여에 소극적이므로 향리형 정치 문화가 신민형 정치 문화보다 구성원들의 요구나 지지가 적극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ㄹ.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이 크게 나타날 경우 구성원들의 참여 비중은 감소하므로 참여형 정치 문화가 신민형 정치 문화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이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8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과 수정 이해

문제 분석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구분된다.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자신이 모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이나 국가가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재산권이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될 수도 있다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개인들 간의 법률관계 형성은 스스로의 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법률관계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과실 책임의 원칙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책임을 진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정답 찾기 ④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관계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근대 민법의 원칙인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②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 간의 법률관계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경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③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는 경우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근대 민법의 원칙인 과실 책임의 원칙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수정된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9 제한 능력자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를 유형화하여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다. 제한 능력자의 유형으로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다.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로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온전한 행위 능력을 인정하되 한정 후견 개시 심판 과정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대리에 의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찾기 ㄷ. 갑과 을은 자연인이므로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ㄹ. 갑은 피성년 후견인이고 을은 미성년자이므로 갑과 을 모두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오답 피하기 ㄱ. 갑은 피성년 후견인이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나 법원이 정한 법률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ㄴ. 을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년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미성년자와의 계약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이며 제한 능력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계약을 맺을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계약을 맺을 경우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정답 찾기 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등으로 자신이 능력자인 것으로 속이는 경우 취소권이 배제된다.

오답 피하기 ㄱ.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행사 가능하다.

ㄹ.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계약 후 계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될 경우 계약에 대한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11 국제법의 이해

문제 분석 (가)는 조약, (나)는 법의 일반 원칙, (다)는 국제 관습법이다.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약속으로 서로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법의 일반 원칙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다.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이다.

정답 찾기 ⑤ 국제 분쟁이 발생할 때 당사국 간의 조약이 있는 경우 법의 일반 원칙에 우선하여 재판의 준거로 적용된다.

- 오답 피하기** ① 조약은 대개 문서의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
 ② 법의 일반 원칙은 원래 국내 법체계에서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의 준거로 활용하고 있다.
 ③ 국제 관습법은 별도의 체결 절차가 없어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포괄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④ 우리나라에서 조약이 국회의 동의와 비준을 거치는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12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로 민주 정치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원리이다. 복지 국가의 원리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정답 찾기 ㄴ. 국민 주권주의는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ㄷ.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단순히 국민의 자유권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ㄹ. 최저 임금제의 실시는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가 민주 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공화국의 가장 큰 특징은 군주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13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의 이해

문제 분석 소극적 성격의 기본권은 자유권,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그러므로 A는 자유권, B는 청구권, C는 사회권이다. 자유권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다. 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서 침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찾기 ④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 오답 피하기** ① 환경권은 사회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② 죄형 법정주의는 자유권 중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국가에의 자유’는 참정권을 의미한다.
 ⑤ 자유권은 근대 시민 혁명을 통해 보장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인 반면, 사회권은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성장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기본권이다.

14 정당 방위와 긴급 피난의 이해

문제 분석 (가)에서 을은 자신의 법익에 대한 갑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려고 하였으므로 법원은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 방위로 판

단하였을 것이다. (나)에서 병은 정을 사망하게 하였지만 화재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서 정을 구하기 위하여 행동한 것이므로 법원은 위법성 조각 사유인 긴급 피난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정답 찾기 ① 을의 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② 을의 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가 적용된다. 지구 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후적 긴급 행위이다.

③ 병이 정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사망하게 한 것은 상해 치사죄의 구성 요건이 된다.

④ 병이 형사 미성년자이거나 심신 상실자가 아니고 강요된 행위도 아니었으므로 법원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라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다.

⑤ (가), (나)에서 법원의 판결은 무죄 선고이다. 집행 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며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15 법률 제정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법률안 제출은 정부나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발의로 시작되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로 회부된다. 본회의로 회부된 법률안은 질의 및 토론 절차를 거친 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정답 찾기 ① 법률의 제정은 정부나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발의로 시작된다.

오답 피하기 ② 법률안의 본회의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법률안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④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법률안 공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16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국가 원수이면서 대내적으로는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행정부 지휘·감독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가진다.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은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선전 포고와 강화권, 긴급 재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등을 가진다.

정답 찾기 ㄱ. 대통령의 임기를 한정하고 중임을 금지한 것은 장기 집권에 따른 독재 출현을 막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ㄷ. 긴급 재징·경제 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행사하는 긴급 입법권으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정답과 해설

오답 피하기 나. 공무원 임면권은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다.

르.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뿐 아니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17 다양한 행정 구제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행정 민원, B는 행정 심판, C는 행정 소송이다. 행정 민원,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은 모두 행정 구제 제도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가. 민원의 처리 결과는 원칙적으로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와 구제 절차를 포함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법 국가주의는 행정 행위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의 원리로 행정 소송이 이 원리에 의한 제도이다.

오답 피하기 나. 행정 심판은 행정 행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작합성, 부당성 등도 심리·판단할 수 있다.

르.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는 국가에 의해 개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는 제도로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에 해당한다.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은 행정 쟁송에 해당한다.

18 개인 간의 분쟁 해결 이해

문제 분석 갑에게 빌린 돈을 을이 갚지 않는 것은 개인 간의 분쟁에 해당한다. 이러한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로 내용 증명 우편, 민사 조정 제도, 소액 사건 심판, 민사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찾기 다. 민사 소송을 통해 갑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을이 재산이 없거나 고의로 빼돌릴 경우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갑의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을은 임의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르. 소액 사건 심판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되는 재판 제도이다.

오답 피하기 가. 내용 증명 우편에서는 우편에 기재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민사 조정 제도는 법관이나 조정 위원회가 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19 불법 행위의 이해

문제 분석 (가)에서 갑의 과실로 인해 을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일반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나)에서 병과 정이 무를 함께 폭행한 것은 특수 불법 행위 중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③ (나)에서 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될 경우에도 병의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감독 의무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갑은 과실로 길을 가던 을에게 손해를 주었으므로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가)에서 갑의 과실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갑이 사는 아파트의 소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나)에서 무는 병과 정 중 한 사람이나 병과 정 전체를 대상으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가)는 일반 불법 행위, (나)는 특수 불법 행위의 사례에 해당한다.

20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이해

문제 분석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주고 임차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임차인은 계약 이전에는 등기부 등본을 검토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지 않은 다른 권리 사항들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이후에는 계약금 및 잔금 지급 시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확인하고, 잔금 지급 이후 입주,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정답 찾기 ② 주민 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등기 이전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필요한 절차이다.

오답 피하기 ① 등기부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각종 권리의 변동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③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의 대리인일 경우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입주 후 가능한 한 빨리 주민 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 후 실제로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은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은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정답찾기 ⑤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판결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분쟁에 개입할 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국제적인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등의 여러 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국제 연합의 경제 사회 이사회이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에는 국제 연합 회원국 이외의 국가도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국제 사법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

10 _ 국제 사회의 현황과 과제 이해

문제분석 냉전 종결로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세계화의 진전과 다양한 행위 주체의 영향력이 증가하였고, 인종·민족·종교 등에 의한 국지적 분쟁이 증가하였다. 또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문화 문제 등 다양한 국제 문제로 인한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합(UN)의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정답찾기 ㄷ.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환경 문제, 인권 문제, 경제 문제, 문화 문제 등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지구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합(UN)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ㄹ. 국제 연합(UN)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상임 이사국의 잦은 거부권 행사로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점, 회원국들의 분납금 미납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 발생, 중요한 국제 문제에서 국제 연합이 배제된 채 각국 대표들 간의 협상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지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오답피하기 ㄱ. 냉전의 종결 이후 국제 연합(UN)의 국지적 분쟁 조정 역할은 증가하였다.

ㄴ. 남북 문제는 경제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와, 그러한 격차가 해마다 확대 되어 가는데서 생기는 정치적·경제적 문제를 총칭하는 말이다.

실전 모의고사 1회 본문 138~142쪽

01 ①	02 ⑤	03 ②	04 ①	05 ②
06 ③	07 ①	08 ①	09 ⑤	10 ②
11 ③	12 ③	13 ①	14 ⑤	15 ③
16 ⑤	17 ④	18 ⑤	19 ③	20 ③

01 _ 국민 주권의 원리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글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해야 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이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졌으므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 언론·출판 등의 자유, 복수 정당제 등의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정답찾기 ① 국민 주권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뜻한다. 이는 곧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뜻에 근거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민이 자신을 스스로 지배하는 정치 원리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결국 국민이라는 동일한 주체임을 전제로 한다.

오답피하기 ② 국민 주권의 원리를 강조한다고 해서 국가 활동의 능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 활동의 능률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③ 국민 주권의 원리는 정부 형태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④ 국가 규모가 작고 인구가 적을수록 실시하기가 유리한 것은 직접 민주 정치 방식이다. 국민 주권의 원리는 어떤 형태의 민주 정치 방식이든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⑤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 민주주의는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깊다.

02 _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해

문제분석 안티고네가 말한 하늘의 법은 우주 만물의 진리로서 그 내용이 정의에 합치된 법이다. 그러나 왕이 임의로 만든 법은 법이라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그 내용이 정의에 어긋나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법의 형식만 강조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도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찾기 ⑤ 안티고네는 하늘의 법이 왕이 임의로 만든 법보다 더 정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왕이 임의로 만든 법은 법의 형식만 강조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법치주의와 관련되고, 하늘의 법은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도 정의롭다는 점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와 관련된다. 안티고네는 법의 내용이 정의롭지 않으면 아무리 법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므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 오답피하기** ①, ③ 법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하고 있지만 제시된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②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④ 국가의 법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03 _ 사회 계약론의 이해

문제분석 인간은 사회 계약을 통해 사회 또는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 계약론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고 자연권 보장을 위해 개인의 모든 권리를 군주에게 양도하고 군주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로크는 자연 상태는 원래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불안정한 상태라서 계약에 의해 국가를 만들고 개인은 일부의 자연권만 양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루소는 양도하거나 나눌 수 없는 주권을 행사하여, 시민의 일반 의지에 입각한 정치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갑은 홉스, 을은 루소, 병은 로크이다.

정답찾기 ② 루소는 주권을 양도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대의 정치를 반대했다. 각각의 시민이 전체의 선을 생각할 때 모아지는 의지인 일반 의지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루소는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홉스는 자연 상태가 매우 불안하므로 인간은 그들의 자연권을 군주에게 모두 양도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기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때 군주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는 헌법의 통제를 받는 군주제를 말하므로 홉스의 주장과는 다르다.

- ③ 국가는 시민의 일반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 사람은 루소이다.
 ④ 저항권을 시민의 고유한 권리로서 인정한 사람은 로크이다.
 ⑤ 홉스, 로크, 루소 모두 국가를 합의에 기초한 인위적인 산물로 보았다.

04 _ 국제 관계의 이해

문제분석 국제 사회는 주권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여 구성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문제를 놓고 분쟁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 많다. A국과 B국은 오랜 기간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다가 결국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양국 정상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므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답찾기 ㄱ. 국제 연합 총회는 주권 국가들이 평등하게 1표씩을 행사함으로써 의사를 결정한다. 따라서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ㄴ. 국제 사회를 보는 자유주의적 관점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서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의한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A국과 B국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했으므로 자유주의적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ㄷ. 제시된 조약은 A국과 B국 간에만 적용되는 국제법이다. 모든 국가에 대해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국제관습법이다.

ㄹ. 국제 사법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하면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므로 강제력이 있다.



더 알아보기

국제 사법 재판소

- 국제기구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국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국제 연합의 기맹국뿐만 아니라 비기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05 _ 연소 근로자의 보호 규정 이해

문제분석 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유해하거나 보건상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며 근로 계약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정답찾기 ② 연소 근로자라도 근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연소 근로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주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이 대리로 연소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오답피하기 ① 연소 근로자는 하루 7시간 이내에서 근로시켜야 한다. 연장 근로를 할 경우라도 1시간 이내이어야 하므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

- ③ 연소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보호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④ 연소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한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⑤ 연소 근로자가 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06 _ 정치 참여의 중요성 이해

문제분석 투표 종료 시간을 늦추면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투표에 참가한 사람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투표소를 여러 곳에 설치하거나 인터넷 상의 투표를 허용하면 사람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다. 제시된 주장들은 모두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다.

정답찾기 ③ 투표율을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는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위정자들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막아 민주 정치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① 정치 참여에 있어서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면 소수의 전문가에 의한 정치가 효율적일 수 있다.

②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 정치권력의 효율성은 신속한 의사 결정과 강력한 정책 집행을 통해 실현된다.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다수의 대중보다는 정책 결정 전문가에 의한 통치가 바람직할 수 있다.

④ 과도한 정치 참여를 경계한다면 투표율을 높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⑤ 신속한 정책 결정을 중요시 할 경우 대중의 정치 참여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

07 _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의원 내각제는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들로 구성된다.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정책을 주도한다.

정답찾기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몇 개의 정당이 연합하여 내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연립 정권을 세워야 한다. 2012년에는 A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단독 내각을 구성했으나, 2004년과 2008년에는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으므로 연립 정권이 수립되었을 것이다.

오답피하기 ② 2004년에는 A당이 제1당이지만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B당이나 C당과 연합하여 정권을 담당했을 수 있다. 혹은 B당이 C당과 연합했을 수도 있다. 또 2008년에는 B당이 제1당이지만 역시 과반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A당이나 C당 또는 D당과 연립 정권을 수립했을 수 있다. 따라서 2004년과 2008년에는 어느 특정 정당이 정권을 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D당은 2008년에 B당과 연합할 경우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므로 연립 정부를 구성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④ 2012년은 A당에 의해 단독 정권이 수립되었으므로 2004년의 연립 정권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⑤ 의원 내각제에서는 정당의 의석수에 관계없이 내각의 정책 집행에 대해 의회가 불신임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08 _ 선거구제의 종류 이해

문제분석 (가)에서는 선거구가 4개이고 의석수도 4개이다. 즉,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다. (나)에서는 선거구가 2개인데, 의석수는 4개이다. 즉,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이다.

정답찾기 ㄱ. 당선자 이외의 후보자가 얻은 표가 사표이다. (가)는 소선거구제로 1명만을 당선자로 결정하므로 나머지 2명의 후보자가 얻은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반면 (나)는 중선거구제로 2명을 당선자로 하므로 탈락한 후보자 1명이 얻은 표만 사표가 된다. 따라서 (가)가 (나)보다 사표가 더 많다.

ㄴ. 소선거구제는 최다 득표자 1명만을 선출하므로 다수 대표제를 적용하고, 중선거구제는 여러 명을 선출하므로 최다 득표자보다 소수의 표를 얻은 후보자도 당선될 수 있는 소수 대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ㄷ. (가)의 갑당은 득표율은 32%인데, 의석수는 3개이므로 전체 의석 4개 중에서 의석을 75%를 차지하고 있다. 즉,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지나치게 크므로 과대 대표되었다. (나)의 을당은 득표율이 38%인데, 의석률은 50%이다. 역시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크므로 과대 대표되었다.

ㄹ. (가)에서는 갑당이 3석이었으나 (나)에서는 1석으로 줄어들었으므로 갑당은 (가)의 선거구제를 선호할 것이다. 이에 비해 (나)에서는 을당과 병당이 각각 1석씩 추가되었으므로 이들 정당은 (나)의 선거구제를 선호할 것이다.

09 _ 정치 참여 주체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A는 공교육을 정착시키려는 목적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 단체이다. B는 전국의 한의사들이 모인 단체로서 직업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 집단이다. C는 총선에서 패배했고, 공천을 하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당이다.

정답찾기 ⑤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은 모두 비공식적인 정치 참여 주체이다. 공식적인 정치 참여 주체는 국가 기관인 국회, 행정부, 법원, 지방 자치 단체 등이다.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은 국가 기관이 아니므로 비공식적 정치 참여 주체이다.

오답피하기 ① 정치 과정에서 투입은 국민이 국가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단계이다. 시민 단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제시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므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익 집단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정 이익을 정부에 요구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역 단위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주로 지역의 이익이나 관심사에 주목함에 따라 농치기 쉬운 특정 분야의 요구를 통해 지역 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도 한다.

③ 정당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여 대표자로 선출되도록 한다. 이러한 대표자가 의회에 진출하여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의회와 정부의 정책 이견을 조율함으로써 정부와 의회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④ 정당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공익을 추구하고, 시민 단체는 특정 분야에서 공익을 추구하지만, 이익 집단은 유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혹은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므로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10 _ 행위 능력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한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일정한 부분에서 이러한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



만,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은 법원에 의해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이다.

정답찾기 ② 을은 만 18세로서 혼인을 했으므로 성년으로 의제되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년 의제 범위는 민법에서만으로 한정된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에 해당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까지는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유해 환경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을은 12월 31일까지는 청소년이므로 12월 25일 현재 을은 술이나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 근로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 계약은 갑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③ 만 35세의 병은 지능이 만 10세 정도이지만 법원으로부터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행위 능력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성년자인 병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정은 피성년 후견인이지만 일용품의 구입 등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⑤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한다. 갑은 미성년자, 정은 피성년 후견인으로서 제한 능력자이다. 을과 병은 행위 능력자이므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11 _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의 서신 검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모든 서신에 대해 일괄적으로 서신 검열을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자신의 서신을 국가 기관이 검열하게 될 경우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답찾기 ③ 수용자의 모든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핵심적 요소로 하여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확고하게 하고자 한다.

오답피하기 ①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표자를 뽑아 정치를 하는 방식이므로 참정권 행사를 통해 실현된다. 통신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는 대의 민주주의의 실현과는 관련성이 없다.

② 국민이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에 근거를 둔다.

④ 인간다운 생활은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도의 생활 수준으로서 복지 국가의 원리에 해당한다.

⑤ 문화 국가의 원리에 해당한다.

12 _ 기본권의 종류 이해

문제분석 기본권 중에서 국가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천부 인권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등이다. 반면 국가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보장받는 것으로는 사회권, 청구권이 있다.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사

회권이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 근로, 환경 보호, 최저 생활 보장 등을 통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한다. 따라서 (가)는 청구권, (나)는 사회권, (다)는 자유권이다.

정답찾기 ③ 자유권은 기본권의 핵심이고 이것을 억압하면 다른 기본권의 행사도 어려우므로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장받는다. 즉, 포괄적인 성격의 기본권이다.

오답피하기 ① 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그 구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②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기본권 자체의 행사가 목적이다.

④ 천부 인권적 성격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인권으로서 국가의 존재 여부나 헌법의 규정 여부를 떠나 당연히 갖는 것을 말한다. 자유권은 천부 인권적 성격을 가지지만 사회권이나 청구권은 국가가 존재해야 하고, 헌법에 규정이 있어야 보장되는 실정법상 권리이다.

⑤ 사회권이나 청구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자유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 행사가 될 수 있는 한 적어야 한다.

13 _ 재판의 종류 이해

문제분석 (가)는 당선이나 선거의 효력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므로 선거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것이므로 수사를 거쳐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 재판을 받는다. (나)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므로 민사 재판이다. (다)는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을 다루는 것이므로 행정 재판이다.

정답찾기 ① (가)에서 갑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므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 따라서 수사를 거쳐 검사가 기소하면 갑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 재판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국가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국가를 대표하여 검사가 원고가 된다.

오답피하기 ② 민사 재판에서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했다면 2심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그러나 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했다면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맡는다.

③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경우 당사자는 행정 심판을 먼저 거친 후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④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민사 재판, (다)는 행정 재판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⑤ (가)는 선거 재판이 아니라 형사 재판이므로 3심제가 적용된다.

14 _ 법률안 의결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정부나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발의로 시작되며,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정답찾기 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라도 국가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을 국회에 돌려보내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오답피하기 ① △△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원(○○ 의원 등)이 발의했으므로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② 본회의 일정과 같은 국회의 의사 일정에 관한 정당 간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것은 교섭 단체이다. 상임 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그 소관 사무에 속하는 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다.

③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의 자구 심사나 오류 수정 등을 맡는다.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이다.

④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더 알아보기 **위원회와 교섭 단체**

국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회와 교섭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가 있는데, 상임 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그 소관 사무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현재 16개가 운영되고 있다. 특별 위원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이다. 대부분의 안건은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다. 상임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본회의에 넘겨져 찬반 투표를 거친다.

교섭 단체는 일정 수 이상의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의 정당 또는 정파를 말한다. 현재 국회법은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 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섭 단체의 대표를 원내 대표라고 한다. 교섭 단체는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고 조정하여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15 _ 혼인 및 출생의 의미 이해

문제분석 약혼은 두 사람 간의 계약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결혼식은 혼인의 요건이 아니라 관습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에 의해 사람은 권리 능력을 획득한다.

정답찾기 ③ (나)는 결혼식을 하는 모습, (다)는 혼인 신고를 하는 모습이다. 결혼식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있으나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나)와 (다) 사이의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사실혼 부부에게는 혼인의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의 부부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상호 간 정조,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는 발생한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인 (나) 이후에 갑

과 을은 서로 부양 의무를 진다.

오답피하기 ① 약혼은 두 사람이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계약이다. 따라서 이것을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어길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요건이 된다. 그러나 아직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상 가사 대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결혼식은 하나의 관습에 불과하다.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혼인 신고이다.

④ 자연인은 출생함으로써 권리 능력을 획득한다. 출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⑤ 약혼, 결혼식, 혼인 신고, 출생 신고 모두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다. 혼인 신고와 출생 신고는 행정 관청에 한다.

16 _ 주택 임대차 과정의 이해

문제분석 A는 B의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획득하고,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얻는다.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면 경매 처분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정답찾기 ⑤ 임차인 A는 B가 D은행으로부터 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전인 2013년 6월 7일에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경매 처분에서는 D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게 된다.

오답피하기 ①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 갑구에 기재되어 있다. ②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에 의해 확보된다. 2013년 5월 5일에는 A가 입주만 하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③ 2013년 6월 9일에 D은행은 B의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확보하였다. 저당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D은행이 이 주택을 점유할 수는 없다.

④ 경매 처분으로 B의 ○○주택에 대한 권리 관계가 소멸한다. 그러나 B가 C에게서 빌린 1억 원의 채무는 ○○주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된다.

17 _ 개인 간의 분쟁 해결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소송 이외의 다양한 분쟁 해결 수단을 활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례에서 을은 갑에게 처음부터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고 내용 증명 우편, 민사 조정 신청 등 소송 외의 방법을 활용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정답찾기 ④ 을의 자동차를 파손한 자는 갑의 아들이지만 법원은 갑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갑의 아들은 만 7세로서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감독자인 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내용 증명 우편은 분쟁의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해



결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리는 수단일 뿐이다. 그 우편에 기재된 내용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민사 조정은 소송 이전에 법관이나 조정 위원회에서 타협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받아들일도록 권유하는 제도이다. 민사 조정은 소송에 비해 간단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민사 소송을 하기 위해 반드시 민사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갑의 아들의 행위는 범죄(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만 만 7세로서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형사 처벌은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을은 갑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없다.

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므로 소송 제기 이전에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송 도중에 갑이 미리 재산을 빼돌렸다면 을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18 _ 유언과 상속 문제의 이해

문제분석 갑은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으므로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갑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직계 비속인 태아와 배우자 을이다. 갑은 유언에서 모든 재산을 ○○법인에게 준다고 했으므로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찾기 ㄷ.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으나 상속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을 가진다.

ㄹ.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 을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6억 원의 1/2인 3억 원까지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자필 유언은 유언자 스스로가 손으로 직접 유언서의 내용을 쓰면 된다.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등을 빠짐없이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한다. 증인은 필요하지 않다.

ㄴ. 을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직계비속인 태아만 상속받는다. 병은 상속 2순위, 정은 3순위로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19 _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이해

문제분석 1층에 사는 갑은 2층 배관시설의 하자로 물이 흘러내려 벽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갑은 을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을은 집주인 병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관시설은 공작물로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1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일 점유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소유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정답찾기 ㄴ, ㄷ. 갑은 1차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인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소유자인 병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오답피하기 ㄱ. 을은 공작물 점유자, 병은 공작물 소유자이므로 1차적으로 을이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진다. 을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병이 공작물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을과 병이 함께 갑에 대해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공작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의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으로 분류된다.

20 _ 위법성 조각 사유의 이해

문제분석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이라는 가치 판단이 가능해야 함을 말한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 종류로는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정당 행위,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을 들 수 있다.

정답찾기 ③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음주 운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갑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으므로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법원은 친구가 교통사고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위급한 상황(부상자의 생명 위협)을 피하기 위해 갑이 운전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인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갑이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다. ② 음주 운전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갑의 음주 운전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④ 부상자가 현재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는 상태가 아니므로 갑의 행위는 정당 방위가 아니다.

⑤ 갑이 자신의 청구권을 자력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자구 행위로 볼 수 없다.



실전 모의고사 2회

본문 143~147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②	05 ②
06 ③	07 ⑤	08 ②	09 ⑤	10 ②
11 ④	12 ⑤	13 ③	14 ①	15 ⑤
16 ③	17 ④	18 ②	19 ⑤	20 ③

01 _ 형사 절차 및 형벌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의 기소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의 징역은 유죄인 피고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자유형이다. ㉢의 집행 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시키는 것이다. ㉣의 사회봉사는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부과하는 형벌 외의 형사 정책 수단이다.

정답찾기 ⑤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에 있어서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뒤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집행 유예이다. 이에 따라 A씨가 집행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나게 되면 징역형이 집행되지 않게 된다.

오답피하기 ① 헌법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유죄의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검사가 기소를 해도 무죄로 추정된다.

- ② 집행 유예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③ 사회봉사는 형사 정책 수단으로 검사에 의해 부과될 수 없다.
- ④ 유죄의 선고가 있더라도 A씨가 상소를 할 수 있으므로 A씨의 유죄는 확정되지 않았다.

02 _ 위법성 조각 사유 파악

문제분석 제시된 사례에 나타난 법원의 판시 내용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한 A씨를 완력을 통해 체포한 경찰의 공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체포가 아닌 이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답찾기 ③ 재판부가 경찰관의 A씨 체포 및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A씨가 음주측정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한 A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① 정당 방위는 현재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권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다.

- ②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고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재판부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주된 이유가 아니다.
- ④ 완력을 사용하여 타인을 체포하는 것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 ⑤ 책임성은 위법성이 인정된 다음에 고려되는 것인데 재판부는 위법성이 없다고 한 것이지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더 알아보기 정당 행위

우리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 또는 ‘업무’에 의한 행위 등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의 예시에 불과하다. ‘법령에 의한 행위’라 함은 예를 들면 공무원의 직무 행위, 징계 행위, 현행범인(現行犯人)의 체포(逮捕), 정신병자의 감치(監置) 등을 말하고, ‘업무로 인한 행위’라 함은 직접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사회 관념상 정당시되는 행위를 업무로 하여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03 _ 공작물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이해

문제분석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찾기 ② 단독 주택의 점유자인 을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즉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단독 주택의 소유자인 병이 무조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1차적인 책임을 진다.

오답피하기 ① 을은 공작물의 점유자이므로 과실이 있어야만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③ 소유자인 병은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과실이 없어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④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은 모두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다.
- ⑤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데도 책임을 지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한 원고가 일반적인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전가할 수 있다.

04 _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행사 사례 분석

문제분석 사례에서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정답찾기 ②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그 순간 법률로서 확정된다.

오답피하기 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한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지만 그 다수당이 야당인지 여당인지는 알 수 없다.

- ③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의결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 ④ 대통령이 재의결된 법안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장이 이를 대신한다.
- ⑤ 법률안의 재의 요구는 반드시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05 _ 내용 증명 우편 분석

문제분석 제시된 문서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하여 주는 내용 증명 우편이다. 이 문서는 발송인이 언제, 누구



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한 우편이다.

정답찾기 ② 내용 증명 우편은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 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즉, 발신자가 자신의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내용 증명 우편은 법원이 아니라 우체국에서 문서의 발송 사실을 증명해 준다.

③ 일반적 소송 비용은 패소한 소송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권리 남용이 아니다.

④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우편에 기재된 내용과 발송 사실만 증명된다.

⑤ 내용 증명 우편은 발송자가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것이므로 수신자가 발신자에게 회신할 의무는 없다.

06 _ 자유권(양심의 자유)의 성격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명예 훼손에 대해 법원이 사죄 광고를 게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국가 권력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의 형성을 강요하므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A는 양심의 자유이다.

정답찾기 ③ 자유권에 속하는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 규정되어야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천부적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양심의 자유는 자유권 중에서 정신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② 자유권은 현대 복지 국가의 헌법 이전의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도 중시되었다.

④ 양심의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국가의 억압과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⑤ 자유권은 국가가 제정할 실정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 이전의 권리이다.

07 _ 소비자 권리의 성격 파악

문제분석 갑, 을, 병 세 사람은 소비자의 권리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은 소비자의 권리를 자유로운 선택권이자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라고 보고 있으므로 자유권으로 보고 있다. 을은 소비자의 권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회권으로 보고 있다. 병은 소비자의 권리를 피해의 예방 또는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하므로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정답찾기 ⑤ 병이 소비자의 권리를 다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로 보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권리를 절차적 권리로 보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병이다.

오답피하기 ① 상품과 용역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 또는 소비 행위에 대해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에 속한다.

② 소비자의 권리를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보았으므로 사회권이라고 본 것이다.

③ 병은 소비자의 권리를 청구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로 생각하고 있다.

④ 갑은 소비자의 권리를 을과 달리 자유권이라 보고 있으므로 소극적 권리라고 본 것이다.

08 _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언론의 중요성에 입각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고 언론 보도의 사소한 오류나 명예 훼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정답찾기 ㄱ, ㄷ. 헌법재판소가 언론 보도에 대한 형사 제재에 반대하는 것은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시하고, 사회적 감시 기능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오답피하기 ㄴ, ㄹ.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므로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방지나 언론의 책임 강화와는 취지가 다르다.

09 _ 만 16세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A군은 만 16세의 청소년으로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청소년은 일반적 권리를 갖고 있지만,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정답찾기 ⑤ 청소년 범죄 사건의 처리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는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는 연령은 만 15세 미만이다.

②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7세 이상이다.

③ 중학생인 A군에게 퇴학 처분의 징계는 불가능하다.

④ A군은 소년법의 적용 대상으로 일반 형사 재판부가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0 _ 법적 사례 분석

문제분석 제시된 기사의 사례에 나타난 법정 다툼은 행정 소송이다. 행정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 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절차이다.

정답찾기 ② 학교의 징계도 일종의 행정 처분이고, A군의 부모가 제기한 소송은 행정 소송이므로 사법상 다툼이 아니라 공법상 다툼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였고, 고등법원은 행정 소송의 2심 법원이므로 원고 또는 피고가 항소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 사건 중에서 법률에 정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제시된 사례의 법정 다툼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④ 학교의 사회봉사 징계도 행정 처분의 일종이므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

으로서 구금되었다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재판을 받은 경우이다. 교사는 구금되지 않았으므로 국가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1 _ 로크의 권력 분립론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주장은 로크의 주장이다.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2권 분립을 옹호하였다.

정답찾기 ㄴ.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 즉 법률의 제·개정과 집행으로 나눈 것은 기능적 구별을 전제로 한 것이다.

ㄷ.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론은 미국의 대통령제 정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고, 로크의 사상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오답피하기 ㄱ. 3권 분립이 아니라 입법권과 집행권의 2권 분립을 주장하고 있다.

ㄸ. 힘의 균형이 아니라 입법권의 우위를 주장하였다.

12 _ 오늘날의 직접 민주 정치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란츠게마인데는 스위스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주민 총회이다. 이 총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모두 광장에 모여 지역의 주요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을 내리는 정치 방식은 직접 민주 정치이다.

정답찾기 ⑤ 주민이 직접 공공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정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하는 관객 민주주의가 나타날 우려가 적다.

오답피하기 ① 주민 자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는 직접 민주 정치 뿐만 아니라 간접 민주 정치가 있다.

② 중우 정치는 우매한 대중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으로 직접 민주 정치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③ 주민이 직접 공공 정책을 결정하므로 주민이 자신들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하기가 유리하다.

④ 직접 민주 정치는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동질성을 중시한다.

13 _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소송에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K씨는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정답찾기 ㄴ. ㉠은 법무부의 보안 관찰 처분 기간 갱신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이므로 행정 소송이고 따라서 공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다.

ㄷ. 소송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면 해당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지된다.

오답피하기 ㄱ. 사면은 일반 사면이든 특별 사면이든 대통령의 권한이다.

ㄷ.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14 _ 죄형 법정주의의 세부 원칙 이해

문제분석 죄형 법정주의의 세부 원칙으로는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 있다.

정답찾기 ① 형사 제재 기간은 한정되어야 하는데 보안 관찰 처분 기간의 횟수나 최대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는 죄형 법정주의의 세부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명확성의 원칙은 무엇이 범죄이고 각각의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답피하기 ②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의 심각성 정도와 형벌 경중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사후 입법) 그 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④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은 형벌은 성문 법률(成文法律)에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해석 가능한 문언의 한계를 넘어 유사한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부과하거나 가중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15 _ 국제법과 국제 사회 행위 주체 이해

문제분석 국제안보지원군(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ISAF)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가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 내 치안을 맡은 군대로 UN의 결의에 따라 창설된 군대이다.

정답찾기 ⑤ ㉠은 ㉡의 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가 간에 체결된 협정에 대해 국가 원수로서 비준을 하지 않은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② 국제안보지원군은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성된 다국적군이므로 정부 간 국제기구이고, 그 존재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관점의 근거가 된다.

③ 국가 간에 체결된 협정은 당사국에게만 적용된다.

④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조약에 해당하는 협정의 체결·비준의 당사자로서 국가를 대표하므로 국제 행위 주체 중 국가에 해당한다.

16 _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 분석

문제분석 △△지역에서 ○○○당은 전체 투표자의 50% 초반대의 지지를 받았지만, 전체 의석의 94%를 획득했다. 이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아주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최대 득표자만 당선시키는 소선거구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정답찾기 ㄴ.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가 큰 경우 유권자의 의사가 국회의 의석 분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전체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가 큰 것은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때문이므로 선거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현행의 소선거구제는 군소 정당보다 거대 정당이 유리하여 군소 정당이 난립하기 어렵다.

ㄴ.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유권자가 기권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유권자 의식의 문제라기보다 선거 제도의 문제이다.

17 _ 선거 제도 분석

문제분석 ○○국은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제시된 자료와 같이 복잡하고 독특한 의회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다. 스웨덴은 우리나라의 1인 2표제에서의 2표의 효과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1인 1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찾기 ④ 각 정당이 당선 우선순위를 결정하지만 복수 후보를 공천하고 유권자가 투표 시 순번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과 공천권을 공유하는 효과가 있어 국민이 정당의 공천권을 견제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므로 선거구는 중·대선거구이고 대표 결정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② ○○국에서는 유권자가 한 후보를 찍으면 그 후보의 소속 정당을 정당 투표로 인정하므로 유권자에게 1표씩만 부여됨을 알 수 있다.

③ 정당 득표율이 4%를 넘긴 정당들을 대상으로 의석을 배분하므로 군소 정당 난립을 견제하는 장치가 있다.

⑤ 정당별 득표수 순위에서 하위의 정당이 상위의 정당과 의석수 순위가 같을 수는 있어도 역전될 수는 없다.

18 _ 투표 결과에 따른 의석 배분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의 의석 배분 규칙에 입각해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하면 된다.

정답찾기 ② 정당별 득표수에서 1.4를 나눈 값이 가장 큰 갑당에 1석이 배정되고, 갑당의 값을 3으로 나눈 값(11,746.90)과 나머지 정당들의 값 중에서 그 값이 가장 큰 을당이 2번째 의석을 배분받는다. 을당의 값을 3으로 나눈 값(5,930)과 나머지 정당들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갑당이 또다시 1석을 배분받고, 갑당의 값을 5로 나눈 값(2,349.38)과 나머지 정당들의 값 중에서 가장 큰 병이 1석을 배분받는다. 따라서 의석은 갑당 2석, 을당 1석, 병당 1석으로 배분된다.

19 _ 국회의 국정 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비교

문제분석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 A는 국회의 국정감사이다. 그리고 행정부 내부통제의 성격을 가지며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 B는 감사원의 감사이다. 따라서 (가)는 국회, (나)는 감사원이다.

정답찾기 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은 (나)의 감사원이고, 감사원은 결산 검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국회의 국정 감사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②, ④ 감사원은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사는 행정부가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③ 조세 법정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20 _ 예산안과 법률안의 비교

문제분석 재정 분야에서 매 회계년도 9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국가 재정 운영 계획안인 A는 예산안이다. 입법 분야에서 국회가 제한 없이 수정·추가할 수 있는 B는 법률안이다.

정답찾기 ㄴ. 법률안은 정부뿐만 아니라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나 상임 위원회에서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A의 예산안은 정부만 제출할 수 있다.

ㄷ. 예산안과 정부 제출 법률안은 헌법 규정에 의해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국무 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답피하기 ㄱ. 예산안과 법률안 모두 국회 본회의 의결 전에 상임 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친다. 예산안의 경우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ㄴ.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예산안의 경우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실전 모의고사 3회

본문 148~152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③	05 ③
06 ②	07 ⑤	08 ③	09 ③	10 ①
11 ④	12 ②	13 ④	14 ④	15 ④
16 ④	17 ③	18 ③	19 ④	20 ⑤

01 _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에서는 민주주의의 의미 중 의사 결정 원리로서의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의미 중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정답찾기 ㄱ, ㄴ.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결과보다는 서로 다른 의견을 통합시켜나가는 과정,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원리를 중시한다. 구체적 덕목으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 의식, 대화와 타협 등을 들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확보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와 관련된다.

ㄷ. 국가와 사회의 운영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이다.

02 _ 민주주의와 이념의 관계 파악

문제분석 (가)는 사회 민주주의, (나)는 자유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③ 사회 민주주의는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하면서 자유 민주주의에 비해 사회 정의와 국민 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오답피하기 ① 대의 민주주의/직접 민주주의의 구분은 의사 결정 방식에 따른 것으로, 이념에 따른 민주주의 유형과 관련이 없다.

②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는 대의 민주주의 상황에서 의회의 위상 저하와 행정부의 권한 강화 상황에서 나타난 것으로 학습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④ 자유 민주주의보다 사회 민주주의가 공공복리와 형평성을 중시한다.

⑤ 자본주의 경제 발달에 따른 문제점 해결에 적극적인 것은 사회 민주주의이며, 자유 민주주의 역시 사회 민주주의보다는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다.

03 _ 우리나라 외교의 전개 과정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 외교는 해방 이후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전개되어 왔다.

정답찾기 ㄷ.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평화 통일 기반의 조성, 경제적 실리 추구, 대북 포용 정책 추진 등을 목표로 북방 외교 및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활발히 전개하기 시작했다.

ㄷ.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국익 증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의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ㄱ, ㄴ.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를 천명하고, 공산권 국가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것은 (나) 시기이다.

04 _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파악

문제분석 (가)는 내정 불간섭의 원칙(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으로 국제 관습법에 해당하며, (나)는 한-EU 자유 무역 협정의 일부로 조약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ㄴ.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포괄적 구속력), 조약은 조약을 맺은 당사자 간에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ㄷ. 국제 관습법은 별도의 체결 절차가 없지만, 조약은 별도의 체결 절차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주요 조약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답피하기 ㄱ. 모든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강제적 집행이 어렵다. ㄷ. 분쟁 발생 시 관련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재판 준거로 사용 가능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 원칙이다.

05 _ 사회 계약론자들의 사상 이해

문제분석 갑은 루소, 을은 흄스, 병은 로크이다.

정답찾기 ③ 로크는 사회 계약을 맺을 때 구성원들의 권리는 일부만 양도된다고 보았다(일부 양도설). 즉, 자연 상태의 권리에는 생명, 재산, 자유와 같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가 있고, 제재의 권리와 같은 양도 가능한 권리가 있는데,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계약을 통해 제재의 권리를 제3자(국가)에게 넘긴다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절대 군주제를 바람직한 형태로 간주한 것은 을, 즉 흄스이다.

② 국가가 국민들의 직접적 의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즉, 직접 민주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루소이다.

④ 저항권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은 로크이다.

⑤ 세 사람 모두 국가를 목적이 아닌 시민들의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더 알아보기

저항권에 대한 사회 계약론자들의 입장

저항권에 대한 사회 계약론자들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흄스는 사회 계약을 통한 최소한의 안전 보장이라는 조건이 안 지켜질 때에만 저항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소극적 입장), 로크는 저항권 행사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적극한다(적극적 입장). 한편 루소의 경우 직접 민주 정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신이 행한 활동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사실상 저항권 논의가 무의미하다.

06 _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의 법률 제정 절차는 법률안 제출(국회의원과 정부) → 심사(소관 상임 위원회) → 의결(국회 본회의) → 공포(대통령)



령) → 효력 발생(공포 후 20일 경과 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경우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정답찾기 ② 국회의 법률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오답피하기 ① 법률안 제출은 정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대통령)의 공포를 거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④ 법률안의 공포 및 거부 모두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 단, 국회의 재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칠 경우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다.

07 _ 정부 형태의 비교 이해

문제분석 갑국과 을국은 서로 다른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조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을국의 경우 a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수반이 a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갑국은 을국과 정부 형태가 다르므로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정답찾기 ⑤ 의원 내각제의 경우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할 경우 의회 해산권과 내각 불신임권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등이 없어 상대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오답피하기 ①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일치하는 것은 을국이다.

② 내각(행정부)이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③ 의원 내각제는 의회와 행정부가 융합된 형태이기에 대통령제에 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④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다.

08 _ 정당 형태와 정치 상황의 관계 파악

문제분석 갑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인데 과반수 의석(50% 초과)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며, 을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면서 제1당이 과반수 의석(50% 초과)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의석을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났다면 갑국은 다당제, 을국은 양당제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정답찾기 나. 갑국은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지만, 을국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의 수단을 통해 다수당 횡포 견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다. 갑국의 경우 연립 정부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 경우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우려가 있다. 반면 을국은 다수당이 뚜렷이 존재하므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보다 분명하다.

오답피하기 가. 갑국은 연립 정권이 들어설 수밖에 없어 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르.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 쉽다는 장점을 지닌다.

09 _ 선거구제 개편의 목적 이해

문제분석 개편 전에는 선거구당 2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개편 후에는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려 하고 있다.

정답찾기 ③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선거 관리가 용이한 편이다.

오답피하기 ① 다당제는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에서 나타나기 쉽다.

② 사표 발생률이 높은 것은 소선거구제이다.

④ 게리맨더링 가능성과 선거구제 유형 자체는 연관이 없다.

⑤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중·대선거구제이다.

10 _ 선거구제 개편의 효과 분석

문제분석 동일한 선거구라 할지라도 분할 또는 합병함에 따라 당선자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선거구제가 달라질 경우 그런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변화의 효과를 보기 위해 모의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당선자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구	정당별 유효 득표수(천 표)					당선자 소속당			
	개편 전	개편 후	가당	나당	다당	라당	기타	개편 전	개편 후
A	A1	53	37	8	5	1		가, 나	가
	A2	28	39	20	16	4			나
B	B1	45	12	40	15	2		가, 다	가
	B2	35	28	23	7	4			가
C	C1	28	32	30	13	1		나, 다	나
	C2	22	25	22	34	3			라

개편 전후 정당별 의석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가당 : 2석 → 3석, 나당 : 2석 → 2석, 다당 : 2석 → 0석, 라당 : 0석 → 1석, 기타 : 0석 → 0석

정답찾기 가. 가당은 선거구제 개편 결과 의석수가 늘어나므로 선거구제 개편에 긍정적인 가능성이 크다.

나. 다당은 의석수가 2석에서 0석이 되므로 선거구제 개편에 부정적일 것이다.

오답피하기 다. 선거구제 개편 결과 나당은 의석수에 변화가 없지만 라당은 의석수가 증가한다.

르. 제시된 예와 보통 선거 이념의 문제는 관련이 없다.

11 _ 언론의 기능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은 SNS의 보급을 통해 언론의 속보성이 의미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를 역설하고 있다.

정답찾기 ④ 신속한 전달면에서 그 강점을 잃어버린 언론이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변



화시키고 있다'는 문구에서 정치 정보의 심층적 분석·전달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답피하기 ①, ② 제시문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 ③, ⑤ 일부 그러한 측면을 엿볼 수도 있으나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한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12 _ 헌법 소원의 유형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을 보면 정부의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 정답찾기** ㄱ.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국민의 청구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헌법 소원의 유형이다.
- ㄷ.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활용하는 것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ㄹ. 헌법 소원은 '자기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만 청구할 수 있다. 즉, 타인이 침해받는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그 침해가 없어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더 알아보기 **헌법 소원의 유형 구분**

헌법재판소에서는 심판이 청구된 사건의 유형에 따라 사건 번호를 부여한다. 그 중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제기하는 헌법 소원으로 '헌마'로 표시된다. 한편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신청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헌법 소원으로 '헌바'로 표시된다.

13 _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가)는 면책 특권, (나)는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 정답찾기** ④ 불체포 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된다.
- 오답피하기** ① 면책 특권은 불체포 특권과 달리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계속 유효하다.
- ②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③ (나)의 표결 결과, 즉 체포 동의안에 대한 부결이 의미하는 바는 정기 국회 회기 동안 병에 대한 체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제한을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4 _ 등기부 등본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가)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나)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정답찾기 ④ C가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D가 전세권을 설정한 것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므로 D에 앞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오답피하기** ① 소유권 관련 내용이 기재된 (가) 부분을 갑구, 소유권 이외 권리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나) 부분을 을구라 한다.
- ② 2012년 7월 2일에 ○○ 건물이 매매되었지만 실제 관련 내용이 접수되어 등기부 등본에 실려 등기부 상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2012년 7월 25일부터이다. 따라서 10일에 A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일주일 뒤인 2012년 7월 17일에 A를 상대로 하여 ○○ 건물을 가압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 ③ 2012년 7월 5일 현재 ○○ 건물의 소유자는 A이므로 저당권 설정 계약 주체는 A와 C이다.
- ⑤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변제권이 인정되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로 부동산 소유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등기부 등본에 등록된 전세권은 별도로 등기부에 설정하는 과정을 거친 것을 의미하며 부동산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15 _ 손해 배상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것처럼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에는 행정상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정답찾기** ㄴ. 을은 갑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 그 사용자인 △△운수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사용자 배상 책임).
- ㄹ. 손해 배상 대상에는 물질적 손해만이 아닌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지급되는 배상금을 위자료라 한다.
- 오답피하기** ㄱ. 을은 직접적 가해자인 갑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을은 ○○시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영조물의 하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6 _ 미성년자와의 계약의 특성 이해

문제분석 갑은 만 18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성인과의 계약과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

- 정답찾기** ④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성인으로 속인 뒤 계약을 맺었다면 거래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갑의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은 제한된다.
- 오답피하기** ① 미성년자와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자가 있는 계약은 미성년자 및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품을 이미 사용하였다더라도 판매점에서 허위 혹은 오류로 처리 속도를 제시한 것을 근거로 반품할 수 있다.
- ③ 내용 증명 우편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뿐이며, 그 내용의 사실 관계가 법적인



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맺었다면 법정 대리인이 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7 _ 상속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A가 유언을 남기지 못한 상태로 사망했기 때문에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법정 상속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다른 상속자들보다 50% 더 많이 상속받게 되어 있다.

정답찾기 ③ F는 비록 친자녀처럼 길렀을지라도 A의 양자나 친양자가 된 것은 아니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B는 전처로서 상속권이 없는 반면, E는 현재의 처로서 상속권이 있다.

② 상속권을 가진 C, D, E의 법정 상속 비율은 1 : 1 : 1.5이다. 따라서 C와 D는 1억 원, E는 1억 5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④ E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C와 D가 동일하게 1억 7천 5백만 원씩을 상속받으며, 자녀가 아닌 F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⑤ A가 사망하는 순간에 E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재혼을 하더라도 그 권리는 박탈되지 않는다.

18 _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때까지의 직·간접적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정답찾기 ㄴ. 성폭력 사범으로 오인되어 사회적 명성에 피해가 갔으므로 명예 회복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명예 회복 제도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그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제도이다.

ㄷ.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다가 무죄 재판을 받았으므로 국가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배상 명령 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상해·폭행·강도나 재산상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형사 재판 과정에서 신청함으로써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이다.

ㄹ. 행정 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제도이다. 사례에서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19 _ 학교 생활의 법적 관계 이해

문제분석 을은 만 14세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면 형사 처벌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학생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상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찾기 ㄴ. 을은 67일을 결석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사례의 경우 130일 이상) 출석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진급을 할 수 없는 유급 대상자이다.

ㄹ. 병의 부모는 갑과 학교 측을 상대로 감독자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을은 만 14세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ㄷ. 을은 중학생이므로 퇴학 처분 대상이 아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교 교칙(또는 학칙)에 의해 퇴학 처분이 가능하다.

20 _ 근로 3권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가)는 단체 교섭권, (나)는 단결권, (다)는 단체 행동권이다.

정답찾기 ⑤ 주요 방위 산업체,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보장되지만, 단체 행동권은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사용자는 단체 교섭권 행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② 단결권은 근로기준법 등에 제시된 근로자만 행사할 수 있다.

③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정(調停), 중재와 같은 조정(調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단체 행동권은 근로 조건에 관한 것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전 모의고사 4회

본문 153~157쪽

- 01 ④
- 02 ③
- 03 ②
- 04 ②
- 05 ③
- 06 ①
- 07 ②
- 08 ④
- 09 ①
- 10 ③
- 11 ②
- 12 ④
- 13 ⑤
- 14 ③
- 15 ⑤
- 16 ④
- 17 ①
- 18 ④
- 19 ①
- 20 ①

01 _ 사회 계약 사상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며, 두 사상가의 사회 계약 사상을 묻는 문제이다. 사회 계약 사상가들은 인간이 천부 인권을 부여받고 태어났지만 현실에서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온전히 지킬 만큼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통하여 사회, 즉 국가를 수립함으로써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찾기 ④ 로크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지만 권리 보장이 불확실한 잠재적 투쟁 상태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는 계약을 통해 국가로부터 권리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신탁을 배반하면 개인은 저항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오답피하기 ① 국민의 직접 참여를 주장한 사회 계약 사상가는 루소이다.

- ② 홉스는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자연권의 전부를 통치자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권력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홉스, 로크 모두 왕권신수설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회 계약 사상가로 국가 권력의 절대성을 강조한 사상가는 홉스이다.
- ⑤ 홉스와 로크 모두 국가는 사회 계약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더 알아보기 사회 계약론의 비교

구분	홉스	로크	루소
인간 본성	성악설	백지설	성선설
자연 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화와 질서 상태이지만 권리 보장은 불확실	자유롭고 평화로움
사회 계약	자연권의 전부 양도	자연권의 일부 양도	자연권 양도 불가 → 일반 의지에 의한 정치 공동체 구성
정치 사상과 정치 형태	군주 주권론, 절대 군주제 옹호	국민 주권론, 저항권 사상, 간접 민주 정치	국민 주권론, 간접 민주 정치 비판

02 _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고대 아테네의 정치 형태를 도출할 수 있다.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은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

는 정치 형태(직접 민주제)였다. 이는 국가의 규모가 크지 않고 시민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민회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참가하여 국사를 결정하였다. 한계로는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제외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답찾기 ③ 민회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참가하여 국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실시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복지 국가의 등장은 20C 이후이다.
②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제외되었다는 것이 아테네 민주 정치의 한계점이다.

④ 보통 선거는 간접 민주 정치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아테네는 직접 민주 정치를 시행하였다.

⑤ 도편 추방제는 시민이 참여한 비밀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도가 아니라 위정자들에 의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중우 정치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더 알아보기 도편 추방제

고대 그리스 민주정 시대에 모든 시민이 참여한 비밀 투표를 통해 위헌인물을 10년간 국외로 추방한 제도이다. 추방자 결정 방식은 이른 봄 민회에서 국가에 해를 끼칠 위험한 인물의 이름을 조개껍데기나 도편에 기입하는 비밀 투표로 하였다.



▲ 고대 아테네 시대의 도편

03 _ 근로자의 권리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당한 사례를 통해 부당 노동 행위와 그 구제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찾기 ㄱ. 부당 노동 행위란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 교섭권·단체 행동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 행위를 말한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를 위해 갑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헌법에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며 사회권에 해당한다.

ㄷ.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04 _ 자유권과 사회권의 특성 이해

문제분석 대화를 통해 기본권의 특성을 묻는 문제이다. A는 거주·이전의 자유(자유권)를, B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사회권)를 이야기 하고 있다.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과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천부 인권성이 강한 권리, 소극적·방어적 권



리, 가장 오래된 기본권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해당한다. 사회권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다. 적극적 권리로 '국가에 의한 자유'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②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과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해당된다.

오답피하기 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③ 역사적으로 자유권이 사회권보다 먼저 보장된 권리이다.
 ④ 사회권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권리이다.
 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은 청구권이며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국가 구조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이 있다.

05 _ 상속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과 빚의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단순 승인,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의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상속받을 수 있다. 단순 승인은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경우로 별다른 신고 절차는 없다. 한정 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이다. 일정 기간 내에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 승인 신고를 하면 된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면 된다. 여러 명의 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정답찾기 ③ 상속 재산과 빚의 금액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으로 한정 승인의 방법을 택하여 상속 재산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답피하기 ①, ② 단순 승인이다. 상속 재산과 빚이 모두 그대로 상속 되는 것은 옳은 설명이나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④, ⑤ 상속 포기이다. 상속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 재산이 많다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06 _ 민사 소송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문의하는 상담 사례이다. 민사 소송, 민사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① 이 사례에서는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소액 사건 심판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정식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제도이다.

오답피하기 ② 가압류는 금전에 관한 청구권의 강제 집행이 불가

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다.

③ 차용 증서나 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내용 증명 우편이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이다.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구입 청약에 대한 철회를 하고 싶을 때,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우편 수취인의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우편을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우편에 기재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④ 강제 집행 절차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스스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국가의 힘을 빌려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⑤ 민사 소송은 소송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항변을 하고,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형사 소송과 달리 자신의 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더 알아보기 개인 간의 분쟁에 대한 법적인 해결

구분	특징
민사 소송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 다툼에 대하여 국가가 고유의 재판권에 근거하여 조정하고 해결하는 절차이다.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절차이다.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송이 개시된다.
민사 조정 제도	본격적인 소송 제기 전에 앞서 법관이나 조정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타협 방안을 마련하여 분쟁 당사자들에게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이다. 정식 소송에 비해 원만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소액 사건 심판 제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정식 소송에 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 제도이다.

07 _ 사용자 배상 책임에 따른 특수 불법 행위 이해

문제분석 사례는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 배상 책임에 관한 것이다. 을은 리모델링 인테리어 가게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갑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일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리모델링 인테리어 가게 주인 병은 을의 사용자로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정답찾기 ㄱ. 갑은 손해에 대한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

ㄷ. 을은 가해 행위, 위법성, 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 관계, 책임 능력이라는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갑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병은 을의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병은 을과의 사무



관계를 바탕으로 을의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오답피하기 나. 갑은 을이 과실인 경우에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르. 병은 을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08 _ 정치 참여자의 특성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그림에서 A는 관련 분야의 특수성이 높고, 책임성 및 공익성이 낮으므로 이익 집단에 해당한다. B는 정치적 책임성과 공익성이 높고, 관련 분야의 특수성이 낮으므로 정당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④ 정당은 이익 집단과 달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 오답피하기**
- ① 의회와 정부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당이다.
 - ② 정당과 이익 집단 모두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 ③ 권력 획득이 목적인 것은 정당이다.
 - ⑤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기도 한다.

더 알아보기 이익 집단, 정당, 시민 단체의 비교

구분	이익 집단	정당	시민 단체
정치적 영향력	있음	있음	있음
관심 영역	좁음	넓음	넓음
정치적 책임	없음	있음	없음
추구하는 이익	사익	공익	공익

09 _ 선거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자료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를 적용하여 실시한 선거 결과이다. 선거 결과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는 한 명도 없다. B당 후보가 30% 득표율로 상대 다수 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사례이다. 이러한 선거 결과에서 병은 70%의 유권자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B당 후보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절대 다수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정답찾기 ① 결선 투표제는 절대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으면 1차 선거에서의 1, 2위 득표자를 상대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가 당선자가 된다는 점에서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사례에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의 대표성 문제를 이야기하므로 해결책이 아니다.

③ 현재 선거 결과도 소선거구제, 상대 다수 대표제를 시행한 결과이다. 소선거구제로의 변경보다는 대표 결정 방법에서 절대 다수의 득표를 얻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은 유권자 1인이 행사하는 1표의 가치가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다.

⑤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다. 사례에서는 알 수 없다.

10 _ 정치 참여자의 특성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가) APEC, (나) 국경 없는 의사회를 회원 자격과 지리적 범위에 따라 A~D로 분류하는 문제이다.

정답찾기 ③ (가) APEC은 회원 자격에서 정부 간 기구이며, 지리적 범위에서 지역적 기구이므로 C에 해당한다. (나) 국경 없는 의사회는 회원 자격에서 비정부 간 기구이며, 지리적 범위에서 범세계적 기구이므로 B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② A에 해당하는 것은 국제 연합, 세계 무역 기구 등이 있다.

더 알아보기 국제기구의 유형

구분	유형	사례
회원 자격	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 연합(UN), 세계 무역 기구(WTO),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등
	비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 적십자사, 국제 사면 위원회(AI),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등
지리적 범위	세계적 국제기구	국제 연합(UN), 세계 무역 기구(WTO), 국제 적십자사, 국제 사면 위원회(AI) 등
	지역적 국제기구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등
기능적 범위	포괄적 국제기구	국제 연합(UN) 등
	제한적 국제기구	세계 무역 기구(WTO),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제 통화 기금(IMF),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등

11 _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유의 사항 이해

문제분석 부동산의 매매 절차를 (가)~(라)로 나누어 각 단계별 유의 사항을 묻고 있는 문제이다.

정답찾기 ② 매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거래의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인지 확인 후 가급적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상당한 금액의 지급이 수반되는 계약인 만큼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의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오답피하기 ① 계약 이전 단계에서는 첫째, 부동산 탐색 단계에서는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부



동산의 상황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한다. 둘째, 구청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과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서 등을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한다. 셋째, 상대방의 설명이나 서류만으로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 ③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 시점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시점이다.
- ④ 등기 완료 후 등기부 등본의 읍구가 아니라 갑구에 소유권이 제대로 이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읍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되는 항목이다.
- ⑤ 영수증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때마다 반드시 주고받는다.

12 _ 현대 정치 과정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그림은 현대 정치 과정을 간략히 도식화한 것이다. 정치 과정이란 정치 참여자를 비롯한 사회의 여러 요소가 공공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둘러싸고 서로 작용하는 과정을 뜻한다. 투입은 이익 표출을 통하여 시작된다. 다양한 정치 참여자들이 각자의 요구와 지지를 표명하는 활동이며, 이익 집단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표출된 내용을 몇 개의 대안으로 취합하는 것을 이익 집약이라 하며 주로 정당에 의해 수행된다. 산출은 투입된 사항이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입법 등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정책 결정이란 정책 결정자가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주로 대통령이나 국회에 의해 수행되며, 정책 집행이란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활동으로 행정부에 의해 수행된다. 환류란 정책 결정과 이를 집행한 후 새로운 요구와 지지가 형성되어 정치 과정에 다시 투입되는 과정을 말한다.

- 정답찾기** ④ 선거는 환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 오답피하기** ① 투입은 전통적 정치 과정보다 현대적 정치 과정에서 보다 더 중시된다.
- ② 시민 단체는 정치 과정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치 참여자이나 정책 결정을 주도하지는 않는다.
- ③ 시민은 일반적으로 투입 측면에서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을 통하여 참여한다.
- ⑤ 권위주의적 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 결정 기구와 국민에 의한 평가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다.

13 _ 국회의 입법 과정의 이해

문제분석 교사와 학생의 질의응답 장면을 통해 입법 과정을 묻는 문제이다.

- 정답찾기** 병 : 법률안은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심의 후 폐기되거나 본회의에 상정된다.
- 정 :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된다.
- 오답피하기** 갑 :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을 : 제출된 법률안은 국민에게 공고하는 과정 없이 해당 상임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더 알아보기 국회의 입법 과정과 대통령의 거부권

〈국회의 입법 과정〉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권한은 권력 분립 구조 하에 국회의 법률 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 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_ 상속의 이해

문제분석 갑은 평소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나 유언 없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법정 상속에 관한 문제이다. 전 재산을 기부하였다면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 사례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정 상속이란 민법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상속을 의미한다. 상속 순위는 법정 순위에 의하며, 상속인이 있을 경우 후순위의 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없다.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받는다. 상속분은 균등 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한다. 갑은 재산 15억 원에서 빚 5억 원을 제외한 10억 원을 상속액으로 남겼다. 직계비속인 딸과 부인이 1:1.5의 비율로 상속 받으므로 딸은 4억 원, 부인은 6억 원을 상속 받는다.

- 정답찾기** ③ 을이 6억 원, 병이 4억 원을 상속받는다.
- 오답피하기** ①, ②, ④, ⑤ 상속액이 맞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유류분의 이해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인이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 액수의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부분이다. 피상속인이 재산자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증했을 경우 상속인은 실제 상속분이 법정 유류분에 모자랄 때 그 모자라는 부분을 재산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을 청구할 수 있다.

15 _ 헌법재판소의 이해

문제분석 헌법 제111조에 규정된 헌법 기관 (가)는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기능을 묻고 있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헌법 보장 기관, 기본권 보장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정답찾기 ⑤ 헌법 소원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오답피하기 ①, ③ 대법원에 관한 설명이다. 대법원은 모든 재판의 최종심을 담당한다.

②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은 국회가 행사하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담당한다.

④ 위헌 법률 심판의 경우 위헌 결정은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 알아보기 헌법재판소의 권한

종류	청구자	내용
위헌 법률 심판	법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
탄핵 심판	국회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주요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판
정당 해산 심판	정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그 해산을 심판
권한 쟁의 심판	기관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을 심판
헌법 소원 심판	국민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구제하는 심판

16 _ 정부 형태와 정당 제도 이해

문제분석 <정부 형태> 그림을 통해 갑국은 대통령제, 을국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통해 갑국은 다당제, 을국은 양당제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나. 갑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행정부 수반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르. 을국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며, 의회가 내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다.

오답피하기 가. 갑국의 의회 의석 분포가 다당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갑국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이므로 국민에 의해 행정 수반이 선출되고, 행정 수반이 속한 정당이 소수당일지라도 단독으로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다. 을국은 의회의 의석 분포가 양당제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소수 의견의 반영이 어렵다.

더 알아보기 정부 형태

구분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행정부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 대통령은 정치적 실권이 없으며 상징적 존재임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 담당 →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여 행정부 구성 → 행정부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융합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과 법률안 제안권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격한 권력 분립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 등에 대해 탄핵 소추권을 가짐 행정부 불신임권이나 국회 해산권 없음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요구와 정치적 책임에 민감 → 의회가 내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의회와 내각의 협조가 잘 이루어짐 정책의 능률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의 임기동안 효율적인 국정 운영 가능 → 신속·강력한 행정 기능 정국 안정과 정책의 연속성 보장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다수당의 횡포 견제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소 정당이 난립할 경우 정국 불안정 다수당의 횡포 → 소수의 이익 침해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재 정치의 가능성 행정부와 의회의 조화가 어려움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 시 조정 곤란
각료, 의원	겸직 가능	겸직 금지

17 _ 형사 소송의 절차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그림은 형사 소송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가)는 수사 단계, (나)는 공판 단계, (다)는 집행 단계에 해당된다.

정답찾기 ①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영장이 발부된 구속된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② 형사 재판의 경우 심리 과정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심리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행위이다.

③ 가석방이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의 복역 태도가 양호하고 개선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가석방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보호 관찰을 받는다.

④ 기소 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⑤ 실형이 선고되면 유죄로 형이 집행되나 집행 유예나 선고 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석방이 되지만 무죄는 아니다. 집행 유예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에 다른 범행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선고 유예란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 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18 _ 정치 문화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그림은 혼합형 정치 문화를 나타내고 있다. (가)국은 향리형 정치 문화의 성향이 강하다. (나)국은 참여형 정치 문화의 비율이 높으므로 참여형 정치 문화의 성향이 강하다.

정답찾기 ④ (나)국은 참여형 정치 문화의 성향이 강하므로 (가)국에 비하여 부당한 법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보다 비판적 수용의 성향이 강할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②, ③, ⑤ 향리형 정치 문화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더 알아보기 정치 문화의 분류

정치 문화는 정치 체제, 투입 과정, 산출 과정, 정치 주체의 대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태도와 행동 양식으로 알몬드와 버바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특징
향리형 정치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역할이 미분화된 전통 사회에서 주로 나타남 구성원들이 정치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함
신민형 정치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집권적인 권위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남 구성원들이 정치 공동체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참여에는 소극적임
참여형 정치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남 구성원들이 정치 공동체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19 _ 선거구제 이해

문제분석 현행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이다. 소선거구제란 1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나)와 같이 선거구제를 변경하는 경우는 중선거구 소수 대표제이다.

정답찾기 ① 변경 전 선거구에서의 당선자는 A당 : B당 : C당 = 3석 : 5석 : 0석이다. ①~⑧ 선거구의 유권자는 1,200명이다. 8개 선거구에서 각 당은 400명의 유권자에게 각각 지지를 받았으므로 득표율은 A당 : B당 : C당 = 약 33% : 약 33% : 약 33%이다. 그러므로 의석 점유율과 득표율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했다.

① 30-60-50	② 90-30-70	③ 30-50-40	④ 70-40-10
⑤ 40-60-50	⑥ 80-30-70	⑦ 30-50-40	⑧ 30-80-70

변경 후 선거구에서의 당선자는 A당 : B당 : C당 = 2석 : 3석 : 3석이다. 변경 후 선거구에서도 각 당은 400명의 유권자에게 각각 지지를 받았으므로 득표율은 A당 : B당 : C당 = 약 33% : 약 33% : 약 33%이다. 그러므로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①+⑤	②+⑥	→	70-120-100	170-60-140
③+⑦	④+⑧		60-100-80	100-120-80

- 오답피하기** ② A당은 1석 감소, C당은 3석 증가의 결과가 발생한다.
 ③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④ 중·대선거구로 변경되면 연고주의에 따른 투표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⑤ 중·대선거구제는 다당 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정국의 안정이 어려울 수 있다.



더 알아보기 선거구 제도

구분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 관리 용이 유권자의 입후보자 인물 파악 용이 다수당에 유리 - 양당제 확립, 정국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적 유명 인물의 당선 용이 소수당에 유리, 신진인사 진출 용이 사표 방지, 국민 의사 반영 효과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적 인물 당선 유리, 소수당에 불리 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불일치함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 선거 과열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 관리 혼란 후보자 난립, 인물 파악 곤란, 무관심 군소 정당 출현, 정국 불안 우려

20 _ 국제 사회의 변화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그림은 국제 사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 양극 체제, (나) 다극 체제, (다) 군사적으로 단극 체제, 경제적으로 다극 체제를 의미한다.

정답찾기 ㄱ.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국제 사회는 동서 냉전의 시대, 양극 체제가 형성되어 각 진영은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대립하였다. 마셜 플랜이란 제2차 세계 대전 후 서구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원조 계획이다. 서구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공산주의의 확대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트루먼 독트린이란 1947년 3월 미국 대통령 H. S. 트루먼이 의회에서 선언한 미국 외교 정책에 관한 원칙으로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나라에 대하여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ㄴ. 1960~1970년대에는 공산 진영의 다원화와 중국의 성장, 제3세계 비동맹 국가의 등장, 자유 진영에서의 일본과 유럽 공동체의 성장으로 다극 체제로 접어들었다. 닉슨 독트린이란 닉슨 대통령이 꾀에서 1969년 발표한 외교 정책으로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을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대처할 것이며 태평양 국가로서 중요한 역할은 하지만 과잉 개입은 하지 않으며 원조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ㄷ. 단극적-다극 체제는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탈냉전 시대,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무역 기구의 출범과 경제 블록화에 따른 무한 경쟁 시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지구촌 공동체의 형성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국지적인 분쟁과 지역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ㄹ. (가)는 양극 체제, (나) 다극 체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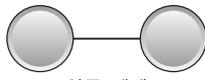
더 알아보기 국제 정치 체제의 유형

국제 정치 체제는 통합의 정도와 주도권을 행사하는 행위자의 수에 따라 양극 체제, 다극 체제, 단극적 다극 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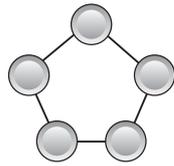
양극 체제는 국제 정치가 두 개의 초강대국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말한다. 1950년대의 냉전 시대에 국제 정치가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누어 미국과 소련에 의해 주도된 것이 예이다.

다극 체제는 국제 정치가 두 개의 초강대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 들어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미국과 소련의 주도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중국, 일본, 독일, 제3세계 국가들이 국제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새롭게 부상한 것이 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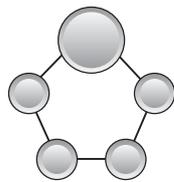
단극적 다극 체제는 하나의 초강대국과 이에 못지않은 여러 강대국들이 국제 정치를 주도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 미국만이 여전히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제 정치를 주도하고, 통일 독일, 유럽 연합(EU), 중국, 일본 등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오늘날의 국제 정치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양극 체제



다극 체제



단극적 다극 체제



실전 모의고사 5회

본문 158-162쪽

01 ①	02 ④	03 ③	04 ③	05 ②
06 ①	07 ④	08 ④	09 ④	10 ③
11 ⑤	12 ②	13 ②	14 ①	15 ②
16 ⑤	17 ③	18 ④	19 ③	20 ④

01 _ 위헌 법률 심판 제도 이해

문제분석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도 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정답찾기 ㄱ. 법원은 A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이 중지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된다.

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ㄷ. 법원은 형법 제139조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의 기각 결정과 A의 유죄 여부는 무관하다.

ㄹ. 법원은 형법 제139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A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02 _ 국무 회의와 감사원 이해

문제분석 A는 국무 회의, B는 감사원이다. 국무 회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부의장),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한다.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으로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정답찾기 ④ 감사원의 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답피하기 ①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지만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 회의는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이다. 대통령은 심의 기관인 국무 회의 의결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무 회의의 결정과 다른 내용을 결정할 수도 있다.

③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기관이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를 실시한다.

⑤ 감사원은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03 권력 분립의 원리 이해

문제분석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을 상호 분리 독립시켜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③ B가 명령 규칙 심사권이면 (가)는 사법부, (다)는 행정부이다.

오답피하기 ①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에 행사하는 견제 권한이다. (가)가 입법부라면 D의 견제 대상이 입법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D에 법률안 거부권이 포함될 수 없다.

② A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면 (가)는 사법부 (나)는 입법부, (다)는 행정부이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에는 법률안 거부권이 포함된다.

④ C가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이면 (가)는 행정부, (나)는 입법부, (다)는 사법부이다. D는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 수단이다. 대법원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므로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수단에 해당한다.

⑤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수단이다. E가 법률안 거부권이면 (가)는 입법부, (다)는 행정부가 된다. 따라서 (나)는 사법부에 해당한다.

04 제한 능력자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제한 능력자 제도는 일정한 정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많은 경우를 객관적으로 정해 놓은 뒤,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정답찾기 A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제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이다. B, C 중 C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피성년 후견인이다.

나. B는 피한정 후견인에 해당한다.

다.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대리에 의해 법률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나 법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리. 후견 개시 심판에서는 본인의 의사도 고려되어야 한다.

05 형사 재판과 선거 재판 이해

문제분석 형사 재판은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소송을 제기하여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한 재판이다. 선거 재판은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 유·무효를 따지는 재판이다. 형사 재판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선거 재판은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찾기 ② 선거 재판에서 법원은 당선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의원의 당선 효력을 인정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선거 절차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선거 재판이다. (가)에서 법원은 갑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

③ (가)의 원고는 검사, (나)의 원고는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후보자이다.

④ (나)의 총선(국회의원 선거)과 관련된 선거 소송은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항소 또는 상고가 불가능하다.

⑤ (가)는 형사 재판, (나)는 선거 재판이다.

06 정치의 의미

문제분석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활동을 말하며,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인간의 활동으로 이해한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답찾기 갑, 병, 정은 정치를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을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이해하고 있다.

가, 나. 정치를 국가만의 고유한 활동으로 이해하거나, 정치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와 관련이 있다.

오답피하기 다. 다원화 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유용한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보다 넓은 의미의 정치이다.

리. 정치를 사회에서 나타나는 지배와 피지배 현상으로 이해하거나,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와 관련이 있다.

07 사용자 책임의 이해

문제분석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정답찾기 가. (가)의 경우 업무 중에 일어난 과실이 아니므로 사용자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경우 피해자 을은 갑에 대해서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나)의 경우 업무 중에 일어난 종업원 갑의 행위로 을에게 입힌 손해에는 사용자인 A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A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다. 을은 A와 갑 모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리. (가)는 갑의 과실이 업무 중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A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의 경우 A가 갑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므로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다. (다)의 경우 을은 갑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며, A는 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08 양당제와 다당제 이해

문제분석 T기에는 갑당이 의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여 갑당이

내각을 구성하여 정책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T+1기에는 의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다. 따라서 정당 간 연합을 통한 연립 내각 수립이 불가피하다. 의석 점유율 1당과 2당이 연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정답찾기 ④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T+1기에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하여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갑당이 과반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T기에 비해 T+1기에는 정당 간 대립으로 정책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

② T+1기에는 과반수 의석을 점유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것이다.

③ T+1기에는 병당이 갑당 또는 을당과 연합하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병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T기에서보다 커질 수 있다.

④ 양당제보다 다당제에서 다양한 민의의 반영이 수월하다.

09 _ 형사 재판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형사 재판의 절차는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 법원 구성 → 원고(검사)의 증거·논거 제시와 피고인의 방어 → 법원의 선고로 이루어진다.

정답찾기 ④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범죄로서 보아 부정적인 행위라는 가치 판단이 가능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정당 행위,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구속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다.

②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으며 1심 재판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속 적부 심사는 기소 전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 구속 절차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보석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면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선고 유예이다. 집행 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10 _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자유주의적 관점과 현실주의적 관점이 있다. 자유주의적 관점은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보고 국제 사회에서도 도덕, 윤리가 존재한다고 본다. 국제법과 국제기구,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 보장을 강조한다. 현실주의적 관점은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본다. 상대국에 대한 힘의 우위 확보와 세력 균형 및 군사 동맹을 강조한다.

정답찾기 ③ 국제 적십자사를 세운 앙리 뒤낭은 전쟁 중 아군과 적군의 구별 없이 부상자를 구할 수 있는 구호 단체를 설립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관점과 관계 깊다.

오답피하기 ①, ④, ⑤는 모두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과 관련이 있다.

② 전쟁 중 부상을 당한 적군을 구호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11 _ 고소장과 내용 증명 우편 이해

문제분석 (가)의 고소장은 고소인이 범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나)의 내용 증명 우편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이다.

정답찾기 ⑤ 내용 증명 우편은 분쟁의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해결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려 반응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고소장의 제출 이후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 원고는 검사가 된다.

② 고소가 받아들여지면 수사가 진행된다. 가압류는 금전에 관한 청구권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다.

③ 내용 증명 우편의 발송이 강제 집행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병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강제 집행할 수 있다.

④ 내용 증명 우편은 우편에 기재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한다.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12 _ 이혼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이혼은 인위적으로 부부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 이혼은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이루어지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할 때 이루어진다.

정답찾기 ② A는 이혼의 의사 합치가 있고, 이혼 속력 기간이 필요한 협의 이혼이다. B는 재판상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될 때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진다.

오답피하기 ① 이혼 속력 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로 정해져 있다.

③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④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 이유나 동기는 확인하지 않고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확인한다.

⑤ 재판상 이혼은 이혼 신고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13 _ 국제법의 종류 이해

문제분석 국제법의 종류에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이 있다. 여기서 A는 조약, B는 국제 관습법이다. 조약은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약속이다.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 관습 법규이다.



정답찾기 ㄱ.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ㄴ.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을 기초로 재판을 한다.

오답피하기 ㄴ. 조약과 국제 관습법 모두 국내 재판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ㄷ. 조약은 체결 당사국에 한해 효력을 갖지만, 국제 관습법은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도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14 _ 정치 참여 주체의 이해

문제분석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의 획득과 자신들의 정견 실현을 위해 조직한 정치 단체이다. 이익 집단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다. 시민 단체는 공공선과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정답찾기 ㄹ. 행정부의 정책을 평가, 비판하는 기능은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에서 수행한다. (가), (나), (다) 모두 '예'가 들어간다.

ㄱ.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ㄴ.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당과 시민 단체이다.
 ㄷ, ㄹ. 총선에 후보를 배출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이다.

15 _ 부동산 거래의 이해

문제분석 부동산 매매 시 등기부 내용을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정답찾기 ㄱ.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ㄷ.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에 붙일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부동산 매매 계약은 구두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적인 분쟁 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ㄹ. 저당권은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아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집을 담보로 한 경우, 원래 집주인은 그대로 그 집에서 살 수 있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팔아 그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16 _ 청구권적 기본권 이해

문제분석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서 침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하거나,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이다.

정답찾기 ㉠은 형사 보상 청구권, ㉡은 국가 배상 청구권과 관련되어 있다.

㉢ 국가 배상 청구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오답피하기 ㉠ 형사 보상 청구권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 구속된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때 형사 보상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구금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받은 자는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형사 사건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권리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다.

㉣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17 _ 미성년자 제도 이해

문제분석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 또는 철회권, 취소권의 배제 등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찾기 ㉢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상대방은 미성년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매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 미성년자인 갑이 을에게 부모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을을 속였을 경우 갑이나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계약상 환불 금지 조건이 있더라도 법규의 효력이 우선한다.

18 _ 연소 근로자의 근로 조건 이해

문제분석 연소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부모의 근로 계약 대리 금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금 청구 가능,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도덕적으로 유해하거나 보건상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 금지, 근로 시간에서의 보호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정답찾기 ㄱ. 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보건상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된다.

ㄴ.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체결한다.

ㄹ. 임금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청구, 수령한다.

오답피하기 ㄷ.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사용자와 합의로 1일 1시간, 1주 6시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19 _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 이해

문제분석 언론은 보도할 내용을 결정하여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한다. 언론이 어떤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보도할 것인지에 따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답찾기 ㉢ 언론 기관은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한다.

오답피하기 ㉠ 언론 매체는 정책 결정 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 언론의 신속한 보도는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다.

㉣, ㉤ 제시문의 내용과 무관하다.



20 _ 유류분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피상속인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유증했을 경우 유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정액수의 재산을 유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유류분 제도라고 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찾기 나, 르. 태아가 사산되면 갑의 직계존속인 병과 배우자인 을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 을은 법정 상속분 9억 원의 1/2인 4.5억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가. 태아가 출생하면 을은 아이와 공동 상속인이 되며, 태아가 사산되면 병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 두 경우 모두 을의 유류분액은 4.5억 원으로 동일하다.

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태아가 사산될 경우 병의 유류분액은 2억 원이다.

실전 모의고사 6회 본문 163~167쪽				
01 ④	02 ②	03 ②	04 ③	05 ③
06 ③	07 ②	08 ③	09 ③	10 ③
11 ②	12 ④	13 ①	14 ②	15 ④
16 ④	17 ④	18 ③	19 ⑤	20 ⑤

01 _ 사회 계약설의 내용 비교

문제분석 갑은 로크, 을은 루소이다.

정답찾기 나. 루소는 주권은 양도되거나 위임, 분할될 수 없는 것이라는 주권 양도 불가설을 주장하였다.

르. 로크와 루소는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성립된 것이라고 본다.

오답피하기 가.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이권 분립론을 주장하였다.

다. 로크와 루소 모두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였다.

02 _ 복지 국가의 원리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의 법률 조항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근로기준법의 목적 조항으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정답찾기 ② 헌법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사유 재산권의 불가침성은 자유 민주주의 원리와 관련되며, 특히 근대 입헌주의에서 강조된 내용이다.

오답피하기 ① 헌법에서 사회 보장, 사회 복지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③ 복지 국가의 원리는 재산권의 제한과 의무 부과, 경제 활동에 관한 규제 및 조정을 통해 상대적·비례적·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④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

⑤ 복지 국가의 원리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한다.

03 _ 상속 사례의 분석

문제분석 상속 재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해야 하므로, 27억 원에서 6억 원을 제외한 21억 원이다. 사례에서 갑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배우자인 을, 직계비속인 병과 정이다. 그런데 갑이 상속 재산 중 1/3인 7억 원을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상속액을 계산해야 한다.

정답찾기 가. 입양의 기본적인 효과는 양자가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다.

다. 유언의 효력이 없다면, 을은 (21억 원 × 3/7) = 9억 원을 상속받는다.



오답피하기 나. 상속 제1순위는 직계비속(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1순위)이다. 사례에서 직계비속은 병과 정이 되고 제2순위인 직계존속 무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리. 유언의 효력이 있다면 상속 재산 21억 원 중 1/3인 7억 원을 ○○ 복지재단에 유증하고, 나머지 14억 원을 을과 병, 정이 1.5 : 1 : 1 = 6억 원 : 4억 원 : 4억 원 상속받게 된다. 이는 을과 병, 정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4.5억 원, 3억 원, 3억 원보다 많다. 따라서 을, 병, 정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04 _ 청소년의 보호 기준 이해

문제분석 갑은 대통령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만 19세임을 알 수 있고, 병은 단독으로 유언이 가능하므로 만 17세 이상이다. 갑, 을, 병은 모두 연령이 다르다고 했으므로 을의 나이는 만 18세이다. 정은 형사상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만 14세 이상인데, 만 17세인 병보다 어리므로 정의 나이는 만 14세 이상 만 16세 이하이다.

정답찾기 ③ 병은 만 17세이다. 취직 인허증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하다.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부한 취직 인허증이 있으면 가능하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대통령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만 19세이므로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② 자동차 운전면허는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를 제외하고 만 18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④ 정은 만 14세 이상 만 16세 이하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다.

⑤ 을은 만 18세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05 _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비교

문제분석 (가)는 청원권으로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며, (나)는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③ ㉠은 평등권의 내용이다.

오답피하기 ① 청구권적 기본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의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적극적 권리이다.

②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하며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이다.

④, ⑤ 사회권적 기본권은 빈부 격차, 노사 문제 등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고,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으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한다.

06 _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국가배상법) 이해

문제분석 군부대는 합동 훈련을 하던 중 조종사의 실수로 상담자 집 지붕을 훼손했다. 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개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로, 상담자는 행정상 손해 배상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정답찾기 병 : 조종사의 과실로 지붕이 훼손됐으므로 행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갑 : 행정 소송은 행정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제기한다. 여기에서는 군부대가 피해자에게 어떤 행정 처분을 내린 일이 없으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을 :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은 아니므로 국가 인권 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 : 손해라 함은 공무원의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모든 불이익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모두 포함한다.

무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이므로 행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7 _ 국제 사회의 전개 과정 이해

문제분석 갑은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으로 발발한 제1차 세계 대전의 결과, 을은 세계 대공황과 전제주의 등장에 따른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 병과 정은 각각 냉전 완화와 냉전 해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정답찾기 ㄱ. 제1차 세계 대전 후 침략 전쟁의 방지와 국가 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 연맹을 창설하였으나 미국의 불참과 독일·일본의 탈퇴 등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ㄴ. 몰타 선언(1989)은 냉전 체제의 종식을 알리는 선언으로 이 선언 이후 동유럽의 공산주의 포기, 독일의 통일(1990), 소련의 해체(1991) 등 공산 진영이 쇠퇴하였다.

오답피하기 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맹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등장한 국제 연합(UN)은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ㄷ. 미국은 닉슨 독트린 이후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축소하였다.

08 _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세력 균형 체제는 특정 국가 또는 국가 집단의 세력을 다른 국가들이 상쇄시킬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 억제하는 전략이다. 전쟁 억제를 위해 군사력의 증강을 통한 적대 세력과의 힘의 균형, 타국과의 동맹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현실주의적 관점과 관련이 있다.

정답찾기 ③ 현실주의적 관점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동맹 등을 통한 세력 균형 체제를 구축한다.

오답피하기 ①, ②, ④, ⑤는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므로 국제 사회에 도덕, 윤리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래서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 국제평화를 보장하고자 한다.

09 _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특징 비교

문제분석 A는 시민 단체, B는 이익 집단, C는 정당이다.

정답찾기 ③ C는 정당이므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오답피하기 ① A는 정부 기관이 아니므로 비정부성, 정치권력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비권력성의 특징을 가진다.

② B는 국회 내 직능 대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각 직업별 이익을 집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

④ 이익 집단은 소속원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당을 매개체로 이용하며, 정당은 지지 기반 확보와 정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견해를 습득하기 위해 이익 집단과 상호 작용한다.

⑤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은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로서,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10 _ 헌법 소원의 이해

문제분석 갑은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정답찾기 ㄴ.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가 된 해당 법률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렸다.

ㄷ.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오답피하기 ㄱ. 위 심판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ㄹ.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해 법원에 위헌 법률 심사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청구할 수 있다.

11 _ 정부 형태의 변화에 따른 현상 이해

문제분석 ○○국이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이원 정부제로 정부 형태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정답찾기 ② 전형적인 대통령제나 이원 정부제 모두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정부 형태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자료에서 내각은 의회에 의해 구성되고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므로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상실하게 되면 사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③ ○○국에서 총리는 내각을 지휘하고, 대통령에게는 국방 및 외교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권이 이원화되어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총리와 내각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⑤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에서 선출되는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동거 정부가 구성된다.

12 _ 제한 능력자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2013년 7월 1일 이후로 종전의 행위 무능력자 제도가

제한 능력자 제도로 바뀌었다. 일정한 정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많은 경우를 객관적으로 유형화하여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답찾기 ㄱ.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대해서는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ㄷ. 피한정 후견인은 법원에서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이 아닌 경우라면 피한정 후견인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 가능하므로 일용품의 구입은 후견인의 동의없이 가능하다.

ㄹ. 성년 후견 제도, 한정 후견 제도는 민법 중에서 재산상의 법률 행위에만 적용된다.

오답피하기 ㄴ.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 행위나 법원이 정한 일정 범위의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13 _ 언론의 역할 이해

문제분석 을 기자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정치인 갑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답찾기 ① 그림에서 허위 사실 보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정황을 미루어 보아 언론 보도에 있어 정확성이 필요함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그림은 정치인에 대한 허위보도에 따른 유죄 판결에 대한 것이므로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림의 주된 내용과는 다소 동떨어진다.

③ 그림은 취재, 편집, 보도의 독립성과 관련이 없다.

④ 그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없다.

⑤ 그림은 사회적 쟁점의 균형 있는 보도와는 관련이 없다.

14 _ 형사 재판의 이해

문제분석 을 기자는 명예 훼손 및 허위보도를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미루어 보아 형사 재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ㄱ. 검사의 기소로 형사 재판이 시작되므로 형사 재판의 원고는 검사이다.

ㄷ. 형사 재판에서는 범죄 행위의 유·무죄만 가린다. 명예 훼손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오답피하기 ㄴ. 벌금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다.

ㄷ. 세 번째 그림에서 판사 1명으로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형사 재판이 이루어졌으므로 을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다.

15 _ 대의제의 위기 극복 방안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에 해당하는 기관은 국회 입법 조사처이다. 국회 입법 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중립적, 전문적으



로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답찾기 ④ 국회 입법 조사처의 활동은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정부 제출 법률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국회 입법 조사처는 입법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므로 국회의원의 입법 전문성이 증대된다.

②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는 입법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부에 의존해 온 까닭에 '정부가 내놓은 법률안을 손만 들어 통과시키는 곳'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입법 전문성이 취약해져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 입법 조사처가 설립되었다.

③ 국회 입법 조사처의 활동으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의 전문성이 신장되어 가결 비율이 이전보다 증대될 것이다.

⑤ 현대 복지 국가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때문에 행정부가 주도하는 입법이 증가했으나, 국회 입법 조사처의 입법 지원으로 의회의 입법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16 _ 국민 참여 재판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양식은 국민 참여 재판의 양형 의견서이다. 국민 참여 재판은 2008년부터 법률에 규정된 형사 사건의 재판에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정답찾기 나. 피고인은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르.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에 권고의 효력이 있을 뿐이다. 다만,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오답피하기 가. 형사 사건 중 법률에 정한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
 다. 국민 참여 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17 _ 선거 결과 분석

문제분석 갑국은 행정부가 의회에 의해 구성되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로 의회 의원을 소수 대표제와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따른 비례 대표제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정답찾기 가. 지역구 의회 의원은 총 300명이고 지역구 선거구는 150개이므로, 한 선거구에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소수 대표제가 시행되고 있다.

나. 지역구 의회 의원은 지역구 선거를 통해, 비례 대표 의원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하게 된다.

다. A당은 지역구 의석수 120석, 비례 대표 의석수는 44석이 되어 164석을 확보하나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갑국에서는 연립 정부가 구성될 것이다.

오답피하기 르. 정당 투표 득표율이 5% 미만인 당에는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으므로 E당은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다.

18 _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비교

문제분석 A는 간접 민주주의, B는 직접 민주주의이다.

정답찾기 ③ 대표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간접 민주주의가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더 적게 든다.

오답피하기 ①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를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이다.

② A와 B 모두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한다.

④ 직접 민주주의나 간접 민주주의 모두 의사나 정책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⑤ 비정부 기구의 정치 참여 확대로 등장한 것은 참여 민주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19 _ 국회의 기능과 대통령의 권한 이해

문제분석 국회는 입법, 국가 기관 구성, 국정감사·통제 기능을 수행하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정답찾기 ⑤ 대통령, 기타 고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여 직무 집행을 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 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한다.

오답피하기 ①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 제128조)

②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한다.

③ 나, 다는 헌법 기관 구성에 관한 것으로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권한이다.

④ 라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20 _ 직장 내 성희롱과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방안 이해

문제분석 의뢰인 갑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고, 이와 관련한 조치를 사장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

정답찾기 나, 르. 부당 해고는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와는 별도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다.

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갑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가. 부당 노동 행위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제시문과는 관련이 없다.